

2022

OPL 워킹그룹 ② 지역혁신을 위한 중앙-지역 협력방안

2022
OPEN POLICY LAB

KIPA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DiSTEP 대전과학산업진흥원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for Enterprise & People

2022

OPL 워킹그룹 ②

지역혁신을 위한 중앙-지역 협력방안 결과보고서

[행정연구원]

Ⅰ 연구책임자	조세현 선임연구위원
Ⅰ 공동연구자	우하린 부연구위원 김상숙 초청연구위원
Ⅰ 연구참여자	홍성우 전문연구위원 김경민 전문연구위원 박주원 연구원 부성필 연구보조원 유미정 연구보조원 신나라 연구보조원

[대전과학산업진흥원]

Ⅰ 연구책임자	김영호 부장, 정서화 선임연구위원
Ⅰ 공동연구자	김성조 선임연구위원 이미애 선임연구위원
Ⅰ 연구참여자	강찬미 연구원

[워킹그룹 집필참여자]

정종석 연구위원(산업연구원)
김성진 연구위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장보영 연구위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의정 책임연구위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김병삼 교수(호서대학교)
이광훈 교수(강원대학교)
이상환 책임연구위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연희 수석연구위원(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임종빈 정책연구실장(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일 러 두 기

본 보고서는 한국행정연구원 미래행정혁신연구실이 2022년도에 운영한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 OPL) 운영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총 3권의 세부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의 OPL은 2021년도에 발굴된 정책의제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2개의 정책의제 발굴 워킹그룹과 1개의 방법론 워킹그룹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들 워킹그룹의 운영과정과 논의결과 및 정책제언 등을 세 권의 보고서로 제시하였습니다.

1. 결과보고서

- ① 주요 내용 : 로봇전문인재 양성 방안 및 지역혁신을 위한 중앙-지역협력 방안 관련 정책 환경 분석 및 정책수요자,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 워크숍 운영결과를 정리하여 제공함

WG1 : 로봇산업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로봇전문인재 양성 방안

WG2 : 지역혁신을 위한 중앙-지역 협력방안

- ② 작성 목적 : 열린정책랩(OPL) 워킹그룹 운영 결과 발굴한 정책의제안을 제시하며, 이를 도출하기 위하여 수행한 정책환경 분석 내용 및 워킹그룹 구성과 운영, 논의 과정 등을 수록

2. 방법론 보고서 - 개방형 플랫폼 기반 정책프로세스 운영을 위한 시스템·디자인 툴킷 개발

WG3 : 개방형 플랫폼 기반 정책프로세스 운영을 위한 시스템·디자인 툴킷 개발

- ① 주요 내용 : 개방적, 협력적, 현장지향적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운영하기 위한 열린정책랩의 방법론에 대한 공공부문 확산을 위하여 열린정책랩 운영 프로세스별 툴킷 개발

- ② 작성 목적 : OPL 방법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 사고, 시스템 사고 과정을 워킹 그룹 워크숍에서 활성화(facilitate) 하도록 돕기 위한 도구를 제시, 이를 통해 연구자뿐만 아니라 개방형 플랫폼 기반 정책의제형성 방법론과 도구를 확산하고자 함

2022년도 OPL 워킹그룹2

‘지역혁신을 위한 중앙-지역 협력 거버넌스’

글: 열린정책랩(OPL) 그림: I KOONG(이궁)

2022년 한국행정연구원 열린정책랩 (Open Policy Lab: OPL) 팀은 대전과학기술산업진흥원 (DiSTEP)과 협력사업으로 지역혁신을 위한 중앙-지역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워킹그룹을 운영하였습니다.

워킹그룹에서는 지역의 혁신역량과 수요를 기반으로 중앙과 지역이 함께 과학기술·산업정책을 설계하는 새로운 협력모델로 Middle up-Down (MUD) 전략을 도출했습니다.

국가중요혁신업
1
국가차원지역산업
2
지역차원지역산업
3
MUD
4
지역차원지역산업
3
Regional Innovation System
관점의 국가산업정책
Regional Innovation System
관점의 지역산업정책

* 중앙-지역 협력 거버넌스에 의한 MUD 전략 실행 영역

지속가능한 지역혁신을 위해 중앙과 지역의 혁신주체가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운영 모델을 제안합니다.

혁신 지원 체계
중 앙
지 역

R&D 지원기관
산업지원기관
중소기업
지역혁신 전담기관
연구단지
대학
기업
사설학 지원기관

열린정책랩과 디스태이 제안한 협력모델의 실질적 운영으로 융합 신산업의 자유로운 실증이 가능한 테스트베드 도시로의 혁신을 기대합니다.

신기술 실증의 장

인공지능
바이오
자율주행
원격의료
로봇
미디어
융합

Contents

제1장	들어가며	1
	제1절 배경 및 전략	3
	제2절 정책의제 및 전략 도출 과정	7
제2장	지역혁신체계 정책환경 분석	13
	제1절 국내 지역혁신정책 현황 분석	15
	1. 지역혁신정책의 배경 및 변천	15
	2. 지역혁신정책의 현황	25
	3. 시사점 및 평가	39
	제2절 국내 지역혁신 사례	49
	1. 대전과학산업진흥원	49
	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74
	제3절 해외 지역혁신정책 현황 분석	101
	1. 유럽연합(EU) 지역혁신정책: 스마트 전문화 사례를 중심으로	101
	2. 프랑스 지역혁신정책	117
	3. 독일 지역산업정책	135
	4. 영국 지역산업정책	150
	5. 분석 및 시사점	164

제3장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의제 및 주요 전략	167
	제1절 정책의제 및 전략 도출 과정	169
	제2절 지역혁신을 위한 중앙-지역 협력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의제와 전략	181
	제3절 지역혁신을 위한 도시형 테스트베드 전략	193
	1. 목표와 전략	193
	2. 세부과제	195
제4장	핵심제안	209
	부 록	215
	참고문헌	234

Contents

표목차

〈표 1〉 지역혁신과 실증선도전략을 위한 자문회의 및 인터뷰 대상자	9
〈표 2〉 중앙-지역 협력체계 워킹그룹(WG2) 참여자	10
〈표 3〉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00~2004년)」의 목표 및 중점 사업	17
〈표 4〉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05~2007년)」의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	19
〈표 5〉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08~2012년)」의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	20
〈표 6〉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12년)」의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	21
〈표 7〉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3~2017년)」의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	22
〈표 8〉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8~2022년)」의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	23
〈표 9〉 중앙부처별 주요 지역R&D사업	28
〈표 10〉 중앙부처 지역혁신성장사업 현황	29
〈표 11〉 시도별 혁신프로젝트 추진분야	33
〈표 12〉 타부처 규제샌드박스과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의 비교	36
〈표 1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플랫폼(6개)의 핵심 산업분야	38
〈표 14〉 지역혁신기관별 주요 수행기능 현황	43
〈표 15〉 주요 특구의 지정 및 인센티브 현황	44
〈표 16〉 DISTEP 주요연혁	51
〈표 17〉 DISTEP에 기대하는 주요 역할	52
〈표 18〉 대전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과의 비교	62
〈표 19〉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경과	75
〈표 2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예산 구성	76
〈표 21〉 통합 전후 역할 비교	78
〈표 22〉 연구 및 기획 관련 주요사업 현황	79
〈표 23〉 혁신정책 확산 관련 주요사업 현황	80
〈표 24〉 경기도 내 정부 공공연구소 현황	84
〈표 25〉 경기도기술개발사업의 특징(정부 사업과의 차별성)	87
〈표 26〉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조성 현황	88
〈표 27〉 광고테크노밸리 조성 및 운영 현황	90
〈표 28〉 광고테크노밸리 혁신주체별 역할	91

〈표 29〉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및 운영 현황	92
〈표 30〉 판교테크노밸리 혁신주체별 역할	93
〈표 31〉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비전 및 목표	96
〈표 32〉 주체별-단계별 향후 과제	99
〈표 33〉 결속 정책(Cohesion Policy) 2014-2020 주요 개정 사항	102
〈표 3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특징	104
〈표 35〉 연구와 혁신 사전적 조건 (Research and innovation ex-ante conditionality)	106
〈표 36〉 우선투자 분야의 변환	109
〈표 37〉 시기별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특징(S3 vs S4+)	111
〈표 38〉 EU의 지역구분과 투자방식	113
〈표 39〉 수행 사례별 지속가능성을 위한 스마트 전문화(S4+) 전략 특징	115
〈표 40〉 프랑스 지역정책 변화 및 비교	126
〈표 41〉 초광역 경쟁거점 클러스터의 3단계별 운영 방법	127
〈표 42〉 클러스터의 세 가지 유형	128
〈표 43〉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 바이오기술 지원 프로그램	139
〈표 44〉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 구동독지역 대상 기업지역 혁신지원 프로그램	143
〈표 45〉 독일 연방정부의 클러스터플랫폼(Clusterplattform) ‘go-cluster’ 등록 클러스터	146
〈표 46〉 영국 지역정책의 변화 과정	152
〈표 47〉 지역개발기구(RDA)와 지역산업협업체(LEP) 간의 차이	154
〈표 48〉 1차 시기 도시권 협상의 주요 도시 사례	158
〈표 49〉 2차 시기 도시권 협상의 주요 도시 사례	159
〈표 50〉 지역혁신사업 추진에서의 문제점(워킹그룹 참여 전문가 설문 결과)	178
〈표 51〉 지역주도성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워킹그룹 참여 전문가 설문 결과)	178
〈표 52〉 중앙부처의 신규 지역혁신사업 추진절차(안)	185
〈표 53〉 지역혁신사업 과제단위 관리의 지역 이관 방안(안)	189
〈표 54〉 대전의 주요 전략산업 분야 및 관련 대덕특구 혁신기관	194
〈표 55〉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의 주요 역할	195
〈표 56〉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203
〈표 57〉 실증사업 현황	205

Contents

그림목차

〈그림 1〉 KIPA-DISTEP 공동 워킹그룹 운영 방향	4
〈그림 2〉 의제도출을 위한 주요 활동 및 결과물	7
〈그림 3〉 지역혁신성장계획에 기반한 지역혁신체계 개편방향	26
〈그림 4〉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체계 변경안(22.2. 기준)	30
〈그림 5〉 연구개발지원단(17개 시도)의 5대 기능	31
〈그림 6〉 시·도 지역주력산업('22년)	35
〈그림 7〉 제7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37
〈그림 8〉 주요 지역혁신사업과 중앙-지역 거버넌스	42
〈그림 9〉 규제자유특구 참여 지자체 공무원/담당자 및 기업 설문조사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46
〈그림 10〉 14개 세부 기능에 대한 인식도조사 결과 중심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54
〈그림 11〉 8대 핵심기능 도출 결과	54
〈그림 12〉 지역과학기술 전담기관으로서 주요 기능의 정합성	55
〈그림 13〉 대전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56
〈그림 14〉 중앙-지역 정책소통체계(NIS-RIS) 구축·운영	58
〈그림 15〉 8기 대전과학기술위원회 운영체계	60
〈그림 16〉 특구 재창조 거버넌스 추진체계	61
〈그림 17〉 대전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체계	63
〈그림 18〉 대전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주요내용	64
〈그림 19〉 대전 과학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이행점검 체계(안)	64
〈그림 20〉 대전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사업범위 및 사업데이터 구축(안)	65
〈그림 21〉 대전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이행점검 체계(안)	66
〈그림 22〉 이행점검 결과 활용(사례)	67
〈그림 23〉 거버넌스 체계(안)	67
〈그림 24〉 대외적 협조체계 구축(안)	68
〈그림 25〉 전략지도 도출 개념도	69
〈그림 26〉 대전 R&I사업 투자선순환체계 개념도	69
〈그림 27〉 R&I사업 투자선순환체계 현황 및 단계적 구축방안	70
〈그림 28〉 창업지원사업 성과진단 사례	71

〈그림 29〉 지역주도 혁신모델	72
〈그림 3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조직도	77
〈그림 31〉 경기도 지역혁신시스템 내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주요 역할	78
〈그림 32〉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80
〈그림 33〉 경기도 중소기업 현황 추이	82
〈그림 34〉 경기도 기업연구소 및 벤처기업 분포	83
〈그림 35〉 2022년 경기도기술개발사업 구성 및 지원내용	85
〈그림 36〉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연도별 지원규모	86
〈그림 37〉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시군별 지원현황	86
〈그림 38〉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비전 체계도	89
〈그림 39〉 1단계 조성 광교테크노밸리 구상도 및 전경	90
〈그림 40〉 광교테크노밸리 협력네트워크	91
〈그림 41〉 판교테크노밸리 협력네트워크	93
〈그림 42〉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추진내용	95
〈그림 43〉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기반 정책	104
〈그림 44〉 유럽구조투자자금(European Structural & Investment Funds) 구성	107
〈그림 45〉 프랑스 지역혁신 정책의 시기별 변화	118
〈그림 46〉 프랑스의 지방 행정 체계	119
〈그림 47〉 프랑스의 초광역 행정단위 레지옹	120
〈그림 48〉 2016년 시행된 레지옹의 구성과 구성도	121
〈그림 49〉 인구와 인구 밀도 기준별 레지옹 분포도	121
〈그림 50〉 레지옹의 고등 교육 이수자와 청년 인구 구성	122
〈그림 51〉 레지옹 별 GDP와 창업기업 수	122
〈그림 52〉 테크노폴 단지 선정과 운영 현황	124
〈그림 53〉 프랑스 초광역 경쟁거점 클러스터 선정 절차와 유형	128
〈그림 54〉 프랑스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행정 체계	129
〈그림 55〉 프랑스의 지역혁신 총괄기구 추진 체계(CGET ex-DATAR)	130
〈그림 56〉 경쟁거점 클러스터 운영체계	130
〈그림 57〉 국가 레지옹간 계약협약 제도	132
〈그림 58〉 독일 클러스터 정책 프로그램의 전개 추이	136
〈그림 59〉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의 구 동독 지역 대상 기업지역 정책 추진 추이	140

Contents

〈그림 60〉 독일 연방정부의 클러스터 정책 프로그램 추이	142
〈그림 61〉 독일 15개 첨단 클러스터	145
〈그림 62〉 영국 LEP 지도	153
〈그림 63〉 영국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체계	155
〈그림 64〉 영국 지역산업정책의 체계도	156
〈그림 65〉 평가 프레임	157
〈그림 66〉 워킹그룹 워크숍을 통해 발굴한 전략 우선순위 도출	179
〈그림 67〉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산업정책의 영역	181
〈그림 68〉 지역혁신을 위한 Middle Up-Down 전략 개념 도출	183
〈그림 69〉 Middle Up-Down 전략 범위	183
〈그림 70〉 중앙부처 지역혁신사업 간의 연계구조(예시)	187
〈그림 71〉 중앙-지역 협력모델의 방향(예시)	191
〈그림 72〉 미국의 3단계 SBIR 지원방식 및 국내 중앙정부 SRIR 운영방식	196
〈그림 73〉 대전형 KOSBIR 프로그램	197
〈그림 74〉 융합기획 생태계(예시)	199
〈그림 75〉 TBM 프레임 워크	200
〈그림 76〉 대전형 실증사업 근접지원 및 환류체계 운영	201
〈그림 77〉 대전형 실증사업을 통한 창업-실증-사업화 생태계 조성	201
〈그림 78〉 대덕특구와 RIS 지역혁신주체와의 협력 R&D 설계 기본개념	202
〈그림 79〉 실증사업 3단계 모델(안)(3년 사업)	206

2022

OPL 워킹그룹 ②

**지역혁신을 위한 중앙-지역
협력방안 결과보고서**

Open
Policy
Lab

제1장

들어가며

제1절 배경 및 전략

제2절 정책의제 및 전략 도출 과정



1

제1절 배경 및 전략

Open
Policy
Lab

1. 지역혁신을 위한 중앙-지역 협력 워킹그룹 운영 배경 및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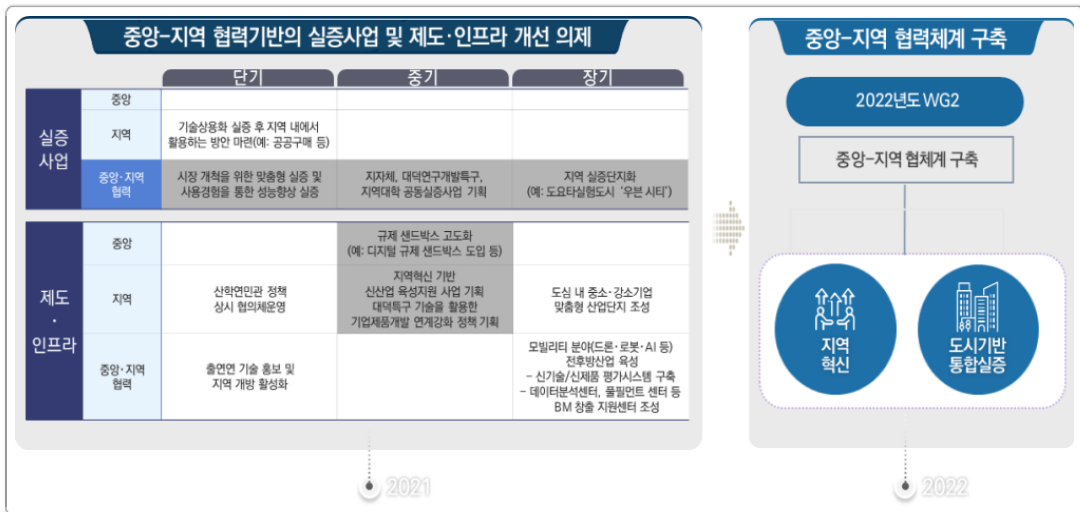
(1) 배경 및 목적

- 한국행정연구원 열린정책랩과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은 2021년 드론·로봇·AI 등 유통·물류 분야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적 대응방안의 필요성을 모색한 바 있음
- 2022년도에는 중앙-지방간의 협력을 지역혁신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산업의 범위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에서의 스마트 공간 혁신을 위한 전략으로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운영 방안 관점에서 정책의제를 발굴하고자 하였음
 - 중앙정부 단위의 연구기관과 지역 단위의 연구기관의 협업에 의한 워킹그룹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중앙-지역 협력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연구진의 판단이 있었으며, 정책전문가, 현장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주제의 중요성을 검증, 확인하였음
 - ‘지역혁신’이란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개발과 과학기술·산업생산·기업지원·문화·금융 등의 분야에서 지역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지역의 발전역량을 창출·활용·확산시키는 것(「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의1의2)으로,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기반한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은 정책적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여전히 난제로 인식됨
 - 현장을 중심으로 하는 미래지향적인 혁신정책의 기획·설계·실행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한 중앙·지역 간 협력 강화 필요
- 본 연구는 민간 행위자와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워킹그룹을 운영을 주축으로 OPL의 운영 방식인 수요 지향적, 현장 지향적, 협력에 기반한 혁신적 정책의제 및 전략 발굴 과정을 통하여 미래지향적이고 실현 가능한 지역혁신의 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공동연구를 통해 수요자와 현장 중심의 미래지향 혁신정책 및 거버넌스(안)을 제시
 - 중앙-지역 협력을 위한 제도와 거버넌스, 지역 내 다양한 행위자간의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에 주목하여 신산업 육성 정책의제 발굴 및 제언
 - 지역주도의 미래 혁신성장을 강화하기 위한 대전 지역 혁신자원 기반의 과학산업정책 및 신산업 육성전략 도출
 - 지역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대전형 도시 융합실증 선도전략 도출 및 현장 중심의 통합적 대안 모색
 - 수요·현장 중심의 혁신전략 강화를 위한 중앙-지역 협력체계 마련 및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2) 연구 전략

- KIPA-DISTEP 공동 워킹그룹 운영(2021~)
 - 2021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과 대전과학기술진흥원은 협력사업으로 '중앙-지역 협력기반의 실증사업 및 제도·인프라 개선 의제'를 단기-중기-장기 의제로 추진해 왔음
 - 2021년에는 드론·로봇·AI 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중앙 혁신지원체계 방안을 모색하면서 R&D이후 실증 및 사업화 단계 구축 및 이를 위한 중앙-지역 협력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2022년에는 이를 구체화하여 지역혁신 거버넌스와 도시기반 통합실증이라는 두 가지 큰 테마로 구성하여 워킹그룹을 운영함

〈그림 1〉 KIPA-DISTEP 공동 워킹그룹 운영 방향



- 2022년 지역혁신을 위한 KIPA-DISTEP 협력사업 개요
 - 목표: 중앙-지역 협력모델을 통한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
 - 구성: 기업 12인, 학계 및 정책전문가 25인
 - 역할: 기업, 학계, 정책전문가, 연구진이 함께 지역혁신 중앙-지역 협력모델 모색
 - 운영기간: 2022년 3월부터 개별 인터뷰, 전문가 세미나, 워크숍 등 진행
 - ① 정책 현장 이해관계자와 관련분야 전문가를 대상 인터뷰 및 세미나에 기반한 의제 도출
 - ② 학계 및 연구기관 관련 전문가들의 상호 토론회
 - ③ 지역 혁신을 위한 KIPA-DISTEP 공동의제(안) 도출
 - ④ 지자체/국가 추진사업에 대한 실행 가능성 타진 및 단·중·장기 로드맵 수립
 - ⑤ 기획 결과에 대한 성과보고회 개최

1

제2절 정책의제 및 전략 도출 과정

Open
Policy
Lab

제2절

정책의제 및 전략 도출 과정

- 다양한 정책수요자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합리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책 의제를 발굴하고 실행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수행함

〈그림 2〉 의제도출을 위한 주요 활동 및 결과물



■ 정책현황분석

- 현황분석 및 자료탐색
 - 신산업 기술 개발 이후 실증과 관련한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샌드박스 법·제도 현황, 관련 이슈 조사
 - 지역혁신정책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추진사업 현황과 평가, 정책기획-집행-평가 단계에서의 중앙-지역 협력 과정 및 추진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 지역발전투자협약 및 포괄보조금제도 등 제도 운영 사례 등 분석
 - 관련 분야 기업 분석 및 전문가 리스트 작업

■ 세미나

- [제1차 전문가 세미나] 융합 신산업 창출을 위한 실증지원사업 현황과 과제 (2022. 7. 5. 10:00 - 12:00, 상연재 서울역점)
 - 융합신산업 창출을 위한 실증지원사업의 개념 및 국내외 실증지원사업의 현황과 실증선도전략의 방향

- 주요 논의 내용

- ① 실증의 개념, 실증연구의 한계
- ② 기술분야별 실증의 특성
- ③ 국내외 실증현황 및 법제도 이슈,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참여 기업 애로사항

● [제2차 전문가 세미나] 지역주도 혁신체계로의 전환, 현황과 과제 (2022. 8. 23. 14:00-17:00, 대전 과학산업진흥원)

- 지역 내외의 미래 지역주도 혁신성장 강화를 위한 지역주도 혁신체계 관련분야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지역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현황 파악
- 지역주도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방향 정립
- 융합신산업 창출을 위한 중앙-지역 협력체계 및 역할 방안

■ 자문회의

● KIPA-지방행정연구원 지역혁신체계 자문회의: 포괄보조금 및 지역발전투자협약 (2022년 8월 24일 토즈모임센터 신반포점)

- 포괄보조금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의 운영에 있어 중앙-지방 간, 제도-행태 간의 간극
- 포괄보조금 도입의 의도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실태
- 지역투자협약의 실효성과 현실적인 운영 방안

● 지역혁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운영 방안 자문회의 (2022년 8월 30일, 상연재 서울역점)

- 규제자유특구 운영 현황 및 지역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지역주도성과 기업자율성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 모색

■ 인터뷰

● 기업 인터뷰

- 대전 지역 규제자유특구(바이오특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바이오니아, (주)수젠텍, (주)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주)레보스케치 등 기업의 특구 사업 경험 및 애로사항 파악
- 로봇분야 기업들(로보티즈, 유진로봇, 클로봇, 트위니 등)을 대상으로 R&D 이후 사업화를 위한 실증 단계에서의 애로사항 및 정책인식 등 확인

● 유관기관 인터뷰

- 대전시 공무원 인터뷰

- 대전 지역 기업 살증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대전테크노파크의 사업 관련 담당자들 인터뷰를 통해 정책 운영 현황 및 향후 과제 파악
 - 대학·연구기관·지역기업 등 지역혁신주체의 실증 지원 관련 정책 및 방향 대한 대전세종연구원 전문가 인터뷰 진행
- 전문가 인터뷰
 - 지역혁신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운영 방안
 - 규제자유특구 운영 현황 및 지역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지역주도성과 기업자율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제언의 필요성

〈표 1〉 지역혁신과 실증선도전략을 위한 자문회의 및 인터뷰 대상자

구분	인터뷰 대상	소속	날짜
기업	김재하 부사장	바이오니아(분자진단 시약 및 시스템 전문기업)	2022.9.1.
	이성운 대표	레보스케치(디지털PCR 플랫폼 개발)	2022.9.8.
	이동배 소장	비전세미콘(주)(협동로봇(로봇카페), 무인이송로봇)	2022.9.19.
	정호정 대표	(주)알지티(서빙로봇, 스마트 레스토랑 시스템)	2022.9.20.
	김진호 대표	(주)도구공간(자율주행 솔루션)	2022.9.20.
	서경훈 대표	E&S헬스케어 (여성질환 분석 전문)	2022.9.30.
	조군호 고문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유전질환 분석 전문)	2022.9.30.
	손미진 대표	수젠텍(다중면역진단 분석 전문)	2022.10.4.
유관기관	안상호 단장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2022.5.13.
	이기정 팀장	대전테크노파크	2022.5.19.
	허재범 과장	대전TP	2022.5.19.
지자체	이정호 팀장	대전광역시	2022.5.25.
연구원	황혜란 수석연구위원	대전세종연구원	2022.5.25.
	박진경 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8.24.
	홍근석 실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2.8.24.
	김권석 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2.8.30.

■ 워킹그룹 워크숍

- 다양한 분야의 현장 전문가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토론과 합의를 통한 정책 의제 및 전략(안) 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2회 이상의 소주제별 워킹그룹을 운영

〈표 2〉 중앙-지역 협력체계 워킹그룹(WG2) 참여자

	이름	소속	사업분야
기업	권현구 대표	(주)기술과 가치	기술경영컨설팅
	김재하 부사장	바이오니아	바이오기업
	김진호 대표	(주)도구공간	로봇기업
	서경훈 대표	E&S헬스케어	바이오기업
	손미진 대표	수젠택	바이오기업
	신동혁 이사	(주)에바	로봇기업
	유병용 이사	(주)오토노머스에이투지	자율주행기업
	이동배 소장	비전세미콘(주)	로봇기업
	이성운 대표	레보스케치	로봇기업
	정호정 대표	(주)알지티	로봇기업
	조군호 기술고문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바이오기업
	천영석 대표	(주)트위니	로봇기업
학계 및 정책 전문가	권기석 교수	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권향원 교수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김권식 연구위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
	김성진 팀장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지역정책팀
	김호 본부장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정책연구본부
	박진경 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박찬수 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신산업전략연구단
	복득규 소장	한국산업단지공단산업입지연구소	산업입지연구소
	성욱준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대학원 AI공공정책
	손수정 선임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혁신법제도연구단
	송락경 센터장	광주과학기술원	브릿지융합지원센터
	안상호 단장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ICT융합사업단
	이기정 팀장	대전테크노파크	기술사업화실
	이상환 책임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계학습데이터연구단
	이연희 수석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정책연구실
	이정호 팀장	대전광역시	과학협력과 과학협력팀장
	임홍택 교수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정종석 연구위원	산업연구원	지역정책실
	정형구 팀장	부산산업과학혁신원	과학기술정책팀
	최종민 교수	계명대학교	행정학과
	최해욱 부연구위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법제도연구단
	허재범 팀장	대전테크노파크	지능형로봇센터
	홍근석 실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
홍형득 교수	강원대학교	행정·심리학부	
황혜란 수석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성장동력연구실	

-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 1차 회의(2022년 10월 19일)
 - 제1차 워킹그룹 주요 논의사항
 - ① 지역주도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 ② 지역주도 혁신의 현황은 어떠한가?
 - ③ 지역주도 혁신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④ 지역주도 혁신의 실질적 실행을 위한 추진동력과 레버리지 전략
 - ⑤ 중앙-지역 협력 거버넌스 운영 전략 및 거버넌스의 실효적 기능을 위한 수단 제언
-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 2차 회의(2022년 11월 8일)
 - 1차 워크숍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의 정의 및 범위, 실현가능한 전략 및 과제를 의제화(안)하고, 연구진이 제시한 거버넌스 모델(안)을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하는 과정을 진행
- 융합실증 선도전략 워킹그룹 1차 회의(2022년 11월 1일)
 - 대전지역 실증사업 현황, 내실화 및 외연 확대의 필요성
 - 지역혁신을 위한 실증지원사업의 향후 발전 방향
 - 출연연-지역기업 연계 강화 방안
 - 지역혁신형 규제자유특구 운영 관련 이슈
- 융합실증 선도전략 워킹그룹 2차 회의(2022년 11월 18일)
 - 지역주도혁신을 위한 실증선도전략 방향
 - 실증사업 내실화, 외연 확대, 출연연-지역기업연계
 - 지역혁신과 연계한 사업화 지원 강화 및 지자체-범부처 협업체계 등을 통한 지역혁신형 규제자유특구

■ 정책 의제 디자인과 의제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전문가 서면 자문

- 그 동안 워킹그룹 과정에 참여했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정책 의제 디자인 및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서면 자문 실시
 - 워크숍에서 도출된 주요 정책 의제의 세부사항들을 정리하여 중앙-지역 및 지역 내 다층적 협력거버넌스 모델, 융합실증 선도전략 및 특구연계 지역혁신 핵심이슈 도출을 위한 관련 의제 및 전략의 우선순위를 확정
 - 지역혁신의 개념과 범위에 대한 공동 이해 영역 도출
 - 지역혁신전략 및 세부실천의제 제안

2022

OPL 워킹그룹 ②

**지역혁신을 위한 중앙-지역
협력방안 결과보고서**

Open
Policy
Lab

제2장

지역혁신체계 정책환경 분석

제1절 국내 지역혁신정책 현황 분석

제2절 국내 지역혁신 사례

제3절 해외 지역혁신정책 현황 분석



2

제1절 국내 지역혁신정책 현황 분석

Open
Policy
Lab

제1절

국내 지역혁신정책 현황 분석

1. 지역혁신정책의 배경 및 변천

- 지역혁신정책은 내용적으로 지역과학기술정책, 지역산업정책, 지역기업정책, 지역인력·고용정책 등 다양한 정책분야를 포괄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설정할 수 있고, 시간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2003년을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할 수 있음
 - 지역혁신정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이에 근거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 등 국가정책 차원에서의 제도 기반 마련을 논의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지역혁신정책을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함
 - 2004.1월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근거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2005년 예산편성부터 시행) 및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04~2008년)」의 수립이 이루어짐
-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혁신정책의 변천 과정을 ①지역혁신정책의 모색기(1993~2002년), ②지역혁신정책의 본격 추진기(2003~2022년)로 대분하고, 이를 다시 역대 정부별로 구분하여 정책의 배경 및 변천 내용을 조감함

1) 지역혁신정책의 모색기(1993~2002년)

① 김영삼 문민정부(1993~1997년)

- 1991년 지방자치 제도(시도 및 시군구 의회 구성) 시행에 따라 '지역간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이 주요한 정책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문민정부에서는 산업정책, 입지정책, 과학기술정책 등의 분야에서 지역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관련 법령을 정비하기 시작
- 산업정책에서는 「공업배치기본계획」을, 국토정책에서는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을, 중소기업정책에서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에 관한 법률」을, 과학기술정책에서는 과학기술의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전국적 확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기 시작

- 관련하여, 1993년 과학기술의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기 시작한 지방과학산업단지 조성,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 등의 경우 지역간 균형발전을 주요 목적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혁신정책의 최초 출발점이라 할 수 있음
- 1994년에는 지역과학기술 진흥과 관련된 예산이 지자체 총예산보다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목표 증가율을 높게 설정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단위의 연구개발 기능 강화, 산학연 활성화 등을 위한 지역과학기술 추진체제의 도입 필요성 제기
- 1995년에는 지역별 기술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역협력연구센터(RRC)(과학기술처), 기술혁신센터(TIC)(통상산업부) 등의 사업이 시범 추진되었고, 이후 중앙부처별로 지역소프트웨어 지원센터 활성화 지원(정보통신부), 테크노파크 시범조성(통상산업부), 지역환경기술 개발센터 운영지원(환경부) 등의 다양한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지역혁신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이 점차 구체화·확대됨
- 한편, 1997년에 제정된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의 과학기술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자금, 연구 인력 및 기술 정보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과학기술 중심의 지역혁신정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 기반이 마련됨

② 김대중 국민의 정부(1998~2002년)

- **(법제도적 기반)** 1999년 12월 과학기술부는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개발하고 지역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과학기술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함. 이를 계기로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 여건에 적합한 과학기술 정책을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기 시작함
 -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00~2004년)」은 시도(16개) 및 중앙부처(9개)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이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이 심의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됨. 그 과정에서 첫 시행된 지방정부의 주도적 계획수립,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체계 형성 등의 사항은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에 해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내용적 범위로는 지역별 전략·특화 기술개발, 지역기술 혁신거점 육성과 기술 사업화 촉진, 전략·특화 산업 지원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양성, 지역과학기술 정보 체계 구축, 지방과학문화 확산,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 예산 확대 및 과학기술 행정체계 강화 등 6개 부문에 대한 추진계획을 제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 한편, 계획에 지자체의 (총예산 대비) 연구개발 예산 비중의 확대, 지자체 내 과학기술 전담부서의 설치 등이 포함되면서, 지역의 여건·특성이 반영된 자기 지역만의 고유한 과학기술진흥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를 실행한 지자체가 있었음

〈표 3〉 「제1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00~2004년)」의 목표 및 중점 사업

목표	지역의 성장 잠재력 확충과 국토의 균형 발전을 실현하고, 21세기 지식기반산업 사회에 대비한 지역 과학기술 혁신기반 구축
중점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별 전략·특화 기술 개발 2. 지역별 지역기술 혁신 거점 육성과 기술의 사업화 촉진 3. 지역별 전략·특화 산업 발전 지원 과학기술 인력 양성 4. 지역 과학기술 정보 체계 구축 5. 지방 과학문화 확산 6. 지방 자치 단체의 연구개발 예산 확대 및 과학기술 행정 체계 강화

* 출처: 과학기술부(2002: 22-29)

-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 사업 기획)** 지역산업정책의 경우, 1999년 대구에서 지역 내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섬유산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산업자원부가 수용함에 따라 (지역혁신 체제(RIS) 관점에서 연구개발 인프라 조성, 연구개발 활동 지원 등을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밀라노 프로젝트가 추진됨. 이는 지자체가 주도하여 지역혁신사업을 기획·추진한 첫 사례임
 - 이를 계기로 2000년에는 부산(신발산업), 경남(기계산업), 광주(광산업) 등의 지역에서도 대구 섬유산업과 유사한 형태의 산업육성계획을 마련·시행하였고, 이후 4개 지역의 지역산업육성사업을 하나로 묶어 4개시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통합 관리함
 - 4개시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서 배제된 비수도권의 9개 시도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재정사업 지원을 요구함에 따라 2002년부터 9개시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새로이 시작됨. 4개시도 사업과 차이점은 시도별 전략산업을 2~3개(4개 시도는 1시도1산업 원칙 적용)를 선정하고, 해당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 지원을 위한 R&D과제 지원보다는) 혁신인프라(지역특화센터 등)를 구축하는 데 집중한 것임

2) 지역혁신정책의 본격 추진기(2003~2022년)

① 노무현 참여정부(2003~2007년)

- 참여정부의 3대 개혁 입법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4년에 제정됨. 이에 근거하여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면서, 지역혁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은 '지역혁신체계(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에 기반한 역동적 지역발전'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4대 추진전략으로 ①혁신주도형 발전기반 구축, ②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성, ③수도권의 질적발전 추구, ④네트워크형 국토구조 형성 등을 설정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 2004)

- 참여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혁신정책, 균형정책, 산업정책, 공간정책, 삶의질적발전정책 등의 5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국정홍보처, 2008), 이 중 지역혁신체제(Regional Innovation System) 구축을 중점 추진하는 혁신정책이 가장 중요한 분야로 설정됨
 - 지역의 다양한 혁신주체(지자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들이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공동학습이 수행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 관련한 지식·정보가 축적되고 이를 토대로 혁신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역혁신체제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을 통한 지역의 자생적·자립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혁신역량에 기반하여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것이 가장 시급
 - 이처럼 지역 혁신주체들의 참여·협력을 통한 지식·기술의 창출·확산·활용을 촉진하는, 즉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위한 지역혁신사업들이 다양하게 기획·추진됨. 이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 2003년 27% 수준이던 국가R&D 대비 지역R&D의 투자 비중을 2007년까지 40%로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
- 지역혁신정책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역의 연구개발 인프라 확충 및 혁신역량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함. 4개지역2단계전략산업진흥사업, 테크노파크 조성사업, 지역협력 연구센터(과학기술부에서 산업자원부로 이관)와 기술혁신센터를 통합한 지역혁신센터(RIC, Regional Innovation Center) 지원,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지원을 위한 지역혁신특성화(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지원, 연구개발 기능이 작동하는 산업단지로 전환시키기 위한 산업단지 혁신클러스터, 대학의 기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하는 사업들임
- 한편, 참여정부에서는 지역혁신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지역과학기술 추진전략으로서 국가과학기술정책 내에서 지역과학기술정책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확보하고,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여 지역혁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05~2007년)」을 수립
 - 핵심 정책목표로 ‘혁신’을 지역 주도의 자립적·내생적 발전에 필요한 요소로 설정하고, 지역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추진과제를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방 자치 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지자체 주도의 상향식으로 도출
 - 제2차 계획에서는 지역의 기술개발 역량 강화, 이에 근거한 지역혁신 추진동력 확보를 핵심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지방과학기술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차별화된 지역과학기술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
 - 한편, 지역 과학기술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에 따라 지역R&D의 예산이 2007년 3조 2,401억원(국가R&D 대비 39.8% 비중)로 크게 증가하는 등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

〈표 4〉 「제2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05~2007년)」의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

비전	지역의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 경쟁력 제고와 국가 균형 발전 실현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생적 성장 동력 확보 과학기술 허부 구조와 과학기술 자원의 지역 편중 해소 '지방 자치 단체 주도-정부 조정'의 지방 과학기술 사업 추진 체계 확립 		
추진전략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	지방 R&D 투자의 효율성 제고	지방 과학기술의 성과 확산
중점 추진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과학기술 혁신 로드맵에 기초한 전략·특화기술 개발 2. 핵심 인력 양성과 산학연 협력 체제 구축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기존거점의 연계 체제 구축과 지역 혁신 거점의 육성 4. 지역 과학기술 정보 시스템의 통합·연계 5. 지방 자치 단체 주도-정부 조정의 사업 추진 체계 확립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연구개발 결과의 성과 확산과 기술 사업화 촉진 7. 지역 과학기술문화의 저변 확대

* 출처: 과학기술부(2006: 42)

② 이명박 정부(2008~2012년)

- 이명박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제2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를 위한 4대 기본방향으로 '광역경제권 구축', '특성화된 지역발전', '지역주도 발전', '지역간 협력·상생발전' 등을 설정하고,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5+2개), 초광역권 등의 공간 단위로 균형발전 사업을 추진
 - 이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행정구역 기준의 지역개발, 모든 지역 대상의 획일적 발전, 중앙부처가 주도하는 하향식 추진 등에서 벗어나 새로운 접근방법으로 '광역화, 특성화, 분권화'를 제시하였다는 점임
- 「제3차 지방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08~2012년)」은 지역혁신사업들이 여전히 지역의 투자 우선순위를 반영하기보다는 중앙부처 주도로 추진되는 등 중앙부처-지자체 간의 협력 체계 정착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화산업 분야에 부합하는 지역혁신사업의 추진, 성과 중심의 사업관리 체계 구축, 지역 주도의 협력체계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음

〈표 5〉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08~2012년)」의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

비전	지역의 혁신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의 실현		
목표	지역별 고유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 구축과 지역 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주도의 사업 추진 체계 마련을 위해 중앙 부처와 지자체의 협력 강화 • 지역 특화 분야에 집중된 지방 과학기술 진흥 사업의 추진 • 성과 중심의 지방 과학기술 진흥 사업 관리 체계 마련 		
중점 추진과제	지역 과학기술 역량의 강화	지역 산업 혁신 기반의 강화	지역 고유 과학기술 활동의 확산
세부 추진과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 연구개발 주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핵심기술 개발의 추진 2. 지역 수요에 대응한 과학기술 인력의 유입 및 활용 촉진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산학연관 네트워크 촉진을 통한 혁신 클러스터의 강화 4.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사업화 거점의 활성화 5. 지역 혁신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업 지원 서비스의 확대 	<ol style="list-style-type: none"> 6. 지역 자원을 활용한 지역 밀착형 기술의 개발 7. 지역 내 참여 계층 확대를 통한 과학기술문화 저변의 확대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09: 34)

- 광역경제권 중심의 새로운 정책 기조*를 반영하기 위해 2010년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정 계획을 수립함. 수정 계획에서는 광역경제권 단위의 추진,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지역 간 상생 발전, 지자체의 자율성 및 분권 확대 등이 중점 반영됨
 - 지역맞춤형 R&D지원 강화, 지역 수요·특성에 맞춘 지역인재 양성, 지역혁신주체간 연계에 기반한 산학연협력 강화, 지역의 고유 특성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등의 4대 전략 분야를 설정하고, 광역경제권별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녹색성장사업」, 「신성장동력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편함
 - 제3차 계획의 지역R&D 투자 확대 목표에 따라 지역R&D 투자규모가 연평균 10%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로서 지역의 기술적·경제적 성과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나는 등 지역의 기술개발 역량이 크게 향상됨

* 이명박 정부의 지역혁신정책은 (균형발전정책의 공간 단위가 기존 시도에서 전국을 5+2개 권역으로 구분한 광역경제권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의 시도별 균형배분 관점에서 광역경제권별로 비교 우위에 근거하여 특성화 발전을 지향하는 것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

** 시·도 단위로 지역별 계획을 수립

〈표 6〉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정계획(2008~2012년)」의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

비전	자율적인 성장 동력을 갖춘 특성화된 지역 발전 실현			
목표	지방 R&D투자 확대와 효율화를 통한 지역과학기술 역량 강화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성장 동력과 연계한 지역 맞춤형 R&D 지원 강화 • 지역에 고용·정착하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 • 지역의 연구개발 거점 간 연계 활성화를 통한 협력 체계 강화 •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추진분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R&D 지원 강화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지역 인재 양성	지역의 거점 자립 및 연계를 통한 산학연 협력 체계 강화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중점 추진과제	1. 지역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 기초연구 역량 강화 2. 녹색성장 및 지역 밀착형 R&D사업 추진 3. 지방 R&D 종합 조정 기능 활성화	4. 지역 수요에 대응한 과학기술 인력의 양성 및 활용 촉진	5. 클러스터 자립 및 연계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6. 기술사업화 및 기업 지원 강화	7. 연구장비 구축·활용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 R&D 종합정보 시스템 연계 강화 8. 과학기술문화 확산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2010: 2)

- 한편, 2011년 3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설치로 지역과학기술 정책이 일부 변화함.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지방과학기술협의회가 설치되고, 협의회가 지역과학기술 관련 부처가 개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 혁신사업들을 종합 조정하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됨(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 「과학기술기본법」 개정과 함께 지역과학기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과학기술협의회에 5년 주기의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조정, 지역과학기술 사업 예산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이 부여됨

③ 박근혜 정부(2013~2017년)

- 박근혜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지역행복생활권* 대상으로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밀착형 정책, 이를 지자체가 주도해 나가는 정책으로 전환
 - 3대 추진전략으로 ①5+2 광역경제권 → 지역행복생활권 구현, ②부처별 산발적(지역 수요와 괴리가 있는) 지원 → 지역 현장 중심의 맞춤형·패키지 지원, ③중앙부처가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하향식 정책 → 주민·지자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주민체감형 정책 등을 설정함
-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기본틀인 '지역희망(HOPE) 프로젝트'에 따라, 지자체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상향식 지역정책이 강조되면서 지역과학기술에 근거한 창조경제의 지역적 확산이 핵심 과제로 설정되었고, 이에 따라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3~2017년)」에서는 지자체의 자율 및 그에 상응한 책임 확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 강화 등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이 다수 포함
 - 이전 정부까지는 지역의 취약한 혁신기반 확충을 위해 센터 건립, 장비 구축 등의 기반구축에 중점을 둔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 구축되어 있는 지역혁신기반(인프라)에 기반하여 지역의 혁신역량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어 추진함
 - 그리고 중앙 차원에서 국가R&D와 지역R&D 사이의 역할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지역 차원에서 지역혁신사업의 기획·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조직이 부재하여 지역 주도로 지역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미흡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4차 계획에서는 '지역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와 '지역 특성화 과학기술 역량 제고'를 핵심 목표로 설정함
 - 지자체에 대해 제1차 및 제2차 계획에서는 지역혁신사업의 수혜자로, 제3차 계획에서는 지역혁신사업의 실행자로 포지셔닝한 반면, 제4차 계획에서는 국가과학기술 정책의 파트너로 그 위상을 향상시킨 점이 중요한 특징의 하나임

〈표 7〉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3~2017년)」의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

비전	과학기술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지역 사회	
목표	지역의 자율과 책임성 강화	지역 특성화 과학기술 역량 제고
중점 추진과제	1. 지역 주도형 R&D 사업 기반 확충 2. 지역의 R&D 기획·관리 역량 및 기반 강화 3. 중앙·지역의 역할 분담 및 국제 협력 강화 4. 지역 R&D 추진 체계 개선 및 재정비	5. 지역 R&D 투자 특성화·내실화 6. 지역 밀착형 과학기술 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 7. 인프라 운영 효율화 및 과학기술문화 확산 8.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산·학·연 협력 활성화

* 출처: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3: 10)

* 당시 전국 63개의 지역행복생활권 설정은 관련 사군 간 자발적 협의를 통해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공간 범위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음.

④ 문재인 정부(2017~2022년)

- 문재인 정부는 균형발전정책 비전선포식(2018년 1월)을 통해,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정책목표로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을 비전으로 제시
 - 이에 근거하여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에서는 균형발전의 3대 전략(사람, 공간, 산업), 9대 핵심과제, 37개 실천과제를 설정함. 균형발전의 실행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체계로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균형발전총괄지표 개발, 생활SOC사업 확대, 지역발전투자협약 추진, 균특회계 개편,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을 함께 제시함(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2019)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8~2022년)」에서는 지방분권형 균형발전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정부의 지역리더십 구축',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극대화',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등의 3대 전략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9개 추진과제를 설정함
 - 지역 주도의 지역혁신사업 추진 기반으로서 지역별 여건·특성에 맞춘 R&D 전주기시스템(투자-기획-평가 등)을 구축하고, 지방정부 역할을 혁신 주체로, 중앙정부 역할을 '조력자'로 제시하는 한편, 지역혁신주체(기업, 대학, 연구소 등)가 자생적·자립적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둬

〈표 8〉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018~2022년)」의 목표 및 중점 추진 과제

비전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		
전략	지방정부의 지혁신 리더십 구축	지역 혁신주체의 역량 강화	지역혁신 성장체계 고도화
중점 추진과제	1. 지역의 R&D투자 결정권 강화 2. 지방정부의 R&D 기획·평가역량 강화 3.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체계 개선	4. 지역거점대학의 연구 및 교육 경쟁력 제고 5. 지역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의 지역 혁신 역할 강화 6. 지역기업의 기술역량 확보	7. 지역 산학연 공동연구 활성화 8. 지역내 기술사업화 촉진 시스템 강화 9. 지역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 출처: 국가과학기술심의회(2018: 7)

⑤ 윤석열 정부(2022년~)

- 지역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나가면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고, 산업구조 변화 등에 따라 전통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주력산업이 침체하면서 지역경제 점점 더 활력이 둔화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더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차원에서 과학기술 기반으로 지역의 자생력을 회복시키기 위한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2023~2027년)」을 마련하고 있음(2022년 말 공표 예정)
 - 지방소멸(소멸위기 시군구, 85개(2017년) → 93개(2019년) → 108개(2021년), 지역경제(지역내총생산(GRDP)의 비수도권 비중, 50.7%(2010년) → 48.7%(2017년) → 47.3%(2020년) 등
- 제6차 계획의 수립과 연계하여, 지역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사항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한편, 지역의 자생력 회복을 지속적,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으로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추진 중임
 - 이전의 계획들과 달리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과학기술 혁신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고, 지역 산학연의 역량 강화와 혁신을 위한 강력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종합계획이 지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임

2. 지역혁신정책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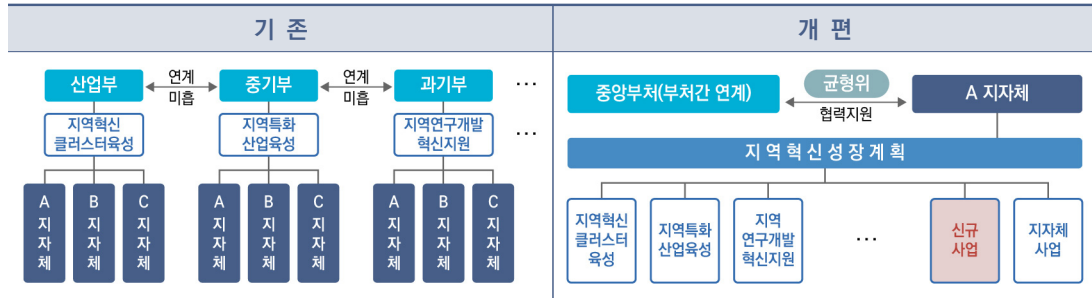
1) 총괄 개요

① 지역혁신성장계획의 추진 현황

■ 추진 배경 및 방향

- 지역 산업육성·R&D 등 지역혁신 관련 사업이 부처별 중앙주도로 추진되면서, 지역산업·기업 육성(산업부, 중기부) 및 지역과학기술 진흥(과기부)에 매년 1조원 이상 지원 중, 지역은 매칭 예산만 부담하는 소극적 역할에 국한됨
 - 부처의 관련 예산은 균특회계내 출연금 형태로 각 부처 전담기관을 통해 시도별 지역혁신관련 기관 등에 지원
- 또한, 부처별·사업별 칸막이식 운영으로 사업효과가 저조함에도 지역별로 지역혁신·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없이 중앙부처 주관의 계획(지역산업진흥계획(중기부), 지방과학기술진흥시행계획(과기부), 산업교육 및 산학연협력 기본계획(교육부) 등)이 개별적으로 수립·실행됨에 따라 분절화 상황이 지속됨
 - 지역 차원에서 중앙부처 지원 사업별로 타깃 산업을 별도 지정(일부 시도의 경우, 10개 이상의 타깃산업 지정)하고 있어,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지역산업 육성 성과가 크지 않음
- 이에 균형위는 (2019.8월) 지역혁신체계개편방안 심의, (2020.5월) 제1차 지역혁신성장계획(2021년) 의결, (2020.11월) 지역혁신성장계획 법정화를 위한 균특법 개정안 발의 등의 절차를 거쳐, 지역 수요·특성에 근거한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중앙부처가 주도하는 사업기획·집행·평가 방식을 지자체가 주도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
 - 지역혁신체계개편방안(2019년 8월)에 근거하여, 지역혁신사업을 지역이 주도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혁신사업들을 실질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균형위 주관하에 시도별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
 - 이후, 시도별 지역혁신성장계획(안)에 대한 균형위 주관의 (다수의 지역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한)컨설팅(2회)을 거쳐,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을 확정(2020년 5월)

〈그림 3〉 지역혁신성장계획에 기반한 지역혁신체계 개편방향



*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19: 12)

■ 추진 경과

- ‘지역혁신체계개편방안’ 제18차 균형위 본회의 의결(2019년 8월)*
 - 지역 단위에서의 혁신성장전략 기획 및 실행을 지자체 주도로 추진하고, 중앙부처는 이를 지원·협력하는 종합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이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추진과제로서 지역혁신성장계획 도입, 지역혁신거버넌스 강화, 대학기반 혁신지원체계 운영, 지역혁신활동지원서비스 체계 강화 등이 제시됨
- 시도별 혁신성장계획(안) 컨설팅 실시(2020년 2~3월)
 - 시도 주도로 작성한 ‘지역혁신성장계획(초안)’이 제출(2020.2)됨에 따라 균형위(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는 시도별 지역혁신전략산업 등을 고려한 전문가 컨설팅단을 구성하고, 2차례의 대면 컨설팅, 수시 자문 등을 시행함(2020.2~3)
- 지역혁신 신규사업 심의위원회 개최(2020년 4~5월)
 - 시도별 지역혁신성장계획(안)을 통해, 시도가 자체 발굴한 (기존 지역혁신사업의 공백분야에 해당하는)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지역혁신성장계획과의 정합성, 사업내용 등 4개 분야 13개 세부 지표에 따라 전문가 심의를 진행함
-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 제23차 균형위 본회의 의결(2020년 5월 27일)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시도별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안)’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함

*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18~’22)」에서 “지역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지역발전투자협약)”, “자립적 혁신성장 기반 마련” 등의 구현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의 3개 부처가 각자 개별적으로 지역 주도의 혁신체계 개편방안을 마련·제시하였고, 균형위는 2019년 6월 3개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각 부처의 개편안을 통합한 ‘지역혁신체계개편방안’을 2019년 10월에 발표함.

- 지역혁신성장계획 법정화를 위한 균특법 개정안 발의(2020년 11월 23일)
 -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계획 평가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반영(제7조의2 신설 등)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함
- 2021년 지역혁신성장계획 성과관리 평가체계 마련(본회의, 2021년 1월)
- 2022년 지역혁신성장계획 평가지침(2021년 계획의 실적평가) 마련(본회의, 2021년 10월)
- 2021년 계획에 대한 시도 자체평가, 이에 대한 균형위 주관의 확인평가 실시(2022년 4~5월)
 -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이후 첫 번째 평가라는 점을 감안하여 성과목표 달성도 등의 결과보다는 지역 주도 추진체계의 원활한 작동 등 과정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함(※ 균형위 확인평가 결과 60점 이상은 시도 자체평가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고, 60점 미만인 시도에 대해서는 자체평가 재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 14개 시도 전체가 60점 이상으로 평가됨)
-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정책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의 제반 기능을 중단하고, 두 위원회의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임. 관련하여 균형위의 인력 조정과정에서 지역혁신성장계획의 관리·평가 업무를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함(2022년 8월)

② 지역혁신사업 총괄 개요

- 지역혁신정책은 지역균형발전정책 차원에서 중앙부처들이 다양한 정책목적을 구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균특회계 자원 기반의) 각종 재정사업과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제도를 총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지역혁신정책은 지역R&D(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가 균특회계 재원으로 추진하는 R&D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기업지원 등 비R&D사업 포함)들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지역R&D사업은 ①(목적)지역기업 성장지원, 지역산업 육성, 지역과학기술 진흥 등을 달성하기 위해, ②(주체)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상향식)하고 지역기업 등 지역혁신주체들이 세부과제를 수행하여, ③(효과 제한성)수행 지역에 성과가 집중되는 사업으로 정의함
- 광의(지역혁신을 위한 기반조성, 투자유치 등의 사업까지 포괄할 경우)로는 산업부(지역산업 육성, 지역투자 촉진, 지역거점 조성 등), 중기부(지역기업 혁신·성장지원, 창업생태계 조성 등), 과기부(지역과학기술 진흥), 교육부(지방대학 육성, 산학연협력 촉진), 국토부(지역교통 기술개발 등), 고용부(사회적기업 육성, 지역고용 촉진), 환경부(환경기술 보급), 농진청(지역농업연구기반 조성) 등과 같이 지역혁신 추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이 총 79개(2023년 정부요구예산 기준)임

-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고용부, 국토부, 환경부, 농진청 등 8개 부처의 재정 투입규모는 3조 2,018억원(2023년 정부요구예산 기준)으로 전년대비 비슷한 수준임
- 지원계정 사업과 연동하여 제주계정과 세종계정으로 개별 분리하여 예산편성하고 있는 사업(예: 지역특화산업육성(지원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등)이 일부 존재하는 바, 이같은 사업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을 경우, 지역혁신 관련 실제 사업 수는 60여 개 정도임

〈표 9〉 중앙부처별 주요 지역R&D사업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 • 연구개발특구육성(R&D) •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R&D) • 수출용신형연구로 개발 및 실증(R&D) • 혁신원자력연구개발기반조성 •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R&D) • 지역SW산업진흥지원 • 산학연협력 활성화 지원(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특성화 기반구축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R&D) •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비R&D) •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R&D) • 사회적경제 혁신성장(비R&D) • 지역협력혁신성장(R&D) • 지역투자촉진 • 초광역협력 시범사업(3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특화산업육성(R&D, 비R&D) •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지원 • 규제자유특구(4개, R&D, 기반조성) • 산학연Collabo R&D •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 • 지역중소기업공동수요기술개발 • 창업인프라지원 • 세종산업기술단지(TP) 조성

* 출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URL: www.openfiscaldata.go.kr, 검색일: 2022.11.20.)

- 한편, 지역혁신성장계획(균형위 주관)의 대상인 지역혁신사업은 〈표 10〉의 지역R&D사업 중에서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지원, 지역SW산업진흥지원(이상 과기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비R&D),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이상 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특화산업육성(이상 중기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산학협력고도화지원(지역선도대학육성)(이상 교육부) 등 13개 사업임
- 2021년 지역혁신성장계획(2020년 실행) 수립 당시에는 11개 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2021년 상반기에 14개 시도 대상의 수요조사, 관련 부처 협의·검토 등을 거쳐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산업부), 지역SW산업진흥지원(과기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교육부) 등 3개 사업을 추가반영하여 14개 사업을 대상으로 2022년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함
 - 균형위는 연구용역(지역주도형 지역혁신사업 관리·운영방안(2020년))을 통해 지역혁신사업의 추가 대상 사업을 검토한 결과,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R&D),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 규제자유특구실증기반조성(이상 중기부),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산업부), 연구개발특구육성(R&D), 지역SW산업진흥지원(이상 과기부),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고용부) 등 8개 사업을 발굴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상기와 같이 3개 사업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됨

- 2023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은 산업부 1개(사회적경제혁신성장(R&D))이 2022년 종료됨에 따라 총13개 사업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것으로 계획함
 - 산업부 사회적경제혁신성장(비R&D) 사업의 경우, 내역사업인 사회적경제혁신성장이 2022년에 종료됨에 따라 잔여 내역사업인 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 한정하여 계획을 수립하게 됨

〈표 10〉 중앙부처 지역혁신성장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부처	회계	세부사업(내역사업)	비목	2022년 예산액	2023년 요구액
교육부 (2)	균특	산학협력고도화지원(지역선도대학육성)	출연	5,000	3,300
	균특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출연	244,000	304,000
과기부 (4)	균특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출연	20,951	23,874
	균특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지원	보조	5,700	23,467
	균특	지역균형발전 SW·ICT 융합기술개발	출연	10,580	-
	균특	지역SW산업진흥지원*	출연/보조	16,564	13,828
산업부 (6)	균특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출연	78,458	83,943
	균특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출연	9,000	9,000
	균특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	출연	163,632	152,693
	균특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R&D)	출연	11,244	9,244
	균특	사회적경제혁신성장	출연	25,063	21,000
	균특	사회적경제혁신성장(R&D)(※'22년종료)	출연	2,871	-
중기부 (2)	균특	지역특화산업육성*	출연	89,057	87,990
	균특	지역특화산업육성+(R&D)*	출연	113,206	118,914
총 계(14)				792,455	851,253

* 출처: 기획재정부 열린재정(URL: www.openfiscaldata.go.kr, 검색일: 2022. 1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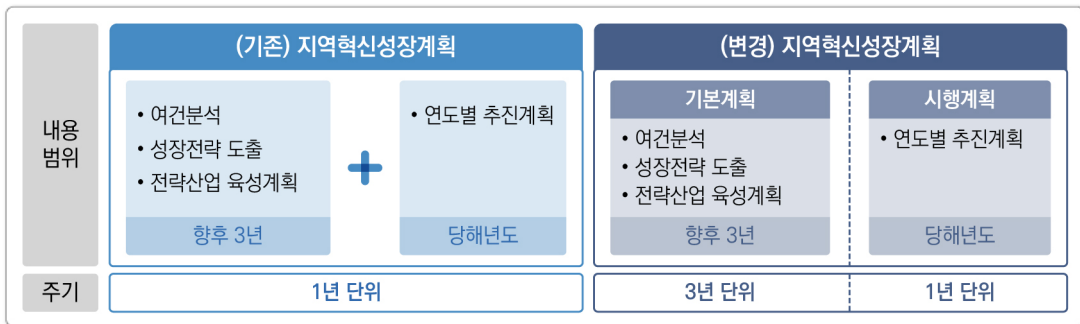
** 지역SW산업진흥지원,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역특화산업육성+(R&D) 등 4개 사업은 각각 3개 계정(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 세종사업)의 예산을 합산

- 한편, 균형위(2022년 2월)는 ‘2023년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방향’과 ‘2021년도 지역혁신성장계획 평가계획’을 함께 마련함. 2023년 지역혁신성장계획의 경우 계획의 안정적 추진, 계획 수립 효율성 및 시·도 부담* 등을 고려하여 계획수립 체계를 변경하기로 함
 - 지역혁신성장계획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구분하고, ①기본계획은 3년 주기로 지역혁신성장 여건

* 2021.6~7월의 지자체 권역별 간담회(7개 권역 17개 시·도)에서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주기 변경, 간소화 등의 지역의견이 다수 제시됨.

분석(지역산업·기업 현황 등), 지역혁신성장전략 도출, 지역혁신전략산업별 육성계획(연차별 성과목표·추진과제, 혁신산업별 육성계획) 등으로 구성된 시·도별 지역혁신전략산업별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②시행계획(기본계획에서 수립한 지역혁신전략산업별 육성계획에 따른 당해 연도 추진계획)은 1년 주기로 해당 연도 사업별 지원계획 총괄, 신규사업 등을 매년 제시하기로 함

〈그림 4〉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체계 변경안(22.2. 기준)



*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22: 3)

** 2022년 지역혁신성장계획(‘21.5월)에서 수립한 ‘22~’24년(3년간) 기본계획(여건분석, 성장전략 도출, 전략산업 육성계획)을 ‘24년까지 유지하고, 2023년 지역혁신성장계획은 ‘23년 추진계획만 수립

- 지역혁신성장계획의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지역혁신전략산업별 육성계획(3년 주기) 수립 대상 지역혁신사업의 경우 지자체·부처 협의·검토를 거쳐 3년 주기로 변경, 추가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정함

2) 지역혁신사업별 추진 현황*

① (과기부)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 (사업목적) 지역의 R&D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혁신생태계 및 플랫폼 구축 지원

-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지역별 R&D 전담기구인 연구개발지원단의 정책 지원을 통하여 지역의 자체적 R&D 역량 향상 및 효율성 제고 추진
 - 2007년 착수 당시 4개 시도의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을 지원하는 것에서 시작하였으나, 점차 지원대상 지역을 확대하여 2017년부터는 17개 시도 전체를 지원하고 있음
-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지역발전에 필요할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의 미래 먹거리 창출 및 지역 산·학·연 R&D 생태계 구축

* 지역혁신사업(13개)의 2023년 예산요구서 등에 근거하여 요약·정리함.

- 지역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목적으로 자체 기획한 ①기초·원천기술 개발(3년) 및 ②사업화R&D(2년)를 최대 5년간 지원함. 아이디어 발굴, 과제 기획, R&D 등 (중앙 주도 및 단기 과제 중심의 타 사업과의 차별화를 위해) 소주기를 지역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지원함(2020~2024년 3개 사업단, 2021~2025년 3개 사업단)
-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지원) 5개 권역별 대학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Open-Lab을 구성하여, 지역기업에 대학 보유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
 - 지역 기업에 대학 보유기술 이전 및 사업화(사전기획 3개월 + 본사업 1.5년) 지원을 2020년부터 추진

〈그림 5〉 연구개발지원단(17개 시도)의 5대 기능

5대 기능	필수 수행과제	시·도별 연구개발지원단 현황
지역 과학기술 정책 기획지원	지방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시행계획 수립	
	지역 내 과학기술정책 기획·발굴	
	지역과학기술위원회 운영	
지역R&D 조사·분석	지역 R&D사업 과제 조사·분석	
	지역 R&D사업 성과 조사·분석	
지역R&D사업 기획·평가·관리	지역 R&D사업 기획	
지역R&D사업 정보 제공	통계자료 및 성과확산	
지역네트워크 구축	지역과학기술혁신협의회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 22)

② (과기부) 연구개발특구 운영 및 인프라지원

- (사업목적)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기술 사업화와 산·학·연 교류·협력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연구개발특구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개발특구 조성·운영 및 관리의 수행 주체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기관의 운영비를 지원
- (특구 기반시설 구축) 대덕·전북·부산 연구개발특구 내 창업지원 시설 등의 조성에 지자체 보조사업(국비 50%, 지방비 50%)으로 설계비, 건축비 등을 지원(2009년부터)

* 연구개발특구(2023년 요구예산액 1,283억원)는 2019년 지역혁신성장계획의 가이드라인 작성 시 과기부 요청으로 지역혁신성장계획의 대상 사업에서 제외됨.

- (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 대덕, 광주, 부산, 대구, 전북 등 5개 연구개발특구 사업을 수행하는 특구본부(대덕)와 지역본부의 운영비를 지원

③ (과기부) 지역SW산업진흥지원

■ (사업목적) 지역 수요기반의 강소SW기업 육성으로 지역의 SW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내역사업으로 ①(지역주도SW성장지원) SW산업이 열악한 12개 광역시도 대상으로 지역의 SW정책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SW정책기획 지원 및 지역SW기업 수요기반 맞춤형 기업지원(마케팅, 네트워크, 컨설팅 등), ②(지역SW서비스사업화) SW산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SW산업 기반조성 및 SW서비스의 국산화·제품화·사업화 등 지원(이상 2개 내역사업은 2006년부터 시행), ③(지역SW품질역량강화) 지역SW품질역량센터(공인(KOLAS, GS 등) 인증·시험기관 지정 및 확대를 통한 SW품질테스팅 전문기관 위상 확립)를 통해 지역 중소SW기업의 지역SW품질테스팅 및 컨설팅 지원, ④지역SW사업 운영 및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④ (과기부) 지역균형발전 SW·ICT 융합기술개발

■ (사업목적)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여 SW·ICT 기술을 활용해 해결하는 주민참여 기반 R&D 추진체계(SOS랩)를 마련하고, 지역 맞춤형 SW서비스 및 ICT융합 디바이스 개발·확산 지원

- 내역사업으로 2019년부터 ①(SOS랩 운영 및 SW서비스 개발) 지자체 주도 SOS랩을 운영하여 지역 현안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R&D 환경 구축·운영 지원, ②(ICT융합 디바이스 개발) 지역주민 생활문제 해결 및 중소 디바이스 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분야 맞춤형 지능형 디바이스 개발 지원, ③(SOS랩 전문성 강화) 지역현안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SOS랩 컨설팅·교육, SW서비스 개발 및 성과 확산 등을 추진
 - (SOS랩 운영 현황) 대전(시민생활안전(청각장애,노인복지,화재예방,악취)), 전북(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경북(지진·재난안전), 충북(도시안전(배출가스, 유해화학물질)), 부산(해양(안전·환경·도시문화)), 경남(사회안전(교통, 위생, 시설)), 전남(사회적격차(교통, 문화, 소통, 환경)), 인천(아동안전(교통, 보육, 교육, 성범죄))

⑤ (산업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 (사업목적)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주도 성장을 위하여 지역별 특성화된 혁신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의 자립적 성장체계를 구축
 - 내역사업으로서 ①(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원)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기존 거점을 연계하여 혁신프로젝트(성과완성형 및 수요맞춤형 R&D과제) 추진을 통해 지역 혁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②(이전 공공기관 연계육성)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혁신주체를 연계하여, 지역 내 산학연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고자 OpenLAB연계형 및 공공기관연계형 R&D 추진

〈표 11〉 시도별 혁신프로젝트 추진분야

시도	프로젝트		시도	프로젝트	
울산		초소형전기차용 전장-의장부품	충남		대형수소전기화학차 부품개발 및 실증
경북	미래차	전기차 5대 핵심부품	광주	에너지 신산업	분산전원 연계 빌딩 전력시스템
세종	항공	도심형 자율주행셔틀 서비스 기반	전남		산업단지 분산전원 마이크로그리드
경남		민수항공기 부품 설계-제작 기술	충북		에너지 효율향상 첨단부품
대구		치과용 맞춤형 의료 기기솔루션	부산	ICT 융합	스마트해양 플랫폼 및 서비스
강원	바이오	개인맞춤형 홈케어 시스템	대전		복합생활공간 안전 서비스 플랫폼
전북	헬스	스마트팜 및 고부가전락식품			
제주		개인맞춤형 기능성 화장품			

* 출처: 산업부(2022: 21)

⑥ (산업부)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

- (사업목적)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와 연계된 비R&D사업으로서,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대상으로 ①(네트워크 지원) 혁신클러스터 내 기업·기관 유치, 산·학·연·관 간의 네트워킹 지원 및 사업성과관리 등, ②(글로벌 연계) 혁신클러스터 내 新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기업과 기술협력 지원, 공동R&D발굴 및 지역기업의 해외시장진출 지원, ③(기업지원) 시작품·시제품 개발, 비즈니스모델 개발, 마케팅 및 컨설팅 등 수요자 맞춤형 사업화 지원

⑦ (산업부)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

- (사업목적) 지역의 연구기관, 대학 및 테크노파크 등 지역혁신기관의 R&D인프라 확충을 지원하여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플랫폼의 역할 수행을 촉진(2019년 예타면제)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실행 계획에 따라 2020~2025년 동안 총 100개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
 - (스마트특성화산업 선정, 과제 유형별 차별화 지원) 스마트특성화 전략을 기반으로 지역여건을 분석하여 56개 산업거점 선정(시도별 4개) → 기존유형(고도화·다각화 전환을 위한 혁신기반 촉진형, 미래산업 창출형)은 ‘스마트특성화 전략산업(56개)’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유형(초광역 협력형)은 ‘스마트특성화 전략산업(56개)’이외 산업도 신규신청 가능함(2022년 사전검토지침 기준)
 - (장비구축 고도화) 비수도권의 56개 산업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기반이 정비될 수 있도록 연구 장비 이전·업그레이드, 확충 등을 지원(※2020년부터 2022년까지 77개 과제(비수도권 14개 시도)의 267개 혁신기관 참여) 선정

⑧ (산업부)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R&D)

- (사업목적) 산업단지내에 대학캠퍼스와 기업연구소를 조성하여 산업 현장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취업이 선순환 되는 체계 구축
- 내역사업으로 ①(산학융합기반조성) 2019년에 신규 선정한 4개 지구(광주, 경북(경산), 강원(원주), 충북(진천·음성))를 대상으로 산학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건립을 지원하고 있음
- ②(산학융합촉진지원 - 조성완료 13개 지구, 조성중 4개 지구 등 총 17개* 지구 대상)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가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하고, 대학생의 현장맞춤형 교육과 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기업성장 촉진
 - 17개 지구의 미래융합 신산업 분야에 문제해결형 산학협력프로그램과 대학교육과정을 연계하는 산학협력 쏠주기 인력양성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인재를 적시에 공급

* 산학융합지구 선정(누적) : ('14년) 8개, ('15년) 10개, ('16년) 13개, ('19년) 17개, ('20년 이후 신규지구 지정 없음)

⑨ (산업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 (사업목적) 지역 사회적경제 기업·지원조직의 협력·네트워킹·혁신에 필요한 통합거점 조성
→ 사회적경제 기업 쏠주기 성장 지원

- 2023년부터는 내역사업으로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회적경제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사업화 지원)’이 2022년에 종료됨에 따라 잔여 내역사업인 ‘사회적경제 혁신타운’에 대해서만 지원
 - 사회적경제 기업의 혁신역량 강화 및 다양한 지역자원과의 연계 촉진을 위한 거점으로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을 지원하여, 이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공동체 복원 등 정부와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 해결 도모

⑩ (중기부)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사업목적) 지역 주도로 지역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및 지역스타기업 중점 육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2019년 예타면제, 총사업비 1조 3,154억원)

- (지역 주력산업 육성) 14개 시도 지자체에서 지정한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 지원(2020~2025년 6년간)
 - 비수도권 14개 시도에서 자체 선정한 융복합 중심 지역주력산업의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 중인데, 2022년 11월 현재 중기부에서는 주력산업의 디지털전환,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의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주력산업 개편(현재 및 미래 주력산업의 별도 선정 등)을 추진
- (지역 스타기업 육성) 성장성 및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4개 시도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 스타기업(시도별 100여개)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R&D 지원
 - 전담PM 매칭을 통해 기업성장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을 위해 필요한 해외시장 진출형 R&D 과제 기획 지원

〈그림 6〉 시·도 지역주력산업('22년)



* 출처: 중기부(2022: 8)

⑪ (중기부) 지역 특화산업 육성(비R&D 기업지원)

■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육성+(R&D)와 연계 추진되는 비R&D(기업지원) 사업으로서, 지역 기업에게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특허, 인증, 마케팅, 디자인 등을 지원하여 신규일자리 창출 및 지역기업 혁신성장을 도모(2013년부터 시행중)

- 내역사업으로 ①(시도기업지원) 전국 소재 지역혁신기관 전문역량을 활용하여 지역주력산업 전·후방 연관 분야 중소기업 성장 지원, ②(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 전국 소재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의 산업기획, 기업지원 플랫폼 기능 강화 지원
 - (시도기업지원의 내역사업) 지역주력산업 기업지원(46개 주력산업 분야 지역기업 등에 시제품 제작, 기술지도, 특허, 인증, 마케팅, 디자인 등 지원), 시군구연고 산업육성(시도 주력산업에서 소외받는 시·군·구 영세기업의 사업화 및 애로기술 해소지원을 통해 낙후지역의 활성화 지원), 지역스타 기업육성, 수출새싹지원 등을 추진
 -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강화) ①지자체 주도의 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 지역기업 육성전략 수립, 데이터 통계기반 구축 등의 정책기획 기능 지원, ②기술교류네트워크 운영, 비R&D 총괄연계, 지역연구장비 허브기관 운영 등의 기업지원플랫폼 기능으로 구분됨

⑫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 (사업목적) 비수도권 지역(14개 시·도)의 혁신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제약 없이 실증,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도입. 14개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신청할 수 있으며, 민간기업 등은 관할 시·도지사에게 특구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할 의무가 있음
- 타 부처 규제샌드박스가 지역이 아닌 개별 기업 단위인데 비해 중기부 소관의 규제자유특구는 세계최초로, 新산업 쏠분야에 걸쳐 지역 단위의 인프라 등을 활용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를 지정·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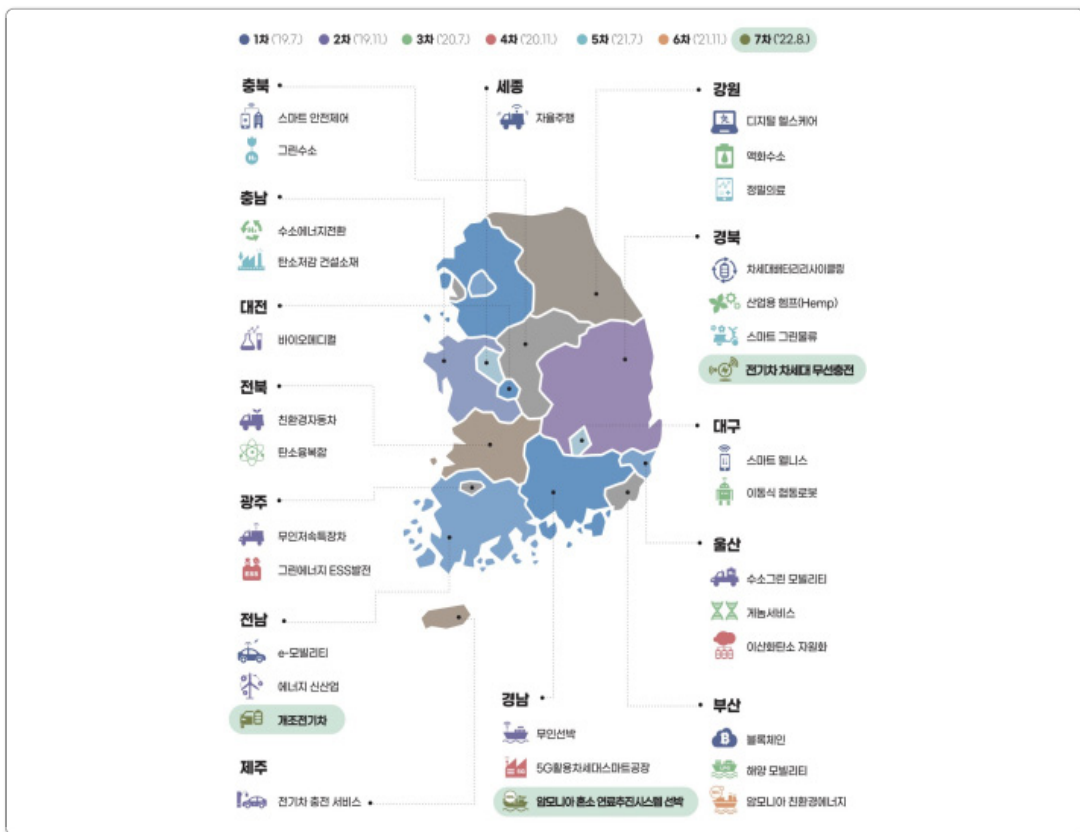
〈표 12〉 타부처 규제샌드박스과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의 비교

구분	타부처 규제샌드박스	지역특구법(규제자유특구)
공통점	● 규제 샌드박스 적용 (신속 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	
차이점	● 기술 중심 개별규제 완화	● 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규제 완화
	-	● 메뉴판식 규제특례 적용(201개)
	-	● 재정·세제 지원
	● 기업 신청	● 시·도지사 신청
	● 전국대상	● 비수도권 대상
	● 위원회 위원장 : 소관부처 장관	● 위원회 위원장 : 국무총리

* 출처: 김권식(2020: 17)

- 규제샌드박스(규제혁신 3중세트)
 - (규제 신속확인) 규제자유특구 안의 기업들은 규제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사업 관련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음
 - (실증을 위한 특례)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시험·검증을 하고자 하는데 소관 법령이 없거나 기존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경우에 일정기간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사업 추진
 - * 기업들이 시·도지사에게 실증특례를 요청하면 관계부처의 검토 및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특례 지정(2년 이내, 1회 연장 가능)
 - (임시허가) 규제자유특구 안의 기업들은 신제품이나 서비스의 안전성이나 기술 검증을 완료하였으나, 허가 기준이 없거나 맞지 않은 기준을 적용하여 출시가 안될 경우에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아 판매 가능
 - * 임시허가가 필요한 기업들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관계부처 검토 및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최대 2년, 1회 연장가능, 법령 정비시까지 기간 연장)를 받을 수 있음
- 2019년 7월 23일 1차 규제자유특구를 시작으로 7차 규제자유특구(22년 8월)가 지정되어 총 32개의 특구를 지정

〈그림 7〉 제7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자유특구 홈페이지(URL: <http://rfz.go.kr/>, 검색일: 2022. 11. 22.)

⑬ (교육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 (사업목적)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대학 혁신’과 ‘지역혁신’을 함께 추진하기 위한 (지역인재가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지역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인재양성에서부터 취·창업, 정주 등이 선순환하는) 혁신체계 구축
- 지자체, 대학 및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①플랫폼(6개 권역의 플랫폼 : 복수형 4개, 단일형 2개)을 구축하여, ②지역의 중장기 발전목표에 부합하는 지역의 핵심분야를 자체 선정하고, ③지역 내 대학들이 핵심분야와 연계하여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지역혁신기관과 협업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것을 지원 (2020년부터 착수하였으며, 플랫폼당 5년(3+2년)간 지원)

〈표 13〉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플랫폼(6개)의 핵심 산업분야

권역(시도)	핵심 산업분야
광주·전남	에너지신산업, 미래형운송기기
울산·경남	스마트제조엔지니어링, 스마트제조ICT, 스마트공동체, 미래모빌리티, 저탄소그린에너지
충북	제약바이오, 정밀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
대전·세종·충남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모빌리티 ICT
강원	정밀의료,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수소에너지
대구·경북	전자정보기기, 미래차전환부품

* 출처: 교육부(2022a: 1; 2022b: 3)

⑭ (교육부) 산학협력고도화지원(지역선도대학육성)*

- (사업목적) 지방대학-지자체-공공기관-산업계가 협력하여 지방 소재 공공기관의 인력수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지역에서 취업 후 정주하는 인력양성 체계구축으로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 토대 마련
- 지방 공공기관 및 유관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융합전공, 공공인재트랙 등) 운영으로 우수 지역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컨소시엄 지원(2014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7개 컨소시엄을 지원 중이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과 단계적 통합 추진 중임)
 - 컨소시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교육환경 개선비, 실습기자재 구입비 및 참여 학생 장학금 등 지원

* ①3단계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LINK 3.0), ②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③대학 창의적 자산 실용화 지원(BRIDGE+), ④대학 산학협력단지 조성 지원, ⑤산학협력 인프라 구축, ⑥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⑦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7개 내역사업으로 구성

3. 시사점 및 평가

1) 역대 정부별 진단 및 평가

① 노무현 참여정부

- 수도권과 지방의 발전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분권-분산 발전모델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연구개발특구 조성, 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등을 통한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의 산업기반과 자립적 성장기반 구축 등을 추진한 결과, 지역간 불균형 해소의 전환점을 마련
 -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재정투자(균특회계 규모: 2005년 9.5%, 2006년 7.5%, 2007년 15% 증가) 확대로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
 - 4+9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지역산업 거점(산업단지,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연구개발특구 등) 확충, 혁신·기업도시 개발 등을 통해 산업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한 결과, 비수도권 제조업의 생산과 생산성이 동시에 상승하고, 또 지역내 총생산 비중 및 수출 비중이 증가하는 성과를 실현
 -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 비중 변화: 51.3%(2002년) → 52.6%(2005년)
 - 비수도권 수출 비중 변화: 56.7%(2001년) → 67.2%(2005년)
- 다만 시·도 중심으로 지역산업정책이 추진되어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역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한계

② 이명박 정부

- 광역경제권에 기반한 정책(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를 설립, 5+2광역경제권 선도산업육성과 인재양성사업, Post 4+9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등) 추진으로 광역적 산업생태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토대로 지역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지역별로 구축된 혁신인프라를 활용, 유망상품의 사업화 단계의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산업의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
 - 제품개발 및 공정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기술의 이전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기술이전 실적기관 수도 2007년 118개에서 2012년 197개로 급증

- 다만, 광역경제권 정책이 기존 행정구역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여 광역경제권 내 시·도간 융합이 미흡하였고, 지역기업에 우수인력을 양성 공급해야 할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및 실질적 협력 체제가 미비하여 선도산업 육성의 추진력이 저하되는 한계

③ 박근혜 정부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중점을 두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했고, 창조경제 활성화를 지역과 연계하여 지역의 신성장동력 발굴에 기여
 - 시·도간 경제협력관산업과 시도별 지역특화(주력)산업을 선정하고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화 서비스 제공하는 한편,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연구개발지원단 등 지역별로 특화된 연구개발 거점을 토대로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활성화에 노력
- 다만, 지역의 미래 먹거리로서 신성장동력 창출 전략은 재정투자의 부족 및 분산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바가 다소 저조하였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

④ 문재인 정부

-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으로 지역산업 위기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6개) 및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선정(3개)으로 지역산업의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회복의 토대를 마련
- 그러나, 지역산업정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균형발전정책에서 지역산업정책의 위상이 크게 축소되었고, 그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적 격차가 더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
 -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체계가 이원화(산업부, 중기부)되어 지역산업육성 중심에서 기업(중소·중견)육성 중심으로 정책대상이 변경되고, 참여정부(지역격차 해소), 이명박정부(경쟁력 강화) 등의 역대 정부와 비교해 볼 때 지역산업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한계
 - 지역산업육성 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산업정책(산업부·중기부), 산업입지정책(산업부·국토부), 산업인력정책(교육부·고용부), 지역과학기술정책(과기부) 등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나 관련 정책 간의 연계성이 부족

2) 지역혁신사업(균특회계 기반) 추진체계 진단 및 평가

■ 지역혁신 관점에서 본 정책 전달체계는 총괄조정-중앙부처-전문관리기관-지역혁신기관-지자체 및 지역전담조직-지역혁신주체 등으로 나타나며,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른 형태로 구체화

■ 총괄조정 기능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자문기구.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국가균형발전계획, 국가균형발전시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조정, 국가균형발전지표의 개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 산업부, 국토부 등으로 구성된 국가균형발전지원단외 시·도, 시·군·구 지원조직으로 지역혁신협의회를 두고 효율적 자문을 지원
 - 과학기술혁신본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 과학기술정책 총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심의·조정 및 성과평가 기능을 담당하며, 재정 투입 관점에서 지역혁신사업을 기획재정부의 위탁받아 총괄 조정
 -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조정 및 심의를 위해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설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 제4항)
 - 지자체 및 지역혁신전담조직
 - 대부분 지자체의 경우 지방과학기술진흥조례에 따라 과학기술과(경기), 과학기술정책과(경북), 미래성장과(충남), 미래산업정책과(광주) 등 광역지자체의 과 단위에서 지역혁신정책을 추진
 - 중앙부처와 산하 전문관리기관, 지역혁신기관 등의 복잡한 거버넌스 속에서 해당 사업의 예산편성에 따라 분절적인 구조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내 과학기술·혁신 정책의 종합 조정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의 필요성 확대
 - 일부 지자체는 지역과학기술 전담조직을 두고 과학기술 혁신정책과 전략 수립, 사업기획·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역혁신 전담기관 신설 또는 기존 기관의 확대개편 시도
- * 경기(2010년 GSTEP 설립, 2017년 GBSA로 통합), 부산(BISTEP), 대전(DISTEP), 충남(CIAST) 등

〈그림 8〉 주요 지역혁신사업과 중앙-지역 거버넌스

총괄 조정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과학기술혁신본부	
	시도 지역혁신협의회(지역)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내)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중앙부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 관리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주요지역 혁신기관	대학별 산학협력단	연구개발지원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연 지역조직	지역사업평가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테크노파크(TP) 지역창업센터 지방 중기청
지역(혁신)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지방과기진흥조례에 따라 과학기술과, 미래산업과 등에서 담당) 지역과학기술전담기관(경기, 부산, 대전, 충남 등) 			지방 소재 대학, 지역 기업, 연구소 등
주요사업 ('21년 총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대학협력기반 지역 혁신사업(2,439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특구육성(R&D) (1,419억원) 지역연구개발혁신지원 (233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특성화기반 구축(R&D) (1,605억원)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R&D) (1,532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육성(R&D) (1,627억원), 규제자유특구실증 기반조성(R&D)(502억원) 지역특화산업 육성+(R&D) (2,563억원)
법적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대육성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기본법 연구개발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특구법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기반 (지역혁신플랫폼) 구축 목표 교육혁신과 지역혁신의 선순환 체계 조성 (예.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형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목표로 (강소)특구의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지원 자생적 지역혁신생태계 구축을 위한 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마트특성화 전략을 바탕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목표 지역별 신기술개발·전후방 연계산업 육성을 위해 R&D 프로젝트(컨소시엄)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구 내 규제특례 적용 후 신기술 실증R&D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주력산업, 지역스타기업 육성

* 출처: 저자 작성

■ (지역혁신사업 간 연계 부족) 지역R&D의 부처별 분절적 지원체계 → (지역혁신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하는 지역 차원의 전담기관 부재 →) 지역의 사업 수행기관별로 독립적 추진 → 이로 인한 지역혁신사업 간의 유사·중복 및 성과미흡 초래 등의 비효율이 발생

- 산업부(R&D, 기반구축, 지역투자), 중기부(지역중소기업R&D, 산학협력R&D, 지역혁신기관(TP,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기반 구축), 과기부(연구개발(강소)특구, 연구개발지원단) 등 관련 부처간 칸막이식 사업구조가 지속됨
 - 지역R&D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기관(産(지역기업), 學(지역대학), 硏(RIS기관 -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연구개발특구본부, 지방과학기술진흥센터 등, NIS기관 - 출연연 지역분원, 전문연 등))이 다수 설립·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 대한 총괄기능(정책기획, 사업관리조정, 평가 등)은 TP정책기획단(중기부), 연구개발지원단(과기부), 지역사업평가단(산업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 2020년 지역혁신성장계획(11개사업)을 수립하여 2021년부터 시행하였으나, 지역 주도의 통합적 추진 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이 실행되지 못하여 성과를 실현하는 데 실패함

- (지역혁신기관의 역할 중복성) 지역혁신사업을 수행하는 RIS기관(지역혁신체계 관점의 기관, 즉 시도테크노파크 등) 및 NIS기관(국가혁신체계 관점의 기관, 즉 출연(연) 지역분원 등)의 과도한 확대 → 지역혁신기관 간 역할·기능의 중복 심화 → 지역혁신기관의 자립운영 약화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관련 기관간 협력보다는 과잉 경쟁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임
- 지역혁신사업을 수행하는 NIS기관(출연(연) 지역분원 등)은 지역에 신규 설립 시 부지매입·건축 비용을 지자체에서 부담하였음에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과 지원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역의 비판적 시각이 존재(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 지역의 기반구축사업이 지역의 타깃산업에 기반한 산업·과학기술 현장 중심의 수요 및 종합적 검토 없이, 지역혁신기관의 자립 운영기반 확충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상당수 존재

〈표 14〉 지역혁신기관별 주요 수행기능 현황

부처	지역혁신기관	R&D		비R&D					
		연구 개발	기술 지원	교육 훈련	창업 지원	경영 지원	네트 워킹	장비 활용	자금 지원
산업부	지역사업평가단 (13개)	지역혁신기관 수행 지역산업진흥사업 평가관리							
	지역혁신센터(자립) (20여개)	●	●	△	△	×	×	●	×
	산업단지클러스터(MC) (90개)	×	×	×	×	×	●	×	×
	지역특화센터(독립) (23개)	△	●	●	△	△	△	●	×
	지자체연구소 (19 → 13개)	●	●	×	△	△	×	△	×
	산학융합원 (13개)	●	●	●	△	×	●	●	×
과기부	과학기술진흥센터(SP) (10개)	●	×	△	×	×	●	△	×
	연구개발지원단 (17개)	×	×	×	×	×	△	×	×
	연구개발특구본부 (5개)	●	●	△	△	△	●	×	×
중기부	테크노파크(TP) (19개)	△	●	●	△	●	△	●	×
	지방중기청 (12개)	×	×	×	×	×	×	△	●
	중소기업진흥공단(지역본부)	×	×	△	△	△	×	×	●
	창업보육센터 (263개)	×	×	×	●	△	×	×	×
	창조경제혁신센터 (19개)	×	△	×	●	△	×	×	×
특허청	지역지식재산센터 (27개)	×	●	△	×	×	×	×	×

* ● : 중점기능, △ : 부가기능, × : 기능 없음

*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20: 180)

- 뿐만 아니라 국가혁신체계 차원의 목적(신성장·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시장 선점)과 지역혁신체계 목적(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의 기반구축사업 간의 차별성이 미흡하여 연구장비·시설 확충을 위한 지역혁신기관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문제점이 있음
 - 2011년 이후 기반구축사업(일반회계·균특회계)의 양적 확대 → 기반구축을 통해 기관별 '자기완결형 사업체계' 구축 → 기관 사업영역의 지속 확대 → 기관간 역할·기능 중복 확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됨(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 지역혁신기관 간의 연계·협력 유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나, 기관간 기능 차별성이 미흡한 관계로 네트워크(예: 산학연클러스터협의체 등)이 형식적으로 구축·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과학기술·산업 인프라 연계 미약) 공간(거점) 기반의 클러스터정책이 2010년대 이후 크게 확대되면서 관련하여 산업부는 지역혁신클러스터(혁신도시 중심),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과기부는 연구개발특구 등 각종 경제특구*가 소관 부처별로 각기 개별적으로 추진되어 특구 성과 및 균형발전 기여도가 높지 않은 수준임
- 특히, 면적이 작은 광역시의 경우 지역기업·혁신기관 집적지 중심의 다양한 특구를 과잉 지정함에 따라 특구간 공간적 중첩이 불가피함
 -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의 실천과제로 포함되어 있거나 균특회계(지역지원계정) 재원이 투입 중인 '균형발전 목적의 특구(이하 균형발전특구)'는 우리나라 전체 특구(총 63개) 중에서 36개로, 이들 특구 간 지원인센티브의 차별성이 크지 않음

〈표 15〉 주요 특구의 지정 및 인센티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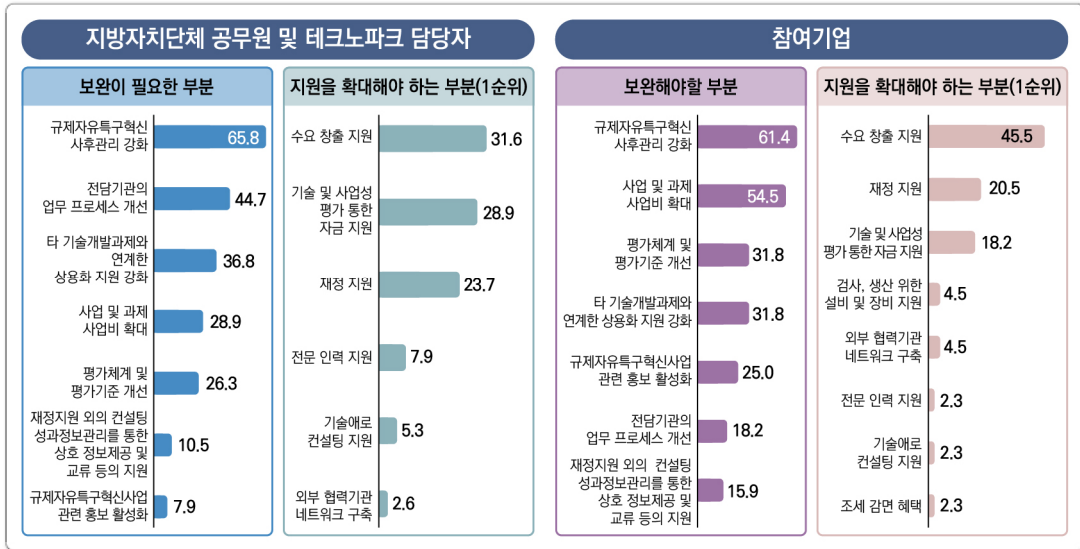
구분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	혁신도시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자유특구
지정 목적	생산시설 집적화	외투유치	수출촉진	신기술분야 외투유치	R&D 집적화	기업중심 도시 활성화	지역 성장 거점 조성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지역신사업 촉진
지정 현황	총 1,262개 국가 47개, 일반 701개, 도청 38개, 농공 476개	9개 (437km ²)	13개 (산단 7개, 32km ²)	총 111개 단지형 30개, 개별형 78개, 서비스형 3개	5개 (강소특구 14개)	5개 (109km ²)	10개	196개	32개
입주 자격	제조업 위주 국내외기업	국내외기업	외투기업	외투기업	국내외기업	국내외기업	공공기관, 국내외기업	국내외기업	국내기업
인센티브	취득·재산세 감면 조성원가 분양	법인세, 취득·재산세 감면	취득·재산세 감면 관세 면제	취득·재산세 감면 관세 감면	법인세, 취득·재산세 감면	법인세 감면	-	규제특례 등	규제특례 등

* 출처: 저자 작성

* 경제특구란 국내외 여타 지역과 차별화된 규제 완화 및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특정 분야의 민간 주체(기업,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의 활동이 자유롭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조성된 특정한 지역을 의미함.

- (지역별 타깃산업의 중복 및 과다) 주력산업, 스마트특성화산업 등 지역별의 산업 타깃팅이 과다하여 육성대상 산업 수의 적정성 미흡 → 산업당 재정투입 규모의 분산 및 소액화 → 지역혁신사업의 성과(특히, 일자리성과) 미흡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됨
 - 지역혁신클러스터대표산업, 스마트특성화산업, 광역협력권산업(이상 산업부), 주력산업, 규제자유특구 산업(이상 중기부), 혁신성장산업(균형위) 등 지역별로 10여개 타깃산업을 육성 중임
 - 지역별 타깃산업은 미래 신산업(국가적으로도 단기간에 경제적 성과를 실현하기 어려운 산업(전기·자율차, 스마트선박, 스마트의료기기, 바이오유전자치료제, 에너지신산업 등)) 위주로 선정됨에 따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단기간에 실현하기 곤란하다는 한계가 존재함(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 (지역산업생태계 형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의 체계성 부족) 균특회계 사업 및 (지역산업생태계 형성과 연관성이 있는) 일반회계 사업 간의 기능적 연계 미흡으로 지역산업생태계 강화의 실효성 미흡
 - 산업부, 중기부 등 중앙부처의 각종 지원프로그램(세부사업 기준)이 지역단위의 생태계분석(가치사슬, 공급망, 혁신자원 등) 기준으로 체계성이 미흡하고, 그에 따른 분절적 사업추진으로 인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이 저해되는 문제가 발생함
 - 공공기관의 기초·원천 연구개발 성과(일반회계) → 상용화 및 사업화를 위한 후속 연구개발(균특회계, 일반회계) → 시제품 등의 시험·분석·평가(일반회계, 균특회계) → 사업화 → 수출 등 마케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및 이어달리기 형성이 미흡함
-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수단으로서의 규제자유특구의 한계)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산업 발전의 혁신을 이끌어내는 지역혁신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역혁신체계 내의 다양한 주체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음
 - 신기술 실증 실행 이후에 사업화 및 시장출시에 대한 실질적 지원, 실증사업 수행 기업의 지역 정착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부족
 - 특구사업의 사업화 및 특구사업자의 정착에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 내에 자생적인 산업생태계가 형성되도록 인적·물적 자원 여건이 조성될 필요 있음
 - 규제자유특구가 지역혁신생태계 조성 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향후 신기술에 대한 수요 창출 지원, 기술 및 사업의 평가를 통한 자금 지원, 재정지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9〉 규제자유특구 참여 지자체 공무원/담당자 및 기업 설문조사(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 (지역혁신체계 개편의 지속성 여부) 중앙 차원의 지역혁신사업간 분절적 추진, 지역 차원의 지역혁신기관간 (역할·기능의 중복·유사성으로 인한) 협력 부족 등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였던 지역혁신성장계획이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대신할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재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나 어떤 방식으로든 “지역주도 혁신체계”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됨

*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제도개선 관련 설문조사

- 수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기간: 2022.10.24.~11.11.

- 대상: 참여기업 (70개), 규제자유특구 참여 지자체 (14개) 담당공무원, 지원기관 담당자 (14인)

- 방법: 참여기업 온라인 설문, 지자체 공무원 및 테크노파크 담당자 방문 조사

* 윤석열 정부는 기존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법률」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추진 중인데(입법예고(2022.9.14~10.24), 국무회의 의결(11.1), 국회(행안위) 제출), 새로운 법안의 주요 골자는 기존의 균형발전·지방분권 시책과 함께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의 지정·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통합적 추진체계로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임.

2

제2절 국내 지역혁신 사례

Open
Policy
Lab

제2절

국내 지역혁신 사례

1. 대전과학산업진흥원*

1) 설립 배경 및 연혁

■ 설립 배경

(1) (중앙정부) 지역혁신 주도 R&D 기획·조정 기능 강화 요청

- 과기부, 지역 중심 R&D 강화와 그 성과를 지역산업과 연계 주문
 - 지역별 R&D 기획 전담기관^{*} 설치 유도 및 R&D 포괄보조금으로 지역산업 기획^{**} ('19.5.1, 과기부 제1차관 주재, 시도부단체장 정책협의회)

* 타 시도 과학기술 전담기관 현황('19 기준)

- 독립기관 : (기설치) 서울, 부산, 광주, 경기, 충남 등
- 부설기관 : (기설치) 전북 등 다른 지자체 TP 내 5명 내외 설치

** 지자체는 부처별 R&D 공모사업 및 인프라 차중, 지역산업·혁신생태계 조성과 괴리

(2) (대전광역시) 대전 내 혁신기관의 지역산업 육성과 혁신생태계 조성 한계 극복 필요

- (필요성) 미래예측·과학기술 기반 신산업 발굴·기획 R&D 취약
 -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을 지역산업 및 공공영역에 접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가 4차산업특별시로 이행되어야 하나 성과 미흡
 - 대전테크노파크 등 출연기관은 부처별 위탁사업인 개별기업 R&D 집행에 치중하여 전반적인 지역산업 육성, 혁신생태계 조성에 한계^{*}
 - * 개별기업 R&D 지원 → 신산업 창출, 혁신클러스터 촉진 등 혁신생태계 관점 기획 필요
- (특수성) NIS와 RIS 간 연계 및 국가 혁신자원의 시 자원화 미흡
 - 대전 내 혁신자원들은 PBS(Project Based System) 하에서 정부과제 수주에 몰입하고 지역과 소통 미미
 - 국가 혁신자원과 대전 간 상시적 연결조직 부재와 시 혁신자원으로 활용 미미

* 과학기술 혁신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기획·평가, 대덕특구 혁신역량의 지역 자원화와 미래성장 동력산업의 발굴과 육성을 주도하는 전담기관(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정관 제2조)

■ 설립 개요

- (명칭) 대전과학산업진흥원(DISTEP*)

*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for Enterprise & People

- (설립근거) 2개 법령 및 1개 조례에 의해 설립근거 확보
 - (법령)「민법」제32조, 「지방자치 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 (조례)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2020.3.31. 제정)
- (설립목적) 지역 과학기술의 수준과 역량을 분석하고, 미래기술 예측을 바탕으로 지역산업 정책 및 과학기술 혁신 전담 전문기관으로서 신성장산업 육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 ※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정관 제2조
- (설립형태/설립일) 재단법인(독립법인) / 2020년 5월 28일
- (설립장소) 대덕특구내 / 대전 유성구 가정로 99(신성동)
- (조직/인력) 1원장-1본부-3부-1실 / 총원 42명
- (재정지원) 지방자치단체 전액 출연
 -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기본재산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사업수입금 및 기타의 수입금으로 조달
 - ※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정관 제30조
- (주요사업) 지역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발전을 위한 기획·평가·조정
 - ※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 (지역혁신기획) 대전의 과학산업 육성과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기획
 - (융합혁신생태계 조성) 지역 주도의 자생적 융합혁신생태계 조성 및 혁신플랫폼 구축
 - (투자분석 및 투자효과성 제고) 대전시 연구혁신(R&I: Research and Innovation)사업의 투자 효과성 극대화를 위한 성과관리체계 구축

〈표 16〉 DISTEP 주요연혁

2018.10.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결정
2019.11.	행정안전부 승인
2020.03.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20.05.	과학기술부 법인설립 허가
2020.05.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창립
2020.09.	초대원장 취임(고영주 원장)
2021.02.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출범식 및 비전 선포 글로벌 과학도시 대전 그랜드디자인 발표
2021.05.	경제과학상생협의회 사무국 지정
2021.08.	대덕특구 재창조 거버넌스 사무국 지정
2021.06.	대전시과학기술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한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시행규칙 개정* * (제6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회 구성과 분과별 역할 및 위상 강화
2022.01.	NIS-RIS(대덕특구-지역) 연계사업* 추진 * '대전시-대덕특구 융합혁신 기획 사업'(26억) '대전형 융합신산업 창출 특구기술 실증 선도사업'(90억) '대덕특구 재창조 추진전략 이행 및 선도과제 기획'(10억)
2022.12.	대전시 최초 대전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방향(안) 대전시과학기술위원회 심의·의결 *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 및 대전시 과학기술진흥조례 제3조에 의거 계획 수립

* 출처: 저자작성

2) 역할과 기능

■ 지역과학기술 전담기관으로서의 핵심 역할

- **(대외적 요구)** 지역주도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과학기술 전담기구를 설치·운영, 과학도시 명성에 걸맞는 대전 내 과학기술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 제기
 - 경기, 부산, 대구 등은 지역수요에 맞는 과학기술 정책 기획, 평가, 조사·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전담기구를 신설·지정하여 운영 중
 - 대전 내 과학기술혁신정책 중심의 과감한 변화·도전 필요성 증대 및 과학기술혁신정책의 종합적 조정·실행을 위한 컨트롤타워에 대한 요구 확대
 - ※ DISTEP설립 인식도 조사 결과(19) : 과학기술중심의 대전의 과감한 변화와 도전 필요성(88.4%), 과학기술 혁신정책 종합조정 컨트롤타워 필요성(83.2%) 등
 - 과학기술혁신정책 실행을 위한 종합 컨트롤타워로서 DISTEP에 기대하는 주요 역할은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 사회문제 해결, R&D정책 종합조정 등인 것으로 분석

〈표 17〉 DISTEP에 기대하는 주요 역할

주요 역할	세부 기능	우선순위
미래성장동력산업 발굴	미래예측 및 대전시 아젠다 발굴	1(42.9%)
	미래전략산업 발굴 및 지원	
도시사회문제해결 (과학기술기반 문제해결역량 강화)	R&D기반 도시사회문제해결	2(19.9%)
R&D정책 종합조정	대전 과학기술·산업혁신 비전 및 정책수립 심의 등	3(17.0%)
	대전 R&D 재정사업 예산배분조정	
	대전 R&D 조사분석	
Pre-R&D, 혁신생태계 구축	대전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	5(7.6%)
	글로벌 인재유치 및 연구회 운영지원	
	해외 국내기업 R&D 센터, 글로벌 연구소 유치 지원	
대전형 R&D사업 효과적 추진	대전형 R&D 사업 기획	4(7.9%)
	대전형 R&D사업 과제 관리	
Post-R&D (R&BD, 지식재산권 관리 등)	지식재산 종합지원	6(3.2%)
	기술사업화 및 기술창업 지원	
	기술혁신기업 성장 지원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

- **(내부적 핵심 가치)** 타 지역 대비 우수한 혁신인프라를 통해 연구성과의 지역 내 파급력 극대화, 과학기술 혁신 및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적인 기획·평가 등 추구
 - 과학기술 혁신·산업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및 정책 기획,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산업 발굴 및 유치 등 전문적 기획 수립을 통한 지역 혁신 추구
 - 지역 내 핵심R&D 융합사업 기획·평가·조정 및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 등 특구 내 연구개발 성과의 지역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 진흥 추진

〈참고 : (재)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정관〉

제4조(사업) ①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한 기획·평가·조정 등 발전 전략 수립
2.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책, 기술 조사 및 분석
3. 지역 과학기술정책과 실행방안 수립 및 지역의 핵심R&D융합사업 기획·평가·DB구축
4. 대덕연구개발특구 혁신역량과 지역 산업기반과의 연계사업 기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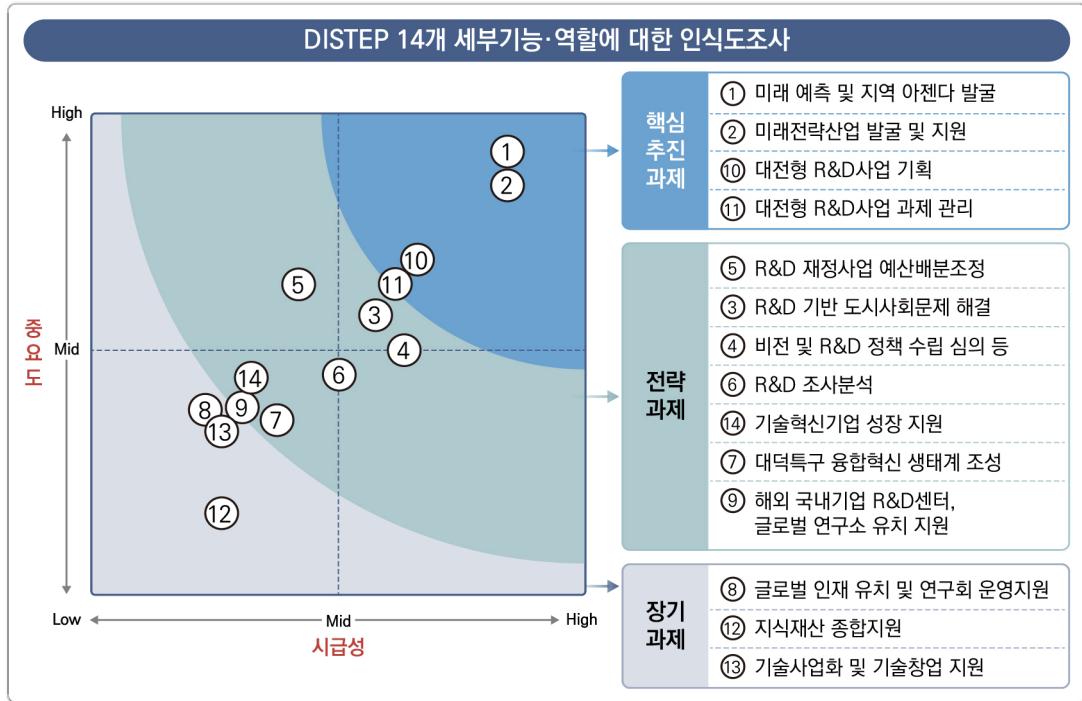
5. 미래 성장동력 산업 발굴 및 유치
 6. 국가·지방자치단체·기업·교육기관·연구기관 상호 간의 협력 시스템 구축 및 운영
 7. 지역내 혁신 플랫폼 및 생태계 구축·운영
 - 8. 연구개발 사업화 기획·지원·조정 등 과학기술 및 산업 분야의 진흥**
 9. 국제협력플랫폼 구축, 인력 교류, 국제기구 유치 등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10.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단체 등의 위임·위탁 사업
 11. 그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② 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 **(DISTEP 고유 역할)** 대전시 과학기술 혁신·산업발전을 위한 대외적 요구와 대전 내부의 핵심적 가치를 반영하여 DISTEP이 추구하는 고유의 역할을 3대 임무로 설정
 - **(지역혁신 기획)** 지역 내 과학산업 육성 및 지역혁신을 위한 전략을 기획하고, 신성장산업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 의제를 발굴·기획하는 역할을 설정
 - **(융합혁신생태계 조성)** 대덕특구와 지역 연계, 대덕특구 내 융합연구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글로벌 혁신 도시전략 강화 등 지역혁신을 위한 연계형 인프라 구축
 - **(투자효과성 제고)** 정부R&D 및 대전 예산 투자사업에 대한 대전형 성과분석 및 환류체계 구축·운영, 대전시과학기술정보서비스 구축 등 정보인프라 제공 역할 수행

■ 지역과학기술 전담기관으로서의 주요 기능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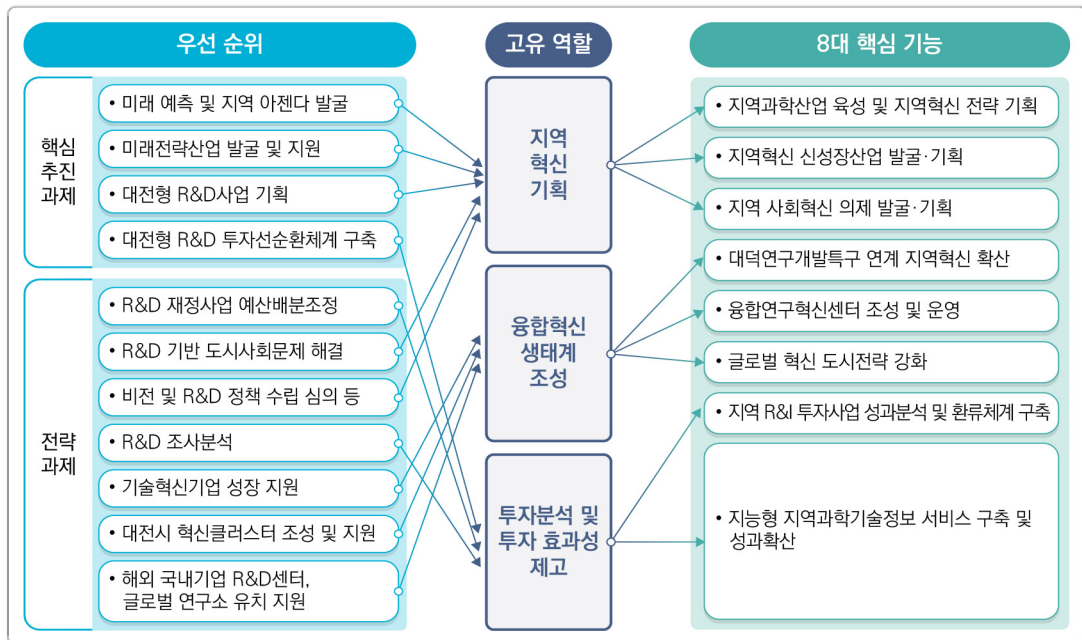
- **(전략목표)** DISTEP 비전 및 미션 달성을 위한 4대(HOPE) 전략목표에 따라 3대 고유 역할을 이행할 주요 기능을 설정
 - ※ (H) 대전 과학산업 총괄 기획 (O)글로벌 협력 플랫폼 (P)지역 연구혁신사업 조사·분석·평가 ④(E)융합혁신 생태계 조성
- **(고유 역할)** DISTEP은 대전 과학산업진흥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대내외적 요구를 반영하여 3대 고유 역할을 설정
 - ※ ①지역혁신기획 ②융합혁신생태계 조성 ③투자분석 및 투자효과성 제고
- **(주요 기능)** 기관 설립목적 및 전략목표를 이행할 3대 고유 역할에 따른 14개 세부기능을 중심으로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8대 핵심 기능을 도출
 - 14개 세부기능의 인식도 조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3대 고유 역할과의 매칭을 통해 8개 핵심 기능을 도출

〈그림 10〉 14개 세부 기능에 대한 인식도조사 결과 중심의 우선순위 분석 결과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

〈그림 11〉 8대 핵심기능 도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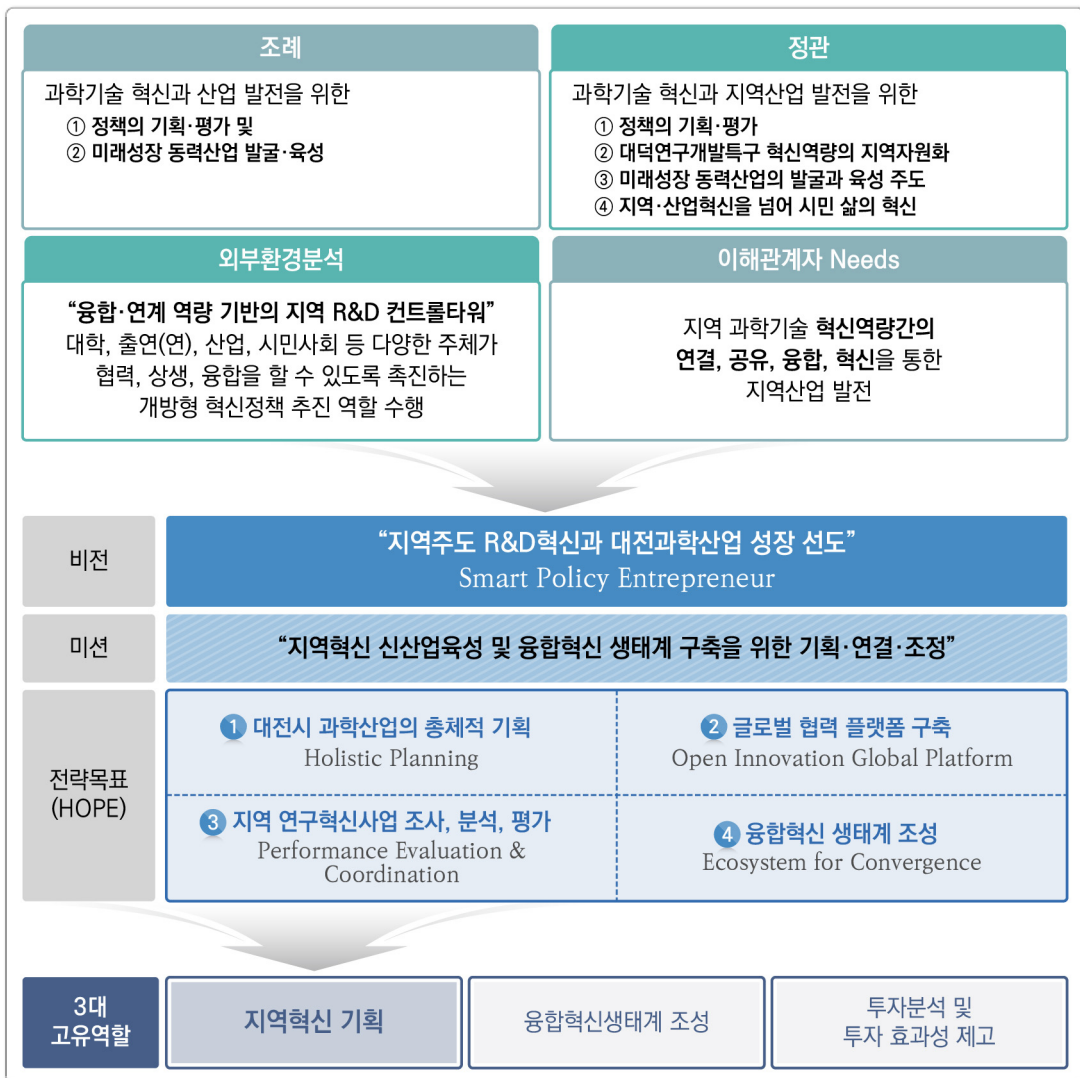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9)

■ 지역과학기술 전담기관으로서 주요 기능의 정합성

- **(전략체계와 연계)** DISTEP 8대 핵심기능은 기관의 전략목표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추진전략과의 정합성에 부합
- **(고유 역할과의 연계)** 기관 설립근거 및 대내외 경영환경 분석을 기반으로 도출한 3대 고유 역할에 근거한 핵심 기능으로 기관 고유 역할 수행에 직접적 연계 가능

〈그림 12〉 지역과학기술 전담기관으로서 주요 기능의 정합성



* 출처: DISTEP(2021) 내부자료

3) 대전시 지역주도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1) 대전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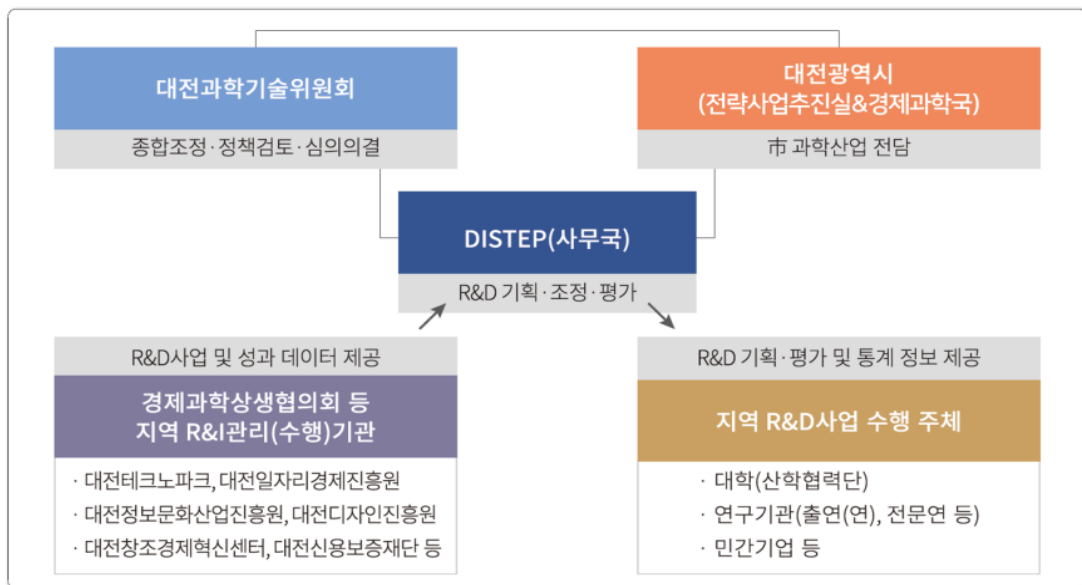
■ 차별화된 과학기술전문 행정거버넌스 체계 구축

- 과학기술 혁신에 기반을 둔 지역과학기술 혁신체제 촉진 강화 거버넌스 구축
 - 제4차 산업혁명 특별시, 과학도시 구축을 위해 경제산업국을 과학산업국과 일자리경제국(現 전략사업 추진실, 경제과학국)으로 전문화하여 출범('19.1.)시켜 과학산업 전담 조직체계 구축
 - 지자체 최초로 과학산업특별보좌관제('19.11.) 도입, 정무부시장을 지역 과학자 출신 과학부시장(現 경제과학부시장)으로 대체 임명('20.9.)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시스템화
-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4조 부시장, 제6조 구성)

■ 지배구조 혁신으로 실행력 있는 사업추진 체계 구축

- 지배구조 혁신으로 실행력 있는 사업추진 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와 규칙* 개정
 - *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시행규칙(제6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시민 중심의 의사결정을 위해 과학기술 위원회의 역할을 확대하고, 경제과학부시장 주재 경제과학상생협의회를 신설하여 운영

〈그림 13〉 대전의 과학기술 거버넌스



* 출처: DISTEP(2022a)

■ 지역 내 정책 소통협의체: 일류 경제도시 대전 조성 실무협의회

- **(대전시 과학산업 강화 조직개편)** 민선 8기 시정 비전을 일류경제도시 대전으로 정하고, 주력산업과 미래 신산업 위주로 조직을 새롭게 개편('22.9.30.)
 - 민선 8기 역점 일류 경제도시 실현을 위한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과학산업국을 '전략사업추진실'로 개편 ▲산업단지 조성 ▲지역 특화산업 육성 ▲기업 투자유치 ▲창업 활성화 지원을 통해 민선 8기 약속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고자 함
-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특히 혁신 구성원의 유기적 협력을 극대화하고자 대전시 과학기술과 산업정책을 담당하는 전략사업추진실과 경제과학국의 주무과로 구성된 '일류 경제도시 대전 조성 실무협의회'를 구성
 - 대전 4대 핵심전략산업(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국방)과 대전지역 주력산업 등 세부 사업들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고, 선제적인 미래 먹거리 발굴을 목표로 주무팀장급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운영
 - 주요 협업 사안 발생시 비정기적으로 회의가 개최되는 형태로 하되 속도감 있는 의사결정과 촘촘한 논의를 위해 주요 사업의 주무팀장급으로 구성
 - ※ 1차 회의('22.11.16.), 2차 회의('22.12.15.), 3차 회의('23.1.예정) 진행을 통해 대전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의 방향과 대덕특구 연계 핵심전략산업 육성 추진방안 등을 논의
- **(과학산업 실행 거버넌스 구축과 연지단 연계)** 과학산업 소관 행정 조직간, 대전시와 혁신기관 간 소통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 대전 4대 핵심전략산업 육성 및 대덕특구와 지역과의 연계 강화 시도
 - 대전시 사업뿐 아니라 4대 핵심전략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초광역 협력사업 기획, 중앙과 대전시 협력사업 기획 발굴 등 대규모 사업의 아이디어 공유의 장으로 활용
 - '일류경제 도시 대전 조성 실무협의회'와 선도연지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① 대전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수립, ② 대전 4대 핵심전략산업 육성사업 기획, ③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등 초광역 협력사업 기획 등을 수행

(2) 중앙-지역 정책소통체계(NIS-RIS) 구축·운영

① 국가와 지역의 균형성장전략 수립 지원

■ 중앙정부 계획 수립 참여와 정책제안

- 대전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 고도 인프라가 집적된 도시*로 NIS와 RIS를 연결하는 대한민국의 세계적 혁신클러스터 역할이 가능

* 1인당 과학지식생산 세계 3위 도시(WIPO 글로벌 혁신지수(Global Innovation Index) 2022)

-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혁신자원과 지역산업을 연계하는 지역주도 혁신모델 구축을 통해 지역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선도
 - * '20년도 대전과학산업진흥원 설립 후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이행의 사무국 운영과 융합연구혁신센터 설립 추진 기관으로 지정해 NIS-RIS 연결을 담당케 함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등 국가 과학기술 종합전략과 지방과학기술 진흥 전략 수립에 모두 참여함으로써 대덕특구 기반의 지역주도 혁신 실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노력 강화
 -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국가와 지역의 균형적 성장을 위한 혁신정책수립을 지원

〈그림 14〉 중앙-지역 정책소통체계(NIS-RIS) 구축·운영



* 출처: 저자작성

② 대전과학기술위원회: 과학기술 진흥 최상위 의사결정기구

■ 추진목적과 주요역할

- 대전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차별화된 과학기술 전문 행정거버넌스 체계를 구축
 - 과학기술 혁신에 기반을 둔 지역과학기술 혁신체제 촉진 강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지자체 최초로 과학산업특별보좌관제('19.11)도입, 정무부시장을 지역 과학산업 관련 전문가로 경제과학부시장을 대체 임명('20.9)하고 조례를 개정하여 과학기술기술위원회 운영 시스템을 개편*

- (주요 역할)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심의, 과학산업 기본계획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 미래 전략산업 육성전략 수립 등 대전 과학산업 정책 및 사업의 조정과 의결 등을 담당하는 최상위 기구
 - 대덕연구개발특구 출연연, 대덕연구개발특구기관장협의회(연기협), 지역기업, KAIST 및 지역대학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NIS와 RIS 연계 논의 진행
 -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주도 혁신성장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
 - 대전시 자체 종합계획과 과기부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에 따른 지역 역점과제를 연계하고 이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시정과제에 적극 반영

■ 대전과학기술위원회 운영 확대

- 대전시는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에 필요한 적시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토록 조례와 규칙을 개정하는 등의 거버넌스 혁신을 통한 과학기술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추구
 - 과학기술 거버넌스의 내실 있는 운영과 시민 중심의 과감한 의사결정을 위해 과학기술위원회의 역할을 확대
 - ※ 정기회의는 기존 연 1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과학기술 및 특구 관련 기관 참여 확대와 산업체·펀드·글로벌 정책 전문가 및 전문성을 가진 시민 참여를 추진
 - 투자 타당성 조사, 평가 및 예산 배분 등에 관한 사항, 성과관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의 조항이 신설
 - 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회, 산학연 협력분과위원회, 과학문화확산분과위원회로 구성하며, 분과별 역할과 위상을 강화*
 - * 과학기술정책분과: 과학기술개발계획 수립 및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시책 발굴·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
 - * 산·학·연 분과: 산학연사업 기획·조정 및 성과확산, 국내외 네트워크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당
 - * 과학문화확산분과: 생활과학 저변 확대 및 과학대중화 실현에 관한 사항을 담당
 -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사무국 및 간사 역할 수행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4조(부시장) 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행정부시장과 경제과학부시장을 둔다. <개정 2020.12.29., 2022.8.12.>

② 행정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1.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다만, 경제과학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한다.

2. 시장의 명을 받아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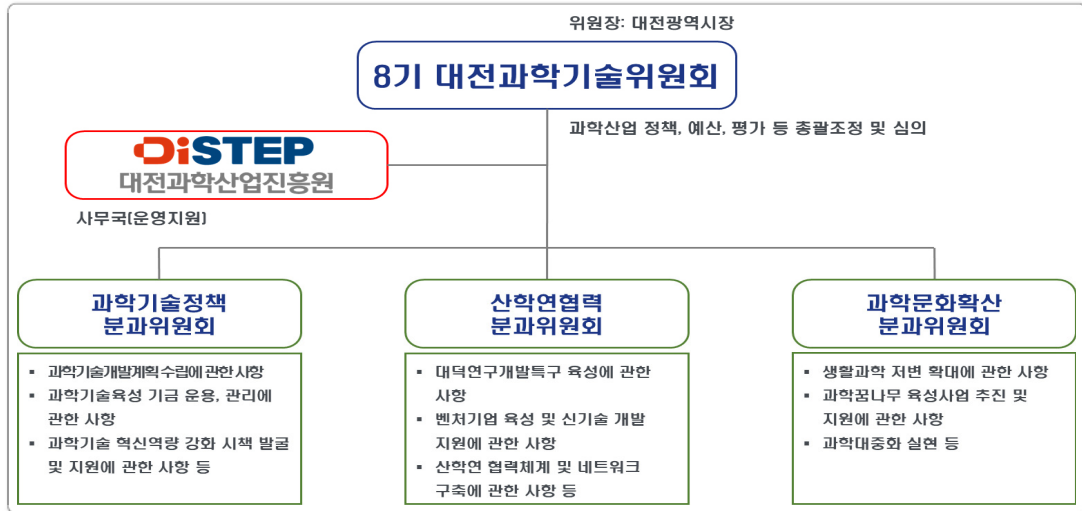
③ 경제과학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12.29., 2022.8.12., 2022.9.30.>

1. 정무적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

2. 전략사업추진실 및 경제과학국 소관사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그림 15〉 8기 대전과학기술위원회 운영체계



* 출처: 저자작성

■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와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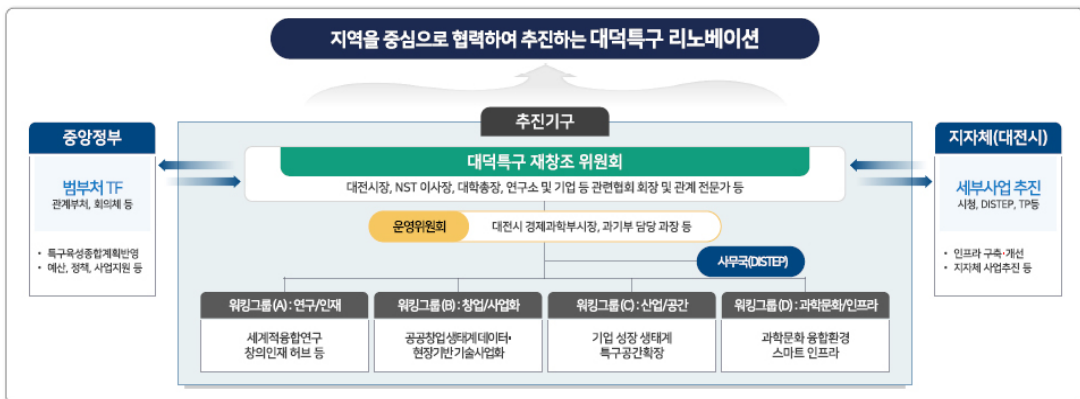
-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 개요) 지자체가 제안한 정책 및 사업을 검토·심의하며, 정책과 예산 간 연계를 강화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역 과학기술 조정기구 역할 수행
 - (구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위원장), 17개 시·도 부단체장,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중기부 실장급 공무원
 - (기능) 지자체가 제안한 지역 R&D사업에 대해 관계부처 및 관련 지자체 간 협의된 사업에 대해 R&D 예산 반영으로 연계 및 지자체간 협업의제 발굴·이행
 - ※ KISTEP 및 17개 시·도별 연구개발지원단에서 사무국 역할 수행
- (대전과기위와 연계방안) 대전시에서 기획한 4대 핵심전략산업 육성사업 및 선도R&D 프로젝트 등을 대전과학기술위원회에서 검토,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 제출을 통한 예산확보 추진
 - 대전시 정책 실무협의회*에서 사업을 기획하고, 대전과학기술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에 대해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에 제출
 - * (일류 경제도시 대전 조성 실무협의회) 市 전략사업추진실, 과학협력국 중심의 정책협의체로 대전과학기술산업진흥원이 사무국 역할 수행
 -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를 통해 ① 대전 4대 핵심전략산업 육성사업 및 대규모 R&D 프로젝트 지원, ② 대전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이행계획 지원방안, ③ 초광역·다부처 협력사업 안건 제안 등을 수행
 - 선도연지단 구성을 통해 대전시 사업기획 프로세스(정책실무협의회 → 대전과학기술위원회 →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의 실질적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국 역할 수행

③ 대덕특구 재창조위원회

■ 대덕특구 재창조위원회 운영

- **(추진근거)**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21.4, 과기장관회의), 대전광역시 대덕특구 재창조 지원조례('22.10.)
 - * 대덕특구 재창조 사업의 재정지원 근거 마련, 종합이행계획 수립 및 재창조위원회 제도화
- **(추진체계)** 연기협, 과학기술출연기관장협의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이 참여해 NIS와 RIS의 연결을 추진하는 거버넌스의 구성과 운영
 - (공동위원장) 대전시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
 - (위원회) 대덕특구 재창조 주요사업 자문·의결, 중앙정부-지역 협력 거버넌스
 - * 산·학·연·민·관 전문가 국회의원, 시의원 등 17명 내외로 구성하여 종합계획의 방향성 설정 및 의결 등을 담당하는 최상위 기구
 - (운영위원회) 실무 총괄, 위원회 회의안건 조정, 현안 및 이슈 논의
 - (4개 워킹그룹)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 과제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그림 16〉 특구 재창조 거버넌스 추진체계



* 출처: 정서화(2022)

- **(대덕특구 재창조위원회 운영)** 2022년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이행계획 수립에 따라 대덕특구 재창조 핵심과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재창조위원회 지속 추진
 - 대덕특구 재창조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부처-지역간 협력체제 구축 등 실행력 강화를 위한 재창조위원회 추진
 - 운영위원회, 워킹그룹 상시 운영을 통한 재창조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지원
 -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전체 거버넌스 사무국 및 워킹그룹 간사 역할 수행

4) 주요성과: 지자체 중장기전략 수립 및 이행체계 구축

(1) 대전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 종합계획의 수립 개요

- **(주요내용)** 일류경제 도시 대전을 목표로 대덕특구와 지역연계를 강화해 대전의 미래 핵심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혁신성장 가속화 전략
 - ※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진흥조례에 근거해 5년마다 시의 과학기술과 산업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해 마련되는 최상의 계획
 - 특구기술과 지역산업 연계강화를 통한 전략산업의 육성, 창업·일자리 창출, 지역인재양성 등 대전의 독창성을 살리는 미래 패러다임 전환의 이정표로 활용
- **(차별성)** 지역과학기술 진흥을 넘어 지역의 핵심전략산업육성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지역혁신역량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주도 혁신의 구체성 확보
 - 지역 과학기술 진흥, R&D에 국한된 기존의 계획과 달리 산업육성을 중심에 두고 지역 과학기술 진흥 및 혁신역량을 제고하는 종합발전전략

〈표 18〉 대전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과의 비교

구분	종합계획('18~'22)	종합계획('23~'27)
정책 방향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을 위한 대전시 자율 종합 육성 대책 마련 (R&D 강화 기반)	대전 특화 과학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 새성장동력 마련 (산업육성 기반)
비전	대한민국 미래성장동력 거점도시 육성	국가 미래를 선도하는 일류경제도시 대전
목표	연구역량 집적, 4차산업혁명 선도, 전국 확산	수치로 제시 예정 중
중점분야	ICT융복합, 바이오 의약, 신재생에너지	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국방
중점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1) R&D 기반확충 • (전략2) R&D 성과확산 •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략1) 대전 특화 과학산업 육성 • (전략2) 세계적 과학산업 융합혁신거점 조성 • (전략3) 지역기반 혁신인재 양성 • (전략4) 사업화·창업 생태계 활성화

* 출처: 지자체성

- **(향후방향)** 종합계획의 성과목표 및 추진방향, 혁신기관별* 역할분담을 제시하고, 수립과정에서 대덕특구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협업 확대
 - * 대전테크노파크,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등
 - 국정과제 및 민선 8기 시정과제, 각 부처 지역과학기술·산업정책, 대덕특구 종합이행계획 등 기존 정책과 연계해 종합계획 수립

- 종합계획에 따라 市 R&I 투자전략을 수립하고, 성과목표에 따라 매년 종합시행계획 수립 및 산업·분야별 육성계획의 목표·계획 실적점검

■ 종합계획 수립체계 및 경과

- **(전략수립)** 대전 특화 과학산업 육성과 대덕특구 중심의 융합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혁신인재를 양성하여 창업과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는 중장기 종합전략을 마련

■ **(추진체계)** 대덕특구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전시 및 대전시 출자출연기관이 참여하며 정부 및 대전시의 유사계획과 연계하여 수립

*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지방시대 종합계획(안)』,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이행계획』, 『대전 미래전략 2040그랜드 플랜』 등

〈그림 17〉 대전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체계



* 출처: 정서화(2022)

- **(추진경과 및 계획)** 「종합계획 수립」 추진계획안 마련('22.09)→사전기획연구 수행(~'23.03)→市 관련 부서 의견수렴('23.03)→「종합계획」 대전과학기술위원회 심의의결('23.04)

- **(기본방향)** 국가투자전략과 지역투자전략을 종합하고 대덕특구와 지역 간의 연계를 강화하는 대전 특화 과학기술산업의 육성전략

- **(과학기술산업 정책기조 유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민선8기의 과학기술산업 관련 시정과제를 중심으로 중앙과 지역간의 정책을 종합하는 과학기술산업 육성방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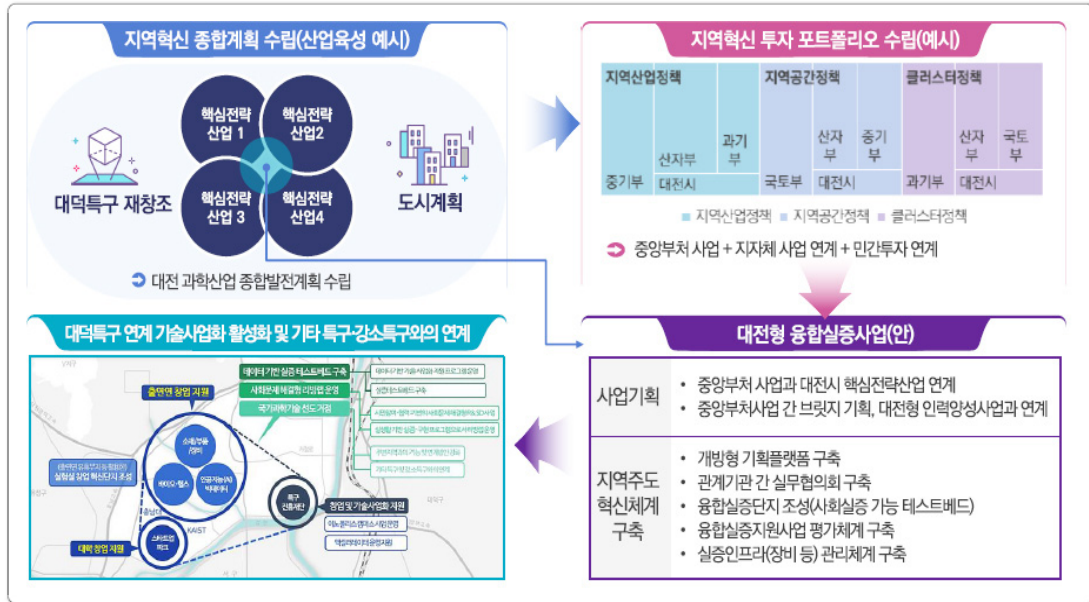
- **(대덕특구-지역 연계 강화)** 대덕특구 혁신역량을 지역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혁신주체 간 융합네트워크 기반구축*으로 지역 융합연구와 융합혁신생태계를 활성화

* 대전시는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이행 선도과제로 융합혁신연구센터 건립 예정

- **(대전형 융합기획·실증 선도전략 수립)** 지역 핵심전략산업의 효율적 성장지원을 위한 대덕특구 기술 기반 산업육성 선도전략(예: 테스트베드 대전)* 수립과 이행

* 대덕연구개발특구와 대전도심융합특구 연계체계 마련을 통한 융합생태계 및 창업·실증화 공간 구성

〈그림 18〉 대전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의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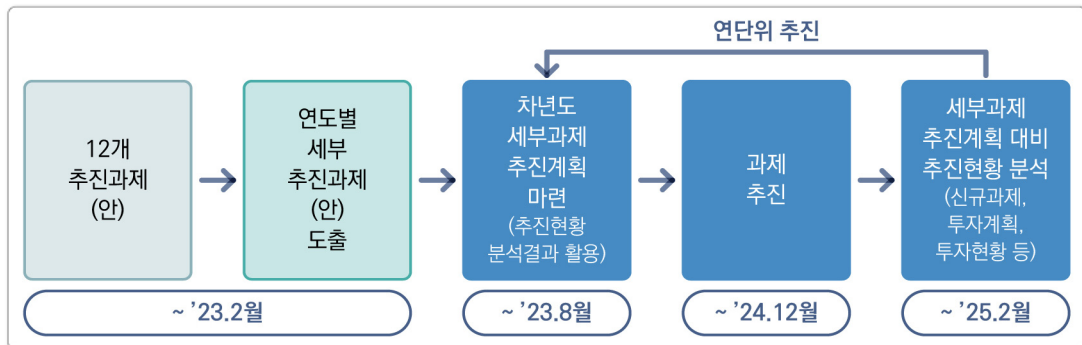
* 출처: 정서화(2022)

(2) 대전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이행점검 프로세스 구축(안)

■ 이행점검 프로세스 개요 및 총괄 운영 계획(안)

- (주요내용) 대전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4대 추진전략 12개 추진과제에 단위에서 당해연도 계획 대비 현황을 분석하고 차년도 이행계획(안)을 마련하는 정례적 체계 마련
 - 종합계획이 이행되는 5년간 연단위 계획을 수립·이행·점검하고, 제6차 지방종합계획 시행계획, 지역 혁신계획 등 중앙정부 추진계획과 연계·활용

〈그림 19〉 대전 과학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이행점검 체계(안)



* 출처: 저자작성

- **(차별성)** 종합계획 수립·이행에 따른 중간점검 및 종료평가를 추진하여 계획의 실효성 강화
 - **(중간점검)** 종합계획 추진 3년차 시점에서 추진현황 및 성과 등을 점검하여 종합계획의 방향성 검토 및 향후 추진계획 수립
 - **(종료평가)** 종합계획 종료시점에 전체적인 추진실적 및 성과를 점검하고, 이후 수립될 종합계획의 근거 자료로 활용

■ 단계별 세부 운영 계획(안)

- **(대상범위 설정)** 대전시 연구혁신(R&I)사업 중 과학산업진흥분야에 해당하는 사업군을 도출하고, 4대 추진전략, 12대 세부 추진과제와 연계하여 지속 보완·관리
 - 대전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세부 추진과제별 연계사업은 지역혁신계획, 제6차 지방종합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대상사업과도 연계하여 활용
 - 대전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연계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한 총괄 데이터를 구축하고, 매년 이행계획 점검 시 활용·보완하여 계획의 정합성·실효성 제고
 - ※ 대전과학기술정보서비스(DAON)를 통해 시스템화 하여 관리(DAON : 대전시 RTIS 시스템을 개편('22.6월) 하여 현재 2차 고도화 추진 중)
 - 이행점검을 통해 구축한 사업 데이터는 신규사업 기획, 중장기 계획수립 등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 시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의 기초자료로 활용

〈그림 20〉 대전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사업범위 및 사업데이터 구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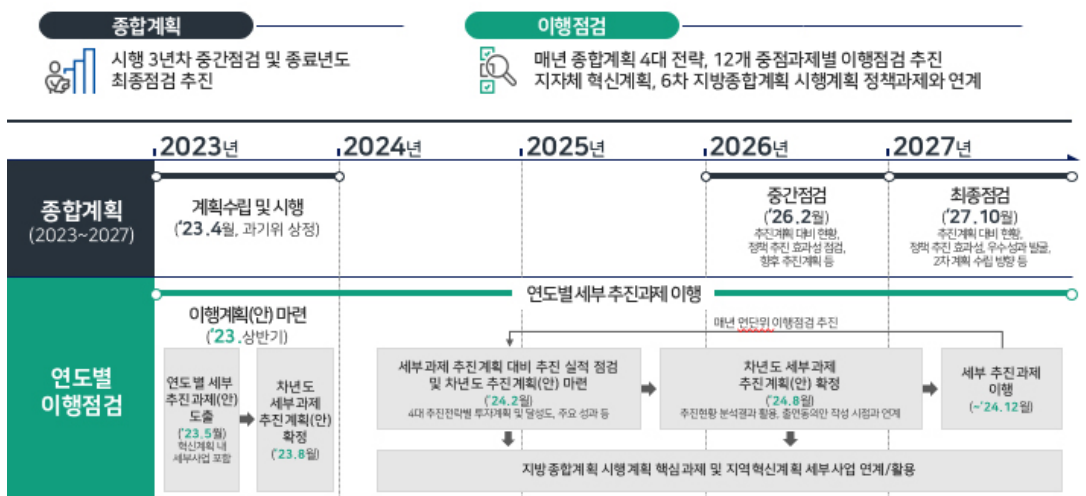
대전시 R&I(연구혁신)사업 (22년 기준 약 4,407억원/DISTEP자체정리)	사업구분				2022예산(국회,박연호)				행정처장보			
	사업명	출처(예산처)	장비(예산처)	지원(예산처)	인건	재료	임대	기타	2022년 예산액	담당부서	담당자	
메이커 스페이스(인공홀) 운영	○	기타	성과회산	합계(기)	사업비	900	1,000	0	0	1,900	행정안전부	박
혁신성장기출 기술사업화 운영지원	○	합계(국인위/사재물)	성과회산	합계(기)	사업비	0	1,800	0	0	1,800	신속안전부	박
전통제조기술 발전원 지원	○	합계(국인위/사재물)	성과회산	합계(기)	사업비	0	2,000	0	0	2,000	신속안전부	박
제품개발소기업 (Maker) 지원	○	제품개발지원(기)	성과회산	합계(기)	합계(기)	0	750	0	0	750	신속안전부	박
성장기업 혁신력 강화 사업	○	제품개발지원(기)	성과회산	합계(기)	사업비	0	860	0	0	860	신속안전부	박
대전 사업상선미 운영 지원	○	제품개발지원(기)	성과회산	합계(기)	사업비	0	700	0	0	700	신속안전부	박
신약개발 연구소기출 성장지원사업	○	합계(국인위/사재물)	성과회산	합계(기)	사업비	0	660	0	0	660	신속안전부	박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지원	○	기타	성과회산	기타	기타	4200	2,160	0	0	6,360	신속안전부	박
지역합계(기출) 지역혁신사업	○	기타	성과회산	기타	기타	0	1,640	0	0	1,640	신속안전부	박
문화인형산업 클러스터 조류	○	문화인형산업(기)	기타(국회)	합계(기)	사업비	0	160	0	0	160	합계(기)	박
혁신기술 공유서비스 사업	○	합계(국인위/사재물)	성과회산	합계(기)	사업비	0	700	0	0	700	합계(기)	박
연기기술혁신 경쟁력 강화사업	○	수출연계지원(합계)	성과회산	합계(기)	사업비	0	60	0	0	60	합계(기)	박

* 출처: 저자작성

- **(이행점검 체계 구축)** 매년 12개 세부 추진과제별 “이행점검 추진계획(안) 마련 → 실적점검 및 이행계획 수립 → 이행점검 결과 반영”을 정례적으로 추진
 - ① **(이행점검 추진계획(안) 마련)** 차년도에 수행할 이행점검 및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매년 연단위 이행점검 추진계획(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배포(매년 10월)
 - ② **(실적점검 및 이행계획 수립)** 세부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점검하고 차년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과기위 상정(매년 3월)
 - ③ **(이행점검 결과 반영)** 차년도 예산(안)마련 시 3월에 수립한 실적점검 및 이행계획 수립(안) 결과가 적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전시 전달 및 반영여부 검토(매년 8월)

〈그림 21〉 대전과학기술진흥융합계획 이행점검 체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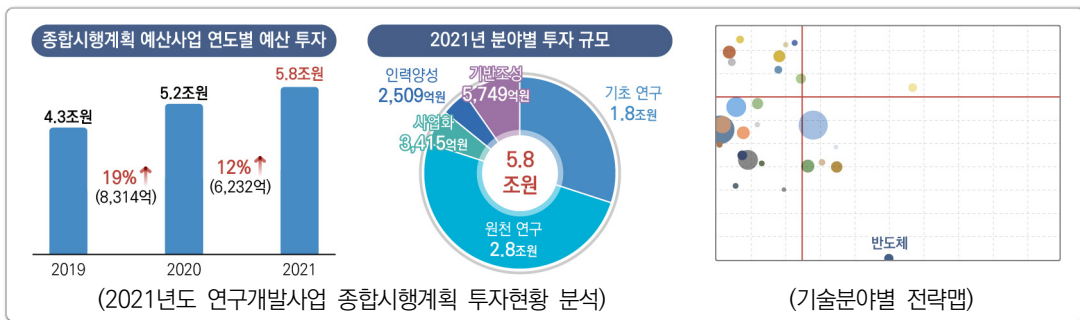
구분	~'23.10월	~'24.2월	~'24.8월
목표	'24년도 이행점검 추진계획(안)마련	1차년도 이행점검 추진	이행점검 결과반영 검토
내용	'24년 세부추진과제(안) 확정 세부추진과제별 전략계획서 작성(차년도 예상사업 기준)	'23년 추진사업 투자현황 분석 '24년 세부 추진과제 기준 이행계획 수립(전략계획서 활용) 과기위 상정	'24년 이행계획(안) 예산반영여부 검토
협조	전략사업추진실 경제과학국 예산실 DAON시스템	전략사업추진실 경제과학국 예산실 과기위	전략사업추진실 경제과학국 예산실 과기위



* 출처: DISTEP(2022a).

- **(이행점검 결과 활용)** 매년 12개 세부 추진과제별 투자 현황 분석 및 대전시 주력 산업분야 전략 공백 분석에 따른 투자결정권 강화
 - ① **(투자현황 분석)** 12개 세부 추진과제별 예산 투자 규모, 추이, 중점 투자분야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이 가능, 대전시 주력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 활용
 - ② **(전략 공백 분석)** 세부 추진과제별 중점 투자분야 분석을 통해 타지역 대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주력산업 공백 분야에 대해 전략적 투자의 근거로 활용

〈그림 22〉 이행점검 결과 활용(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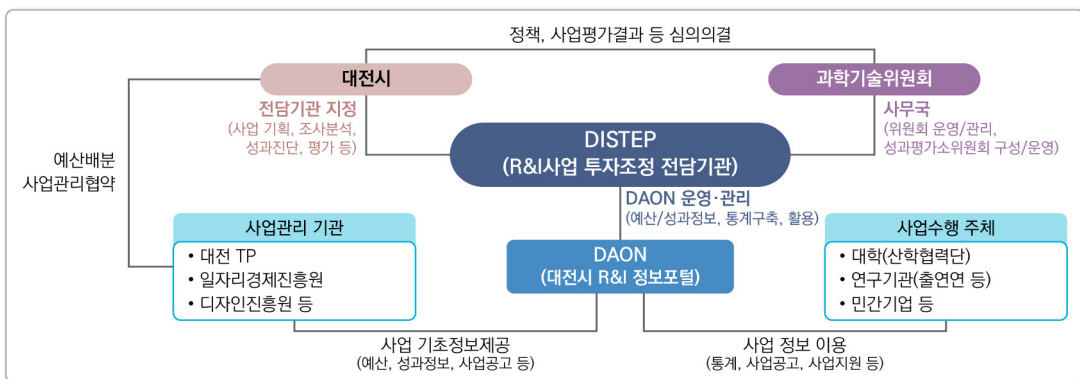


* 출처: 저자작성

■ 거버넌스 및 대외적 협조 체계

- **(거버넌스)** 연도별 이행점검(안)은 대전시 주관으로 수립하고, 과학기술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의·의결하는 체계로 추진
 - 이행점검 추진계획(안) 및 실적점검/이행계획 수립(안) 등은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담당하여 수행
 - 대전과학기술정보서비스(DAON)를 통해 이행점검 대상 사업 현황 및 성과정보를 구축·관리·제공하도록 지원

〈그림 23〉 거버넌스 체계(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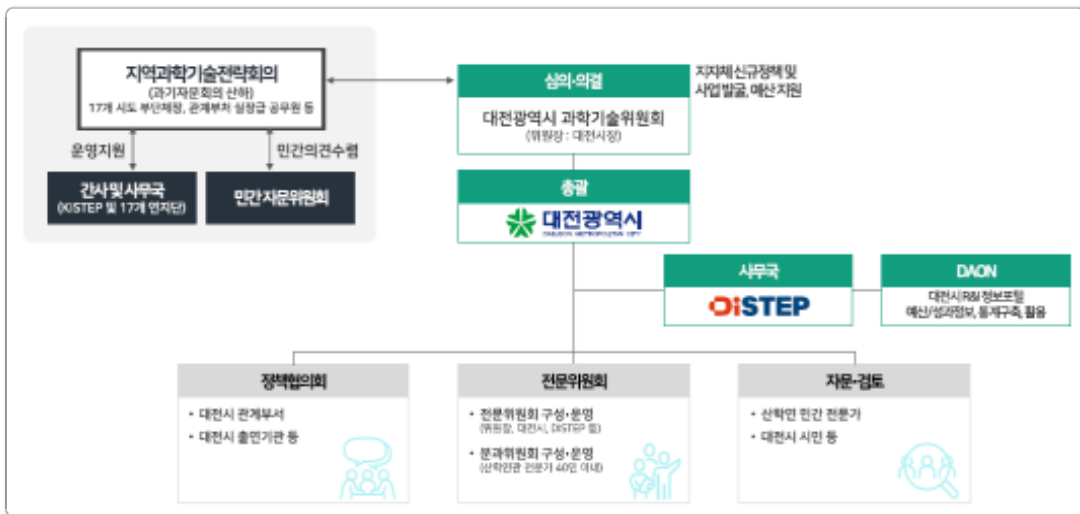


* 출처: 저자작성

- **(대외적 협조체계)** 대전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연도별 이행점검을 통해 발굴된 신규정책 및 사업 수요는 대전시를 통해 중앙부처 수요와 연계하여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논의

* 지역과학기술전략회의: 과기자문회의 산하 협의체로 지역 산학연 위원으로 구성·운영되던 지방협의회를 지자체 부단체장 중심으로 개편

〈그림 24〉 대외적 협조체계 구축(안)



* 출처: DISTEP(2022a)

(3) 중장기 혁신전략의 체계적 실행체계 구축

- **(개요)** 대전 4대 핵심산업 전략지도(strategy map) 도출, R&I 투자순환체계 구축을 통해 전략산업 육성 기획과 투자-수행-성과진단-환류의 실행점검 프로세스를 동시 구축

■ 대전 핵심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전략지도 도출

- **(주요내용)** 4대 핵심전략별* 권역 내·초광역 협력기획 및 산업육성 전략 도출

* 나노·반도체, 바이오헬스, 우주·항공, 국방

- 특허 및 Player분석, 관련기업 니즈분석, 산업Value Chain 분석 등을 통한 전략지도 구축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기반 지역경제 활성화' 우수사례로 선정, '2022년 국가지식재산네트워크 컨퍼런스' 발표*

* 발표제목: 지역주도 지식재산 기반 미래신산업 창출전략

〈그림 25〉 전략지도 도출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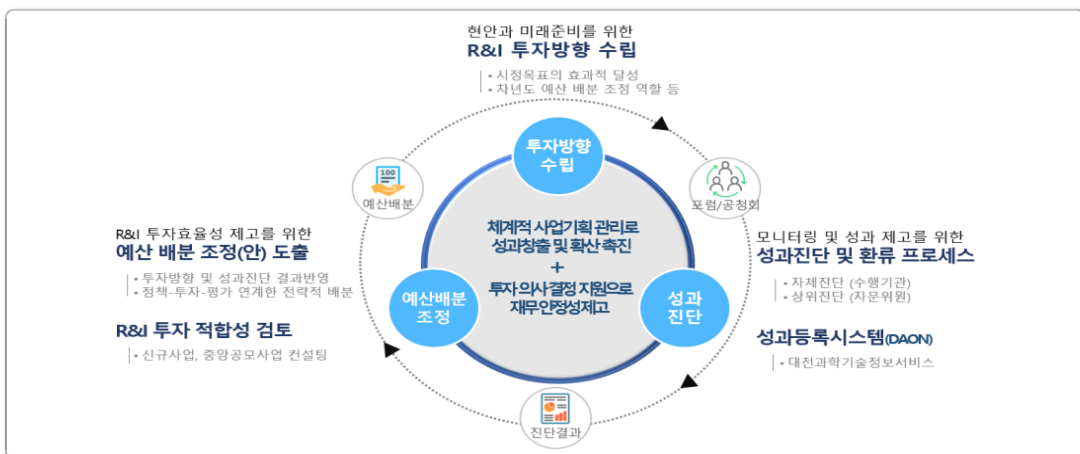


* 출처: DISTEP(2022a)

■ 대전R&I사업 투자선순환체계 구축

- **(주요내용)** 대전시 자체적으로 수립한 과학기술진흥 중장기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대전시 주도의 R&I 사업 기획-집행-예산배분-성과관리 및 환류 체계 구축·운영
 - 중앙정부 주도의 종합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공모 형태로 지자체에 배분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하고 지역별 계획에 근거한 사업을 관계부처가 지원하도록 개편
 - ※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23~'27)(안) (중점추진과제 1-2 참조)
 - 대전시는 R&I사업을 대상으로 투자환류체계를 구축·운영 중이며 대전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계하여 활용 예정
 - ※ 대전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12대 세부 추진과제별 사업 기획-투자-평가-환류 및 이행점검 체계 구축

〈그림 26〉 대전 R&I사업 투자선순환체계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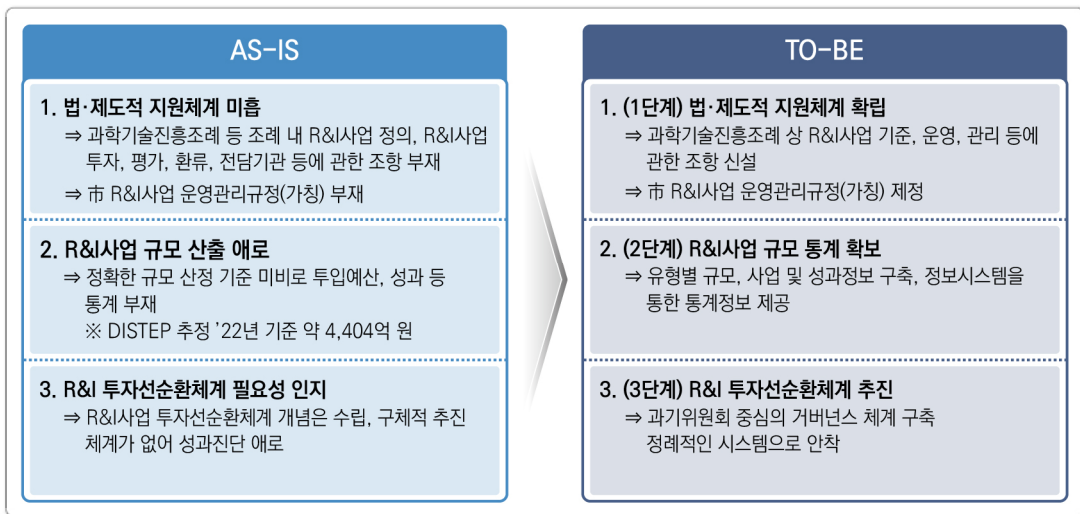


* 출처: DISTEP(2022a)

제2장
국내 지역혁신정책 현황 분석

- **(추진방향)** 대전시 R&I사업의 기획·투자·평가·환류 시스템이 대전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정부 체계와 유사하게 정례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
 - **(추진완료)** R&I사업 투자선순환체계 운영방안 수립('21), 일부 R&I사업(창업지원사업) 성과진단 추진('22), 성과진단 표준지침(안) 마련('22)
 - **(추진예정)** 조례 및 규정 제·개정('23, 上), 시비타당성조사('24), R&I사업 투자방향수립 및 예산배분 조정('25) 등

〈그림 27〉 R&I사업 투자선순환체계 현황 및 단계적 구축방안



- **(주요성과)** R&I사업 정의에 따라 사업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대전시 일부 사업(창업지원사업) 대상의 성과진단을 추진하여 예산(안) 마련 시 기초자료로 활용
 - 투자선순환체계의 핵심인 성과진단과 연계하여 성과지표 Pool 구축, 성과진단 표준지침(안), 조례 및 규정 제·개정안 등을 마련하고 성과진단 업무를 지속 추진 중
 - 성과진단 결과는 차년도 예산(안)마련시 활용(1개사업 일몰, 1개사업 수행기관변경 등)
- **(기대효과)** R&I사업 성과진단 기반의 지역주도 혁신시스템 구축으로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 특히 대전 과학산업융합계획 이행점검 체계 구축으로 과기분야 최상위 계획의 이행력 강화에 기여

〈그림 28〉 창업지원사업 성과진단 사례

대상 사업

1. 창업지원사업 중 15개 사업 성과 진단('20년~'21년) → 11개 사업구조개선(안) 도출
 ※ 15개 성과분석 대상 사업 중 일몰, 종료사업을 제외하고 3년 이상 계속 추진된 11개 사업을 성과진단 대상 사업으로 선정

성과 분석 및 진단

1. 사업별 성과목표·지표 점검 및 성과 데이터 구축
 ※ 사업기획서 및 논리모형을 활용한 사업별 성과목표·지표 점검을 통해 5개 핵심성과지표 도출
 2. 5개 핵심 성과지표를 기준으로 사업 유형별 성과 분석

사업유형별 핵심지표별 성과('21년)

성과분야	성과지표	1억원당 성과(기여율 반영)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평균
기술적성과	지재권 출원/등록(건)	0.01	0.19	0.96	0.00	0.38
인프라성과	창업기업 지원(건)	7.54	13.35	23.37	1.20	13.94
사회적성과	고용창출(명)	3.05	1.30	4.76	2.52	3.12
경제적성과	매출증가액(억 원)	0.31	0.37	6.17	0.00	2.26
	투자유치(억 원)	1.20	2.29	1.41	1.79	1.60

※ Bold는 평균을 상회하는 성과를 의미

3. 성과분석 결과 분석
 ※ 내부 연구진 및 외부 전문가 공동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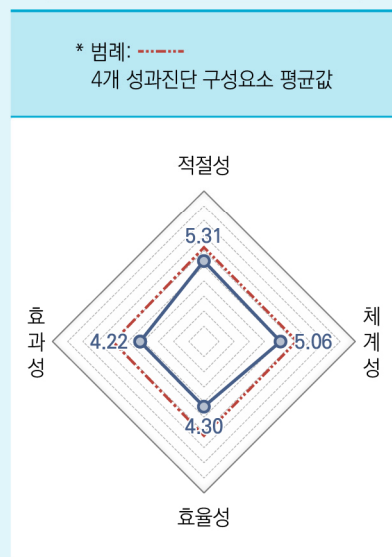
성과 진단 결과 도출

1. 사업별 성과지표 개선(안), 지표별 우선순위 및 핵심성과지표(안) 도출
 2. 성과진단 구성요소(적절성, 체계성, 효과성, 효율성) 분석 및 분석결과 기반의 사업구조개선(안) 도출 → 수행기관 변경 등 사업구조개선에 활용

(예)혁신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사업

혁신기술 고도화 및 사업화 지원

도출 가능 성과지표	성과지표		비고
	기존 성과지표	개선 성과지표(안)	
창업기업 지원(건수)		★	신규, 핵심
기여매출액(억 원)		★	신규, 핵심
투자유치(억 원)	○	○	유지
고용창출(명)	○	○	유지
전반적만족도(점)		○	신규
매출성과(억 원)	○	○	유지
지재권 등록(건수)	○	○	유지
지재권 출원(건수)	○	○	유지
신규창업(건수)		○	신규
기술이전(건수)		★	신규, 핵심
수출액(억 원)	○	×	삭제
신규창업률(%)	○	×	삭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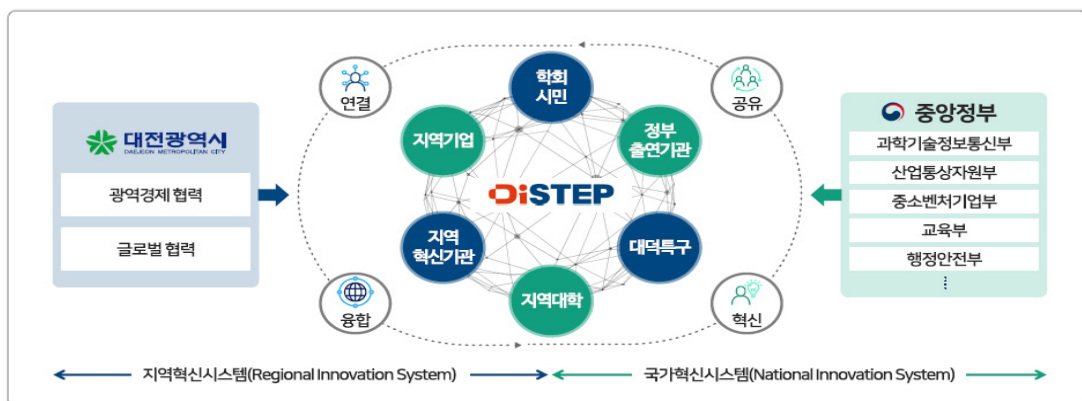
* 출처: DISTEP(2022a)

5) 향후 과제*

(1) 국가혁신체계와 지역혁신체계를 연결하는 지역주도 혁신모델의 창출

- 국내 최대 연구개발 집적지인 대덕연구개발특구 출범 50주년을 맞아 지역을 중심으로 협력해 추진하는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을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2021년 4월 29일)
 - 융합연구 중심이자 미래 신산업의 거점 공간으로서 중앙과 지역이 함께 또 다른 미래 50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
 - 연구·인재, 사업화·창업, 기업·산업, 도시·인프라 등 4대 전략 8대 실행계획을 마련, 지역주도 거버넌스를 통해 이행과제를 기획·추진함으로써 실행력의 극대화 도모
- 대전은 지역혁신 시스템을 견인하는 지역주도 혁신 전담기관으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을 설립, 중앙부처와 상생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도모해 대덕특구의 다양한 R&D성과와 기술이 지역산업 발전과 국가 발전으로 연계되는 지역주도 혁신전략을 수립 중
 - 민선 8기 4대핵심전략 산업인 바이오헬스, 나노반도체, 항공우주, 국방 등을 중심으로 미래산업육성 및 기존 지역산업의 전환 전략* 마련
 - * 대전만의 최적화된 미래전략산업 기술지도를 구축해 대전의 新미래전략사업 탐색부터 新지역혁신 모델의 창출을 도모(대덕넷, 2022.6.27.)
 - 국가적 과제와 민선 8기 핵심사업* 간 시너지를 기반으로 특구 과학기술과 지역 산업 연계, 창업 및 일자리 창출을 아우르는 종합계획* 마련
 - * 대전시와 관계기관의 과학산업 정책·사업 및 관련 국가계획을 반영한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예정(전자신문, 2022.7.19.)

〈그림 29〉 지역주도 혁신모델



* 임흥탁·정서화(2022: 31-32)

(2) 지역주도 혁신을 위한 지역 R&D 기획·실행·평가 체계 구축

- 지역주도 혁신의 실제적 효능을 위해 지역 맥락에 맞는 일관성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되며, 특히 지역주도성을 강화한 기획·실행·평가체계 마련이 시급
 - (지역 맥락 기반) 지역 내 산·학·연·민·관이 함께 현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정책 효과성, 전략의 타당성, 지지체를 비롯한 혁신주체 간 역할 배분 등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사고 기반의 정책기획·실행·평가 지원 필요
 - (자기주도성 강화) 지역주도 혁신 담당기관이 지역 R&D 기획 및 효율적 R&D 투자·조정체계를 정립해 지역의 자생력을 담보하는 지역개발·지역산업 발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확립 필요
- 나아가 지역과 국가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과 운영을 통해 국가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자기 주도적 혁신성장 모델 정립이 필요
 - 지역의 핵심 행위자 간 집단지성을 기반으로 혁신전략과 투자 방향을 설정하고, 중앙정부 수준에서 조정하는 개방형 정책플랫폼의 운영을 통해 1) 전략적 정책 프레임워크 도출, 2) 개방형 탐색 프로세스, 3) 산업, 환경, 에너지, 노동 등 정책 영역 간 통합 관점을 유지하고, 국가, 초광역, 지역 등 혁신의 범위와 대상의 적정성을 위한 정책수단 혼합을 통해 새로운 초격차 마련을 위한 제도적 학습과 실험공간 마련이 필요(Pontikakis et al., 2022)
 - (지역혁신 열린 거버넌스) 대전의 혁신자산인 대덕특구의 지식이 지역 현장의 지식과 맞물리며 정책과 공유될 수 있도록 지역 주체 간 열린 거버넌스 구축 필요
 - (국가협력 거버넌스) 국가 전체적인 혁신전략·투자방향과 지역혁신의 기회 및 도전을 연결함으로써 단발적이고 이יש성이 아닌 현장과 미래를 지향하는 국가혁신시스템 전환 노력 필요
 - (초광역 협력 기획·실행) 초격차를 위한 제도적 학습과 실험공간으로서 지역주도의 연계와 협력을 기반으로 단일 행정구역을 넘는 사업 기획과 실행을 통해 융합산업 창출과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을 모색하고 수도권 1극을 넘어서는 분산형 혁신으로서 지역R&D 리그의 가능성을 탐색
-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지역미래산업 육성과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개방형 정책플랫폼을 운영하며 현장 및 미래 지향적 지역혁신전략 도출을 시도
 - 산·학·연·민·관 뿐 아니라 의회 및 언론을 포함한 지역의 이해관계자와 함께 과학기술, 산업, 지역사회, 법·제도에 이르는 지역주도 혁신전략의 추진 기틀을 마련
 - 기업과 시민의 아이디어 발굴과 소통을 지원하고, 중점 의제를 중심으로 하는 정책 및 사업의 기획, 실증을 지원함과 동시에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

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 설립 배경 및 연혁

■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의 발전 과정

- 2000년대 초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도입으로 지역R&D사업을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자체 R&D사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함
 - 민선1~2기는 중앙정부 R&D사업을 모방하는 시기였으며 민선3기부터 지자체 주도 과학기술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도입함
- 광역지자체 최초 지자체 과학기술진흥 전담기관(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설립 및 운영(2010~2016년)
 - 2010년 '경기과학기술진흥원(GSTEP)' 설립으로 민선4기(2010~2014년) 경기도정은 지역 과학기술 혁신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활발한 지역혁신활동을 선도함
-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과학기술진흥 및 연구개발 정책추진을 위한 전담기관 설립과정은 3단계로 정리할 수 있음
 - (1단계, 2007~2008년)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사전연구를 통해 지역R&D전담기관 설립을 계획하고 부설로 경기과학기술센터를 설치
 - (2단계, 2008~2010년) 경기과학기술센터에서 도내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는 '경기도기술개발사업'을 운영하며, 지역R&D전담기관 설립을 준비
 - (3단계, 2010~2016년) 경기과학기술진흥원(GSTEP)을 설립하여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중소기업 R&D 지원, 광고/판교테크노밸리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등과 같은 혁신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등 추진
-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정책연구실을 통해 싱크탱크로서 정책연구 및 기획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2010년 과기부의 '지역연구개발지원단지지원사업'을 유치하여 경기도 및 중앙정부가 경기도에 투자하는 R&D예산에 대한 통계 DB를 구축(조사·분석·평가)함으로써 데이터기반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함
 - 경기도 R&D 조사분석시스템을 통해 경기도 자체 R&D사업과 국비매칭 R&D사업, 정부R&D사업의 경기도 유입현황 등에 대해 매년 조사분석을 수행함으로써 도 전체 R&D 투자현황을 파악함
 - 경기도과학기술정보서비스(GTIS)를 통해 조사분석 자료를 공개함
 - 매년 '경기도과학기술통계집'을 발간함으로써 정부 및 경기도 과학기술투자에 대한 전체 상황 정보를 제공함
-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경기도정의 재정상황 악화 및 민선6~7기 경기도정의 과학기술정책 변화로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통폐합됨

■ 통합기관 설립 배경과 과정

- 2017년 1월 (구)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구)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통합되어 (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설립됨

〈표 19〉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 경과

년도	주요 내용
1997.06	경기중소기업진흥재단 설립 → 1999.08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
2005.05	경기바이오센터' 설립
2008.08	경기연구원 부설 경기과학기술센터 설치
2010.05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설립(경기과학기술센터와 경기바이오센터 통합)
2016.09	경기도출연기관의 통폐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7.0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설립(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통합)

* 출처: 저자 작성

- 이질적 성격을 갖는 두 기관의 통합에 대한 다양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추진된 (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설립은 여러 효율화 안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통합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의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었음

2) 역할과 기능

■ 설립목적과 주요 기능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학 및 산업 분야 진흥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제발전을 선도' 한다는 설립목적을 제시함
 - 또한 '패러다임 변화의 선제적 지원을 통한 미래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미션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통합 전 각 기관의 핵심 키워드인 '중소기업' 및 '과학기술'을 버리고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음
- 핵심 전략방향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혁신기반 조성', '고객가치 실현',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네 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세부과제를 설정함
 - ① 전주기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 : ①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②신성장 창업 생태계 조성, ③ 글로벌 수출경쟁력 제고

- ② 산학연 협업을 통한 혁신기반 조성 : ①미래 과학기술 패러다임 변화 선도, ②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및 확산, ③차세대 바이오 헬스산업 육성
 - ③ 현장소통을 통한 고객가치 실현 : ①현장 맞춤형 지역 특화산업 고도화, ②현장 중심의 정책연구, ③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립
 - ④ 경영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 : ①업무수행의 전문역량 강화, ②지속가능 경영 선도, ③전사적 안전관리를 통한 지원기반 확립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상기에 제시된 설립목적과 비전·전략체계를 바탕으로 다음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
 -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현장밀착 맞춤형 지원 및 우수기업 집중 육성
 - 창업 아이디어 발굴에서 성장까지 공정과 혁신이 넘치는 창업 생태계 조성
 -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전문화된 글로벌 마케팅 지원
 -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기술혁신주체 상호 간 4차 산업혁명 촉진
 - 신산업, 혁신기술 기반 바이오헬스케어산업 육성
 -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혁신클러스터 고도화 및 확산
 - 현장중심 소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고객지향 및 현장맞춤형 지역특화산업 고도화
 - 혁신성장을 위한 현장중심 정책연구

■ 예산과 조직 현황

- 2022년 2월말을 기준으로 기관 총 예산은 약 2,856억원 수준임
 - 예산 구성을 살펴보면, 기관운영 10.19%, 경제부문 54.18%, 과학부문 34.97%으로, 경제부문이 과학부문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함

〈표 2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예산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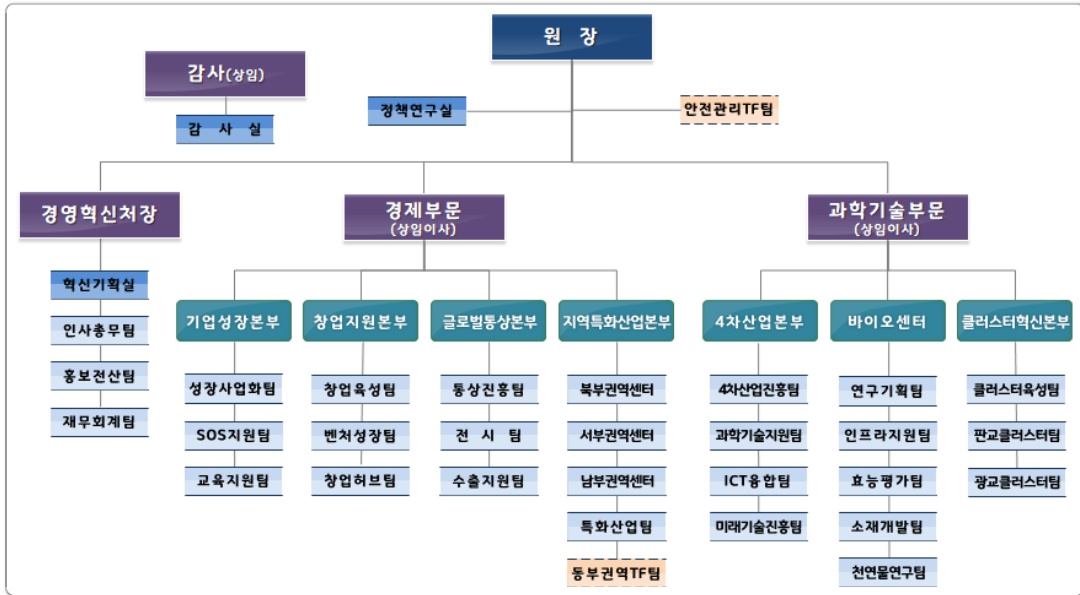
(단위 : 원)

총계	기관운영	원장직속	과학부문			경제부문			
		정책연구	4차산업 혁명선도	바이오 산업육성	클러스터 고도화	중소기업 성장지원	창업벤처 지원	수출마케팅 지원	지역특화 산업육성
2,856.3억 (100%)	10.19%	0.42%	10.42%	3.22%	21.34%	32.11%	13.85%	3.72%	4.50%

* 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부 자료

- 조직은 2부문(경제, 과학) 1처(경영혁신처) 7본부(각 사업본부) 33부서(실, 팀, TF팀)로 구성되어 있음

〈그림 30〉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조직도



* 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부 자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통합 전후 역할 변화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통합 전후의 역할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통합·설립되었으며, 동 조례에 따라 과학기술정책 지원의 역할도 명시되어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조례」에 따라 과학기술 전담기관으로서,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연구, 사업 조사·분석·평가 시스템 구축, 경기도 자체 및 국비매칭사업 기획 및 운영·관리, 과학문화 저변 확대 및 확산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음
 - 통합기관이 중소기업지원업무에 높은 비중을 두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통합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 및 사업관련 대내외 활동(경기도 내 자체R&D, 정부/타지자체 대상 지역과학기술진흥)을 통합 6년 차인 현재까지 이어가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조금씩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21〉 통합 전후 역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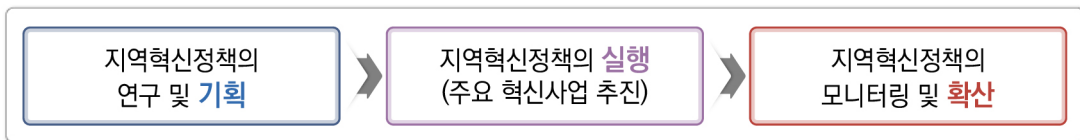
구분	통합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	통합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과학부문)
조직 (경영관리부문 제외)	3본부 1센터 14팀	2본부 1센터 13팀(정책연구실 포함)
정부 신고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소관부서	과학기술과	특화기업지원과
위상	광역지자체를 선도하는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전담기관	경기도 과학기술진흥 전담기관 → 점차 약화되는 추세
역할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연구·기획, R&D사업 조사·분석·평가, 기술개발지원사업 수행, 바이오R&D 및 기업지원, 정부R&D 유치·수행, 과학문화 확산 등	통합 전과 동일
인력 운영	연구직/전문직	일반행정직

* 출처: 저자 작성

■ 경기도 지역혁신시스템 내에서의 주요역할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지역혁신체제 안에서 (1) 지역혁신정책의 연구 및 기획, (2) 지역혁신정책의 실행, (3) 지역혁신정책의 모니터링 및 확산을 담당함
 - 지역혁신 관련 정책은 정책연구실과 과학부문(통합 이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이 전담기관의 역할을 수행

〈그림 31〉 경기도 지역혁신시스템 내에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주요 역할



● 주요역할 1. 지역혁신정책의 연구 및 기획

- 경기도의 지역혁신정책에 대한 연구 및 기획, 조사·분석 등의 역할은 정책연구실이 담당함
- 과학기술진흥 관련 조례에 의거하여 수립되는 과학기술 기본계획(5년 단위), 디지털대전환 기본계획(3년 단위) 등 다수의 산업 도메인별, 정책 단위별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함
- R&D정책 수요조사를 통해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 공모사업, 경기도 자체 R&D사업(경기도 기술개발사업)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함
- 과학기술 및 중소기업 관련 통계DB를 구축하고 매년 업데이트 및 통계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정책연구 및 사업기획의 기초 자료로 제공 및 활용함

〈표 22〉 연구 및 기획 관련 주요사업 현황

역할	세부사업	주요 내용
정책연구	과학기술 정책연구	경기도 수요에 따른 과학기술 혁신 관련 정책연구(중장기 기본계획, 정부 동향에 다른 현안 연구 등)
	중소기업 정책분석개발	경기도 수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책연구(중장기 기본계획, 정부 동향에 다른 현안 연구 등)
	중소기업 정책연구①	정책연구실 자체 수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관련 정책연구
과제기획	R&D과제 기획	도내 산학연 전문가 대상 R&D 과제 발굴 수요조사 정례 실시
조사분석	과학기술 조사분석	경기도 과학기술 관련 데이터 조사분석 후 보고서 발간(경기도 과학기술통계집, 중앙정부 과학기술투자 유입현황, 경기도 R&D 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등)
	중소기업 조사분석②	경기도 내 중소기업 현황 관련 조사분석 추진

* 출처: 저자 작성

● 주요역할 2. 지역혁신정책의 실행

- 경기도 지역혁신정책의 실행을 위해 다양한 과학기술 혁신사업(R&D 지원, 클러스터 조성, 전략산업 육성, 국비 유치 등)을 수행함
- 타 지역 대비 우수한 산학연 주체를 확보하고 있는 경기도는 지역혁신 지원 프로그램과 대표 브랜드 사업(지자체 최초 자체 재원의 중소기업 지원 R&D 사업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함
-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판교테크노밸리'는 국내 지역 혁신클러스터의 성공 사례로 자주 인용되고 있으며, 입주기업의 성장으로 제2, 제3 판교테크노밸리까지 공간을 확장 중임
- 이외에도 경기바이오센터 운영을 통해 바이오산업 육성, 인공지능 관련 국비 유치를 통한 경기도 인공 지능 경쟁력 제고 등 경기도의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 중임
(*지역혁신정책의 실행관점에서 경기도 대표사업은 동 보고서 3-2 우수사례에서 추가 설명함)

● 주요역할 3. 지역혁신정책의 모니터링 및 확산

- 경기도 지역혁신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확산에 대한 역할은 정책연구실이 주로 수행함
- 앞서 소개한 '과학기술정책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경기도 R&D사업 평가 및 피드백을 담당함
 - 2016년까지 경기도 경제실 소관 공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으나 평가업무의 과중, 피평가 기관의 낮은 수용도, 평가 결과에 따른 예산 환류 미흡 등의 사유로 중단됨
 - 이후 경기도의 필요에 따라 개별 과제 단위의 평가제도(일종의 '특정평가제도')로 전환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경기도는 혁신정책의 성과를 확산하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 과학문화 확산사업을 추진
 - 2020년까지는 경기도 자체 재원을 통해 과학축전 등의 경기도 과학문화 확산 사업을 추진
 - 2021년 과기부의 '지역과학문화확산사업'에 선정되어 경기도 지역과학문화확산센터를 운영

〈표 23〉 혁신정책 확산 관련 주요사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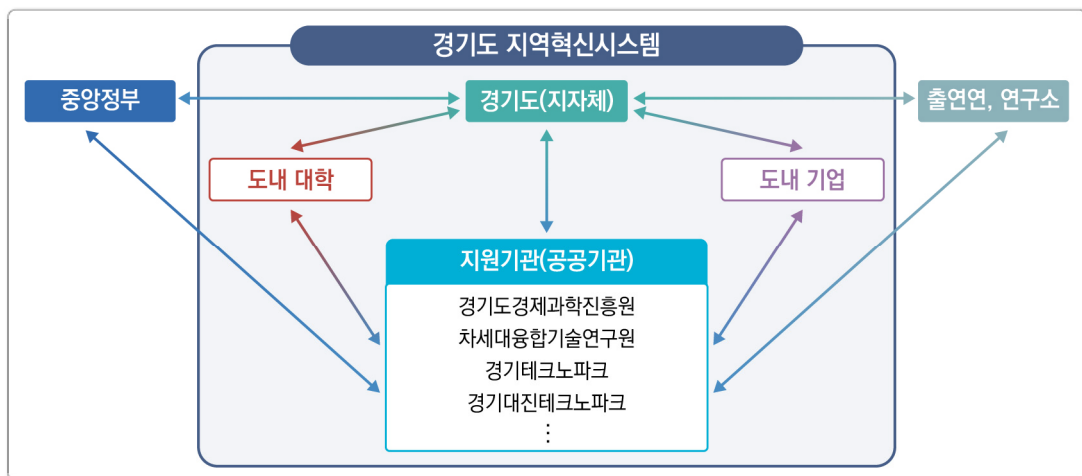
사업명	주요내용
지역과학문화 확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관부서 : 경기도 과학기술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과학창의재단) • 사업 기간 및 예산 규모 : 1년(단년도 계속 지원사업) / 연간 450백만원 이내(국비 225백만원, 도비 225백만원) • 사업내용 : 지역과학문화 활동 지원, 시군 협력, 과학문화 관련 사업자 지원, 소외지역 과학문화 확산 활동 추진 등

3) 경기도 지역주도 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 지역 과학기술정책의 거버넌스 시스템

-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네트워크 구축 모델로서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를 〈그림 31〉과 같이 제시함
 -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이해관계자)는 경기도(지자체), 지원기관(공공기관), 대학, 기업 등으로 지역혁신시스템(RIS)에서 활동하며, 중앙정부, 국가 출연연, 연구소 등 국가혁신시스템(NIS)과도 활발하게 협력관계를 구축함

〈그림 32〉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



* 출처: 저자 작성

■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

- 경기도(지자체)는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연계를 담당함
 - 과학기술정책 관련 제도(조례, 규정 등) 마련, 예산 반영, 중장기계획(경기도 과학기술정책 기본계획, 지방과학기술진흥계획 등) 수립, 사업 기획 등을 산하 지원기관 및 지역 내 혁신주체들과 협력하여 추진함
 - 국가과학기술정책과의 연계·협력을 위해 중앙정부 부처와도 상호 협력함
- 지원기관(공공기관)은 경기도의 과학기술정책 지원, 사업 기획 및 수행, 도내 혁신주체들의 지원을 담당하고 있음
 - 경기도의 과학기술을 지원하는 주요 공공기관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등이 있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가 100% 출연한 기관으로 지역의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를 지원하고 있음
 - 현재 경기도 과학기술 전담기관으로서,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지역 과학기술정책 수립 지원, 사업 수행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출연·출자한 기관으로서, 자율주행, 소재·부품·장비 등 융합연구, R&D인력양성 등을 수행하는 전문연구기관임
 - 경기테크노파크는 중소벤처기업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으로 출연한 기관으로서, 제조혁신, 경기도 뿌리산업, 지식재산 관리 등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도, 포천시, 대진대학교(대진재단)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경기북부지역의 산업과 기업 육성을 담당하고 있음
- 대학은 정부, 경기도 및 기초지자체가 추진하는 R&D, 인력양성, 산학협력사업 등을 수행함
 -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GRRC)'는 1997년에 경기도 산학협력사업으로 시작되었으며 경기도에서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대표 R&D사업임
 - GRRC는 기존 지역협력연구센터(RRC, Regional Research Center) 사업 규모가 지역 특성상 기업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집중 육성이 필요한 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임*
 - 2022년 기준, 도내 8개 대학(성균관대, 항공대, 차의과대, 경희대, 가천대, 경기대, 한국공대, 한양대 등)이 연구센터로 참여하고 있으며 산학협력 R&D를 수행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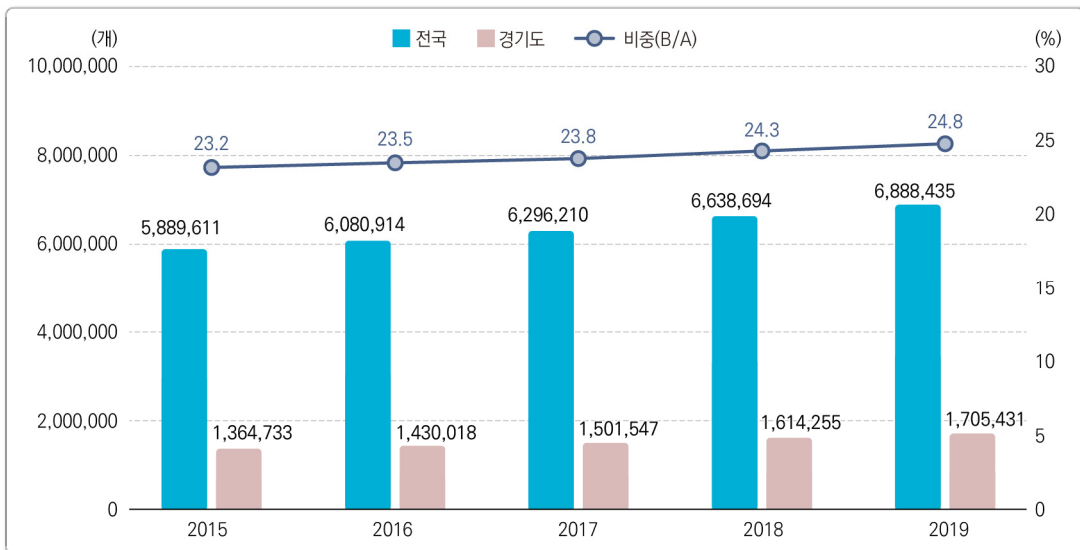
*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홈페이지(URL: <http://www.grcc.or.kr>, 검색일: 2022. 11. 22.)

- 도내 중소중견기업은 민간R&D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임
- 정부출연연구소, 산업협회 등도 지역 내 주요 혁신기관으로서 경기도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협력하고 있음

■ 경기도 혁신주체(산학연) 현황

- 경기도 혁신주체는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행위자이기 때문에 도내 혁신주체 현황을 살펴봄
- 기업 : 2019년 기준 중소기업 사업체 수(소상공인 포함)는 1,705,431개로, 전국의 24.8%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경기도 과학기술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은 R&D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기업의 현황이 중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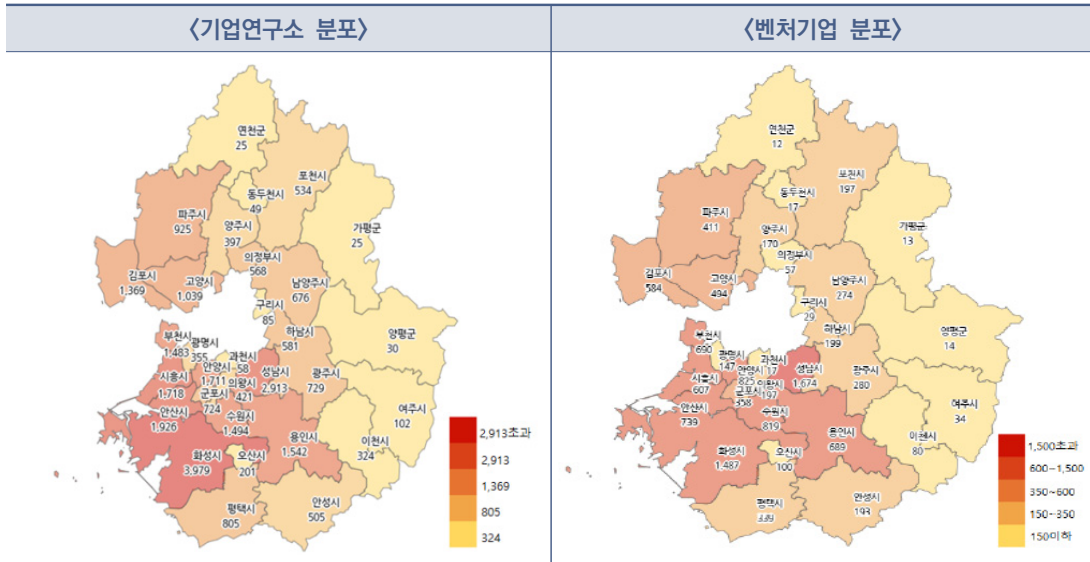
〈그림 33〉 경기도 중소기업 현황 추이



* 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022b: 39)

- 기업부설연구소와 벤처기업들은 경기남부(화성, 안산, 시흥, 성남, 용인, 수원 등)에 집중되어 있고 이는 경기도 산업, 일자리, 혁신역량 측면에서 지역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음

〈그림 34〉 경기도 기업연구소 및 벤처기업 분포



* 출처: 김명진·김학균(2021: 106, 109)

- 대학 : 4년제 대학 42개 중 이공계열을 보유한 대학은 28개임
 - 4년제 대학 기준, 경기 남부 23개, 북부 5개로 분포되어 있으며, 설립주체는 국립 2개, 사립 26개이며, 본교 22개 분교 및 캠퍼스 6개임
 - 4년제 대학 기준, 기초과학 실험실 보유 대학은 20개이며, 8개 대학은 IT분야(정보통신,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등) 연구실을 보유하고 있음
- 공공연구소 : 경기도 내 공공연구소는 20개가 있는데 지역분원까지 포함하면 총 34개이며, 17개 시·군에 분포되어 있음
 - 대부분이 정부출연연구소이며,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연구소는 국립암센터, 농어촌연구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한국건설기술시험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등임
 - 이외에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주요 연구소의 지역분원이 소재함

〈표 24〉 경기도 내 정부 공공연구소 현황

기관명	지역	지역조직명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광주시	광주검역사무소
	용인시	용인검역사무소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수원시	산업혁신수학센터
국립농업과학원	수원시	국가특허미생물통합보존소
국립식량과학원	수원시	중부작물부
국립암센터	고양시	본사
국립축산과학원	수원시	동물병원
	용인시	용인가축질병방역센터
	평택시	평택사무소
농림축산검역본부	의왕시	의왕사무소
농어촌연구원	안산시	본사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성남시	본사
한국건설기술시험연구원	화성시	본사
	고양시	본사
	연천군	SOC 실증연구센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화성시	화재안전연구센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군포시	경기지역본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안산시	경기지역본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천시	금형성형연구부문
	시흥시	시흥뿌리기술지원센터
	안산시	융합생산기술연구소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천시	이천분원
한국전기연구원	안산시	안산분원
	의왕시	의왕분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성남시	서울SW-SoC융합R&BD센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의왕시	본사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성남시	본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과천시	본원(과천청사)
	김포시	김포지원
	부천시	부천지원
	안산시	안산지원
	용인시	용인청사
	의정부시	의정부지원
	화성시	화성지원

* 출처: 김명진·김학균(2021: 117)

4) 주요성과

■ 지자체 주도 R&D사업 : 경기도기술개발사업

- **(필요성)** 광역지자체의 자체 기술개발사업은 1)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2)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3) 지역 특화산업 발굴 및 맞춤형 육성, 4) 중앙정부 지원의 보완 등을 통한 지역 경제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함(정의정 외, 2014)
 - 경기도는 지역주도 R&D정책 강화 패러다임에 대응하고 독자적인 과학기술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R&D사업을 구상
- **(기획 단계)** 동 사업은 정부의 지역 R&D사업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추진됨에 따라 경기도가 자체 예산으로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됨
 - 2008년 경기도 산학연의 기술협력 촉진과 기업 R&D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세계적 수준의 R&D 지역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 경기연구원, 경기과학기술센터(경기연구원 부설)에서 기획함
 - 경기도가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사업기획을 요청, 경기연구원에서 기획하고 경기과학기술센터가 수행주체로 설계되었으며, 추후 사업 규모 확대계획을 통해 전담기관 설립이 논의되기 시작함
- **(집행 단계)**
 - (지원 분야) 사업 초기에는 지원유형을 전략산업형과 기업주도형으로 구분하고 전략산업형은 다시 '산업기술'과 '공공기술' 분야로, 기업주도형은 '산업혁신클러스터(IICC)'와 '기업개방형'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음. 그동안 여러 번의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2022년 현재 전략산업형의 '공공기술'과 '산업기술' 분야, 기업주도형의 '일반'과 '북부특화' 분야로 구분하여 지원되고 있음

〈그림 35〉 2022년 경기도기술개발사업 구성 및 지원내용

	지원분야	사업내용	지원규모	지원과제 수
전략산업형	공공 기술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중소기업분야의 기업수요중심(자유공모) 단기 사업화 촉진 기술개발	1년, 1.5억 원 이내	7.5억 원 (5개 내외)
	산업 기술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신기술제안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과제(지정공모) 실증연계 기술개발	1년, 1.0억 원 이내	2.0억 원 (3개 내외)
기업주도형	일반	기업수요 중심(자유공모)의 단기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 (신제품 및 시장개척)	1년, 1.5억 원 이내	30억원 (20개 내외)
	북부 특화	경기 북부*소재 기업(자유공모) 중소기업분야 기술개발	1년, 1.5억 원 이내	6.0억 원 (4개 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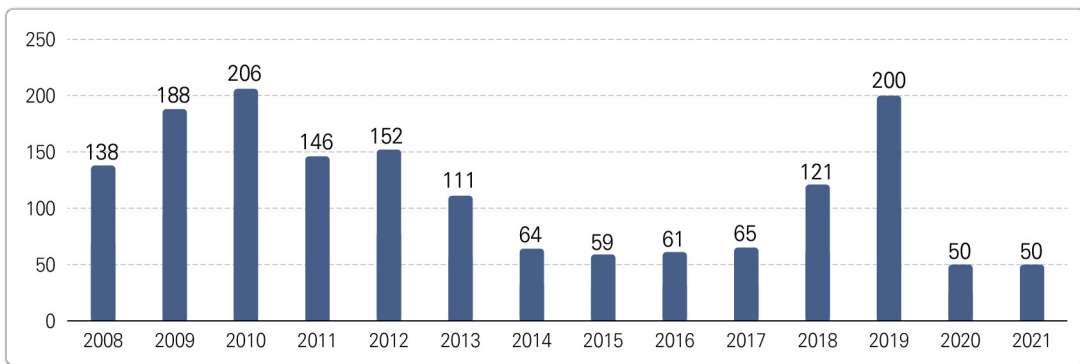
* 북부 특화분야 대상지역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가평

* 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022c: 28)

- (예산) 사업초기 약 130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되었으며 점차 증가하여 2010년에는 206억까지 확보한 적이 있음. 그러나 점차 감소하여 경기도 재정상황이 어려웠던 2014년~2017년 기간 동안에는 50~60억 수준으로 감소하였음. 2018년 사업지원 전담기관 변경과 2019년 일본의 반도체소재 수출규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다시 증가하였다가 2020년 이후 년 50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 (수요) 경쟁률은 13년('08~'21년) 간 평균 경쟁률은 4.4대1로 지원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19년 1차 공고시 10.1 대 1로 최고 경쟁률을 달성
- (대상) 기술개발사업 주관기관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이 약 9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학·연구소 6%, 중견기업 4% 등의 비중을 차지함

〈그림 36〉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연도별 지원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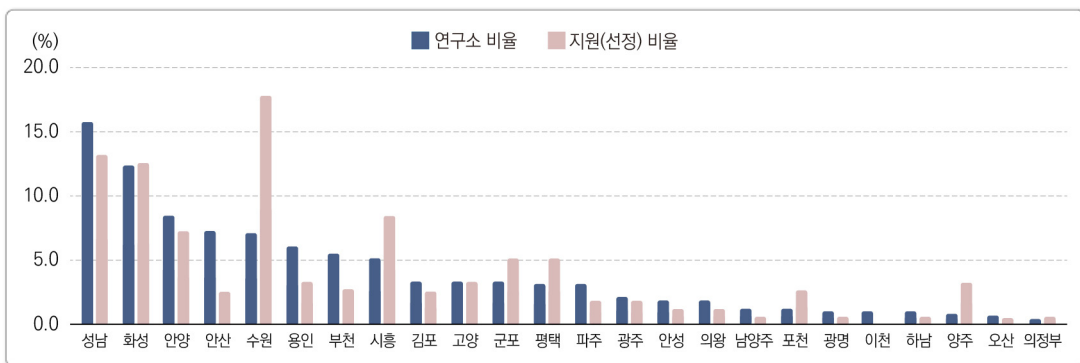
(단위 : 억원)



* 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022c: 10)

- (시군별 지원현황) 기업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성남, 화성, 안양, 안산, 수원 등에 소재한 기업들의 지원 수요도 많고 선정도 많음

〈그림 37〉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시군별 지원현황



* 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022c: 10)

- **(평가 단계)** 동 사업은 매년 초에 기술개발을 수행할 기업 선정 후, 현장평가 및 중간점검을 통해 기업의 기술개발 성과를 제고하고 애로사항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매년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성과 분석 수행과 성과분석보고서 발간을 통해 사업의 성과 점검과 익년도 사업 기획 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환류시스템이 구축·운영
 - 2022년 1월 조사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21년까지 지원하여 R&D수행이 '성공'으로 종료된 699개 과제의 주요 성과는 특허출원 770건, 특허등록 709건, 신규고용 6,959명, 매출 7,668.4억원 등임
 - 다만 동 사업은 도내 재정상황 및 소재부품장비기술개발사업 등 새로운 사업 추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투자규모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종합)** 경기도기술개발사업은 경기도 ①과학기술경쟁력 및 혁신역량 제고, ②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③경기도형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등에 기여함
 - ① 경기도 과학기술경쟁력 및 혁신역량 제고 : 도내 산업 고도화 및 핵심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실행방안이며 사업 성과 확산을 통해 미래 산업 및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내 혁신역량을 강화
 - ② 경기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R&D 수요가 높아 정부의 중소기업 대상 기술개발 지원사업만으로는 도내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며, 경기도의 현장밀착지원과 지원 효율성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 ③ 경기도형 지역혁신시스템 구축 : 동 사업의 추진을 통해 지역주도의 R&D정책 수행, 전략산업의 기술경쟁력 및 혁신역량 제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실현함으로써 독자적 지역혁신시스템 구축에 기여

〈표 25〉 경기도기술개발사업의 특징(정부 사업과의 차별성)

부처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경기도
분야	기초·원천	주력산업	소산업	소산업
규모	대형	중·대형	중소형	소형
기간	중장기	중장기	단기~중기	단기
범위	범국가, 사회	산업 발전	기업 상용화 (선택·집중형)	기업 상용화 (저변확대형)
대상	국가출연연	대·중견기업	중소·창업기업 (소상공인)	중소·창업기업 (대학, 연구기관)

* 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022c: 23)

■ 혁신클러스터 육성 사업 : 광고, 판교 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

- 경기도는 2000년대 초반부터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을 지역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였음
 - 혁신클러스터는 혁신주체들의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혁신활동이 이루어지는 지리적 개념으로 지역의 경제·산업육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임(정승용 외, 2020)
 - 경기도는 체계적인 혁신클러스터 육성정책 추진을 위해 2014년에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년 「제2차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종합계획(2016~2020)」과 2021년 「제2차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종합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음

〈표 26〉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조성 현황

	구 분	현황	분야	소재지
조성 완료	광고테크노밸리	2008년	나노, 바이오, 융합기술 R&D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원
	판교테크노밸리	2015년	IT, BT, NT 첨단연구개발단지	성남 분당구 대왕판교로 일원
	안산사이언스밸리	2010년	첨단부품소재, 메카트로닉스, 지능형로봇	안산시 상록구 사3동 일원
조성 예정	제2 판교테크노밸리	2023년	자율주행,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ICT첨단산업	성남시 시흥동 및 금토동 일원
	제3 판교테크노밸리	2023년	미래금융, ICT첨단 산업	
	광명·시흥테크노밸리	2024년	스마트 하드웨어, 데이터산업	광명시 가학동, 시흥시 금이동
	용인플랫폼시티	2025년	미래형 복합 자족도시 (IT, BT 중심 첨단기업)	용인시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 등 일원
	고양일산테크노밸리	2023년	IT기반 콘텐츠, 융합의료기술 등	고양시 일산구 대화동 일원
	양주테크노밸리	2024년	첨단섬유, 디자인, 전기전자	양주시 마전동 일원

* 출처: 정승용 외(2020: 68)

〈그림 38〉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비전 체계도



* 출처: 정승용 외(2020: 129)

- 광교테크노밸리 조성 현황은 다음과 같음(백인길 외, 2015)
 - (배경) 1990년대 말 경기도청소재지인 수원시가 고밀도 구시가지로 인해 공간구조 재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관(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이 대두됨. 당시 수원시는 이의동 일원에 컨벤션시티 조성을 계획하였으나 도시기본계획(2004년)에서 행정타운으로 계획이 확대됨. 경기도와 수원시의 '경기 첨단행정신도시 건설을 위한 수원 이의지구 개발 계획'의 제안과 이의 승인을 통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도시인 광교신도시 조성이 시작되었으며, 도시지원시설 부지에 광교테크노밸리가 조성됨
 - (목적) 광교신도시 내 첨단 R&D 연구단지과 민간 R&D·업무시설, 대학 연구시설 등을 포함하는 첨단 산업의 중심지역으로 조성됨수원 남부 민간연구소, 대학 등과 연계하여 첨단기술혁신의 중심지로 조성
 - (미래상) BT, NT, IT 중심의 융복합 R&D 허브

〈그림 39〉 1단계 조성 광교테크노밸리 구상도 및 전경



* 출처: 정승용 외(2020: 70)

* 출처: 김수진 외(2010: 10)

- (주요내용) 2008년에 5개 공공시설이 구축되면서 광교테크노밸리 1단계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고, 2단계 개발사업은 의료·건강분야 특성화산업과 관련하여 민간 기업컨소시엄 유치로 현재 진행 중임

〈표 27〉 광교테크노밸리 조성 및 운영 현황

구분		현황	분야	소재지
조성 현황	위치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광교신도시 내 택지개발지구 내)		
	규모	5개 시설(부지 269,404㎡, 건축연면적 221,532㎡)		
	조성 기간	2004년 02월 ~ 2008년 02월		
	사업비	5,578억원 * 재 원: 국비 578억원, 도비 4,604억원 민간 등 기타 396억원		
운영 현황	시설·관리	5개 공공시설 및 3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광교테크노밸리 운영 * 5개 공공시설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R&DB센터, 경기바이오센터, 한국나노기술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 3개 공공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3개시설 관리), 한국나노기술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입주 기업·기관 현황 ('15년 기준)	218개 기관, 상근자 3,383명 * BT(27%), IT(25%), NT(15%), 융합(8%) 중심		

* 출처: 정승용 외(2020: 71-73)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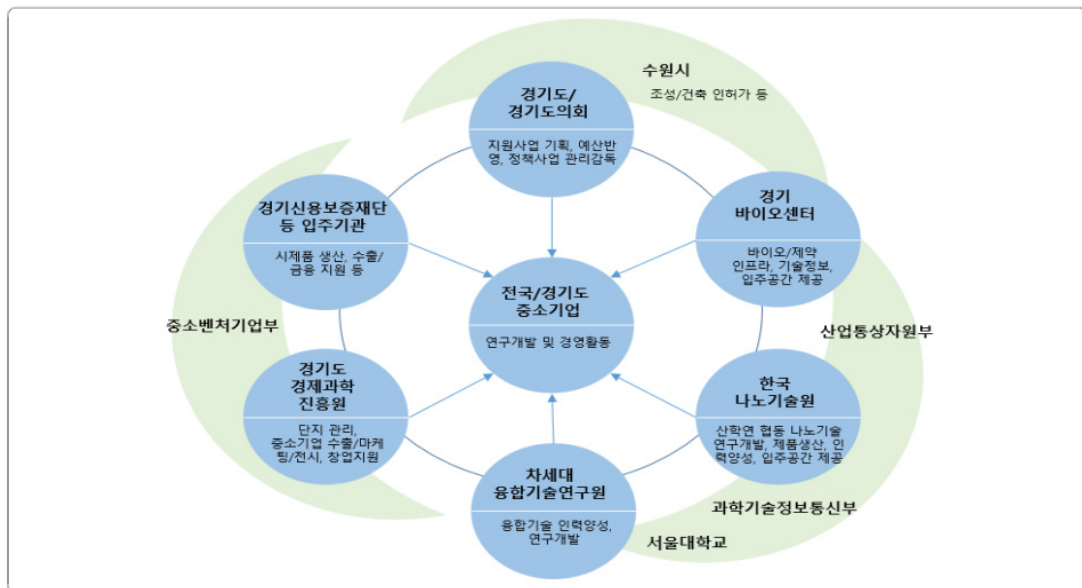
- (협력네트워크) 2022년 현재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단지 관리기관)을 중심으로 광교테크노밸리 내 공공기관(차세대융합기술원, 한국나노기술원 등) 간의 협력은 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공기관은 광교 내 입주기관(기업)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 혁신주체를 지원함*

* 기관 설립 관련 정보는 각 기관 홈페이지 참조.

〈표 28〉 광교테크노밸리 혁신주체별 역할

주체	내용
경기도/경기도의회	광교테크노밸리 조성,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지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 수행에 관한 관리·감독 및 예산지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1996년 설립되었으며 사업성과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을 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테크노밸리 단지의 시설 및 입주기업/기관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 및 과학기술 진흥 전담기관으로 경기도 전역 중소기업을 지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2008년 개원 시 서울대의 나노, 융합생명공학, 차세대자동차, 지능로봇, 소프트웨어 등 9개 연구소가 입주함. 2018년 경기도와 서울대학교가 공동출연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현재는 경기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자립화 연구지원사업 등 융합기술R&D를 담당
한국나노기술원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나노소자, 화합물 반도체 분야의 연구개발 및 지원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나노기술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경기도와 과기부가 투자하여 2008년 설립 완료. 자체적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나노관련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 지원, 나노기술 인력양성 사업을 수행
경기바이오센터	제약바이오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석 장비와 공간을 제공하는 등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
정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경기도와 협력
수원시	클러스터 조성, 건설 및 교통망 구축에 수원시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입주기업	광교테크노밸리에는 다수의 제약/바이오, 나노, 반도체 장비 등과 관련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이 입주

〈그림 40〉 광교테크노밸리 협력네트워크



* 출처: 저자 작성

● 판교테크노밸리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근거)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2004.11)
- (배경) 2000년대 초 세계 경제가 첨단지식산업 경제로 변화하면서 주요 국가에서는 지식기반산업 집적지 또는 혁신클러스터 조성 및 육성이 활발하였음. 이에 경기도는 정부에 벤처단지 집적지 조성을 제안하여 ‘성남 판교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받아 개발을 시작하였음
- (목적) IT 관련 융합기술 중심으로 세계적인 혁신클러스터로 육성
- (미래상) IT와 IT R&D 융합기술의 R(Research), I(Information), T(Trade)가 융합 발전하는 ‘글로벌 R&D 허브’
- (주요내용) 3개의 공공지원시설(글로벌R&D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건립이 완공되어 1단계 개발사업이 2015년에 완료되었으며, IT/BT/CT 등 첨단 산업업종을 유치하였음

〈표 29〉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및 운영 현황

	구 분	현황	분야	소재지
조성 현황	위치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판교신도시 택지개발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		
	규모	3개 주요 용지(초청, 일반, 연구지원) 구성 (부지 661,925㎡, 건축연면적 433,248㎡)		
	조성 기간	2005년 ~ 2015년		
	사 비	5.3조 * 용도 : 토지비 1조 4,046억원, 건축비 3조 8,659억원 * 재원 : 국비 578억원, 도비 4,604억원, 민간 등 기타 396억원		
운영 현황	시설·관리	3개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위탁하여 판교테크노밸리 운영 * 3개 공공시설 : 글로벌R&D센터,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캠퍼스		
	입주기업 현황 (‘20년 기준)	1,259개사, 상시 근무자 64,497명 * (IT) 830개(65.9%) (CT) 165개(13.1%) (BT) 164개(13.0%) (NT) 17개(1.4%) (기타) 83개(6.6%)		

* 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020: 3, 7-8); 정승용 외(2020: 76-78)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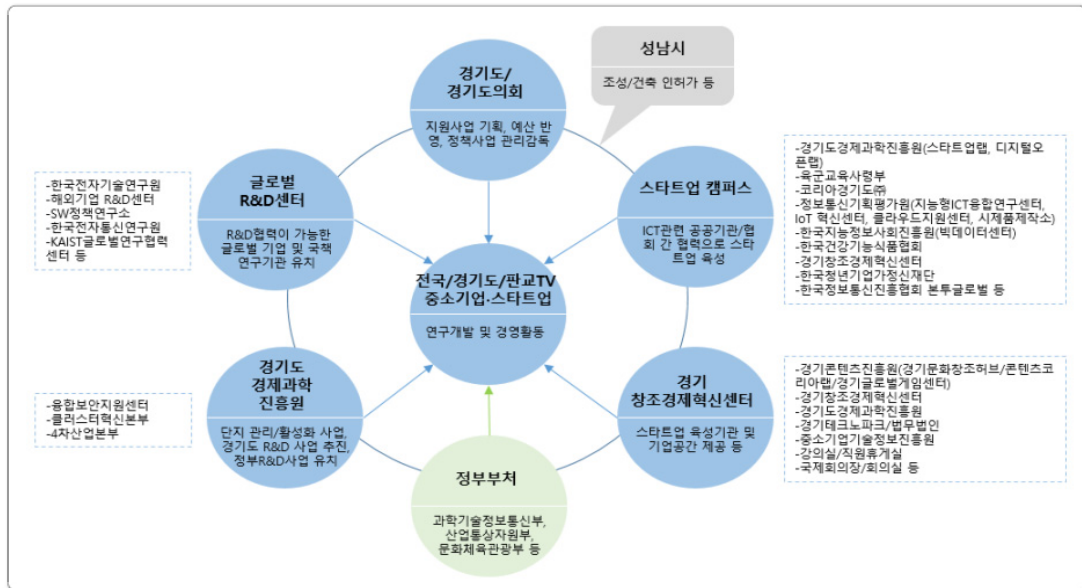
- (협력네트워크)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클러스터 관리기관)은 판교테크노밸리 내 산학연이 교류할 수 있는 문화행사, 교육, 투자교류회 등을 개최하고 있으며, 매년 ‘판교테크노밸리 실태조사’를 통해 입주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하고 있음. 판교테크노밸리에는 다수의 정부부처 연구개발지원기관이 입주하여 자체R&D 및 기업들의 기술개발 및 창업지원을 하고 있음*

*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URL: <https://www.pangyotechnovalley.org/base/main/view>, 검색일: 2022. 11. 22.)

〈표 30〉 판교테크노밸리 혁신주체별 역할

주체	내용
경기도/경기도의회	판교테크노밸리 조성, 연구기관 유치, 판교테크노밸리 운영에 관한 관리·감독 및 예산지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판교테크노밸리 단지 관리 및 입주기업/기관 지원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ICT/SW 및 대형 국가R&D사업 유치 등을 통해 도내 관련기업을 지원
스타트업 캠퍼스	ICT 관련 기관협회 및 전문기업이 협업하여 스타트업 육성 글로벌 벤처캐피탈, 엑셀러레이터 등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2015년 완공.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스타트업랩, 경기도 스타트업캠퍼스, 디지털오픈랩, 지노바아시아), 정보통신기획평가원(지능형ICT융합연구센터, IoT혁신센터, 클라우드지원센터, 시제품제작소), 트허법인, 코리아경기도(주), 본투글로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SAP LAP코리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등이 입주해 있으며, 이들은 전국 IT기업 및 관련 창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육실, 회의실, 국제회의장, 컨설팅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경기문화창조허브, 콘텐츠코리아랩, 경기글로벌게임센터를 운영하며 콘텐츠 스타트업을 육성. 이외에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융합보안지원센터, 클러스터혁신본부, 4차산업본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기테크노파크, 법무법인,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이 단지 내 기업지원 기능을 수행
글로벌R&D센터	경기도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R&D협력이 가능한 글로벌 기업 및 국책연구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건립한 공간으로 2012년 준공. 제네랄일렉트릭 인터내셔널, 싸토리우스코리아 아이바이오택(주), 베이커휴즈코리아(주), SW정책연구소, 한구전자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KAIST글로벌연구협력센터 등이 입주
정부 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ICT/SW 및 디지털콘텐츠 관련 연구개발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다수의 지원기관을 판교테크노밸리에 집적시키고 있음. 이들은 판교테크노밸리 내 약 1,697개 입주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

〈그림 41〉 판교테크노밸리 협력네트워크



* 출처: 저자 작성

- 상기와 같이 경기도는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여 혁신기업들이 집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의 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내외부 지원기관이 함께 위치할 수 있도록 유도함
 - 판교테크노밸리는 첨단R&D단지 조성을 통해 반도체, 바이오, 융합 R&D거점으로 성장 중임
 - 판교테크노밸리는 글로벌 혁신클러스터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판교테크노밸리의 모델을 제2판교, 제3판교테크노밸리로 확대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고양테크노밸리, 양주테크노밸리 등 신규 혁신클러스터를 조성 중임
 - 판교·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대상 실태조사 결과, 기업의 인지도 향상, 매출 증가, 신제품개발 등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 것으로 조사됨
 - 향후 혁신클러스터의 지속적 육성을 위해서는 성장단계에 맞는 지원체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장기적 예산확보가 필수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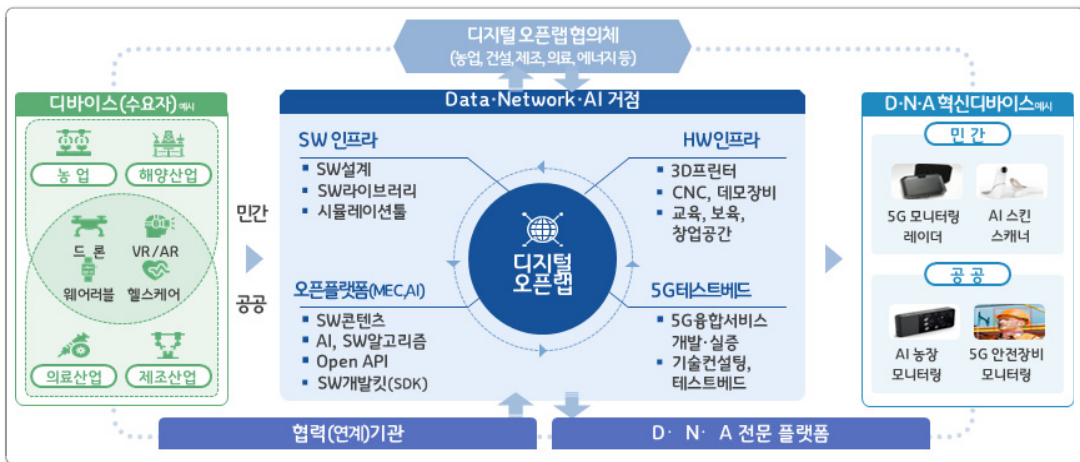
■ 대형 정부사업 유치 : 열린혁신 디지털오픈랩 사업,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 정부는 지역주도 R&D정책을 통해 지자체의 R&D사업 기획 역량을 제고하고 지역 내 혁신주체들이 성장 기반을 마련하게 하려는 정책을 추진함
 - 5개년마다 수립되는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에서 강조하는 지방 과학기술정책의 기본방향은 지역주도(또는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 혁신성장임
 - 경기도는 지역주도 과학기술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지자체 주도 R&D사업 및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통해 사업기획 역량을 제고하고 있음
- 경기도는 지역과학기술 맞춤형 사업을 기획하여 정부에 제안하거나 국책사업 공모에 참여하여 대형사업을 유치하고 있음
 - 경기도가 국가 R&D사업을 유치한 최근 성공 사례로 과기부의 디지털오픈랩 사업과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을 살펴보고자 함
- 열린혁신 디지털오픈랩 사업은 디지털 신기술을 통한 융합 신산업 창출과 글로벌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2021년 경기도가 동 사업을 유치함*
 - (추진목적) 판교테크노밸리 인프라를 연계하여 범부처·지자체·민간협력 인프라 구축 및 D(Data)·N(Network)·A(AI) 융합 디바이스 개발·확산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융합 혁신 실현
 - (사업기간) 2021년 4월 ~ 2025년 12월
 - (총사업비) 49,700백만원(국비 47,000백만원, 도비 1,800백만원, 대구 900백만원)

* 디지털오픈랩 홈페이지(URL: <https://digitalopenlab.kr/>, 검색일: 2022. 11. 22.)

- (수행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사업기획, 주관, 인프라 구축
 - 대구테크노파크 : 지역기업 홍보, 교육 및 R&D지원
 - 대학(전북대학교,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 : 교육과정 운영
 - 연구기관(한국전자통신연구원) : 자체R&D 및 R&D지원
 - 지원기관(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스마트기술진흥협회) : 기업 홍보 등
- (지원대상) 국내 5G, AI 기술 및 제품 보유 중소/스타트업
- (사업내용)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공간), 융합 디바이스·서비스 개발지원(R&D), 교육과정 운영 등
- (1차년도 주요성과) 2021년 4월 선정 결정이 나고 2022년 6월 디지털 플랫폼이 오픈되었으며 10월까지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게 디지털융합 디바이스 개발 지원 35건을 수행함

〈그림 42〉 열린혁신 디지털 오픈랩 추진내용



* 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022d)

- (사업의 의의) 오픈 이노베이션 기반 혁신 디바이스 및 서비스 개발 공간을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내 구축하여 경기도 중심의 디지털 융합 혁신기반 조성 및 확산을 도모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과학기술 진흥 전담기관으로서 동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 유치하고 참여기관과 함께 도내 관련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함. 특히 경기도, 중앙정부, 타 지자체, 민간과 함께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대한민국의 DNA 융합디바이스 개발사업을 선도함
-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기술이 가져올 미래사회의 변화된 모습을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AI 테스트베드를 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에 구축하고자 기획된 사업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21.2)
 - (추진목적) 판교테크노밸리에 기 추진해왔던 경기도 인공지능 실증 지원, 판교 AI얼라이언스 운영 등과

- 연계하여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산업경쟁력 및 혁신성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기간) 2021년 5월~2023년 12월
- (총사업비) 39,000백만원(국비 19,500, 도비 19,500)
- (수행기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5개 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기획하여 주도하고 연구기관(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기업(콩테크, 아임클라우드) 등과 협력하여 수행함(참여기관이 실증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의 수요를 받아 실증을 진행하는 방식)
- (지원대상) 국내 AI 기술 및 제품 보유 중소기업, 중견, 대기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지원(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사업내용)
 - ① AI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 ② AI 기술실증 서비스 시나리오 기반 국민참여형 실증 평가 및 검증
 - ③ AI 기술요서 중심의 전문 시험·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 ④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 위원회 및 활성화
- (비전, 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표 31> AI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비전 및 목표

비전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스마트 판교 - 사람 중심 AI, 산업 혁신 AI, 삶의 혁신 AI	
전략	AI 기술실증 테스트베드 조성을 통한 혁신성장 모델 발굴 및 차세대 핵심기술 산업경쟁력 강화	
중점과제	플랫폼 기반 AI 테스트베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판교 AI 실증 테스트베드 인프라 구축·운영 ② AI 실증 지원센터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실증 서비스 시나리오 기반 국민 참여형 실증 평가·검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국민 체험 AI 기술융합 서비스 실증 지원 ④ AI 기술 실증기업 사업화 지원 및 국민 체험평가단 운영
	AI 기술요소 중심의 전문 시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⑤ AI 기술 인증 체계 구축 및 컨설팅 지원 ⑥ 도시·사회문제 해결형 AI 기술 융합 실증 확산
정책 추진 인프라	AI 기술실증 환경 제공으로 실증체계 고도화 및 협업체계 강화	

* 출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2022d)

- (사업의 의의) 국민 체감도와 산업 파급효과가 큰 AI 기술을 판교테크노밸리 내 인프라(자율주행센터 등)와 연계하여 실증과 사업화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AI 혁신사례를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창출하고 이를 통해 도내 주요 산업 디지털 전환을 촉진함. 경기도 과학기술 진흥 전담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동 사업을 기획·유치하여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과학기술발전과 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선도모델이 되고 있음

4) 향후 과제

■ 기획단계

- **(정부)**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과학기술진흥’사무 및 대학교의 역할을 명시
 - 「지방자치법」 제13조②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구역/조직/행정관리, 주민의 복리증진,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이 포함되나 ‘지역과학기술진흥’ 사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음
 - 또한,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과 관련 고등학교까지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의 사무는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 과학기술혁신의 핵심주체인 ‘대학교’의 역할은 부재하여 지역 소재 대학교들의 지역 혁신에 대한 의무와 책임 인식이 약함
 - 따라서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혁신주체들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려면 지역 혁신주체의 의무와 책임임을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행정안전부 소관 법개정)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 제13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 법이 주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의 지역R&D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지자체 주요 과학기술혁신정책의 근거로 사용하기 어려움(균특위/산업부 소관)
 - 지자체가 100%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과학기술진흥 전담기관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상황을 개선하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는 과학기술혁신정책을 ‘필수 또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 사항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 **(경기도)** 경기도정에서 과학기술정책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도의회에서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추진에 관해 이해력과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정을 촉구할 필요
 - 광고/판교테크노밸리, 안산사이언스밸리 조성 등을 통해 첨단기술/기업/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아직까지 지역경제 및 산업활성화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음
 - 앞으로는 이에 더하여 지역과학문화 저변 확대(도민, 소외계층 등), 지역 내 대학의 연구역량 향상 등 지역혁신역량 강화 측면으로도 조망하는 것이 필요(현재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기본계획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투자예산은 크지 않음)
 - 현재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및 사업 소관 상임위는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들의 경기도 과학기술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공통)**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의 목표를 기존의 ‘지역산업 육성’에서 ‘지역 혁신역량 강화’로 패러다임을 전환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 R&D정책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따라서 지역에 천착한 업종의 기술개발 지원, 중앙-지역이 선정한 지역별 특화산업 기술 인프라 및 R&D 지원 및 관련된 인력양성 등에 집중하고 있으나, 지난 30여년간 지속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첨단산업과 고급인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는 상황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한계를 보임
-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역 경쟁력*을 높여 인력 유치(예를 들어 우리나라 조선업은 세계 1위를 자랑하는데 경남과 전남에 조선업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공공립/민간연구소, 우수대학 관련 학과들이 집적된다면 조선업 및 해당 업종의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이 이 지역으로 모이게 될 것임)
- 지역의 교육/문화 환경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정주여건 확보를 함께 추진
- 독일 등 연방정부체제 국가들의 지역 경쟁력 강화정책을 벤치마킹하는 것도 필요

■ 실행단계

- **(공통)** 지역과학기술정책에 관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
 -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스스로 지역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큰 틀에서 가이드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가적 정책방향과의 연계 및 중장기적으로 지역혁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을 찾는 '망원경' 역할을 수행. 지자체 간 유사/중복의 문제가 발생 시 중재를 통해 국가재정의 낭비 및 지역 간 경쟁을 피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역사, 사회, 환경, 문화에 대해 지자체가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음. 지역의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단/중/장기적 역할을 찾아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수립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현미경' 같은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과학기술진흥 사무를 담당할 인력 및 재정적 지원 추가
 - 중앙정부(산업부, 과기부)에서는 지방과학기술진흥 사무의 일부를 지역으로 이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무를 맡게 되므로 해당업무를 수행할 지자체별 공무원 정원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세입원을 찾는 것이 필요. 지방의 인력과 재정적 상황을 함께 고려한 범부처(과기부, 산업부, 행안부 등)의 결단이 필요

* 지역 경쟁력이란,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유지 및 향상시키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시장 점유율을 안정·증가시킬 수 있는 역량을 말함. 경쟁력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숙련 노동력과 투자, 지식, 기술 등 혁신활동이 유입되므로 지역 간 경쟁의 산물임. 경쟁력 있는 지역이란 '세계시장을 충족시키는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지역, 해당 지역에 입지한 기업들이 높은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 기반시설, 사회자본, 제도·자본 등이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기때문에 높은 수준의 소득과 고용을 유지함 (Camagni, 2002; Storper, 1997; 노용식·이희연, 2012: 603에서 재인용)

- **(경기도)** 지역의 혁신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운영방식의 개선을 통해 과학기술 전문기관으로써의 전문성 확보 및 사업 예산과 협력 네트워크 확대
 - 경기도의 과학기술진흥사업 예산 확대가 필요함. 정부는 정부예산의 약 5%까지 R&D 투자를 목표로 정하고 실천하는 반면 경기도는 매년 총 예산대비 과학기술투자 비중이 지속 감소하는 추세에 대한 개선 시급
 - 미래차, 반도체,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경기도의 우수한 과학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정부와 협력하여 첨단R&D사업을 공동 기획 및 추진하는 것이 필요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면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규제 vs. 수도권 완화 의견이 대치되는 것보다는 지역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
 - 또한,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경기도가 타국가의 과학기술정책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거나, 경기도의 우수사례를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확산시키는 역할도 필요함

■ 평가 단계

- 정책 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차원에서 과학기술정책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수준의 조사-분석-평가-환류 체계 확보가 필요
 - 2016년 이후 중단된 경기도 공공기관 대행사업 종합평가제도를 부활시켜서 정책사업에 대한 주기적 평가와 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경기도과학기술진흥위원회의 실질적 예산 심의 기준 확보를 통해 평가 결과를 사업 예산에 반영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함

〈표 32〉 주체별-단계별 향후 과제

주체/단계	기획	실행	평가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지자체의 의무사무로 지방자치법에 명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에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강화' 관련 사무를 담당할 인력 및 자원 지원 	
경기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정에서 과학기술진흥정책의 우선순위 확보 • 경기도의회의 과학기술정책 인식 및 관심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진흥 전담기관 설립 • 과학기술 예산 확대 • 미래첨단산업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 추진 • 타 지자체 및 해외 과학기술 협력 체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환류체계 강화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과학기술혁신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지역산업 육성 - (향후) 지역혁신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과학기술정책 추진에 대한 역할 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망원경' 역할 - (지자체) '현미경' 역할 	

2

제3절 해외 지역혁신정책 현황 분석

Open
Policy
Lab

제3절

해외 지역혁신정책 현황 분석

1. 유럽연합(EU) 지역혁신정책: 스마트 전문화 사례를 중심으로

1) EU의 결속정책(Cohesion Policy)과 스마트전문화 전략

(1) 배경 및 목적

■ EU 회원국 수가 늘어남에 따라 회원국의 삶의 질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정책의 일환으로 결속정책을 EU 초기부터 계획하고 추진(정홍렬, 2021 수정인용)

- 초기에는 정책에 대한 의지 표명만 했을 뿐 정책 시행은 주로 회원국들이 추진
- 그 후 공동체는 경제통화동맹(EMU)과 단일시장을 추진하면서 경제적 격차 확대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정책을 시행하고, 관련된 기금의 규모 확대
- 1999년 말부터는 중동부 유럽 국가들까지 회원국을 확대하는 문제와 맞물려 국가 간 경제적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정책을 더욱 확대강화 추진

■ EU 결속정책의 발전과 결속정책 2014-2020, 스마트전문화 전략(RIS3)

- EU는 유럽 내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혁신을 위한 제도적 환경 개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상품을 개발속도를 높여 EU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신광민 외, 2015 수정인용)
- Europe2020의 목표 달성과 지역의 수요에 따른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결속 정책(Cohesion policy) 2007-2013의 후속정책으로 결속 정책(Cohesion Policy) 2014-2020가 개정되어 추진
 - 과거 결속 정책(Cohesion Policy) 2007-2013은 Europe2020과의 연계가 낮았으며 투자에 대한 성과 측정이 어려움
 - 결속 정책(Cohesion Policy) 2007-2013은 경제적·사회적·불균형 해소에 기여를 했으나, 혁신수요에 대처, 지역의 효과적인 공공지출 측면에서 한계
 - 성과가 해당 지역의 경제적 환경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결속 정책(Cohesion Policy) 2007-2013이 유럽의 주요 투자 분야와의 연계가 낮아 자원이 주요 분야에 집중되지 못하고 분산 투자
- EU는 향후 10년의 성장 전략으로 EUROPE 2020전략을 수립하여, 교육(인력양성), 연구개발 및 기술

혁신에 투자하여 지속가능한 유럽의 성장 추진

- 결속 정책(Cohesion Policy) 2014-2020은 Europe2020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개정 추진

-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EU 내 국가 및 지역의 지속적인 경쟁력 약화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제시된 개념으로 2010년 EU의 성장전략 보고서인 'Europe 2020'에서 '스마트 전문화를 위한 연구혁신 전략(Research and Innovation Strategy for Smart Specialisation: RIS3)'으로 대두

〈표 33〉 결속 정책(Cohesion Policy) 2014-2020 주요 개정 사항

구분	주요 내용
유럽 전 지역 지원	• 지역의 발전 수준(GDP 기준)에 따라 지원 수준과 해당 지역의 공동 부담비율에 차이를 두어 유럽 전 지역 지원
주요 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	• Europe2020과 연계되는 11개의 주요 성장 분야에 ESIF 기금을 집중적으로 지원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 가용 자원으로 성취 가능한 목표 설정, 목표달성을 위한 프로세스 수립,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시스템 구축, 성과지표 설정
조건부 조항 설정	• 지역에 투자된 자금의 효과적 사용을 위해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한 사전 조건부 조항 설정(예,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 환경보호법의 준수 등)
공통 전략 프레임 수립	• ESIF 기금 간의 조정 및 중복 투자 지양, Horizon2020과 같은 EU 기관과의 연계 강화
자금 및 규정의 간소화	• ESIF 기금의 공통 규정 마련, 복잡한 회계 규정의 단순화 등을 통한 EU 자금 사용의 절차의 간소화
협력 강화	• 프로젝트 간 상호 협력 강화
EU의 경제적 정책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강화	• 지역의 새로운 경제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지원을 통한 EU의 경제적 정책 프레임워크와의 연계 강화
중소기업 지원 강화	• 중소기업 관련 대출, 보증, 벤처캐피탈에 EU 기금 지원

* 출처: 김성진·장영희(2015: 11)

- 결속 정책(Cohesion Policy)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지역의 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금 지원에 의무조항 설정을 통해 EU의 경제적 정책 프레임워크와 연계 강화
- 이러한 조건부 조항 설정에서 대표적인 것이 지역 주도로 전략을 수립하는 스마트 전문화 개념으로 지역정책의 중심적 역할 수행

(2) 스마트 전문화(RIS3)의 주요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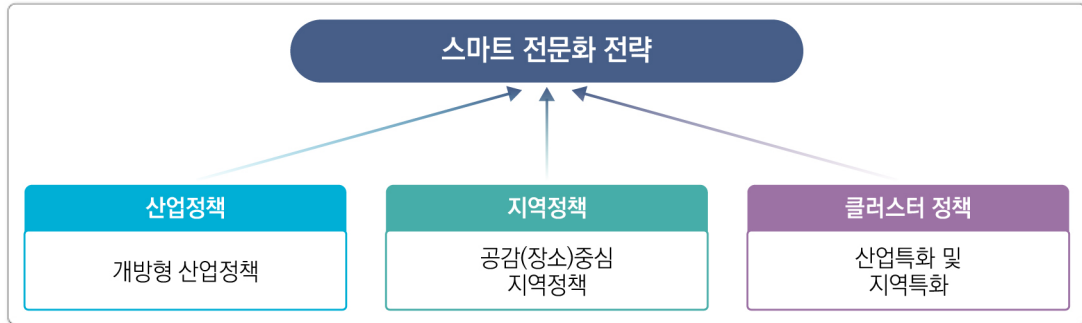
■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란 경쟁우위 창출을 위해 주요 전문화 분야를 설정하는 국가 및 지역의 혁신 전략을 의미(김성진 외, 2021: 11)

- 지역 기반의 연구 및 혁신 잠재력의 극대화를 위해 지역의 강점 및 잠재력을 분석하여 정책 투입을 위한 전략 영역을 식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지역이 바이오, 정보통신 등 유사한 산업분야에서 경쟁함에 따라 지식기반이 획일화되고 지역별 독창성과 차별성이 사라지면서 유럽 연구혁신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에서 시작
 - 미래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방형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고, 지역 산업역량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전략과 투자를 통해 지역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산업정책이 요구됨
 - Foray(2007)이 소개한 스마트 전문화 개념을 2009년 EU의 전문가 자문그룹 Knowledge for Growth(K4G)이 구체화시켰으며, 유럽의 연구·혁신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스마트 전문화에 기반한 과학·기술혁신 및 산업정책을 제안(김성진 외, 2021: 11에서 재인용)

■ 스마트 전문화(Smart Specialization)의 특징

- 지역의 독특한 특성과 발전 경로에 기반하여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장소기반(place-based) 지역 정책
 -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스마트 성장의 핵심수단이며 지역의 강점과 경쟁우위 등을 기반으로 지역의 지식기반의 경제 발전을 도모
 - 지역의 기존 강점에 기반하여 지역을 다각화하며 클러스터 정책의 동태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고기술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조한 기존 지역 혁신 전략과 구별
 - 지역 주체성과 혁신성이 강한 집단이 지역의 인적자원의 기반이 되어 이해관계를 해결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으로 연결
-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토대가 되는 정책의 패러다임은 '개방형 산업정책', '공간(장소)중심의 지역정책'과 '산업특화 및 지역특화의 클러스터 정책'
 - 개방형 산업정책은 혁신 환경 및 산업생태계 안에서 개방형 혁신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의 융·복합을 강조
 - 공간(장소)중심 지역정책은 지역의 자원을 토대로 지역발전을 지향하며 일정범위 지역 단위의 혁신 산업생태계 구축을 강조하는 정책
 - 클러스터 정책은 클러스터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기업이 외부자원을 활용하여 핵심역량을 축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조

〈그림 43〉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기반 정책



* 출처: 김성진 외(2021: 12)

- 지원 대상은 EU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이나 국가가 참여할 수 있으며 선도지역 뿐 아니라 개발이 필요한 지역도 참여 가능
-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기업가정신 발견과정(entrepreneurial process of discovery)으로 정책 및 자원을 집중할 전문화 분야를 선정
 - 기업가정신 발견과정(entrepreneurial process of discovery)이란 기업, 개인발명가, 연구원, 고등교육기관 등 지역의 이행관계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의 역량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의 R&D 및 혁신 영역에서 전문화할 수 있는 분야를 스스로 선정하는 과정

〈표 34〉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특징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특징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성장을 위한 핵심 수단 • 국가 및 지역의 강점, 경쟁우위, 잠재력에 기반을 두고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참여주체들이 선정한 우선순위에 투자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지식기반의 경제발전을 도모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지역개발펀드 등 EU의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가나 지역(유럽 통화정책 2014-2020) 선도 지역과 개발필요지역을 포함한 모든 지역 • 연구계, 제조분야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디자인 및 창의 산업, 사회 및 서비스 혁신, 新비즈니스모델 및 실용적 혁신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가적 발견 과정 강조 • 기초연구 지역과 응용연구 지역 간의 스마트 전문화 다이내믹스의 공간적 배분 • 강조되는 부분은 사전조건부(ex-ante conditionality) 조항의 설정을 통해 모든 지역들이 각자가 보유한 비교우위 및 잠재력에 기반한 혁신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특정 산업분야 및 시장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지식경제의 중심으로 접근함
프레임워크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역의 특성 및 잠재력 분석(지역 산업 및 혁신자원 현황 분석) 및 신성장동력 분야 발굴 ② 거버넌스 구축 단계(시민사회 등 혁신 수요자 관점도 포괄, 정부·기업·연구기관·시장·시민사회 Quadruple Helix)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특징	
	③ 지역의 미래 비전 설정 ④ 우선순위를 선정(기업가적 발견 과정을 통해 지역의 잠재 역량 고려) ⑤ 정책 혼합(구체적인 시행 계획 및 시범사업이 포함된 로드맵 등을 지역의 기타 정책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구성) ⑥ 모니터링평가 및 컨설팅

* 출처: 김성진 외(2021: 13)

(3) 지역혁신 거버넌스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스마트 전문화 플랫폼

-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2011년부터 '스마트 전문화 플랫폼'을 통해 지역 및 국가 정부를 대상으로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개발 및 구현 추진
 - 약 170개 EU 지역과 18개 국가 정부의 상호 학습, 데이터 수집, 분석 및 네트워킹 지원
 -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초기에는 부문 정책적 개념에서 시작되었고, 점차 유럽 통합정책과 연계하여 이 하에서 논의할 스마트 전문화를 위한 연구혁신 전략(RIS3)의 국가 및 지역을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의 형태로서 지역발전 전략으로 변화
 - 현재는 혁신 기반 국가 및 지역 단위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

■ 상향식 증거기반 정책의사결정 과정

-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 지역 혁신 우선순위 설정 및 집중적 투자
 - 스마트 전문화를 위한 연구혁신 전략(RIS3)은 지역의 우선순위를 지역 자산, 직면한 도전과제, 경쟁우위, 잠재력 등에 대한 bottom-up방식의 기업가적 발견과정과 증거 기반 정책의사결정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혁신 프로세스 향상
 - 단일비전 아래 통합되어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개발·실행·모니터링에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거버넌스 구조 개선
- 지역의 혁신 자원과 수요에 기반한 협력적 혁신
 - 지역의 혁신과 발전에 다양한 경로가 있을 것이라는 지역적 맥락 하에 수립되므로 경제적 전환을 위한 전략을 개발하고 실행 가능
 - 사회적, 환경적, 기후/에너지 등 경제적·사회적 도전과제에 대한 대응 가능한 훌륭한 도구로 작동
 - RIS3를 추진하는 지역은 자신의 위치에 대한 진단을 위해 타 지역, 클러스터, 혁신주체들과 협력이 필

- 요하고 이는 지역의 내부적·외부적 연결 증대로 연결됨
- RIS3로 지역의 역량, 기회, 수요에 기반한 현실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국제적 차별화와 기술다각화를 통해 지역을 재구조적으로 개발전략의 중복과 단순한 전략 복제 회피 가능
- RIS3로 혁신을 위한 자원의 임계점까지 도달 가능
- 관련 산업을 중심으로 한 다각화는 지식의 확산과 기술다각화를 촉진 가능

(4) 정책수단

■ 스마트전문화를 위한 연구혁신 전략(RIS3 : Research and Innovation Strategies for Smart Specialization)

- 과학기술분야와 관련하여 결속 정책(Cohesion Policy)은 ‘연구와 혁신(Research and innovation)’ 분야에 대한 ERDF 기금에 대한 지원 의무조항으로 RIS3(Research and Innovation Strategies for Smart Specialization) 전략 수립 필요
 - 지속가능한 성과창출 위해 지역의 자산, 경쟁우위, 잠재력을 고려한 RIS3 전략 마련 필요

〈표 35〉 연구와 혁신 사전적 조건(Research and innovation ex-ante conditionality)

목적	투자 우선순위	사전적 조건	성취 단계
연구, 기술개발, 혁신 등의 강점	모든 투자의 우선순위는 목적 부합정도를 고려함	1.1 연구와 혁신 국가 또는 지역 스마트 전문화 전략이 존재해야 함 • 스마트 전문화 전략은 개인의 연구 또는 혁신비용에 대하여 연구와 혁신시스템이 잘 작동하도록 National Reform Programme 과 유사한 영향력을 미쳐야 함	• 국가 또는 지역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조건 • SWOT분석 또는 유사한 분석을 통해 연구와 혁신의 우선순위 조정 및 한정된 자원 투자 • RTD(Research Technology Development) 투자 촉진을 위한 개괄적 측정 • 모니터링 메카니즘 • 또한, 연구와 혁신에 대한 예산배분에도 적용 가능

- (투자) RIS3는 스마트 전문화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한 지역의 연구혁신 전략으로 통합적, 장소기반의 경제적 전환을 추진
 - 지식기반발전을 위한 국가/지역의 주요 우선순위, 도전과제, 수요에 대한 정책에 투자를 집중
 - 각 국가/지역의 강점, 경쟁우위, 잠재력을 기반으로 스마트 전문화가 형성 추진
 - 기술적 혁신과 실제상황에서 혁신(practice-based)을 지원하여 민간 영역 투자 촉진

-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지역의 혁신과 실험에 참여 장려
- 증거기반의 전략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시스템과 평가시스템 구축

■ (기금) 유럽구조투자기금(ESIF : European Structural & Investment Funds)

- 결속 정책(Cohesion Policy)은 유럽구조투자기금(ESIF)으로 추진
 - ESIF 기금의 지원은 상보성을 가지고 있어서, ESIF 기금 지원은 해당 국가의 투자와 같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금의 지원이 공공 및 민간의 투자를 대체해서는 안 됨
- 유럽구조투자기금(ESIF)은 결속 정책(Cohesion Policy) 추진을 위한 수단으로 5개의 주요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지원
 - 유럽 지역개발기금(ERDF : 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은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주요 목적으로 지원하되, 혁신과 연구(I&R : Innovation&Research), 정보통신기술(ICT), 중소기업 지원, 저탄소경제 등 주요분야에 집중 지원
 - 유럽사회기금 플러스(ESF+European Social Fund +) : 결속정책 2014-2020에서는 유럽사회기금(ESF : European Social Fund)은 인적 자원을 위한 투자를 위해 지원했으나. 새로운 결속정책에서는 청년고용 이니셔티브(YEI : the Youth Employment Initiative), 가장 빈곤한 지역을 위한 유럽지원 기금(FEAD : the Fund for European Aid to the most Deprived), 고용 및 사회 이니셔티브 기금(EaSI : the Employment and Social Innovation Programme), 유럽 보건프로그램(EU Health Programme) 등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영하도록 개선
 - 결속 기금(CF :Cohesion Fund)는 환경 및 교통 기반 시설에 지원
 - 유럽 지방개발농업기금(EAFRD :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는 농업을 지원
 - 유럽 해사어업기금(EMFF : European Maritime and Fisheries Fund)는 어업을 지원

〈그림 44〉 유럽구조투자기금(European Structural & Investment Funds) 구성



- 결속 정책(Cohesion Policy)은 ERDF, ESF+, Cohesion Fund를 통해 대부분 지원되며, 그 외 EAFRD와 EMFF를 통해 지원
 - 5가지 자금을 통합하는 ESIF 전략 프레임워크 내에서 투자의 효과성과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EU 지역구분에 따라 투자 수준을 결정함

2) 新결속정책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위한 스마트 전문화(S4+) 발전

(1) EU의 新결속정책(Cohesion Policy)의 배경 및 목적

- 유럽은 국제적으로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와 함께 탄소배출과 관련된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
 - 2019년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하고, 이에 대한 추진 방안으로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 ‘기후법(안)(European Climate Law)’ 등을 잇달아 마련(김수현 외, 2020: 1)
 - 최근에는 지금까지의 지역혁신정책 및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가 경제성장 및 경쟁우위에 치중해 오면서, 현재 당면해있는 기후 변화, 환경악화, 불평등, 빈곤 등의 환경 및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과 학문의 초점 전환 필요성 제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3: 31)
- 이러한 변환에 따라 새롭게 산업전략을 수립하고 경제적·제도적 지원책을 구축함으로써 단순한 기후변화 대응을 넘어서 향후 EU의 발전 및 혁신 체계를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성 대두
- 新결속정책(2021-2027년)은 연구·혁신과 기후변화를 연계하여 집중 투자를 추진하고 지역이 주체가 되어 실행하고 장소기반 리더십을 강조하는 정책 추진(European Commission 2020; Bachtler et al., 2018; 허동숙, 2020: 12에서 재인용)
 - 더 경쟁력 있고, 스마트한 유럽(혁신, 중소기업 지원, 디지털 기술 및 산업 현대화)(목표 1), 탄소중립경제로 친환경 저탄소 전환(저탄소, 순환경제, 기후변화)(목표2)에 중점 투자
 - ERDF의 65%와 결속기금(Cohesion Fund, CF)의 85%를 집중 투자 예정
 - 인프라 투자에서 혁신, 광대역통신, 중소기업 지원 중심으로 투자 확대 예정(혁신, 광대역통신, 중소기업 지원 ERDF, CF 재원 30% → 46% 증가) (Bachtler et al., 2018; 허동숙, 2020: 12에서 재인용)
 - 우선순위의 변화 추진
 - 11개 주제목표를 5개의 정책 목표로 개편하여 동일한 목표에 기여하는 서로 다른 혁신정책들 간 인위적

- 인 구분을 제거하고 다양한 세부 정책 효과 극대화 및 유연한 지원 추구
- 기존의 11개 주제목표 때문에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5가지 정책목표를 두고, 복합적으로 추진하고 빠른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개편 추진

〈표 36〉 우선투자 분야의 변환

결속정책 2014-2020	新결속정책 2021-2027
11개 우선투자 분야	5개 우선순위 투자
1. 연구, 기술 개발 및 혁신 강화 2. ICT의 접근성, 이용, 품질 향상 3.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4.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지원	1. 더 경쟁력있고 스마트한 유럽
5. 기후 변화 적응, 위험 예방 및 관리 촉진 6. 환경 보존 및 보호 및 자원 효율성 증진 7. 지속가능한 교통·운송 촉진 및 네트워크 인프라 개선	2. 탄소중립경제로의 친환경 저탄소 전환
8. 지속 가능하고 양질의 고용 촉진 및 노동 이동성 지원 9. 사회적 포용 촉진, 빈곤 및 차별 퇴치 10. 교육, 훈련 및 평생 학습에 대한 투자 11. 행정의 효율성 향상	3. 이동성 강화로 유럽 연결성 강화
	4. 보다 사회적이고 포용적인 유럽
	5. 모든 유형의 영토에서 지속가능하고 통합된 개발 촉진으로써 시민에게 더 가까운 유럽

(2) 지속가능성을 위한 스마트 전문화(S4+)의 주요내용

■ 지속가능성을 위한 스마트 전문화(S4+)의 개념

- 기존 스마트 전문화(S3) 전략의 방향성, 개념의 명확성, 가이드라인의 결점 등에 대해 비판을 반영하여 이를 보완 및 개선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스마트 전문화(S4+) 전략이 등장
- McCann & Soete(2020)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장소기반 혁신'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지속가능성을 위한 스마트 전문화(S4+) 개념을 제시하고, 기존의 스마트 전문화 정책이 유럽의 그린딜 정책을 중심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3: 30에서 재인용)
 - 연구와 혁신 정책의 목적을 단순히 변화 자체에 두지 않고 국제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혁신적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주된 목적
 - EU Joint Research Centre는 지속가능 개발과 연계한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주제 발간
- 지속가능성을 위한 스마트 전문화(S4+)는 기존에 EU에서 수행하던 스마트 전문화(S3) 전략을 '지속가능성'과 '포용적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초점을 두어 발전시킨 개념
 - 즉 기존의 스마트 전문화 전략에 초국가적인 기후 위기에 따른 사회적 과제해결이라는 방향성이 더해진 전략

■ 지속가능성을 위한 스마트 전문화(S4+) 전략 주요 특징

- 과제 지향적(Challenge-oriented)
 - 지역 단위에서부터 현재 직면한 사회적 과제 고려
 - 새로운 에너지원 및 이동수단 개발, 질병 대응 등 과학·기술·사회적 측면의 개선을 목표
 - 기존 산업과의 상충, 산업 간 연계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과제 지향적 전략 수립
- 장소기반(Place-based)
 -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실질적 혁신
 - 장기적 관점에서 SWOT 분석을 통한 계획 수립
 - 지속적인 정책학습을 통한 피드백 및 개선점 파악
 - 지역 간 발전 격차 방지, 혁신역량 격차를 고려한 계획 수립 지원
- 다층구조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
 - EU: 전체적 방향성 설정, 투자·제도·국제 협상력 확보
 - 국가: EU의 방향성 견지, EU 내외의 국가 및 지역과의 혁신 공유 체계 마련
 - 지역: 실질적 수행 주체, 지역 내 환경적 문제 파악, 유사 지역 사례 학습

■ 스마트 전문화(S3) vs 스마트 전문화 (S4+)의 비교

- 2014-2020년에 추진된 스마트 전문화 전략과 2021-2027년에 추진될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특징 비교(Elisabetta, 202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3: 30-32에서 재인용)
 - S3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혁신 연구 및 혁신(R&I)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두었다면 S4+는 사회문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대안 및 솔루션을 제공 초점
 - 참여자의 경우 S3는 정부, 기업, 대학 중심이고, S4+는 시민의 참여를 지향
 - S3에서는 국가, 지역, 분야별 혁신시스템을 통해 시스템 실패를 보완하는 것에 주력해왔고, S4+는 사중나선 협력(정부, 기업, 대학, 시민)을 중심으로 전환 시스템의 보완과 사회적·환경적 과제 해결을 위한 R&I 정책을 추진
 - 지역적 관점에서는 S3는 지역 경제의 성과를 위해 혁신을 활용하였고, S4+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진행될 전망
 - 기업가적 발견과정, 우선순위 중심 식별, 모니터링 등은 S4+에서도 계속 활용

〈표 37〉 시기별 스마트 전문화 전략의 특징(S3 vs S4+)

	S3 (2014-2020)	S4+ (2021-2027)
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쟁력 혁신의 R&I 생태계 삼중나선(Triple helix, 정부-기업-대학)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혁신적인 변화 사회문제에 대한 지속가능한 대안 제공 사중나선(Quadruple helix, 정부-기업-대학-시민) 접근
R&I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적 혁신 시스템 국가, 지역, 분야별 혁신시스템 산학연 연계(Triple helix interaction) 구조적 시스템 실패의 보완 지식 활용 경쟁력 연계 구축, 수요 정책, 기업 지원 상호적 시스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획기적인 변화 새로운 분야(Emerging 분야) 사중나선 협력(Quadruple Helix) 전환 시스템 실패의 보완 사회적·환경적 과제 해결 새로운 실험에 대한 지원 R&D 방향성에 대한 관심 시스템과 실험
지역적 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경제 및 혁신 매핑 지식 기반의 기회를 식별하는 시스템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문제 중심의 다차원적, 체계적 분석
기업가적 발견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화 및 경쟁력과 관련된 새로운 기회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로를 위한 전문화 및 전환과 관련된 새로운 기회 발견
우선순위 식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향식 컨설팅 및 참여 과정을 통해 우선순위 정의 삼중나선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워크숍, 포커스 그룹, 플랫폼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선순위의 순차적 식별 지역 수준의 협의 및 참여를 통해 상향식으로 우선순위 정의 '공유 의제' 구축을 목표로 상향식 프로세스에 따라 하위 지역/섹터에서 보완됨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중나선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S3 도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S3 우선순위 기반이며 R&I 생태계 강화를 위해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RRI(Responsible Research & Innovation) 접근 방식 우선순위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이고 도전적인 실험에 중점 대체기술 및 혁신적인 커뮤니티 네트워크 탐색 지원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성과 효율성 우선순위의 성과에 초점 통계, 설문 조사, 데이터, 질적 정보 기반의 지표 디지털 도구 및 오픈 데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과 효과성 및 관심 디지털 모니터링 및 매핑 도구, 문제식별과 해위자 연결을 위한 빅데이터와 오픈 데이터 탐색 지역 행정부 뿐 아니라 이해 관계자에 의한 학습도구로서 모니터링 활용

(3) 거버넌스

■ 다층구조 거버넌스(Multi-level Governance)에 의한 사회문제해결

- EU는 탄소중립, 청정순환경제, 청정에너지 등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EU·국가·지역 및 도시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큰 방향성을 제시하며, 투자·제도·국제 협상력 확보
- 개별 국가는 EU의 방향성을 견지하고 EU 내외 국가 및 지역과의 혁신 공유 체계 마련
- 지역은 실질적 추진 주체로서 주요 그린딜 분야를 설정하고 지방정부, 기업, 학교, 시민 등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에 가장 적합한 발전 전략 및 개발 전략을 수립
- 상위 거버넌스에서 이에 대해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유럽 각 지역이 동반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

■ 지역 주도의 종합적 프로그램 운영

- 결속 정책 2014-2020에서 제시하는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됨에 따라 지역단위에서는 프로그램 간의 단절하는 현상을 발생하여 지역단위에서 종합행정을 할 수 있도록 개선
 -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실행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과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권한과 책임 강화를 동시에 추진
 - 프로젝트 성공 조건을 간소화하고 명확한 사용 조건을 마련하여 관리체계의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도전과 요구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중간에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강화
 - 투명성을 강화하여 수혜자의 운영에 대한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체계 강화 추진

(4) 정책수단

■ (투자) 지역간 투자 형평성 및 효율성 제고

- 전 지역이 관심을 갖는 부문에 대한 접근과 지역유형별 접근을 통해 장소기반 리더십을 가지고 발전을 추진
 - 저성장, 저개발 지역인 유럽 남부와 동부 지역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EU 전역의 많은 지역들이 관심을 갖는 산업 전환(Industrial Transition), 실업을 완화, 글로벌 경제 참여, 초국경 협력, 스마트 전환, 도시 차원의 이슈 관련 투자 추진
 - 지역맞춤형 지역개발을 추구하기 위해 기존 지역 범주(개발지역, 전환지역, 선진지역)를 개선하고 추가적인 기준(청년실업률, 저학력 수준, 기후변화, 이민자 수용 및 통합)을 마련하여 투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개선 추진

〈표 38〉 EU의 지역구분과 투자방식

구분		결속정책 2014-2020	新결속정책 2021-2027
지역유형	선진 지역	1인당 GDP > EU-27 평균 90% 공동 융자:50%	1인당 GDP > 100% EU-27 평균 공동융자 : 40% 또는 50% (2014-20년 기간 동안 TRR이였을 것임)
	전환 지역	1인당 GDP 75~90% EU-27 평균 공동융자 : 60% 또는 80%(예: LDR)	1인당 GDP 75%~100% EU-27 평균 공동융자 : 60% 또는 70%(예: LDR)
	저개발 지역	1인당 GDP < 75% EU-27 평균 공동 자금 조달:80% 또는 85%(위기 영향)	1인당 GDP < 75% EU-27 평균 공동 융자:85%

■ (기금) 지역주도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 기금 배분 증대 및 지역의 권한 강화

- 지역 주도 개발 전략 마련을 지원하고 공동자금 조달(co-financing) 비율을 증가시켜 지역·도시가 EU 프로젝트의 주도권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도록 개선
 - 커뮤니티 주도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에 ERDF 기금의 6%를 배정하여, 도시 차원의 결속정책에 힘을 실어 주고 도시 당국을 위한 새로운 네트워킹, 역량 구축 프로그램 강화
- 자금운영 및 관리에 있어서 지역 당국의 권한을 강화하고, 지역 개발 전략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고유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존 프로그램의 관리 및 검증의 부담이 과도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新결속정책에서는 자금운영에 대해 단일 규칙을 도입하고, 관리 및 통제기관의 지정 제도를 폐지

(5) 지속가능성을 위한 스마트 전문화(S4+) 수행 사례

■ 슬로베니아 SRIP 순환경제

- 스마트 전문화 전략(S3)에서부터 지속가능한 관광,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순환형 경제를 위한 네트워크 등 순환경제*를 토대로 그린딜 정책의 방향성을 구축하고, 2016년 기업가적 발견과정에서 민관클러스터 조직인 전략적 연구혁신 파트너십(Strategic Research and Innovation Partnership, SRIP) 구성
 - SRIP는 참여주체들을 대상으로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로의 전환, 신기술, 친환경 설계, 디지털화의 도입에 대한 교육 및 전문적 지원을 제공
 - 대표적으로 슬로베니아 북부도시 마리보르의 유럽 문화기술 센터에서는 중소기업과 NGO가 참여하여

* 천연자원의 채취에서 제조, 재사용, 재제조 및 재활용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반복하며 설계단계에서부터 재생 및 순환사용을 특징으로 함(김준수 외, 2021: 4)

플라스틱 병과 같은 포장폐기물을 가스, 연료 등으로 재사용하거나 고부가가치의 2차 원료로 분해하는 혁신기술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

- 마리보르의 연구소, 기업, 지자체로 구성된 WCYCLE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활용을 통해 토양 및 식품을 생산하는 'Soil 4 Food' 프로젝트와 재활용 건축자재를 활용하여 건축 및 도로구간을 조성하는 신데렐라 프로젝트 수행

- 스마트 전문화 주제 플랫폼(Smart Specialisation Thematic Platforms), 밴가드 이니셔티브(Vanguard Initiative) 등 주요 EU 플랫폼과의 협력체계 구축

■ 오스트리아 포랄베르그(Voralberg) VLOTTE

- EU의 탈탄소화 지침을 바탕으로 2050년까지 에너지 자율화 목표를 설정하고, 2008년부터 기후변화에 의한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기연료를 기반으로 한 e-모빌리티 사업체인 VLOTTE를 설립
 -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생 에너지를 활용해 이동수단의 탄소배출을 절감함으로써 지역 경제 부흥과 환경 오염 방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주된 목표
 - 공공 부문에서는 포랄베르그 주 산하의 지역공공사업 및 에너지 공급업체인 Illwerke vkw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전기차 임대 서비스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이끌었고, 지역 비영리 연구 기관 카이로스가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력
 - 포랄베르그 주의 대중교통 업체의 지역보증회사, 지역 환경 협회 및 에너지 연구소가 전기버스 및 배터리 비용 등을 지원
 - 민간 부문에서는 지역 차량공유업체가 대다수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함으로써 사용자에게 e-모빌리티에 대한 친숙성 높이고, 사용자는 지역 공무원, 기업체 직원, 민간인 등으로 구성되었고 기술 조정 및 개선을 위한 다양한 피드백 제공
- 포랄베르그 주의 VLOTTE 프로젝트는 거버넌스의 기능 확립과 지역 내 다양한 혁신주체들의 참여가 중요성 보여줌
 - 포랄베르그 주는 기업, 연구원, 지방정부, 사용자 등 지역 내 이해관계자들이 상호협력을 통해 지역 산업 전환 유도

■ 북부 네덜란드의 지역혁신체계(RIS3)

- 북부 네덜란드 연합 SNN에서는 2013년부터 EUROPE 2020의 목표인 지속가능한 포괄적 성장 내용을 기초로 지역의 혁신체계 구축을 시도하였고 사회적 과제 해결에 초점을 두어 스마트전문화 전략 수립

- SWOT 분석으로 지역에서 집중해야 할 분야를 검토한 후 1)건강·인구변동·복지(Health, Demography and Welfare), 2)식품안전· 지속가능 농업 및 바이오 경제(Food Security, Sustainable Agriculture and Bio-economy), 3)안정·효율적 클린 에너지(Reliable, Clean and Efficient Energy), 4)깨끗하고 안전한 물(Clean, Safe Water) 네 개 분야의 사회문제 해결 클러스터를 지정
- 기존에 잘 구축되어 있던 지역의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클러스터를 기반으로 사회적 과제 해결 수행을 목표로 두고 다양한 관점에서의 문제를 고민하고 리빙랩으로 실제로 적용하여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전략 마련
-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는 리빙랩으로 기업 및 연구기관 클러스터와 연계하고, 실제 환경에서 효과 및 타당성을 시험해보거나 실제 사용자와 협의하여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평가 및 개선책 개발
- 지속가능성을 위한 스마트 전문화(S4+) 전략의 주요 특징은 과제 지향성으로 지역혁신의 전체적 목표가 사회적 과제 해결에 초점을 두어 설정될 수 있고 실질적 혁신을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산업 및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

〈표 39〉 수행 사례별 지속가능성을 위한 스마트 전문화(S4+) 전략 특징

수행 사례	과제 지향적 (Challenge-oriented)	장소기반 (Place-based)	다층구조 거버넌스 (Multi-level Governance)
슬로베니아 SRIP	•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 민간 클러스터 조직 • 이해관계자 간 네트워킹 구축	• EU Interreg, 호라이즌 2020 • 정부의 스케일업 지원
포탈베르그 VLOTTE	• 탄소배출 절감 e- mobility	• 정부, 공공, 민간, 사용자 등 실질적 혁신주체 참여 • 지역 재생에너지 활용	• EU의 탈탄소화 지침 • 정부의 에너지 자율화 목표
북부 네덜란드 RIS3	• 사회문제 해결 클러스터 • 산업 간 연계 통합적 관점	• 중소기업-연구기관 클러스터 • 사용자 협의 공동개발 • 리빙랩 활용	• EUROPE 2020 정책 • 북부 네덜란드 연합 SNN 구성

* 출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23: 34)

3) 시사점

■ 증거기반 지역혁신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학습 플랫폼의 운영

- EU는 기존의 결속정책에 따른 지역혁신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증거기반 정책 추진

- 스마트전문화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지역주도로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지만 국가혁신체계와 지역혁신체계의 연계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틀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의 지역혁신정책의 방향성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줌
- 新결속정책에 따라 스마트전문화의 개념을 발전시키고 스마트전문화 전략을 수립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축적하여 정책을 발전시키는 구조는 벤치마킹이 필요

■ 복잡한 정책목표와 기금구조를 지역중심으로 운영하도록 개선

- 지역 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지향적 성격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지역단위의 본질적인 혁신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획 제공과 실질적 개선 도모
- 복잡한 기금구조를 개선하여 지역단위에서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지역구분을 통한 투자수준을 달리하여 전환지역, 저개발지역에 새로운 기회 창출 부여
- 다층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함으로써 EU-지역-시민 간의 비전공유와 실질적인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구조 개선은 한국 지역혁신정책이 가져야 할 패러다임으로 판단됨

2. 프랑스 지역혁신정책

1) 배경

(1) 프랑스 국가운영체제와 지역혁신

■ 프랑스의 국가운영체제 역사

-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가 근본을 이루어 왔음. 이에 따라 역사적으로 프랑스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도시사를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현재까지도 대통령이 임명하여 파견하는 도시사와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의회(광역의회, 도의회, 지방의회)에 의한 이원집정부적 정치 체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음
- 지방(Provence)과 지역(Region)이라는 개념이 다소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프로방스적인 여러 분산적인 지방정부와 중앙적인 파리 중심의 경쟁이 프랑스 행정 체계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남. 중세 시대의 붕괴 이후에 프랑스 사회가 봉건 체제를 벗어나고 있을 때, 루이 16세, 부르봉왕가가 무너진 이후 프랑스는 대혁명(1792년)을 거치면서 구체제가 완전히 붕괴되고 나폴레옹 집권 후 현대적인 법체계와 최신의 현대의 행정체제를 갖추
 - 현재 프랑스 제 5 공화국 체제를 거쳐 오면서 프랑스는 세계 인류사에 영향을 미친 현대적인 법률과 지방 행정 체계를 이룸

■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하에서의 지역정책 수립과 집행

- 이원집정부적 정치체제하에서 프랑스는 강력한 지방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DATAR(현재 CGET, 국토균형개발청)라는 기구를 통해 지역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하도록 함

〈그림 45〉 프랑스 지역혁신 정책의 시기별 변화



* 출처: CGET 발표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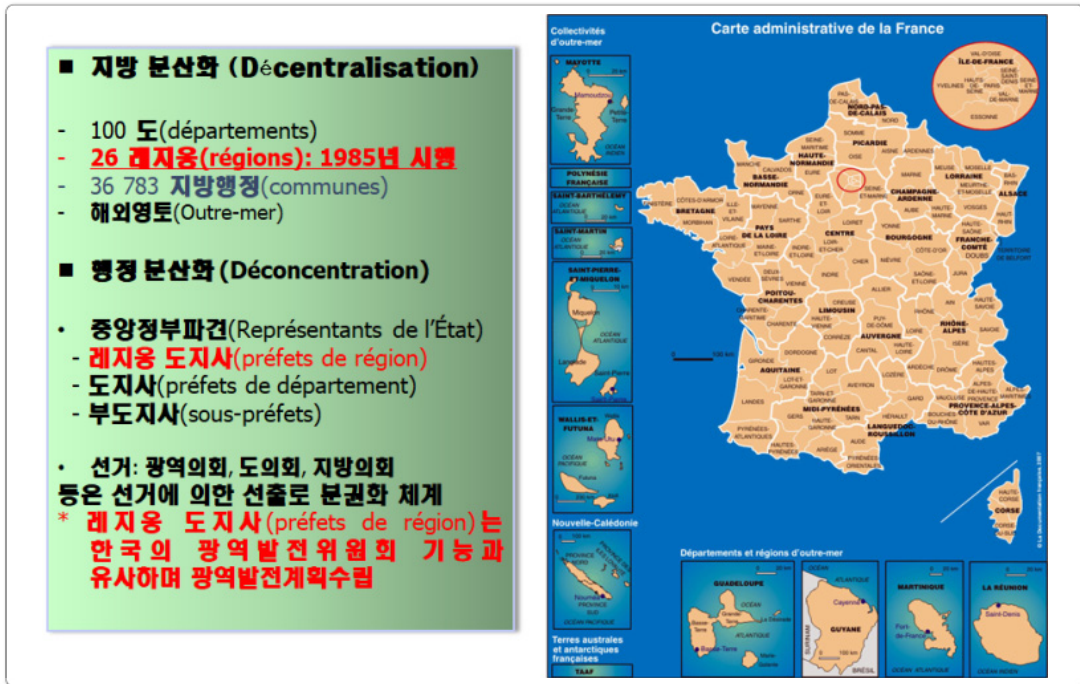
(2) 프랑스의 지방행정체계 개편: 초광역 레지옹

■ 초광역 레지옹(Region)

- 레지옹(Region)이란 행정단위는 1985년부터 행정구역의 단위로 출발, 23개의 초광역 행정단위가 시작되었음
 -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행정구역으로 즉 구체제의 산물이었던 '도(Departement)'라는 행정 구역을 그대로 두고 좀 더 광역의 행정단위가 시작되었으며, 해외영토를 제외한 프랑스 본토에 '도(Departement)'는 총 99개가 있음(해외영토 4개 제외)
 - 레지옹은 1959년 창설 당시에 단순한 행정구역에 불과하였고, 1964년에 행정협의체가 구성됨
 - 레지옹은 1972년에 공법상의 법인격과 예산상의 자치권을 갖는 영조물법인(etablissement public)의 지위가 부여됨. 1982년 지방분권 실시와 함께 레지옹은 지방자치단체로 승격되어 지역계획에 대한 권한과 역할이 강화됨
 - 레지옹의 도지사는 한국의 광역발전위원회 기능과 유사하며 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함

- 마크롱 정부에서는 99개의 도(Département)를 그대로 두고 있으나, 22개(해외영토 2개)의 레지옹을 더 큰 광역체계로 개편함

〈그림 46〉 프랑스의 지방 행정 체계



* 출처: CGET 발표자료

■ 마크롱 정부의 초광역 레지옹 개편

- 프랑스는 2016년을 기점으로 행정 구역 개편을 통해 초광역 레지옹 행정체계를 구현하여, 제2기 마크롱 정권의 행정 체계가 완료
- 2016년 마크롱 정부에 들어서서부터 14개(1개는 코르시카(코르시카는 이탈리아 근처에 위치하며 본국에 포함됨)의 초광역 행정단위로 대폭적인 변화를 주었음
 - 기존의 23개의 이르던 레지옹에 대한 구조가 2016년 마크롱 정부에 들어서서부터 이를 14개(1개는 코르시카(코르시카는 이탈리아 근처에 위치하며 본국에 포함됨)의 초광역 행정단위로 대폭적인 행정단위에 변화를 주었음. 13개를 프랑스 본국을 나누는 초광역 레지옹이며 4개는 해외영토에 존재하는 레지옹으로서 총 14개가 레지옹으로 결정됨
 - 마크롱 정부 14개 레지옹인데 13개 본국, 4개 해외영토라 하여 합이 맞지 않음

- 2016년 마크롱 정부에서 지역 정책에서 초광역 정책이 시작됨으로써 새로운 영토 조직(NOTRE 법)에 관한 법률은 지역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옴. 다시 개편된 이 레지옹은 1990년대 이래 프랑스 제도 환경에서 정치적, 경제적, 상징적 변화를 가져왔음
 - 가장 큰 변화는 각 지방행정 체계가 중앙정부로부터 권력을 양도받으며 각 레지옹에서 선출된 레지옹 도지사에게 의해 주도되고 유럽 연합에 의해 인정된다는 것임

〈그림 47〉 프랑스의 초광역 행정단위 레지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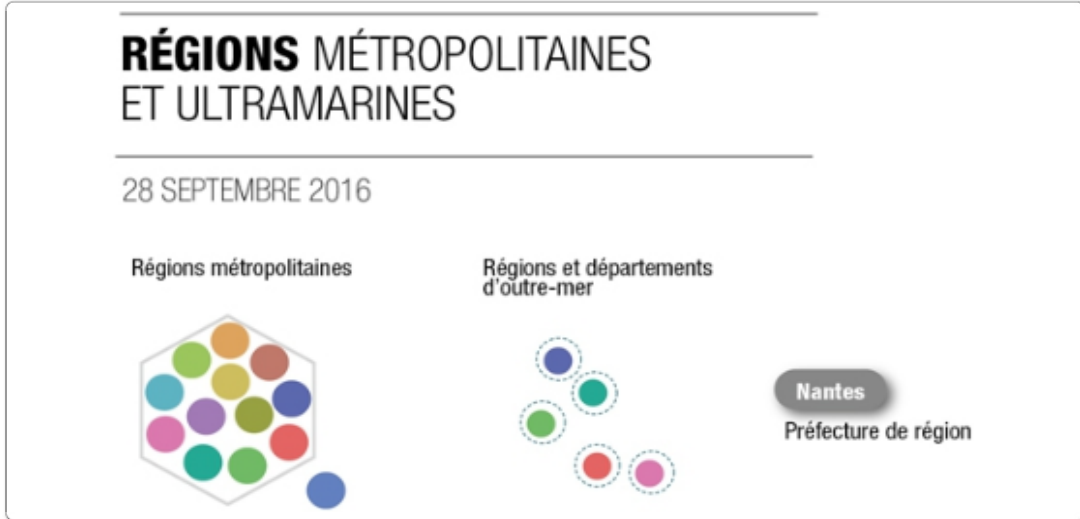


* 출처: CGET 홈페이지

■ 레지옹 개편에 따른 지역혁신 추진체계의 변화

- 레지옹 개편에 의한 지역의 권한 강화에 수반하여 지역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 기구도 커다란 개편이 이루어짐
 - 50여년간 지역혁신 추진체계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온 DATAR(국토균형개발청)의 조직이 개편
 - 광역 행정 체계의 변화에 따라 DATAR 조직이 CGET(Commissariat général à l'égalité des territoires, 국토균형개발청)조직으로 개편, 지역정책을 총괄하게 되었음

〈그림 48〉 2016년 시행된 레지옹의 구성과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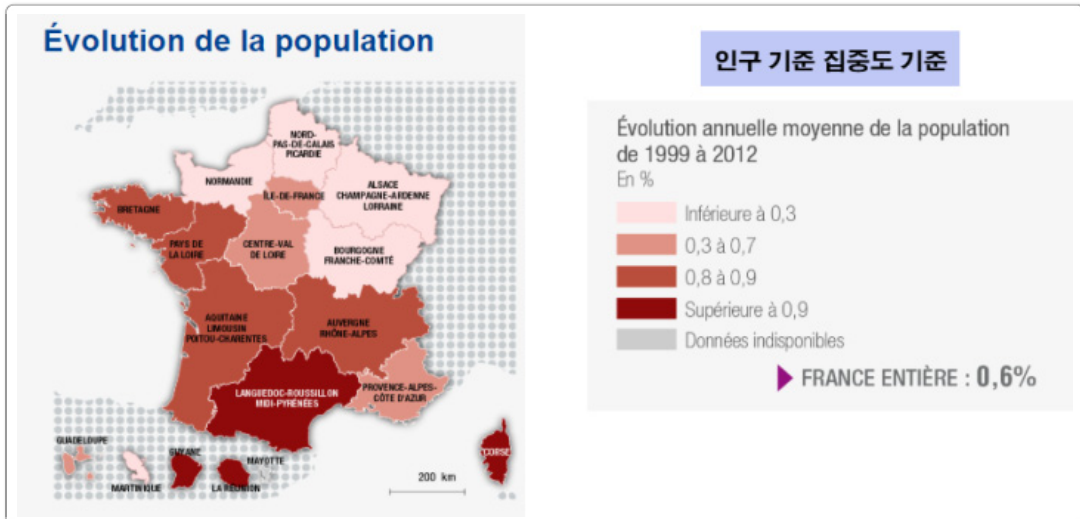


* 출처: CGET 홈페이지

〈참고〉 레지옹의 분류 체계 기준

- (인구와 인구 밀도) 프랑스의 본토에 있는 13개의 레지옹을 분류할때 영토와 인구 기준에 따른 분류를 하여 평균적으로 5백만명 이상의 구성비를 가지고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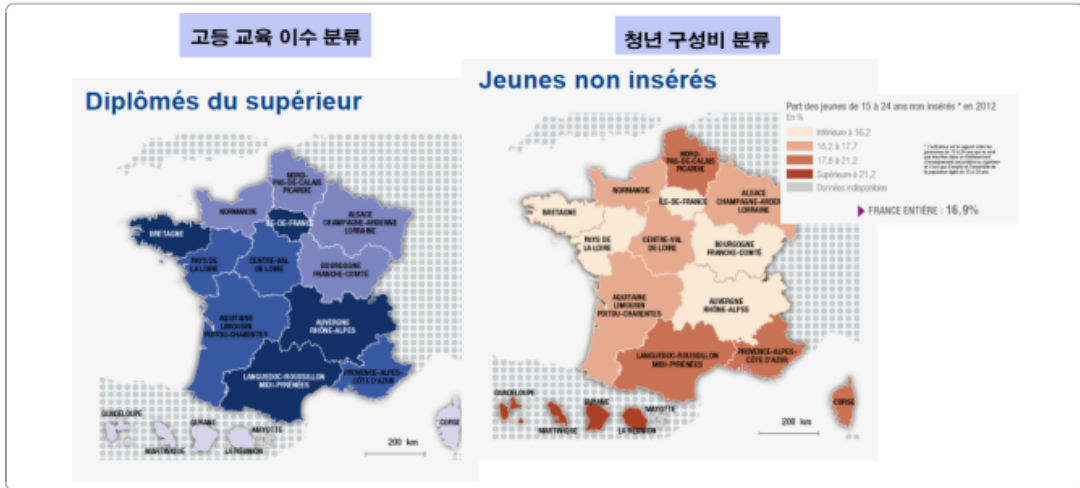
〈그림 49〉 인구와 인구 밀도 기준별 레지옹 분표도



* 출처: CGET 홈페이지

- (고등 교육 이수자와 청년 인구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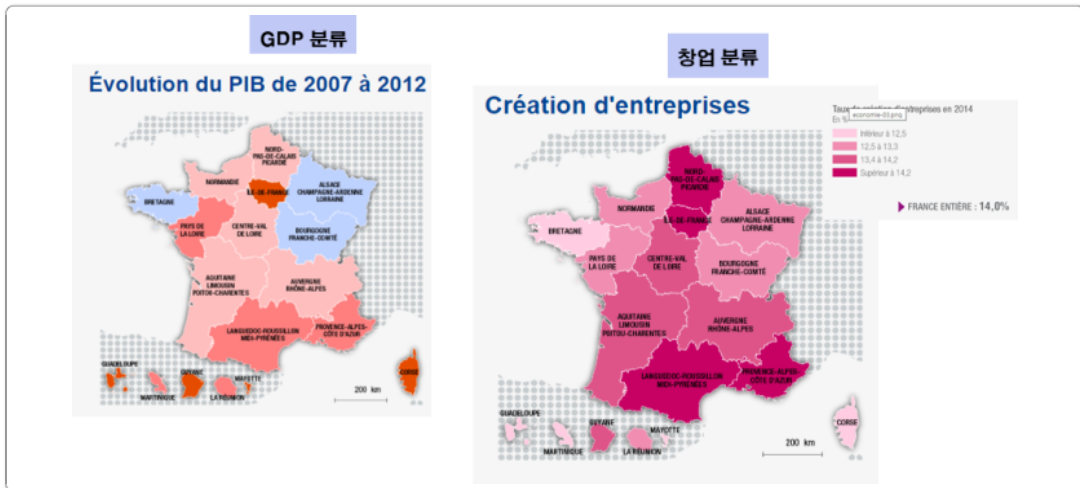
〈그림 50〉 레지옹의 고등 교육 이수자와 청년 인구 구성



* 출처: CGET 홈페이지

- (GDP와 창업 기업 수기준)

〈그림 51〉 레지옹 별 GDP와 창업기업 수



* 출처: CGET 홈페이지

- 다양한 분류에 따라서 프랑스 영토를 초광역 레지옹으로 구분하여 프랑스의 행정 체계를 일시에 변경하여 글로벌 시대에 맞는 체계로 행정을 개편함

2) 주요 지역혁신정책

- 2차대전 이후, 프랑스의 산업정책은 1960년대 드골(De Gaul)정부가 농업지역에 산업단지를 유치하면서부터 시작됨. 이후 프랑스의 산업정책은 1980년대 테크노폴(Technopole), 1990년대 지역생산체계(Systèmes Productifs Locaux; SPL) 구축, 그리고 2000년대 경쟁거점(Pôle de compétitivité) 정책으로 규모와 내용면에서 발전을 거듭해 옴

■ 테크노폴 정책

- 프랑스의 산업단지 및 클러스터 정책의 시초는 소피아 앙티 폴리스(현재 4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음, 주요산업은 전자산업과 통신산업)이며, 이후 툴루즈에 있는 항공우주 단지, 그레노블(Granoble, 광학과 입자가속기) 등이 실리콘 벨리에 영향을 받은 주요 테크노폴 정책을 시행
- 배경 및 목적
 - 프랑스의 테크노폴 정책은 균형발전이라는 공간정책의 틀 속에서 산업과 연구기능을 특정지역에 집중시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일종의 공간정책과 산업정책의 결합체라고 할 수 있음
 - 이 정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개발을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소 인근에 연구중심의 R&D단지와 산업인큐베이터를 조성·집적시켜 고부가가치 기업을 창출하는 데 기여함
- 주요 내용
 - 산업(연구)단지인 하드웨어 체제가 어느 정도 완성된 이후부터는 지역 산업 정책의 방향이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적인 정책 중심으로 바뀌었음
 - 연구단지 중심의 테크노폴은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되었으며, 기업창업센터(BIC), 창업지원청(ANVAR) 등을 통해 전국 80여 개의 테크노폴 연구단지가 조성, 운영되고 있음
- 성과
 - 프랑스 테크노폴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소피아 앙티폴리스이며, 150개의 외국기업을 포함해 1,300개의 기업이 입주한 대규모 연구단지로 연구 인력 등 총 고용 인원만 3만여 명에 이르며, 설립 50여 년에 이름

〈그림 52〉 테크노폴 단지 선정과 운영 현황



* 출처: CGET 발표자료

■ 지역생산체계(Systèmes Productifs Locaux; SPL) 구축 정책

● 배경 및 목적

- 프랑스의 지역생산체계 구축 정책은 중소기업간 연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일종의 산학연 네트워크 정책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프랑스 산업의 큰 특징은 산업 및 R&D 기능이 대부분 국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과 기업 간 연계협력 이 약하다는 데 있음
- 이에 특정 분야 혹은 특정 지역에 속한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하나의 통근권 안에 입지는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동 정책을 수립. 특히 특정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및 자치단체에 대하여 참여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특정 지역 내에 산학연관 협력을 촉진시켜 지역의 생산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나라의 지역혁신정책 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주요 내용

- 동 정책은 공모를 통해 추진되며,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업의 지리적 집중성, 업종특화, 노하우 및 자원과 수단들의 공유 가능성 등을 기준 요건 등의 심의를 거쳐야 함
- 1998년과 1999년 두 차례에 걸쳐 96개를 지정하여 그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변천

- 1990년대 후반의 SPL(Systèmes productifs locaux, 지역생산시스템)정책은 마이클 포터의 클러스터 개념과 이웃 이탈리아의 중소기업 간 협력에 영향을 받아 한 분야 또는 한 지역에 속한 일단의 기업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하나의 통근권 안에 입지하는 생산기업의 클러스터화를 추진한 사례가 있음

- 주요 성과

- 정책취지에 비해 총사업비가 360만 유로로(1개 당 약 7천만원) 매우 작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생산체계(SPL)”라고 정부가 인증한 대외홍보효과로 인해 기업과 지자체간 협력 장려를 촉진시키는 계기로서 작용(OECD, 2006a; 정옥주, 2006: 706에서 재인용)
- 그러나 SPL정책은 중소기업 간 단편적인 협력사업 위주로 운영되었으며 장기적인 기술혁신 협력에서는 취약하였다는 평가가 있음

■ 경쟁거점 클러스터 정책(Pôle de compétitivité)

- 배경 및 목적

- 유럽연합은 개별적인 클러스터 정책에 맞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평가함. 1,000여 개가 넘는 클러스터를 평가와 등급에 따라 구분해 운영하며, 개별 과제별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그 중에서 프랑스의 경쟁거점 클러스터(Pôle de compétitivité) 정책은 2004년부터 추진. 2004년에는 총 71개의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386개의 과제를 지원
- 프랑스의 경쟁거점 클러스터 정책은 프랑스의 산업 잠재력을 강화하고, 보다 높은 국제적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활동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 및 기업가들에 대한 지역의 매력을 상승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

- 주요 내용

- 프랑스의 경쟁거점 정책은 R&D를 중심으로 기업-연구기관-대학 등이 상호협력을 통해 그 성과를 공유하는 초광역 클러스터 정책으로 출범함
- 기존의 지역생산체계, 테크노폴 정책이 단순 네트워크와 산학협력 기능의 집적이라면, 이 정책은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상품의 수익을 참여자분배에 따라 배분한다는 점에서 이전의 그것과는 차별화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음
- 2004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시행된 이 사업은 총 71개의 클러스터를 지정하여 386개의 과제를 지원하고 있음. 특히 이 사업은 기술 경쟁력과 시장성, 그리고 몇 가지 기준에 따라 글로벌 경쟁거점, 글로벌 경쟁거점 후보, 그리고 국가적 경쟁거점 등 3가지로 범주화하여 지원함. 2004년 9월 프랑스 정부는 ‘경

쟁력 클러스터' 구축을 토대로 새로운 공업 전략을 채택하였음

- 경쟁력 클러스터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춘 기존 지역 내 기업과 훈련 센터 및 연구 기관의 집약으로 정의됨
 - 첫째, 혁신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제휴노력 참여 의지
 - 둘째, 국제적 안목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일정규모의 협업체. 이 제휴는 시장이나 기술 부문을 중심으로 구축될 수 있음

〈표 40〉 프랑스 지역정책 변화 및 비교

구 분	테크노폴 Technopole	지역생산체계 Systèmes Productifs Locaux	경쟁거점 Pôle de compétitivité
도입시기	• 1980년	• 1998년	• 2004년
도입배경		• 중소기업간 연계	• 국가R&D확충 • 글로벌 경쟁력 강화
사업분야	• 연구단지 중심	• 산업단지 정책(대학, 연구소), 중소기업	• 개별 경쟁거점 중심의 지자체, 기업, 연구소, 대학
사업주체	• Technopole	• 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	• 개별 경쟁거점
시행기관	• FTEI(France Technopoles Entreprises Innovation)	• DATAR(DIACT) • CIDF(산업정책클럽)	• DATAR(현 CGET)/DGCIS
선정지역	• 약 80개	• 96개	• 71개
지원금액	-	• 총사업비: 360만 유로	• 총사업비: 15억 유로
주요특징	• 대학, 연구소 중심의 R&D 단지 • 기업 창업 및 고부가가치 기업단지	• 지역 내의 생산단위별로 생산단계 구성이 목표 • 생산 네트워크 중심 • 중소기업 중심	• 기업, 연구소, 대학 중심의 R&D 중심 사업
법적형태	• 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
국내유사 사례	• 테크노 파크/사이언스 파크	• 지역혁신체계(RIS)	• 없음

* 출처: CGET 발표자료;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2022)

■ 초광역 경쟁 거점 정책

- 배경 및 목적
 - 프랑스의 경쟁 거점 정책은 2021년까지 총 5단계에 걸쳐서 시행. 각 단계마다 정책의 방향과 개념이 여러 번의 과정을 거쳐오면서 정부의 정책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1단계에서 2단계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3단계에서 현재인 5단계에서는 정책적인 큰 변화가 있었음

- 경쟁거점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연구개발 확충을 통해 경쟁력을 향상하는 데 있으며, 유럽연합의 각국은 2010년까지 연구개발 비중을 GDP 대비 3%까지 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음
- 하지만, 당시의 프랑스로서는 녹록지 않은 목표였으며, 2007년까지만해도 프랑스의 연구개발 비중은 GDP 대비 2.11%에 불과했었음
- 특히,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비율은 부족했음. GDP 대비 1.32% 정도로 독일의 1.76%, 일본의 2.40%보다 뒤쳐져 있었으며 이에 따라, 연구개발의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가 필요했으나, 프랑스 중소기업의 85%가 10인 미만의 소규모 민간 기업이었기에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요원하였음

〈표 41〉 초광역 경쟁거점 클러스터의 3단계별 운영 방식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기간	2006-2008(1단계) 3년	2009-2012(2단계) 3년	2013-2018(3단계) 5년, phase 3
예산	15억 유로(국고)+민간(15억 유로) 2조	1.5Milliard 유로 : 2조	110M€, 유로(150억 유로) 17조(12조 대부)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사적 배경에 따른 지자체이나 느슨한 연결 조직이며, 71개 사업별로 독립법인 설립(민간) 71개의 법인 설립 	2ephase(2009-2012) dela politique des pôles, dite "Pôle 2.0" - 총 2500개 R&D 과제 - FUI과제: 1096개 과제 - 참여 연구 인력 15000명 - 2단계 성과 평가 실시 - 17개 연구 거점대학(PR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프랑스를 위한 3대 목표 과 34개 혁신 전략 수립 (DGCS에서 수립) 세계 경제에서의 시장 성장 프랑스 기술에 의한 선점 시장에서의 위치 선점 34개 선정 계획
선정지역	71개	72개(6개 재선정)	71개

* 출처: 김병삼·강정훈(2009)

● 주요 내용

- 1단계에서는 기술 경쟁력, 시장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글로벌 경쟁거점(Pôle de compétitivité mondial), 글로벌 경쟁거점 후보(Pôle de compétitivité à vocation mondiale), 국가적 경쟁거점(Pôle de compétitivité national) 3가지로 구분해 평가하여 지원
- 글로벌 경쟁거점은 각각 분야에서 중심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5,000명 이상의 연구 인력을 보유한 7개의 클러스터에 글로벌 경쟁력거점 인증을 부여
- 파리에 위치한 의료 분야 Medicin(Genepole), 통신 정보산업 및 자동차 분야 SYSTEM@TIC, 금융산업 Europlace 3개 클러스터를 비롯해 리옹의 생명공학 Lyonbiopole, 툴루즈의 항공우주 분야 Aerospace Valley, 그레노블의 나노·소프트웨어 Minalogic, 남부 마르세유의 의료기기·정보통신 분야 SCS(Secured Communicative Solutions)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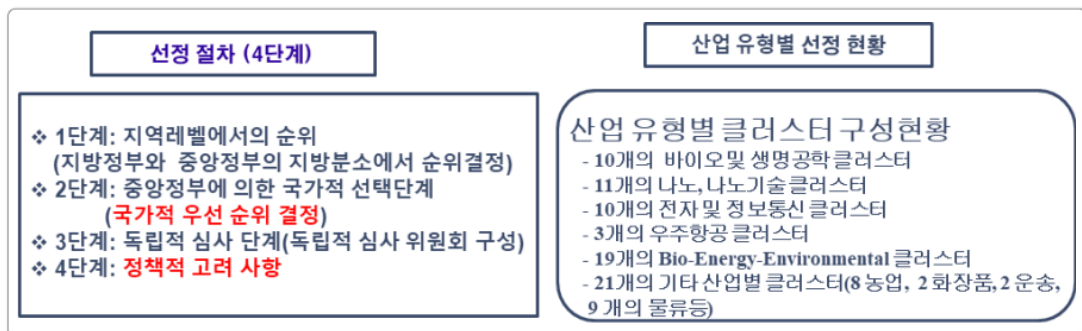
- 글로벌 경쟁거점 후보(Pôle de compétitivité à vocation mondiale)는 글로벌 경쟁력에 잠재력을 지닌 클러스터를 선정해 지원하며, 현재 10개 클러스터가 글로벌 경쟁거점 후보로 지정되었음

〈표 42〉 클러스터의 세 가지 유형

유형	1단계		2단계	3단계
	주요 구분 기준	수		
글로벌 경쟁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인력 수 5,000명 이상 • 글로벌 시장에서 중심기능 수행 분야 	7	글로벌 경쟁거점 지정	글로벌 경쟁거점 지정
글로벌 경쟁거점 후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 인력 수 5,000명 이상 • 글로벌 시장에서 중심 기능을 수행하기에 부족한 분야 	10		
국가적 경쟁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 보유한 분야 	54	국가적 경쟁거점	국가적 경쟁거점

- 국가적 경쟁거점은 프랑스 자국 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지닌 클러스터로 현재 54개 클러스터가 지정되어 있음. 10개의 바이오·생명공학 클러스터, 11개의 나노, 나노기술 클러스터, 10개의 전자 및 정보통신 클러스터, 3개의 우주항공 클러스터, 19개의 바이오에너지 환경 클러스터와 농업, 화장품 운송, 물류 등 21개의 기타 산업 클러스터로 구성되어 있음
- 경쟁거점 정책은 미약했던 지방자치단체(Regional)와 민간 경제의 주체인 기업, 연구소 간의 파트너십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함.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경제주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원동력을 제공했으며, 1단계 광역 클러스터는 경쟁거점으로, 2단계 경쟁력 클러스터는 경쟁거점 2.0으로 불리며, 단계별로 정책을 추진함

〈그림 53〉 프랑스 초광역 경쟁거점 클러스터 선정 절차와 유형



* 출처: 김병삼·강정훈(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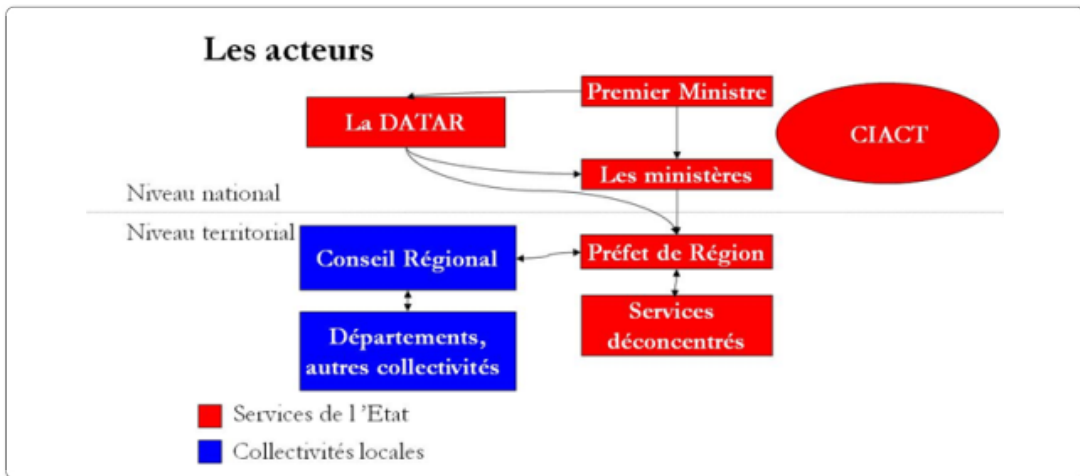
-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분소에서 지역 자체적인 바텀업 방식으로 결정하고 중앙정부로 올리면(1단계), 중앙정부에서 국가적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결정함(2단계). 이후 중앙정부에서 심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심사하면서 전체 순위를 결정하고(3단계), 정책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함(4단계)

3) 지역혁신 거버넌스

■ 지역정책 총괄기구: 국토균형개발청(CGET)

- 레지옹 정책의 변화와 함께 중앙 행정기구 개편이 이루어짐
 - DATAR가 CGET(국토균형개발청)으로 개편되면서 관련 장관 회의인 CIADT(7 개 장관 회의) 구축, 수산산하에 지방정책에 대한 정부간 협의체로 7개 부처의 공동기구 일부를 개편함

〈그림 54〉 프랑스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행정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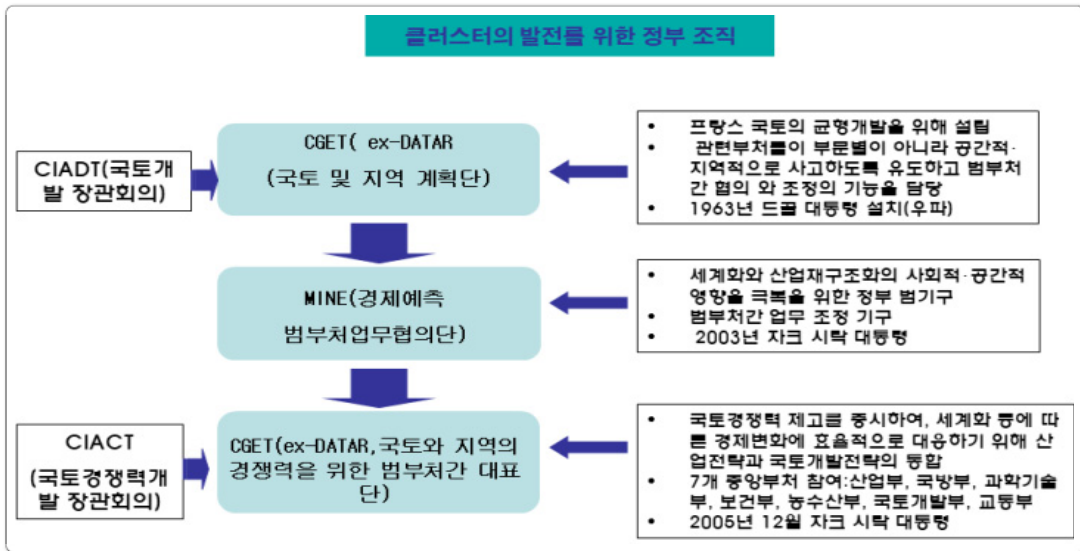
* 출처: CGET 발표자료

- 프랑스에서의 CGET의 역할은 우리나라와 같은 단순한 위원회 기능보다는 7개 중앙부처의 지역 정책을 총괄하며, 실제적 기구로서 보다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
 - CGET의 개편은 2015년 12월 31일 신설된 대통령령의 주요 조항*으로 법적 지위와 역할이 수립. CGET 정책의 핵심은 '경쟁력(Competitivite)과 통합(Cohesion)'임. 가장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주체가 각각의 강점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하며 발전 중임
 - 국가·지역 간 계약(CPER: Contrats de plan Etat-Regions) 프로그램, 유럽정부·지역 간 프로그램(DOUCP: Programmes Regionaux Europeens, 2000~2006)이 운영되고 있음

* 2005.12.31 대통령령 (n.2005-1791)

- CGET의 핵심 사업인 글로벌 경쟁력 클러스터는 부처 간의 조율을 거쳐 수상 주재의 국토경쟁력개발장관 회의(CIACT)가 의사 결정을 담당함. 경제, 연구, 국토개발, 교통, 농업, 보건 등 부처 간 작업팀(GTI)이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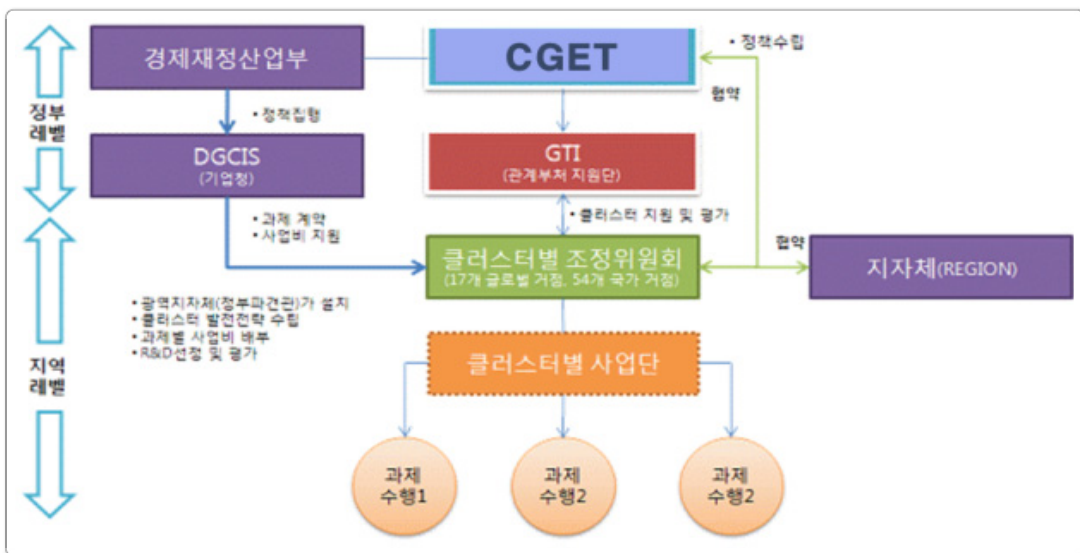
〈그림 55〉 프랑스의 지역혁신 총괄기구 추진 체계(CGET ex-DATAR)



* 출처: 김병삼·강정훈(2009)

■ 초광역 경쟁거점의 추진 체계

〈그림 56〉 경쟁거점 클러스터 운영체계



* 출처: CGET 홈페이지

- CGET는 중앙정부기구로 7개 부처에서 파견된 중앙공무원 220명 이상으로 구성되어 이들이 지역사업 전체를 총괄하고 결정하며, 집행부서인 경제재정산업부 예산을 집행함. GTI는 CGET 안에 있는 조정 협의회로 실행을 결정함
- 레지옹 정부 안에서 지방정부가 클러스터 사업을 결정하고 발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지방정부에 파견 온 CGET 파견관이 함께 확정하는 방식으로, 지역레벨과 정부레벨이 같이 가기 때문에 실제 집행 권한이 있음
- 클러스터 조정위원회가 국토경쟁력강화 지원단과 지자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경쟁거점 클러스터가 형태를 갖추게 되며, 경쟁거점 클러스터가 조직된 이후, 클러스터 운영의 핵심인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 과제 선정은 지역클러스터 조정위원회의 지역평가, 국토경쟁력강화 지원단의 정부평가의 2단계에 걸쳐 진행. 정부평가는 지역의 평가결과를 그대로 반영해 확정하는 상향식 체계를 갖추고 있음
- 클러스터별 조정위원회에서 1차 평가를 하며, 2차에서 지나친 중복은 조정하거나 탈락시킴(현재 4단계 클러스터의 경우 1단계 때 선정한 73에서 56개로 줄임). 이를 지방정부에서 최종 확정하면서 성과에 따라 산업분야를 내부적으로 조정함

4) 정책 수단

■ 계약협약 제도

- 프랑스의 지역 혁신 정책은 계약협약(Contrats de Plan) 제도를 통해 추진하며
 - 프랑스의 계약협약 제도는 '국가와 지역발전에 동시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개발사업을 중앙·지방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 및 투자분담에 대해 공적으로 상호 약속하는 계약'임
 - 계약은 국가를 대표하는 레지옹(region) 지사와 지역을 대표하는 레지옹의회 의장 간의 협상을 통해 체결
- 레지옹 전체 예산의 30~60% 수준의 계획(프로젝트, 프로그램)에 참여. 일례로 레지옹 중 하나 '노르-파드 칼레 국가와 레지옹 간 계획 계약'은 17개 사업에 대해 총 262만 유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이 중 31.4%인 82만 유로를 중앙정부가 부담기로 함
- 계약협약을 체결한 레지옹정부는 매년 1회 시행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가보고서는 레지옹 지사와 레지옹 의회 의장이 공동대표인 계획계약조사위원회에서 검토·평가됨. 또한 평가 결과 계약의 일부 조항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파트너 간 상호 합의에 의해 전부 또는 일부를 개정할 수 있음

〈그림 57〉 국가 레지옹간 계약협약 제도

au 15/10/07	Etat		Conseils Régionaux		Autres collectivités (1) K€	TOTAL K€
	K€	%	K€	%		
Alsace	341 524	39.24%	257 673	29.61%	271 103	870 300
Aquitaine (2)	574 672	48.48%	610 750	51.52%	0	1 185 422
Auvergne	282 727	60.00%	188 485	40.00%	0	471 212
Bourgogne	277 088	44.13%	350 843	55.87%	0	627 931
Bretagne	594 313	55.34%	479 647	44.66%	0	1 073 960
Centre	359 844	48.28%	385 472	51.72%	0	745 316
Champagne-Ardenne	231 608	50.00%	231 609	50.00%	0	463 217
Corse	132 000	50.51%	129 340	49.49%	0	261 340
Franche-Comté	217 523	43.15%	166 102	32.95%	120 448	504 073
Ile-de-France	2 041 136	37.34%	3 425 083	62.66%	0	5 466 219
Languedoc-Roussillon	495 872	37.85%	814 320	62.15%	0	1 310 192
Limousin	234 292	60.25%	154 546	39.75%	0	388 838
Lorraine	527 849	49.95%	528 900	50.05%	0	1 056 749
Midi-Pyrénées	522 929	46.65%	598 000	53.35%	0	1 120 929
Nord-Pas-de-Calais	747 626	29.37%	1 797 911	70.63%	0	2 545 537
Basse-Normandie	267 472	50.00%	267 472	50.00%	0	534 944
Haute-Normandie	431 456	35.59%	441 780	36.44%	339 076	1 212 312
Pays de la Loire	489 504	49.00%	509 411	51.00%	0	998 915
Picardie	322 278	49.82%	324 550	50.18%	0	646 828
Poitou-Charentes	377 563	57.21%	282 341	42.79%	0	659 904
PACA	840 462	50.43%	826 102	49.57%	0	1 666 564
Rhône-Alpes	920 067	38.40%	1 475 810	61.60%	0	2 395 877
Guadeloupe	169 497	50.95%	115 411	34.69%	47 790	332 698
Guyane	134 855	79.69%	28 230	16.68%	6 150	169 235
Martinique	141 570	32.16%	167 515	38.06%	131 061	440 146
Réunion	257 563	48.43%	162 114	30.48%	112 203	531 880
total CPER régionaux	11 933 290	43.11%	14 719 417	53.18%	1 027 831	27 680 538
total CPER massifs-fleuves	807 745	54.12%	592 773	39.71%	92 053	1 492 571
TOTAL	12 741 035	43.67%	15 312 190	52.49%	1 119 884	29 173 109

* 출처: CGET 발표자료

5) 시사점

■ 지역혁신 기반으로서의 지방행정체제(초광역 레지옹)

- 프랑스의 신 지역정책의 핵심은 초광역 레지옹 정책을 통해 세계화에 맞는 지방 정책과 국제 경쟁 체제임
 - 새롭게 집권한 프랑스의 제1기 마크롱 정부는 2016년 집권 초반에 기존의 행정 체계를 빠르게 혁신하여 초광역 레지옹 정책(Mega Region)을 실시하여 글로벌 체제에 맞는 지방 행정 체제를 빠르게 결정하고 체제를 혁신함
 - 규모의 경제 개념에 입각하여 지방을 최소 5백만 단위의 인구 구조와 기업의 혁신 체제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지방행정 체제를 개편함으로써 지역혁신의 기반 마련

■ 중앙-지역 협력 거버넌스에 의한 지역혁신정책 수립

- 세계화와 유럽통합의 진전에 따른 대외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국토계획중심에서 경제산업 분야로까지 지역혁신 추진체계의 기능을 확대·강화
 - 국토경쟁력강화 관계부처장관회의(CIACT)와 국토경쟁력강화 지원단(DATAR)를 CGET(국토개발 관리청)으로 개편하여, 프랑스의 국토정책 방향이 균형정책 뿐 아니라 지역 경쟁력 강화로 확대됨에 따라 CIADT와 DATAR의 기능을 확대
- 지역혁신정책 추진 체계는 중앙정부기구인 CGET와 조정협의회에서 지역사업의 실행을 최종 결정하는 가운데, 레지옹 정부 안에서 지방정부가 클러스터 사업을 결정하고 발전계획 수립하는 과정에 지방정부에 파견 온 CGET 파견관이 참여과정을 통해 중앙과 지역이 사업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설계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의 컨설팅을 통한 산업 조정이 필요함. 사업이 정치적으로 좌우되고 산업분야의 방향이 자주 바뀌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지역의 클러스터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어야 함

■ 지역의 주도적 혁신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계약협약제 운영

- 프랑스의 계약협약제는 먼저 레지옹 정부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CGET와 서로 논의하면서 중앙정부의 자문과정을 거쳐 1년간의 협의 끝에 세부 프로그램과 모든 과제 내용을 협약함
 - 예산은 5:5나 6:4 정도로 하며, 지방정부도 예산 투입이 큰 만큼 협약 단계에서부터 세밀한 계약을 수립함
 - 장기 10-20년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1-2년마다 중앙의 컨설팅 계속 받고 자문하면서 조정을 해 나가는 방식으로 계획적으로 운영함
- 우리나라의 지역발전협약제도는 국토교통부 소관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토목공사와 같은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지역발전협약제도가 활용되는 경향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보완하기 위한 중앙 정부 차원에서의 면밀한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향후 지역주도 혁신을 위한 협약제도가 지역의 혁신 역량 강화 및 지역의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혁신을 기획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지역 간 경쟁과 시너지의 창출을 바탕으로 국가경쟁력 강화

-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는 각 지역에서 경쟁거점 클러스터는 산업 영역적으로 구역과 범위를 정하였으며, 다른 지역에 유사한 클러스터가 10여 곳에 이룸. 각 클러스터 간에 연합체를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경쟁과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해 제휴관계를 맺은 기업(중소기업), 연구소 및 교육기관,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 간에 연합을 두었음

- 모든 R&D사업의 개발(최소한 2개 기업과 1개 연구소)과 클러스터 활동(상호활동, 국제제휴, 지역별 연합 등) 등을 수행하며 클러스터의 활동은 프랑스의 산업 잠재력을 강화하고, 보다 높은 국제적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활동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투자자 및 기업가들에 대한 지역의 산업적, 기술적, 경영 효과를 통한 지방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음
- 또한 중소기업을 반드시 포함시켜 중소기업의 개편과 신성장동력을 찾는 데 필요한 인력구조 개편에 정책 방향을 둠
- 즉, 프랑스의 지역혁신정책은 유럽통합에 따른 유럽 내의 1,000여개에 이르는 경쟁거점 클러스터를 통한 국가 간 경쟁과 이를 통한 유럽과 국제간의 경쟁을 통하여 프랑스 산업 구조에 대한 개편을 이루고자 하였음. 이러한 비전은 글로벌적인 경쟁 구조의 개편과 세계화에 이룬 경쟁 구조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데 사업목적을 두었음

3. 독일 지역산업정책

1)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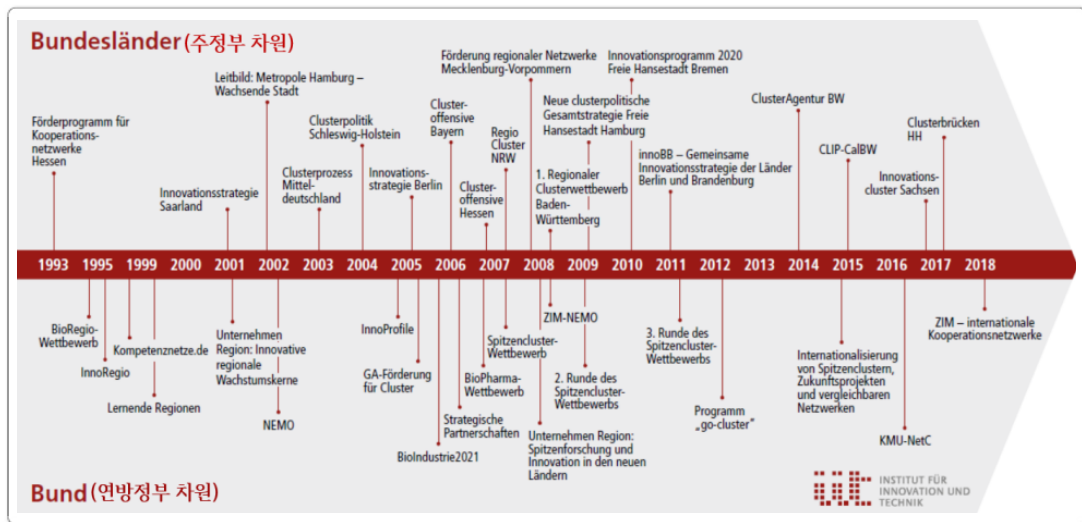
- 독일의 지역산업정책은 연방정부 차원보다는 주정부 차원의 산업정책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지역정책은 국가전략산업 육성 차원에서 주로 클러스터 정책으로 구현
 -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의 클러스터 이론의 영향으로 독일은 1990년대부터 지역산업 정책은 클러스터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안영진, 2020)
 - 유럽의 클러스터 정책은 영국, 아일랜드 등이 선두 그룹으로 시작하여, 그 후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이 뒤이었고, 독일은 유럽국가들 중에서는 다소 늦게 출발
 - 기본적으로 독일은 규모, 문화, 역동성에서 매우 다양한 16개 국가(주정부)로 이루어져 있고, 주정부가 경제에 관한 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김계환 외, 2013: 231)
 - 독일은 자율성과 연대라는 외견상 모순되는 두 가지 논리를 결합하고 있고, 경제정책에 관한 한 주도적인 역할은 연방정부보다는 주(Lander)와 민간이 중심
 - 그러나, 국가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연방정부의 주도성이 드러나며, 지역의 자율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방정부는 주정부 간의 경쟁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을 채택

2) 목적 및 변천

- 독일의 지역산업정책은 1990년대에 주(州)정부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차원에서 먼저 시작했고, 뒤이어 연방정부는 전략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클러스터 구축전략을 추진하면서 전개
- 독일은 1993년 헤센(Hessen)주에서 '지역 협력네트워크'(Kooperationsnetzwerke)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2000년 이후에는 클러스터(Clusteroffensive) 전략을 각 주마다 경쟁적으로 추진
 - 2001년 자르란트(Saarland)주의 '혁신전략'(Innovationsstrategie) 프로그램, 2003년 중부독일(Mitteldeutschland)주의 '클러스터프로세스'(Clusterprozess) 프로그램, 2004년 슐레스비히-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의 '클러스터정책'(Clusterpolitik) 프로그램을 각각 추진
 - 2005년 베를린(Berlin)의 '혁신전략'(Innovationsstrategie) 프로그램,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의 '지역정책의 클러스터지향'(Cluster-Orientierung der Regionalpolitik)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 서 점차 독일 남부지역으로 확대
- 2006년 독일남부 바이에른(Bayern)주가 ‘공세적 클러스터’(Cluster-Offensive) 프로그램을, 2007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주가 ‘지역클러스터’(Regiocluster) 프로그램을, 2009년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지역클러스터경쟁’(Regionaler Clusterwettbewerb)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적극적이고 경쟁적으로 클러스터 전략을 추진
 - 2010년대에는 브레멘(Bremen)이 ‘혁신프로그램2020’(Innovationsprogramm2020)을, 2017년 작센주가 ‘혁신클러스터’(Innovationscluster)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클러스터는 독일 전역으로 확산

〈그림 58〉 독일 클러스터 정책 프로그램의 전개 추이



* 출처: Sedlmayr et al.(2021: 51); 안영진·구지영(2022: 520)

3) 독일의 국가운영체제와 지역혁신 거버넌스

- 독일의 국가 행정체제는 연방정부-주정부-기초지방정부 등으로 구성되어 유럽 국가 중에서도 비교적 강력한 지방분권체계를 운영(김성호, 2010: 19)
 - 독일은 주정부의 정치적 행정적 권한이 헌법상(연방기본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정부(지역정부)가 지역에서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강한 주정부의 권한을 보유
 - 바이마르 공화국을 변질시킨 히틀러의 중앙집권식 단일국가에 대한 반작용으로, 독일은 2차 세계대전 후 연방주의를 지지

- 1989년 동독붕괴 이후 통합과정에서도 구 동독 지역을 5개 주로 나누고, 이들 주들이 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통일 독일 이후에도 독일은 모두 16개 주 연방으로 구성
- 독일은 연방기본법(통일헌법) 제20조 1항에서 독일은 '민주사회연방국가'라고 규정하고, 연방기본법 제79조 3항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협력 원칙'을 규정
 - 연방의회(Bundestag) 내에 연방상원(Bundesrat)을 두고 있어, 주정부는 연방상원(Bundesrat)을 통해 주정부를 대표하여 중앙집권에 대한 견제 기능을 보유
 - 연방의회(Bundestag)가 주정부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률안을 심의할 경우, 주정부의 대표들은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연방의회가 비록 의결한 법안이라고 해도 연방상원(Bundesrat)의 과반수 이상이 부결에 찬성하게 되면, 그 법안은 효력을 상실
- 연방기본법 제70조에는 "기본법에서 규정한 바를 제외하고, 주정부는 자치권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연방법률을 집행한다"고 규정
 -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잔여 권한은 원칙적으로 주의 권한으로 추정되며, 사물의 성질상 연방권한으로 인정되는 사안과 연방권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좁은 범위 내에서 묵시적인 연방권한이 인정
 - 또한 독일 연방기본법 상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권한배분은, 입법권과 행정권으로 구분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연방은 입법권에 중점을 두고 있고, 행정권은 주로 주정부에 중점이 주어져 있음
- 헌법에 의하면, 연방정부와 주정부 활동의 비용부담은 기본적으로 '견연성의 원칙'으로, 행정권한과 재정책임성을 일치
 - 기관의 운영과 유지에 관한 비용은 그 기관의 행정주체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연방기관의 행정비용은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행정비용은 주정부가 부담
 - 연방헌법은 입법책임과 비용을 연계시키지 않고 행정책임과 결부시키는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목적비용)은 행정책임에 귀속
 - 단, 주정부가 연방법률에 의해 위임사무로 수행하는 경우에 목적비용은 연방정부가 부담
- 주정부의 집행범위는 주(州)법은 물론 연방법률도 집행하는데, 주에서 연방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주행정청은 에너지 공급, 공공교통행정, 교육 및 문화, 병원 및 노인후생 등 생존배려적인 활동을 하고, 연방정부는 관세, 연방방위행정, 철도, 우편, 노동 등 특수업무의 활동을 수행
 - 특히 주목할 것은, 연방과 주가 공동으로 행정관청이나 그 밖의 조직을 만들어 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데, 즉 연방헌법은 주의 책임 혹은 연방의 책임 중에 하나일 것을 요구하는 '혼합행정 금지'의 원칙으로 운영

- 이러한 국가운영체제에 따라 독일은 법과 제도나 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전략보다는, 협력 네트워크와 경쟁을 통한 지역산업 정책을 전개해 옴
 - 독일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경제에너지부(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현재의 Bundesministeriums für Wirtschaft und Energie: BMWi)와 교육연구부(Bundesministeriums für Bildung und Forschung: BMBF) 2개 부처가 부처별로 '첨단기술' 확보의 일환으로 추진
 - 주(州) 정부는 바이오산업이나 기타 첨단산업 등의 부분에서 해당 주(州)의 실정에 맞게 해당 산업육성을 위해 해당 주(州)의 역량을 결집한 클러스터 전략을 전개했고, 주로 중앙정부와 유럽연방(EU)의 보조금을 활용하여 해당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방식과 협력 주체를 채택
 - 이하에서는 독일의 이러한 지역산업정책의 전개 방식과 그 특징을 면밀하게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찾아 우리 지역정책에 적용 가능한 부분과 이를 위한 전제조건 등을 살펴보고자 함

4) 주요 내용 및 정책 수단

① 학습훈련, 경험유도, 플랫폼화 등의 기반 조성

- 독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1995년에 도입한 '바이오지역경쟁'(BioRegio-Wettbewerb) 프로그램을 효시로 클러스터 정책의 초기에는 주로 '학습'과 '경험'등의 기반조성 사업으로 핵심 방향을 정하고 지역 정책을 추진
 - 1999년의 '혁신지역'(InnoRegio) 프로그램과 2000년에는 '학습지역'(Lernende Regionen)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지역클러스터 관련 정책의 도입 확산을 위한 기초적인 '학습' 프로그램을 전개
 - 2002년 '혁신지역성장중점지역'(Innovative Regionale Wachstumskerne) 육성 프로그램, 2005년에는 '혁신프로파일'(InnoProfile) 사업을 통해 지역 내 혁신성장의 경험 공유 및 성공사례 양산의 노력을 전개
 - 2006년에는 '바이오산업 2021'(Bioindustrie 2021)을 발표하고 전략적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2007년에는 '첨단클러스터경쟁'(Spitzencluster-Wettbewerb)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을 전개
 - 이후 독일 연방정부는 2012년에 기 구축된 클러스터를 플랫폼화하여 'go-cluster'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2017년에 '중소기업 네트워크 및 클러스터'(KMU-NetC) 프로그램을 실시하면서 클러스터를 플랫폼화 하는 전략을 추진

② 공모와 경쟁 방식의 운영

■ 독일 연방정부의 지역산업 정책은 주로 신산업과 첨단 분야 산업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간 경쟁 공모 방식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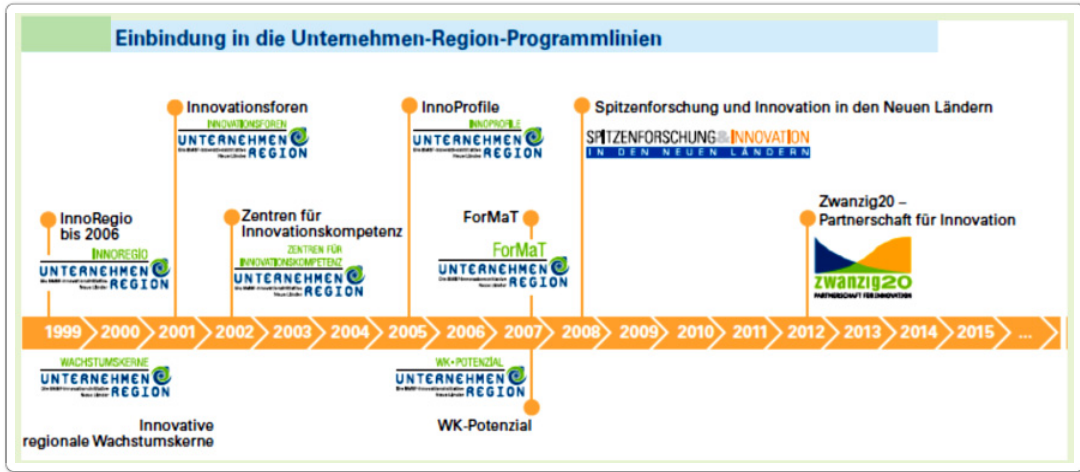
- 교육연구부(BMBF)는 독일의 바이오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 바이오산업 클러스터의 경쟁 공모 사업, 즉 '바이오지역 경쟁'(BioRegio-Wettbewerb) 프로젝트를 추진
 - 1995년 바이오산업지역 클러스터를 공모하고, 당시 참여 신청한 17개 지역 클러스터 가운데 3개 지역 클러스터 즉, 뮌헨(BioRegion München), 라인란트(BioRegion Rheinland. 후에 BioRiver로 명칭 변경), 하이델베르그(BioRegion Heidelberg. 후에 BioRegion Rhein-Neckar Dreieck로 명칭 변경)가 선정하여, 5년간 각각 5,000만 마르크 지원
 - BMBF는 그 후에도 바이오산업 육성 차원에서, 사업화는 가능하나 아직 시장화 단계에는 없는 프로젝트 지원을 목적으로 '바이오챌스'(BioChance) 프로그램(1999년~2005년)을, 그 후속 프로그램으로 '바이오챌스플러스'(BioChance Plus) 사업(2004년~2006년)을 연계하여 추진
 - 바이오레지오 프로그램의 경우, 민간기업의 경제적·과학기술적 잠재력, 지역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역량, 지역 내 산학연 주체들 간의 상호협력 정도, 지원서비스의 가용성, 연구결과의 상업화 전략 및 창업기업 지원 전략의 실효성 등이 지원 대상 선발 기준
 - 바이오레지오 프로그램은 컨설턴트를 매개로 한 네트워크를 통해 창업과정의 지원, 연구잠재력의 현실화, 창업기업의 금융지원, 산학연관의 실질적 협력, 정부의 신속한 인허가, 연구계와 산업계의 창의력 결집 등으로 생명공학 분야에서 많은 신기술과 신기업을 창출하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
 - 우리와의 차이점은, 우리는 당해 연도에 배정된 지원예산은 가능한 모두 소진하여야 차년도 예산배정과 지원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시스템인 반면, 독일은 반드시 소진하지 않아도 되는 기금 방식으로 운영되어, 프로젝트 준비나 추진 역량이 미진한 지역은 과감히 탈락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

〈표 43〉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 바이오기술 지원 프로그램

공모명	기간	지원 규모	대상 그룹	지원 내용
BioRegio	1997-2005	9,000만유로	개인	유력한 바이오기술 지역 강화
BioChance	1999-2005	5,000만 유로	프로젝트 (기업, 과학자)	개별 연구 프로젝트의 지역 포괄적 지원
BioChancePlus	2004-2006	1억 유로		
BioProfile	1999-2007	5,100만 유로	지역	독자의 특화 분야를 확립한 소규모 바이오기술 지역 지원
BioFuture	1998-2010	7,500만 유로	개인	바이오 과학기술자의 경력 및 창업 지원

* 출처: 안영진(2020)

〈그림 59〉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의 구 동독 지역 대상 기업지역 정책 추진 추이



* 출처: 안영진(2020)

③ 경쟁을 위한 네트워크 유도

■ 독일 교육연구부(BMBF)는 서독 대비 낙후된 구 동독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젝트에서도 경쟁 공모 방식인 ‘혁신지역 경쟁’(InnoRegio-Wettbewerb)(1999-2006) 사업을 추진

- ‘혁신지역’(InnoRegio) 프로그램은 클러스터의 육성을 직접적인 목표로 한 것은 아니나, 클러스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혁신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할 목적으로 추진
 - 구 동독 지역 전역에 개인, 기업, 연구 및 교육 기관, 공공 행정기관, 상공회의소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극히 다양한 444개 연합체(Allianz)가 공모에 신청하여 최종적으로 23개의 네트워크를 선정하여 프로젝트를 시행
 - 비록 산업을 형성할 정도의 규모와 역량에는 미달했지만, 지역의 빈약한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먼저 네트워크 형성에 대한 기회를 제공
 - 우리와의 차이점은, 우리의 지역지원 정책의 대부분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쟁 방식이라기보다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형평성을 고려한 배분방식으로 운영
 - 특히 우리는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지원자금을 신청할 역량마저 미흡하다는 이유로 수월성보다 형평성에 맞추어 균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인재유치와 자원활용 역량이 갈수록 소멸
- ‘혁신지역 경쟁’ 프로그램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구동독지역의 혁신 네트워크를 진흥하기 위한 ‘기업 지역-새로운 주들을 위한 혁신이니셔티브’(UnternehmenRegion-Die Innovationsinitiative für

die neuen Länder)를 실시하면서, 지역이 지역내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전개

- '기업지역'(Unternehmen Region)은 지역의 숙련된 기술자, 기업가, 과학자들을 일정한 네트워크로 묶어 기술혁신 및 사업화를 유도하고, 혁신적인 창업을 지원
- 지역 내 지속발전 가능한 클러스터의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 산업, 과학 분야의 프로파일 생성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려는 전략 하에 추진
- 세부적으로 '기업지역'은 지역의 연구기관, 기업들간의 혁신 네트워크 지원을 위한 '혁신포럼'(Innovation Forum), 지역의 특화된 산업·기술적 프로파일을 조성하기 위한 '혁신프로파일'(InnoProfile), 지역에 혁신적 성장거점을 조성하기 위한 '혁신지역성장핵'(Innovative Regional Growth Core: GC-Innovative regionale Wachstumkerne: WK)과 혁신역량센터'(Centre for Innovation Competence-Zentren für Innovationskompetenz)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
- 이는 지역 내 지역혁신 관계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하드웨어적 공간과 소프트웨어적 모임을 체계적으로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밖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하는 물론 지역 내로 자원을 끌어들이는 전략을 학습토록 유도
- 이후에는 시장성이 있는 기술이나 연구결과의 시장화에 초점을 맞춘 '시장을 위한 연구'(ForMat: Forschung für den Markt im Team),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간의 합동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혁신 지역성장핵 잠재력'(GC Potential - WK Potential) 프로그램, 서독을 포함한 해외 유망기업들과의 협업을 지원하는 '투엔티20'(Twenty20- Zwanzig20: Partnerschaft für Innovation) 프로그램 추진
- 이를 통해, 지역 대학과 지역 연구소가 단순히 연구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구결과의 시장화를 위해 중소기업과의 협력을 활성화 할 뿐 아니라, 해외 기업과의 연계를 위해서도 지역 대학을 포함한 지역 연구기관의 협업을 유도하는 프로그램들을 전개
- 우리 교육부의 지역혁신 지원의 경우, 지원방식과 성과지표 및 측정방식이 논문실적 등 대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역인재의 지역체류와 지역기업과의 연계에는 그다지 효과를 제공하지 못하는 실정

- 'ZIM-NEMO'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려는 기업들을 지원하되, 적어도 6개 이상의 중소기업 간의 네트워크 형성 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전개
- 우리의 경우, 대부분의 지역 R&D과제가 기업 단독수행이며, 지역 연구소와 대학과의 협업은 있지만, 지역 중소기업들 간의 협업을 유도하기 위한 과제와 사업은 전무한 형편
- 반면 독일은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연결은 물론, 중소기업 간의 연계를 통해 이들 간의 네트워크 공동 프로파일 생성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작업하는 네트워크 매니저의 서비스 활동에 대해서도 재정을 지원
- 2005년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시범 프로젝트(Modellprojekt)로 '협력네트워크 및 클러스터매니지먼트 프로젝트'(Kooperationsnetzwerke und Clustermanagementprojekte)를 추진하면서 협력과 네트워크의 범주를 확대하는 정책을 실시
 - 이는 기업과 산업경제 관련 공공기관 중에서 지역 내에서만 아니라, 지역을 넘어선 협력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른바 공동과제 클러스터간 연계 지원을 통해 네트워크의 범주를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
 - 우리의 경우, 클러스터간 협력을 위한 사업은 거의 전무하며, 동종 업종 간의 클러스터는 경쟁 관계로 인해 협업이 어렵다 할지라도, 이업종 클러스터간의 협업은 충분히 시도해 볼만 사업
 - 특히 클러스터의 구성 및 매니지먼트에 대해서는 클러스터 간에도 상호 학습과 벤치마킹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수준의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과 사업도 필요

〈표 44〉 독일 연방교육연구부(BMBF) 구동독지역 대상 기업지역 혁신지원 프로그램

프로그램	이니셔티브	기간	예산 (만유로)	목적
InnoRegio	23개	2000-2005	23,050	클러스터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혁신 잠재 역량을 발굴하여 개발
ForMAT	33개	2008-2013	5,864	대학을 포함한 공공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를 상업화하기 위한 목적
InnoProfile	InnoProfile 42개	2005-2013	15,700	젊고 유망한 연구자들과 역내 특화사업 간의 협업 유도, 지역경제의 경쟁력있는 프로파일 생성
	InnoProfile-Transfer 51개	2013-2019	12,270	
InnovationForum (Innovationsforen)	182개	2001-2017	1,400	학제간 네트워크 조성 및 발전을 통해 기업과 교육·연구 기관 간의 혁신 파트너십 강화
Innovative Regional Growth Core(WK)	51개	2001-2018	35,060	기 조성되어 있거나 잠재성 있는 플랫폼 기술을 발굴, 지역 핵심산업 거점으로 체계적 육성

프로그램	이니셔티브	기간	예산 (만유로)	목적
GC Potential* (WK Potential)	41개	2007-	5,850	대학·연구기관들의 상용화 가능 연구기술을 중소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인트 프로젝트 지원
Centres for Innovation Competence (Zentren für Innovationskompetenz)	14개 (Joint Centres for Information 7개 별도)	2002-2018	27,160	대학·연구기관의 우수 연구방법 및 기술 개발 지원, 장기적으로 높은 성과의 국제적인 연구센터 육성
Twenty20 (Zwanzig20)	Project Consortia 10개	2013-	45,000	역내 우수한 경제·과학 역량의 체계적 발굴을 위해 1개 이상의 서독 기업이 참여하는 학제간, 융합적 협업체계 조성 지원
	Forums 9개	2016-	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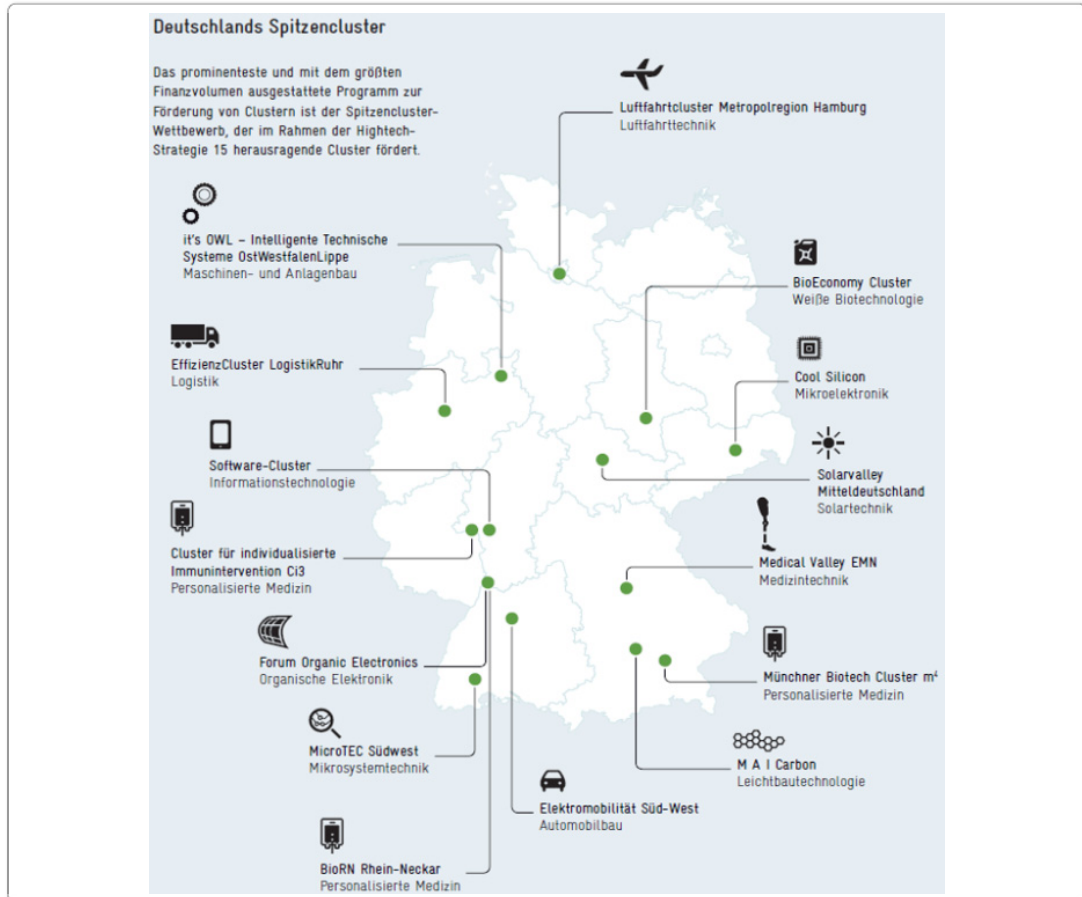
* 출처: 안영진(2020)

⑤ 연구개발전략 및 인증제와 연동된 클러스터 운영

■ 독일은 범부처 사업으로 ‘하이테크 전략’(High-tech-Strategie) 추진을 위해, 지역별 ‘첨단 클러스터 경쟁(Spitzencluster-Wettbewerb)’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마다 차별화된 전략산업 육성을 유도

- 2005년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이 대연정을 구성한 뒤, 2006년에 연방정부로서는 처음으로 범부처 연구개발 및 산업혁신을 위한 포괄적 전략인 ‘하이테크전략’(High-tech-Strategie)을 추진
 - 2009년까지 146억 유로를 투자하고, 이 중 119억 4,000만 유로는 17개 핵심 산업 육성 및 기술 개발에, 나머지 26억 6,000만 유로는 혁신정책 프로그램에 투자
 - 2007년 1차 공모에 신청한 38개 클러스터 중 5개 첨단클러스터, 2009년 2차 공모에서 신청한 23개 클러스터 중 5개 클러스터, 2011년 3차 공모에 신청한 23개 클러스터 중 5개 클러스터를 선정하여 총 15개 첨단 클러스터를 확정
 - 이는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정책과 지역산업 정책의 절묘한 결합으로 평가되며, 그간 20년 이상의 지역 클러스터의 기반을 확보해 온 결과의 산물이라고 평가됨

〈그림 61〉 독일 15개 첨단 클러스터



* 출처: Commission of Experts for Research and Innovation(2015: 38)

■ 독일 연방정부는 바이오산업 등 첨단산업 클러스터의 발굴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독일 내에 첨단 클러스터 네트워크를 관리하기 위해 인증제를 운영

- 1999년에 시작된 ‘핵심역량넷’(Kompetenznetze) 사업은 2012년 7월에 명칭을 ‘go-cluster’로 변경하고, 독일의 모든 혁신 클러스터는 ‘go-cluster’에 신청 가능하게 함
 - ‘go-cluster’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클러스터의 조직과 구성, 클러스터의 관리 및 운영, 활동·협력 관계, 지명도·성과 등이 가입 기준에 충족해야 함
 - 경제에너지부(BMW)는 벤치마킹 및 인증과정 비용을 지원하고, ECEI(European Cluster Excellence Initiative)가 일정한 품질 표준을 충족하는 클러스터에 수여하는 실버 라벨의 승인 비용도 제공 (김성진, 2019: 16)
 - go-cluster의 모든 참여자는 클러스터 운영을 개선하여 go-cluster 선정 2년 내에 ECEI의 실버 라벨

- (Silver Label)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클러스터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이 과정을 통해 정기적으로 클러스터를 점검하는 기능
- 'go-cluster'에 일단 가입하게 되면, 유럽 통일 기준에 따른 클러스터의 등급을 부여받고, 'go-cluster'라는 로고 사용이 가능해 클러스터로서의 신용도를 제고할 뿐 아니라, 독일과 유럽의 타 클러스터와의 공식적 교류가 가능
 - 독일 연방정부의 클러스터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클러스터 수는 약 500여 개에 달하고, 2020년 4월 현재 'go-cluster'로 정식 등록된 것이 84개, 우수 클러스터 가운데 첨단클러스터(Spitzencluster)에 해당하는 것이 8개 정도이며, ECEI로부터 골드 라벨로 인정된 곳이 11개, 실버 라벨 55개, 브론즈 라벨 6개 등임
 - 네트워크 플랫폼의 기본 목적은 국내 클러스터를 국제 수준으로까지 발전시키고, 참여하고 있는 클러스터의 국제적 인지도를 향상시켜, 국제적인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함
 - 우리의 경우, 클러스터(산업단지 등) 인증제 자체가 부재하며, 한번 형성된 클러스터는 중간 점검이라는 과정을 통해 클러스터로서의 유지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도 부재하고, 지역의 클러스터를 국제적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도 미흡함

〈표 45〉 독일 연방정부의 클러스터플랫폼(Clusterplattform) 'go-cluster' 등록 클러스터

연방주	클러스터	산업부문	클러스터	산업부문	클러스터
바덴-뷔르템베르크	144	자동차	51	금속가공	8
바이에른	32	건설	13	마이크로시스템	16
베를린	12	바이오	39	약기	3
브란덴부르크	6	화학	8	나노기술	14
브레멘	15	서비스	61	광학, 포토닉	21
함부르크	10	전자, 계측기술, 센서	34	식물연구	9
헤센	40	에너지기술	76	생산기술	74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27	금융	4	우주기술	12
니더작센	129	임업, 목재	6	위성기술	3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29	건강	65	센서	2
라인란트-팔츠	20	정보통신	74	안전기술	16
자르란트	4	크리에티브(창조산업)	34	섬유, 의류	3
작센	8	플라스틱	24	환경기술	86
작센-안할트	16	물류	39	교통기술	31
슐레스비히-홀슈타인	9	항공기술	17	포장기술	4
튀링겐	12	의료기술	46	재료기술	56
합계	513	https://www.clusterplattform.de/CLUSTER/Navigation/DE/Bund/go-cluster.html			

* 출처: 안영진(2020)

⑥ 독일 클러스터의 최종 지향점은 국가경쟁력

■ 독일의 지역정책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들 사이에서 협력과 경쟁으로 운영되지만,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다시 EU, 즉 유럽 전체의 산업 및 기업정책과 맞물려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차원에서 지역산업 정책을 운영

- 독일 연방정부의 지역산업 정책은 경쟁력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정책이며, 독일의 경제성장과 핵심산업 및 기술육성을 지역적 특징을 고려하여 추진(김진숙, 2015: 8552)
 - 독일의 지역별 클러스터는 독일 전체 최고의 혁신네트워크 클럽이라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멤버의 영입은 네트워크 전체에 보다 높은 품질이 보장될 때만 영입이 가능하고, 그 판단 기준은 멤버기업들이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멤버 박탈도 발생
- 독일 클러스터 정책의 특징은 지역 내는 물론, 지역을 넘어서 기업과 관련된 기관과의 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타 주정부에 있는 동일 대상기업들도 네트워크에 포함 가능하며, 국가를 초월하여 네트워크 활동을 전개
 - 주정부 클러스터 사업의 기본적 특징은 장기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첨단 전략산업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에 대부분 참여
 - 현재까지 독일은 주로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보통신, 에너지, 바이오, 생명공학 등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연구개발을 전개
 -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며, 연구기관 및 대학은 물론, 정부지원기관 및 금융기관도 동참하고 있어, 해당 지역산업과 클러스터가 독일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강점을 보유

5) 시사점

- 독일의 지역산업 정책은 주로 지역혁신 클러스터를 통해 진행해 왔지만, 개별 지역의 상황과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역 혁신주체의 자율적 연계를 통한 역량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협력을 위한 경쟁(Contest for co-operation)’ 방식을 진행 (황혜란, 2006: 52)
 - 지역혁신시스템의 역량은 해당 지역이 가진 자원의 양이나 규모보다는 지역혁신체계 내에서의 혁신주체간 연계의 질적 수준에 의해 결정
 - 중앙정부가 지원대상을 직접 선정하는 프로젝트 방식을 띠면서도,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 지역이 자율적

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유도하는 방식

- 지역간 역량과 자원의 격차로 인해 형평성을 강조하는 방식보다는, 역량과 자원의 격차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의 자율적인 연대 및 연계 전략을 유도
 - ‘협력을 위한 경쟁’ 방식은 지역내 자율적인 협력 시스템에 대한 설계 및 전략의 실효성에 근거하여, 지원 대상지역을 선정(황혜란, 2006: 53)
 - 중앙정부의 지원 대상에 선발되기 위한 과정을 통해,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 자체의 기획 역량의 확보는 물론, 지역에 적합한 시스템 설계가 가능하도록 유도
 - 협력방식과 전략의 실효성이 경쟁의 기준이 되는 선정방식을 통해, 지역 자체의 시스템 설계의 실효성을 고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동시에 지역의 경쟁력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연계하여 고민하도록 유도
 - 독일의 지역산업 육성전략은 지역의 자율적 문제해결을 위한 선제적 고민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계 시스템을 체계화하는 것은 물론, 여러 측면에서 강점이 존재
 - 응모 지역은 각 지역의 특수한 문제나 필요에 근거하여, 혁신활동을 해당 지역 내에 조직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선발이 되기 위한 준비과정은 개별 지역의 특수성에 근거한 조직형태 구성이 가능
 - 지역혁신 지원 프로그램 응모 준비 과정에서, 선정된 지역은 당연히 문제해결의 기회를 확보하게 되고, 탈락지역도 시스템 설계 및 문제해결을 위한 선행 학습활동의 기회를 제공
 - 또한 탈락지역은 그간의 선행 준비학습을 통해, 다른 지원 프로그램에 응모하기도 하고, 독자적인 자금 마련을 통해 해당 지역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자체 시스템의 마련의 계기를 제공
 - 독일 지역산업 정책의 기본 원칙은 국가내 또는 유럽 전체 차원에서 각각의 이해관계자들 간에 폭넓은 협상 과정을 유도(주현 외, 2015: 221)
 - 독일의 산업정책은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유지하는 장기적인 목표를 지향하고 있고, 산업정책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재조정과 조정을 진행
 - 관료주의적인 상명하달식 접근방식이 아닌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반복적인 대화를 유지하는 상호 협상적 산업정책을 견지
 - 지역산업 정책이 세부적으로 구현되는 과정에서도 상호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폭넓은 대화와, 이를 통한 네트워크 형성을 유도하는 방식을 지향
 - 이해당사자들과 광범위한 대화를 유도하는 독일의 정책설계는 감독과 균형 시스템을 통해 오류를 조기에 중지시키고, 자원을 절약하고 지키는 장점을 보유
- 독일의 지역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주정부의 자율성에 맡겨지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주요 전략산업은 연방정부가 지역 간의 경쟁방식을 통해 선정·육성

- 중앙은 국가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전략산업을 정하고, 세부적인 육성방식과 추진전략은 지역에서 해당 지역의 물적/인적 자원을 활용하여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방식
 - 중앙에서 지정한 전략산업과 핵심기술을 해당지역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주정부는 해당지역 현실에 맞는 운영 조직과 추진 방식 및 구성을 통해 해당지역의 클러스터의 우수성을 제시
- 중앙의 선정 방식은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산업의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과 추진 전략이 갖추어진 지역 중에서 우수한 클러스터를 경쟁방식을 통해 평가하여 선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클러스터는 해당 지역의 특징점을 최대한 활용하되, 해당지역 외 다른 지역이나 다른 국가의 역량도 활용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클러스터를 운영
- 중앙은 지역의 클러스터를 대상으로 인증제를 통해 감독 관리하며, 클러스터로서 지속유지 여부를 점검하여 글로벌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둠
 - 중앙은 형평성을 통한 균분의 방식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효율성을 통한 경쟁의 방식을 유도
 - 지역은 해당지역의 클러스터 육성 차원만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글로벌 대상으로 활동과 경쟁을 유도
- 독일은 지역산업정책이 국가연구개발 정책과 연동이 되어, 독일의 주요한 전략기술 개발정책이 지역간 경쟁에 기초하여 지역지향적으로 운용하되 글로벌 경쟁력을 지향
 - 따라서 지역의 경쟁력이 국가의 경쟁력이고,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행정적 구역을 초월한 경쟁력 간의 연계를 유도할 필요
 - 이를 위해서 지역산업의 경쟁력 뿐 아니라, 지역정책의 경쟁력과 지역 내의 경쟁력의 결집은 물론, 더 나아가 지역 외부 역량을 활용할 줄 아는 경쟁력도 필요

4. 영국 지역산업정책

1) 배경

■ 영국의 지역산업 정책은 지역간 불균등한 산업화 및 성장, 이로 인한 지역발전의 격차 심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의 결과물

- 산업혁명 이후 지속되어온 산업화의 영향으로, 농촌에서 일자리가 있는 도시로의 이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 발전 및 격차는 이미 18세기부터 나타나기 시작
 - 스코틀랜드 중부지역인 글로스고우의 조선산업, 잉글랜드 북서부지역인 맨체스터의 섬유산업, 잉글랜드 북부인 뉴캐슬의 광업 및 조선산업, 웨일즈 남부지역인 카디프의 철강 및 광업 등이 대표적인 예
 - 1차 세계대전과 1920년 경제대공황 이후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1928년에는 '산업이전청'을 설치하고, 산업이전 목적으로 도시노동자 대상 보조금 및 융자 지원 등을 실시
 - 1934년에는 「특별지역법」을 제정하여 낙후지역의 경제성장 지원정책과 더불어 실업률이 높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을 전개
- 전통적으로 의회 활동이 활발한 영국은 주로 법 제정과 제도 시행을 통해 지역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산업 정책을 전개
 -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5년 「산업분산법」을 통해 기존의 산업 지역을 통폐합하면서, 동시에 신규 개발지역을 지정하여 개발지역 내 제조업체에 대한 자금 지원을 실시
 - 1947년에는 「도시 및 농촌계획법」을 제정하여, 개발지역 내 신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장건설허가제' 실시하여, 신규 개발지역의 공장 신축을 적극 유도
- 1950년 이후부터는 영국의 전통적인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당 정치를 통해 각 정당의 특색에 부합한 지역산업 정책을 전개
 - 1950년대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중앙정부의 직접 지출은 줄이면서, 기존의 '공장건설허가제'의 절차를 완화하는 노력을 전개
 - 1960~70년대 노동당 정부가 집권하면서, 종래의 거점 중심의 지역산업 정책을 국가 전체를 고려한 종합발전 정책으로 전환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확대
- 1970년대에는 보수당의 '작은 정부론'과 노동당의 '정부 역할론'이 교차하면서 서로 상반된 지역산업 정책을 전개
 - 70년대 초반에는 보수당이 집권하면서 성장거점 중심의 선택과 집중 전략을 다시 추진하면서 공장건설 허가제를 폐지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에 대한 우선적 지원을 실시

- 70년 중반 이후에는 노동당이 재집권하면서 보수당에서 폐기한 공장건설허가제를 다시 부활하여 산업의 일부지역의 편중을 억제하고 중앙정부의 역할을 확대

2) 목적

- 1990년대부터 영국의 지역산업 정책은 중앙 주도에서, 지역의 장단점을 잘 인지하고 있는 지역의 자치정부로 역할의 중심 이동을 본격화하기 시작
 - 1990년대는 영국의 지역간 특히, 남북 간 격차는 고착화되어 갔고 낙후지역의 전반적인 산업 침체가 심화되자, 중앙주도 방식에서 지역 주도의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
 - 1997년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 정부는 기존의 낙후지역에 대한 무리한 투자유치 및 재정지원 정책을 지양하고, 해당 지역의 내생적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고, 웨일즈, 스코틀랜드, 북아일랜드에 자치정부를 수립하여 연방국가체제 운영 방식에서의 전환을 시도
 - 영국의 양당정치에 반영된 지역산업정책의 변화와 그 방향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여부와 전제조건 등을 살펴보고자 함

3) 지역혁신 거버넌스

- 신노동당은 지역산업 정책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기구(RDAs,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지역청(GORs, Government Offices for the Regions), 지역의회(RA, Regional Assemblies)를 설립
 - 지역개발기구(RDAs)는 중앙정부로부터 일정 정도의 감독을 받지만, 지역 기업과 노동조합 등 지역의 대표들로 구성된 지역위원회
 - 지역청(GORs)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전달하고 지역과 소통하며, 지역의회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
 - 지역의회(RA)는 지역의 의견을 대변하며 중앙정부와의 의견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의 기업 및 기구의 대표들로 구성
- 2010년부터 보수/자민 연립정부가 수립되면서 그간 노동당 정부가 추진한 지역정책을 폐기하고 새로운 지역혁신체계를 구성
 - 지역정책을 대표하던 지역개발기구(RDAs)를 폐기하고 민관협의기구인 지역사업협의체(LEPs, Local

- Enterprise Partnerships)를 설립하면서, 지역정책의 대상을 '광역(Region)에서 기초(Local)로' 전환
-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공간전략(Regional Spatial Strategy)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역경제전략(Regional Economic Strategy)을 결합한 지역발전전략(Regional Strategy)을 전면 폐기
 - 광역과 대도시 중심의 도시권 협약(Multi Area Agreement) 및 법정 도시권(Statutory City-Region)을 폐지하고, 중소도시를 포괄하는 '도시권 협상'(City-Deal)을 도입
 - 중앙주도의 지역정책을 반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권한과 재원을 대폭 지역으로 이관하여, 지역정책의 '분권화와 지방화' 정책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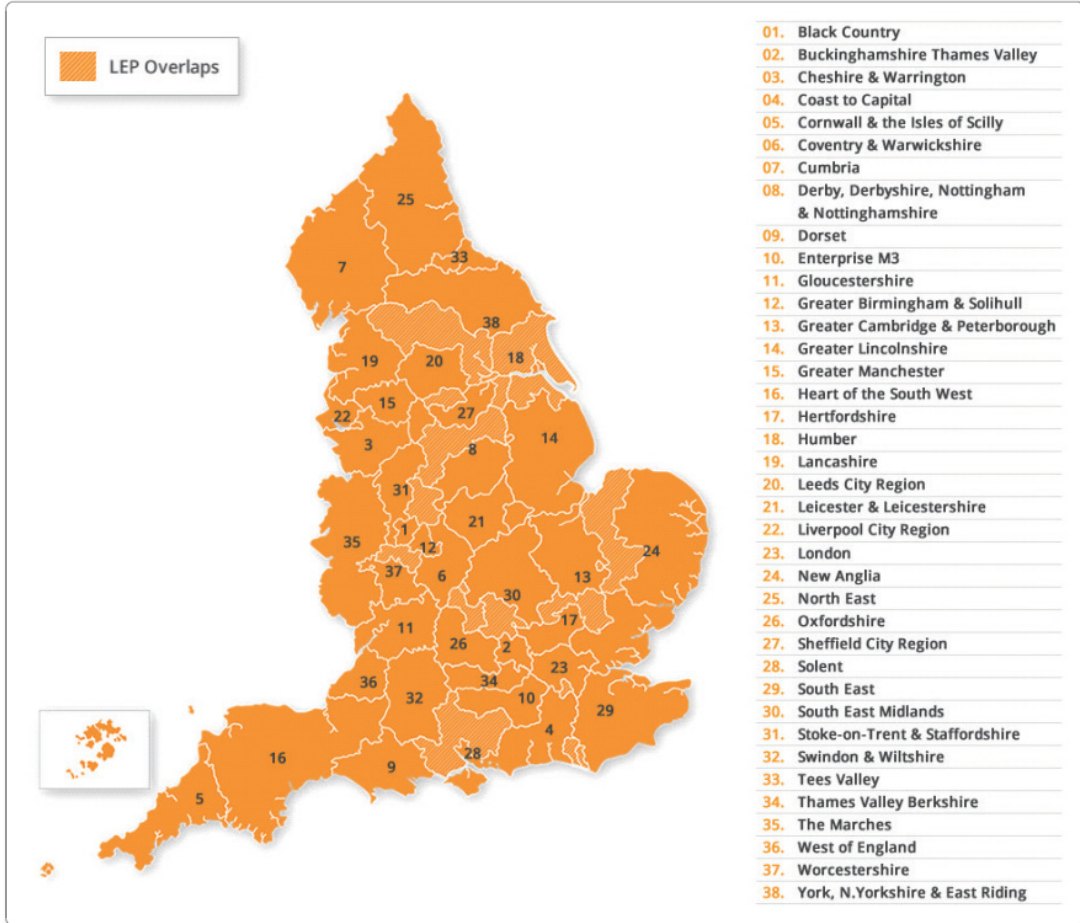
〈표 46〉 영국 지역정책의 변화 과정

구분	광역단위 (Region)	로컬단위 (Local)	광역 재등장 (Region)	로컬 재등장 (Local)
기간	1970년대 (1974, 노동당)	1980~90년대 (1979, 보수당)	2000년대 (1997, 신노동당)	2010년 이후 (2010, 보수당 연정)
논리	공공관리 (Public Mng.)	신로컬리즘 (New Localism)	신지역주의 (New Regionalism)	큰 사회 (Big Society)
추동력	민주화와 서비스 전달	행정기구 조정	경쟁력	경쟁력, 재정적자 감소
구조	공식적 : GLC, 6개 대도시	공동기구 : 런던, 대도시	다양 : 파트너십, 공동기구, GLA	다양 : 파트너십, 공동기구, 기능지역

* 출처: 박충희(2018: 71)

- 영국의 양당제는 지역산업 정책에도 각 당의 정책기조와 방향이 투영되어, 각 당의 집권 시기마다 다른 양태를 보임
 - 보수당은 시장주의 관점에 입각하여 작은 정부와 지역의 주도적 역할을 지향하는 반면, 노동당은 시장 실패 영역을 보완하기 위해 큰 정부와 공공 부문의 역할을 강조
 - 노동당은 런던광역시(GLC, Great London Council)과 9개 지역의 지역개발기구(RDAs)와 지역의회(RA) 지역청(GORs)을 통하여 광역단위 중심의 지역산업정책을 추진한 반면,
 - 보수당은 지방정부와 기업협회가 주도하는 '지역산업협의체'(LEPs,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총 39개로 구성된 기초(Local) 단위의 LEPs를 통하여 지역산업정책을 전개

〈그림 62〉 영국 LEP 지도



* 출처: 최석환(2018: 19)

- 양당의 지역산업정책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 할 수 있는 지역개발기구(RDAs)와 지역산업협의체(LEPs)는 그 운영방식에서 각자의 장단점이 있음
 - 지역개발기구(RDAs)는 법상 기구로 법에 따라 '지역전략계획'을 입안하고, 예산 역시 중앙으로부터 지원받는 반면, 지역산업협의체(LEPs)는 법적 지위가 보장되지 않는 임의기구이고 운영비를 자체 조달하는 방식
 - 지역개발기구(RDAs)는 지역산업정책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지만, 지역산업협의체(LEPs)는 중앙정부와 그 역할을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수행 (오용준 외, 2015: 2)

〈표 47〉 지역개발기구(RDA)와 지역산업협의체(LEP) 간의 차이

	RDA	LEP
관할 지역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9개 광역 단위에서 1개씩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컬 단위를 기초 규모와 포함된 지자체의 수가 다양 특정 지자체의 경우 중복 가입된 경우도 있음 현재 승인된 39개의 LEP가 잉글랜드 전역을 포괄하는지 명확하지 않음
법적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적 기구이고, 법적 계획인 지역전략계획을 입안 예산은 중앙 정부에서 통합된 단일 예산을 지원 받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의 기구이며, 운영비를 자체 조달해야 함 기존 정부기관으로 공공책무성을 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LEP가 법적 기구로 전환할 가능성은 낮아 보임
재원 조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정적 재원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방식으로 지역 정책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 정부로부터의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보장 받지 않고 스스로 운영 자금을 마련 초기 정착금은 소규모로 일부 지원되지만, 지역 성장 기금에 민간 기업이나 단체들과 경쟁하여 운영 자금을 확보해야 함. 이때 특별대우나 우선권은 없음(NAO, 2012)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역단위에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 투자유치, 산업 리더십(sector leadership), 기업지원, 혁신, 금융(VC 포함) 등은 중앙정부가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로컬단위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 리더십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역할은 제한된 것으로 보임 주거, 교통, 인프라, 고용, 인적자원개발, 저탄소 사회 등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A는 중앙부처의 지역관련 예산을 통합한 단일 예산(Single Pot)을 사용하여 예산편성과 조직운영의 자율성이 있었음 반면, 경영계획(Corporate Plan)을 3년마다 작성하고, 매년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하므로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있다는 단점이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수당 연정에서 로컬단위로 권한 이양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중심기구로 LEP를 설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RDA에 비해 역할이 축소되어 보수당 연정의 지역정책은 신노동당 정부에 비해 지역정책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됨

* 출처: 최석환(2018: 20)

- 즉, 39개 지역산업협의체(LEPs)는 주거, 교통, 인프라, 고용, 인적자원개발, 환경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부문을 수행하는 반면, 지역간 연계, 기업지원, 혁신, 금융 등 경제와 관련된 부문은 중앙 정부에서 수행
- 양당 공통으로 지역청(GORs)에 대한 숫자의 차이(보수당 10개, 노동당 9개)는 있으나 양당 모두 인정
- 결정적인 차이는 중앙의 권한을 지역으로 이양하는 대신, 지역의 LEP는 민간과 경쟁하면서 스스로 운영자금을 마련해야하는 책무도 같이 부여

〈그림 63〉 영국 지역산업정책의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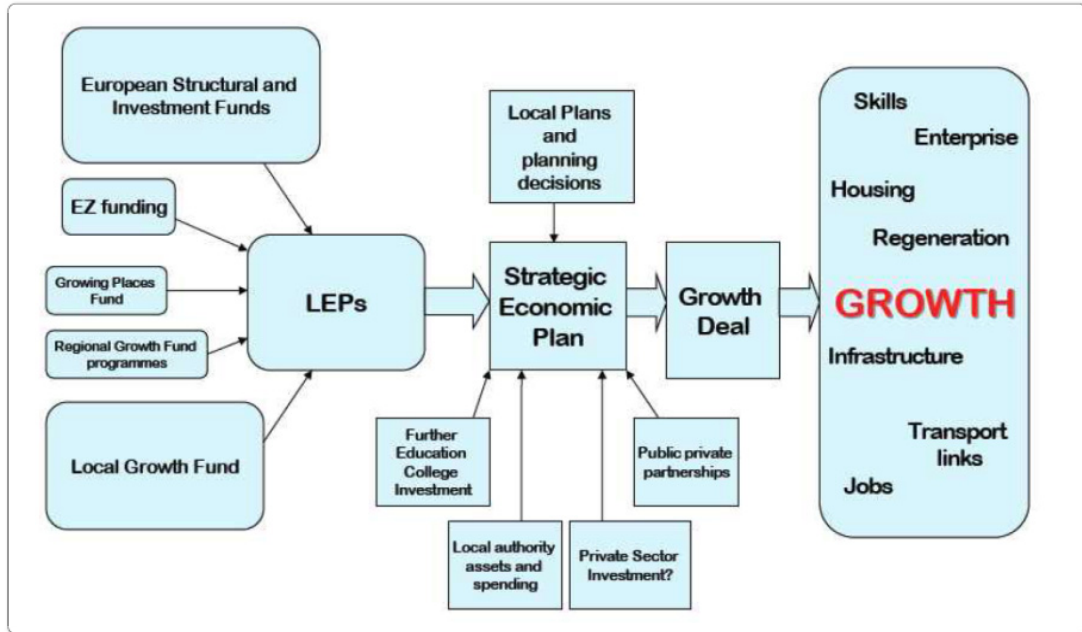


* 출처: 박종희(2018: 73)

4) 주요 내용 및 정책 수단

- 영국의 지역산업 정책의 주요 방향은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에 따라 재정적 요소와 비재정적 요소까지 지역에 이양하여 지역의 ‘주도성’을 인정하는 대신 그에 따른 지역의 ‘책임성’도 동시에 강조
- 지역 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재정적 수단인 ‘지역성장기금’(RGF, Regional Growth Fund)과 비재정적 기능인 ‘지역산업협의체’(LEPs)를 양대 축으로 활용
 - 재정적 수단으로 ‘지역성장기금’(RGF, Regional Growth Fund) 이외에 성장지역기금(Growing Places Fund), 지역성장포괄기금(Single Local Growth Fund), 유럽연합기금(EU Structure and Investment Fund) 등이 있음
 - 비재정적 수단으로는 ‘지역산업협의체’(LEPs) 중심으로 창업지구(Local Growth Deal), 도시권 협상(City Deal), 지역성장 협상(Local Growth Deal), 분권 협상(Devolution Deal), 지자체 연합기구(Combined Authority) 등을 활용
 - 그 결과물로서 기술, 기업, 주택, 세대, 인프라, 교통망, 일자리 등의 성장을 자체적으로 이끌어 내도록 지역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추진

〈그림 64〉 영국 지역산업정책의 체계도



* 출처: 박충희(2018: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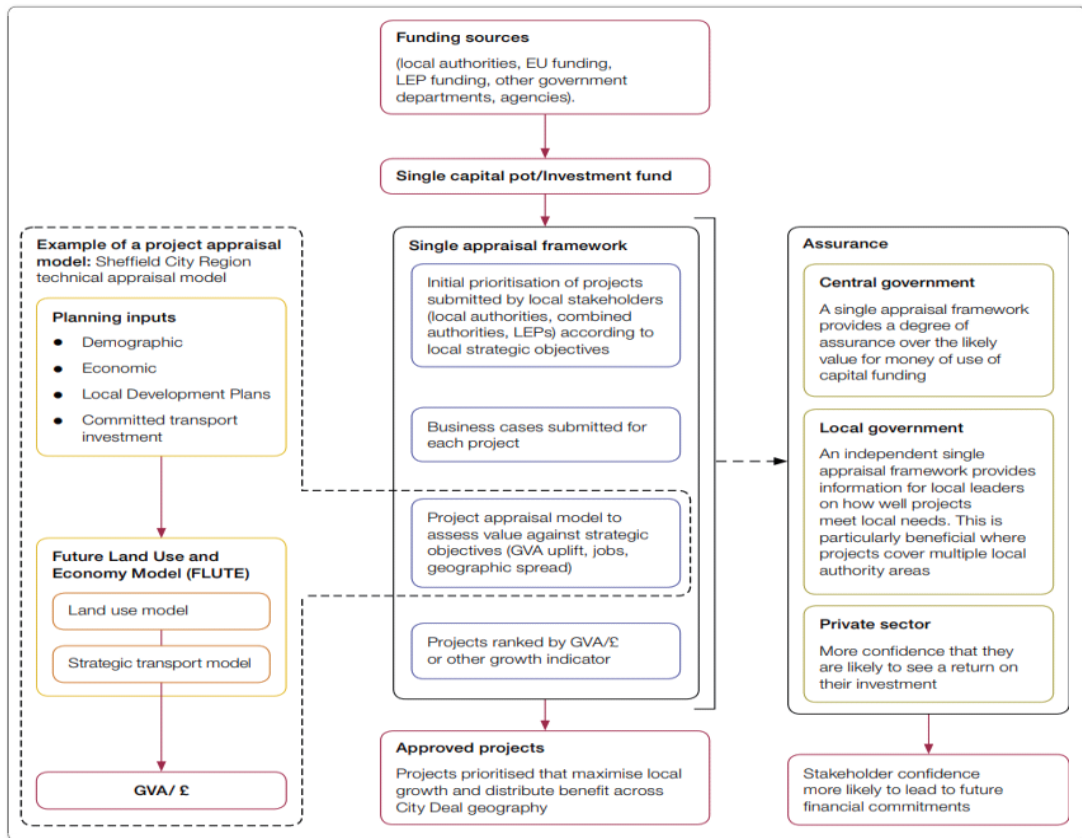
① 지역산업협의체(LEPs, Local Enterprise Partnerships)

- 지역산업협의체(LEPs)는 지역내 지역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중앙에 지역의 요구와 현안을 제시하여 중앙으로부터 자원을 얻어내는 해당 지역 발전에 관한 의결협의체
 - 지역산업협의체는 기업에 대한 지원, 지역내 규제 개선, 전략적 인프라 구축, 주거 환경 개선, 지역내 기업가와의 연계 협력, 민간 자금의 유입 등에 관한 일을 결정(영국 상공회의소(British Chambers of commerce)가 그 전신)
 - 지역산업협의체는 작게는 인구 50만명에서 최대는 780만명에 이르기까지 그 인적 규모는 다양하며, 행정상으로도 작게는 2~3개 지자체(District)에서 많게는 30여개의 지자체가 결합되어 있을 정도로 구성과 그 방식이 다양
 - LEPs는 공공회사는 아니지만, 지역 경제의 행정적 권역을 넘어 자율적 권역을 설정하여 성장과 재생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 중심의 파트너십으로,
 - 각 도시가 가지는 잠재역량을 동원 및 연계하고, 지역의 리더와 산업계 리더가 자체의 운영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발전과 성장을 촉진 및 주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 (영국 시티딜 사례 연구, 2018)

② 지역성장기금(RGF, Regional Growth Fund) :

- 지역성장기금(RGF) 운용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과 목적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와 ‘지속가능한 성과의 창출’
 - 지역성장기금은 지역에 대한 중앙정부 재정지출의 감소를 보충하기 위해, 각 지역의 민간부분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를 유도하고, 정부와 공공부문에 대한 과도한 의존성에서 탈피하여 지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정준호, 2013: 38)
- 지원 신청된 지역성장기금(RGF)은 12명의 자문위원회를 통해 평가하며, 그 평가 기준은 ‘실효성’과 ‘적법성’
 - 지역경제성장과 지역내 고용창출의 잠재성 여부, 지원을 통해 추가적인 경제성장 가능성 여부, 민간의 주도적 참여의 지속성 여부 등을 통해 ‘실효성’을 평가
 - 그 외 신청액이 재무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지원 근거의 타당성은 있는지 여부, EU의 국가지원 규정은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 그 ‘적법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

〈그림 65〉 평가 프레임



* 출처: 최석환(2018: 61)

- 지역성장기금(RGF)의 평가와 운영 상의 원칙 중 간과할 수 없는 특징이 '협력'과 '책임'
 -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체계 즉, 대기업, 중소기업, 사회 적기업, 공공부문 모두가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는지, 어느 정도 체계적이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결정
 - 지원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면, 실사를 거쳐서 지원이 착수되나,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은 지원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을 받게 되어, 지원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의무를 점검받아야 함

③ 도시권 협상(City Deal)

- 도시권 협상(City Deal)은 지역경제 성장을 위해 다양한 주체 간의 협상과 그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합성'과 '적절성'을 강조
 - 도시권 협상은 지역의 형편과 수요에 맞게 지역적 특수성을 적합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구성하여 중앙에 요청하는 것으로, 중앙과 지자체 간의 일종의 거래
 - 그 기본 원칙은 첫째, 중앙정부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것이며, 둘째 지역기업과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구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셋째 지역에서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자원과 권한을 지역에 이양하는 것(이원섭, 2017: 8)

〈표 48〉 1차 시기 도시권 협상의 주요 도시 사례

시티 딜	승인월	협상 주체	내용
Greater Birmingham	2012년 7월	Greater Birmingham과 Solihull 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에서 추진 중이던 Green deal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녹색산업 관련 기술 제공 및 일자리를 창출 • 주택 및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토지의 재개발 및 생명과학분야의 허브역할을 수행하는 중계 의학 연구소 설립
Bristol City Region	2012년 7월	West of England LEP와 그 산하의 4곳의 지방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Economic Development Fund 마련 • 이를 위해 기업투자촉진지구(Enterprise Zones)에서 발생하는 기업세금을 25년에 걸쳐 100% 지방정부 세수로 직접 편입 • 템플쿼터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지역 성장 허브센터를 설립, EZ에서 성장허브의 창출
Leeds City Region	2012년 7월	Leeds City Region LEP와 Leeds City 지방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년까지 연간 평균 2.6%까지 성장을 향상 • 2016년까지 60,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도시 지역의 실제 탄소 배출량 감축

시티 딜	승인월	협상 주체	내용
Liverpool City Region	2012년 7월	Liverpool City 지방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iverpool City Region LEP 지역 포함 • 공공 및 민간자금 단일 투자기금의 창설 • 리버풀시 개발공사(Mayrol Development Corporation) 설립 • 국제 비즈니스 페스티벌 개최 • 해양 풍력 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
Greater Manchester	2012년 7월	Greater Manchester Combined Author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에 대한 현지 투자 및 그레이터 맨체스터 투자 프레임워크 • 시건설 및 기술허브 • 저탄소 허브 및 주택투자기금으로 인한 총 부가가치의 증 가치로부터 추가세금수익의 일부를 “환수”하게 함으로써 시설기금(Infrastructure Fund) 조성
Newcastle City Region	2012년 7월	Newcastle City 지방정부와 North East 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캐슬과 게이츠헤드(Gateshead) 지역에 Accelerated Development Zone(ADZ)의 조성 • 해상 및 해양에 대한 민간 부문의 투자 확보 • Homes and Communities Agency(HCA)와의 공동 투자 계획 개발, 초고속 광대역 시설에 대한 투자
Nottingham City Region	2012년 7월	Nottingham City 지방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 캐피탈 기금, Y 세대 기금, 기술 기금 조성 • 운송, 디지털 연결 및 그린 딜을 통한 “21세기 인프라” 개발
Sheffield City Region	2012년 7월	Sheffield City 지방정부와 Sheffield City Region 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예상되는 기업 레이트(Business Rates)를 활용 하는 기금조성 프로그램 운영 • 선진제조센터와 원자력 연구센터를 기반으로 한 국가조 달센터 설립

* 출처: 최석환(2018: 43)

〈표 49〉 2차 시기 도시권 협상의 주요 도시 사례

시티 딜	승인월	협상 주체	내용
Black Country	2014년 2월	Black Country LEP 지역의 4개 지방 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800개의 신규 제조 일자리 확보, 고 부가가치 제조 시설에 대한 민간 부문 투자 1억 2천만 파운드 및 고 부가 가치 제조, 도제 제도 확보
Greater Brighton	2014년 3월	Brighton and Hove, Shoreham, Worthing, Newhaven, Lewes 및 South Downs 국립 공원 및 Mid Sussex의 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reater Brighton에 투자 1억 7000만 파운드 및 8,500개의 일자리를 창출 • 주력 제안은 창의적인 기술 분야의 허브 역할을 하는 Tech City South의 창설하는 데에 기반을 두고 있음
Coventry and Warwickshire	2013년 12월	Coventry와 Warwickshire 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50개의 선진 제조 및 엔지니어링 회사의 성장을 지원 • 1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 • 공공 부문에 2천 5백만 파운드, 민간 부문 투자에 6,600만 파운드를 확보

시티 딜	승인월	협상 주체	내용
Greater Cambridge	2014년 6월	Cambridge City 지방정부와 South Cambridgeshire 지방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투자 기금을 마련 • 45,000개의 신규 일자리와 400개의 신규 견습직 창출 • 공공 부문 10억 파운드와 민간 부문 투자 40억 파운드 창출
Greater Norwich	2013년 12월	Norwich City 지방정부, South Norfolk 지방정부, Broadland 지방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 파운드의 민간 투자 마련 • 300개의 신규사업 지원 • 19,000개의 일자리 창출
Hull and the Humber	2013년 12월	East Riding of Yorkshire 지방정부, Hull City 지방정부, North Lincolnshire 지방정부, North East Lincolnshire 지방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험버(Humber) 개발에 4억 6000만 파운드의 투자 마련 • 4,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
Ipswich	2013년 10월	Ipswich, Suffolk and New Anglia 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까지 신규 사업 400개 지원 • 2019년까지 5,000개의 신규 견습 과정과 3000개의 추가적인 높은 가치의 고용 창출
Leicester and Leicestershire	2014년 3월	Leicester와 Leicestershire 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청년 실업을 50% 감소 • 공공/민간부문 투자를 1억 3,000만 파운드 확보
oxford and oxfordshire	2014년 1월	oxfordshire 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500채의 주택을 개발 •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성장 허브(Growth Hub) 설립
Plymouth	2014년 1월	South West, Cornwall, and Isle of Scilly 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해양 및 선진 제조업 부문을 활성화 • 9,000개의 일자리 창출 • 공공 자금 3천 4백만 파운드와 민간 부문 투자 2억 6,200만 파운드 확보
Portsmouth and Southampton	2013년 11월	Solent 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3백만 파운드의 투자를 확보 • 17,000개의 일자리 창출
Preston, South Ribble and Lancashire	2013년 9월	Lancashire, Preston, South Ribble 지방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ancashire Enterprise Zone의 5,000명을 포함하여 20,000개의 일자리 창출 • 4개의 새로운 도로계획 지원 • 17,000개의 신규주택 건설
Southend	2014년 3월	Southend-on-Sea Borough 지방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지원 네트워크 창출 • 중앙정부(Gateway to Growth), 지방정부 및 민간출처를 통한 6백만 파운드의 자금지원
Stoke and Staffordshire	2014년 3월	Stoke-on-Trent and Staffordshire 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최초 저탄소열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113백만 파운드의 투자를 창출 • 최대 23,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

시티 딜	승인월	협상 주체	내용
Sunderland and the North East	2014년 6월	Sunderland City 지방정부와 South Tyneside 지방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부문을 중심으로 5,2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 선진 제조업에 2억9천5백만 파운드의 민간 부문 투자를 확보
Swindon and Wiltshire	2014년 7월	Swindon and Wiltshire 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윈던 Swindon과 윌트셔 Wiltshire의 새로운 대학 캠퍼스의 개발을 제안 지역에서 4급 이상의 교육을 받은 18,000명의 개인과 1,250개의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사업을 지원
Tees Valley	2014년 6월	Tees Valley Unlimited 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민간부문투자의 3,500만 파운드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함
Thames Valley Berkshire	2013년 10월	Thames Valley Berkshire L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00개의 새로운 직업 경험 기회 제공 300개의 견습과정 설치와 800개의 청소년 계약 임금 인센티브제를 (Youth Contact Wage Incentives) 운영 총 4,500명의 청년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

* 출처: 최석환(2018: 46-47)

- 도시권 협상은 다양한 공공서비스 및 지역개발 관련 집행권한을 지역 맞춤형 방식으로 해당지역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음
 - 우선 지방정부(또는 지방정부 연합체)는 해당지역의 발전계획서(계획+실행안)를 중앙정부에 제출하면
 - 중앙정부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제안서를 확정하고, 지방정부는 제안서에 제시한 사업과 관련된 분야(주택, 교통, 교육, 연구 등)에 대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원을 이양받을 내용을 확정
 - 대신 중앙정부는 해당 사업의 성과관리를 위해 지방정부와 사업수행 확약(목표 및 성과 등) 계약을 체결(영국 시티딜 사례 연구, 2018)
- 실제로 2012년에 실시된 1차 도시권 협상과 2013~14년에 실시된 2차 도시권 협상의 내용을 보면, 1차와 2차 사이에는 분명한 차별성이 존재
 - 1차 도시권 협상 시기의 주요 도시들의 협상 내용을 보면, 물론 일부 일자리 창출 등이 보이기는 하지만, 주로 공공연구소나 센터의 설립과 투자기금 조달을 위한 협상 내용이 중심을 이루나,
 - 2차 도시권 협상 시기에는 대부분 협상 내용이 일자리 창출이 핵심적인 내용이며, 그 다음으로 민간투자 유치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보여 줌

④ 지역성장협상(Local Growth Deal)

- 지역성장협상(LGD)은 지역산업협업체(LEPs)가 지역발전을 위해 어떻게 사업을 집행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경제계획'(Strategy Economic Plan)을 수립하여, 중앙정부와 협상을 통해 지원 규모와 지원 사업을 결정하는 제도
 - 지역성장협상을 위한 전략적 경제계획(SEP)은 크게 성장계획(Growth plan), 집행계획(Implementation plan), 전달계획(Delivery plan) 등 3가지 요소로 구성
 - 성장계획(GP)은 비전, 목표, 성장잠재력, 성장 장애요소, 극복방안 등을, 집행계획(IP)에는 경제성(B/C) 분석, 자금조달 계획, 구성체계 등을, 전달계획(DP)는 전달관리 체계, 향후 일정 및 세부 실천계획 등을 포함
- 이는 지역사업 비전, 목표, 현황분석, 추진전략, 예산배분방향 등에 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중앙의 지역경제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우리의 '지역산업진흥계획'과 유사
 - 지역이 자율적으로 선정한 지역의 주력(특화)산업에 대한 현황분석, 성장목표 설정, 추진전략 수립, 연계방안 제시, 성과관리 방안 제시 등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설정하여 제시하는 것은 유사하나,
 - 중앙에서 기본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방식, 지역 주력산업의 범위와 설정 방법 등을 제한하는 방식, 중앙에서 제시한 사업에만 국한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 사업비 배분과 지방비 매칭 등 예산운영 상의 고착성 등에서는 차별성이 존재

3) 시사점

- 법과 제도는 그 사회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진화하는 것이지, 갑자기 이식되어 적용되지는 않는 유기체임을 인지할 필요
 - 다른 나라의 법, 제도, 시스템이 아무리 잘 운영된다고 해도, 단순한 수입, 모방, 추가로 해당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고, 해당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발전하려는 인식, 방식, 문화의 산물
- 영국의 지역발전 분권협상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이슈와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이원섭, 2017: 7)
 - 분권협상의 구체적인 목표가 분명해야 하고, 목표달성 정도 및 진행 수준에 대한 성과평가와 모니터링이 필요
 - 연합기구, LEP 등 지역 참여기관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역량과 열정과 전문성을 보유할 필요
 - 중앙정부 권한 및 책임의 지방 이양에 따라, 중앙부처 내의 지자체 관련 부서의 조직, 인력, 역할, 기능에

대한 축소 또는 재조정이 필요

- 중앙권한의 지역으로 이전이나 지역분권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행정조직이나 기구를 구성한다면 또다른 공공재와 공공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개연성이 있음
 - 기존의 조직을 조정 및 개편하여 활용하되, 추가비용을 별도로 만드는 방식은 또 다른 규모의 낭비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양할 필요
 - 지역으로 중앙권력을 이양하는 반대급부로 영국처럼 지역에서 운영예산을 자체적으로 만드는 방식을 지향할 필요
 - 그러나 지역에서 자체의 운영비 확보를 위해 민간과의 이해충돌이나 갈등유발을 배제할 필요 존재
- 협업이 가능한 거버넌스 구성이 지역문제 해결의 최우선의 관건
 - 우리는 이미 지역간 연계와 협력을 유도하기 위한 광역권 사업 등을 여러 차례 추진해 본 결과, 협업에 대한 역할구분과 기능에 따른 책임 분담을 더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음
 - 기존에 우리의 지역간 협업은 '나눠먹기' 방식에 불과한 경우가 많으며, 각자 자기의 분담된 업무만 추진하고 추후에 단순히 합치는 '따로 합치기' 방식으로 운영된 사례가 많음
 - 지역의 이해관계자들이 지역사업에서 각자의 이익을 얻기 위해 모였다가, 이익 취득 후 헤어지는 '이익 공유 집단제' 방식에서 탈피할 필요
 -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민간단체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거버넌스(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실제로 협업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리더십과 우수사례를 만들 필요
- 지역의 사업과 자원 운영의 재량권을 지역에 이양하는 대신, 지역의 책무성을 강화할 필요
 - 중앙은 지역에서 운영할 수 있는 자금만 심의 검토해서 지급해 주고, 나머지는 지역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중앙은 지역에 평가 등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에서는 탈피할 필요
 - 지역은 더 철저하고 차별화된 계획수립을 통해 중앙과 지역민으로부터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으며,
 - 지역은 중앙과의 협의를 통해 성과목표와 성과평가를 반드시 검증 받을 필요가 있으며, 성과평가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수용할 수 있는 태도와 인식이 필요
 - 중앙도 투명한 성과평가와 기준, 일관성 있는 평가 지표와 평가방법,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성과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확보할 필요
 - 지역산업정책의 목표와 성과에는 반드시 일자리 창출과 기업 성장, 민간의 투자참여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목표와 성과는 일회성이나 단기가 아니라 지속성 확보 여부를 반드시 포함할 필요

5. 분석 및 시사점

	EU (RIS3 스마트전문화전략)	프랑스 (경쟁거점정책)	독일 (지역클러스터정책)	영국 (지역산업정책)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개인발명가, 연구원, 고등 교육 기관 등 지역의 이행관계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 역량을 기반으로 해당 지역 R&D 및 혁신 영역에서 전문화할 수 있는 분야를 스스로 선정하는 기업 가정신 발견과정(entrepreneurial process of discovery)으로 전문화 분야를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 경쟁력, 시장성 등의 기준에 따라 글로벌 경쟁거점, 글로벌 경쟁거점 후보, 국가적 경쟁거점 3가지로 구분하여 평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로 신산업과 첨단 분야 산업육성을 위한 클러스터 간 경쟁 공모 방식을 추진하면서, 구(舊)동독지역의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을 위한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산업 정책의 주요 방향은 '지역발전 투자협약제도'에 따라 재정적 요소와 비 재정적 요소까지 지역에 이양하여 지역의 주도성을 인정하는 대신 그에 따른 지역의 책임성 강조
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및 지역의 강점, 경쟁우위, 잠재력에 기반하여 이해 당사자들인 참여 주체들이 선정한 우선순위에 투자하고,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지식기반 경제발전을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분소(CGET 파견관이 참여)에서 지역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업 내용을 중앙정부로 올리면(1단계), 중앙정부에서 국가적 우선순위에 의거하여 결정(2단계), 이후 중앙정부 심사 위원회에서 전체 순위를 결정(3단계), 정책적 고려 후 최종 결정(4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0년대 이후 지역 내 혁신성장 경험 공유 및 성공사례 양산 노력. 협력과 파트너십을 통한 지역산업 육성을 전개. 2012년부터 기 구축된 클러스터를 플랫폼화하여 'go-cluster' 프로그램을 추진 범부처 사업으로 '하이테크 전략'(High-tech-Strategie) 추진을 위해, 지역별 '첨단 클러스터 경쟁'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마다 차별화된 전략산업 육성을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시권 협상(City Deal)은 다양한 주체 간의 협상과 그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으로, 중앙정부 권한의 과감한 지역이양, 지역기업과 지역주민을 위한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 및 이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자원과 권한의 지역 이양을 포함 지역 주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재정적 수단인 지역성장기금(Regional Growth Fund)과 지방정부와 기업협의회가 주도하는 '지역산업협의체' (LEPs)를 양대 축으로 활용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주도 개발 전략 마련을 지원하고 공동자금 조달 비율을 증가시켜 지역·도시가 EU프로젝트의 주도권을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도록 개선.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정책 실행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과 평가 및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권한과 책임 강화를 동시에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랑스의 계약협약제는 먼저 레지옹 정부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CGET와 서로 논의하면서 중앙정부의 자문과정을 거쳐 1년간의 협의 끝에 세부 프로그램과 모든 과제 내용에 대하여 협약하며, 1-2년마다 중앙의 컨설팅 및 조정을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독일의 지역산업정책은 기본적으로 주정부의 자율성에 맡겨지나,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주요 전략산업은 연방정부가 지역 간의 경쟁 방식을 통해 선정·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산업협의체는 지역 내 지역정책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중앙에 지역의 요구와 현안을 제시하여 중앙으로부터 자원을 얻어내는 해당 지역 발전에 관한 의결협의체로 운영

2022

OPL 워킹그룹 ②

**지역혁신을 위한 중앙-지역
협력방안 결과보고서**

Open
Policy
Lab

제3장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의제 및 주요 전략

제1절 정책의제 및 전략 도출 과정

제2절 지역혁신을 위한 중앙-지역 협력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의제와 전략

제3절 지역혁신을 위한 도시형 테스트베드 전략



3

제1절 정책의제 및 전략 도출 과정

Open
Policy
Lab

제1절

정책의제 및 전략 도출 과정

■ 제1차 전문가 세미나

- 융합신산업의 창출을 통한 지역혁신을 위한 수단으로서 실증지원 사업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 (2022년 7월 5일)
 - 융합신산업 창출을 위한 실증지원사업의 개념 및 국내외 실증지원사업의 현황과 실증선도전략의 방향
 - 도시 기반의 실증 특구의 필요성 등 논의

〈세미나 참석자 주요 발언〉

- ☞ **(실증의 개념)** 실증연구는 R&D 성과로 확보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실제 적용되는 현장의 환경에서 설정된 또는 기대된 기술의 기능 구현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완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R&D, 데모 및 적용의 각 단계에 존재함.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증은 데모 과정에서의 실증만 얘기하며 이 역시 R&D에 비하면 너무 작은 비율을 차지함
- ☞ **(실증연구 한계)** R&D 성공을 또 실증하는 것은 중복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으나, 실험실 결과의 현장 적용성을 검토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음. 하지만 중복 실증에 대한 제도권의 수용이 어려워 관련 예산이 부족하고 이렇듯 기술이 검증되지 않으니 기업의 수용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함
- ☞ **(기술 실증의 필요성)** 대덕의 기술 사업화에는 실증이 필요함. 실증은 기술검증 및 기술사업화, 사회적 가치창출을 위함이며 특히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함. 허나 정부사업은 R&D 지원과 창업지원등에 집중하여 연구실과 시장을 연결하는 실증 과정은 자원 투입의 사각지대이며, 기업 역시 성공 불확실성이 높아 자원투입 결정이 어려움
- ☞ **(법제도 이슈)**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에 비해서 사고 발생이 거의 없음. 제일 잘 해서가 아니라 사고에 대한 징벌적 대응으로 실증을 안 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나는 것. 실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벌을 받는 구조의 문제



■ 제2차 전문가 세미나

- 지역주도 혁신체계로의 전환, 현황과 과제(2022년 8월 23일)
 - 지역 내외의 미래 지역주도 혁신성장 강화를 위한 지역주도 혁신체계 관련분야 전문가 세미나를 통해 지역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현황 파악
 - 지역주도 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과학기술 및 산업정책 방향 정립
 - 융합신산업 창출을 위한 중앙-지역 협력체계 및 역할 방안



■ 지역혁신 자문회의

- KIPA-지방행정연구원 지역혁신체계 자문회의 : 지역혁신 수단으로서의 포괄보조금 및 지역발전투자협약(2022년 8월 24일)
 - 중앙-지방 간, 제도-행태 간의 간극을 확인하는 현황 진단으로서 포괄보조금 도입의 의도와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실태, 지역투자협약의 실효성과 현실적인 운영 방안 등을 논의
- 규제자유특구 운영 개선 방안 제언 자문회의(2022년 8월 30일)
 - 규제자유특구 운영 현황 및 지역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논의

〈참석자 주요 발언〉

- ☞ **(중앙-지방 간, 제도-행태 간 괴리에 대한 인식)** 지방 간 격차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Bottom-up 기반의 지방 자율 기획을 추진한다면 지방의 적자생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
- ☞ **(포괄보조금의 한계)** 프랑스의 모델을 차용하였으나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게 대체적인 의견. 포괄보조금의 의도는 지역의 실정에 맞게 쓰라는 데 있었으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이 현실
- ☞ **(지역투자협약의 실효성)** 지역발전협약은 국토부가 하고 있지만, 기재부가 예산을 얼마나 편성해주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 현장에서는 국토부 위주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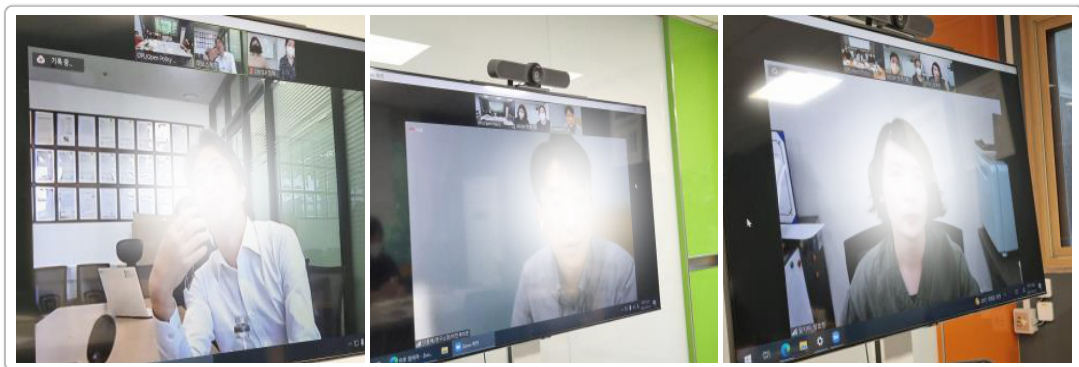


■ 기업 인터뷰

- 대전 지역 규제자유특구(바이오특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바이오니아, (주)수젠텍, (주)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 (주)레보스케치 등 기업의 특구 사업 경험 및 애로사항 파악
- 로봇분야 기업들(로보티즈, 유진로봇, 클로봇, 트위니 등)을 대상으로 R&D 이후 사업화를 위한 실증 단계에서의 애로사항 및 정책인식 등 확인

■ 유관기관 인터뷰

- 대전시 공무원 인터뷰: 대전 지역 기업 실증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및 대전 테크노파크의 사업 관련 담당자들 인터뷰를 통해 정책 운영 현황 및 향후 과제 파악
- 대학·연구기관·지역기업 등 지역혁신주체의 실증 지원 관련 정책 및 방향 대한 대전세종연구원 전문가 인터뷰 진행



■ 워킹그룹1(지역혁신체계 구축) 1차 워크숍

-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 1차 워크숍(2022년 10월 19일, 대전DCC)

- 제1차 워킹그룹 주요 논의사항

- ① 지역주도 혁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 ② 지역주도 혁신의 현황은 어떠한가?
- ③ 지역주도 혁신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 ④ 지역주도 혁신의 실질적 실행을 위한 추진동력과 레버리지 전략
- ⑤ 중앙-지역 협력 거버넌스 운영 전략 및 거버넌스의 실효적 기능을 위한 수단 제언



■ 워킹그룹1(지역혁신체계 구축) 2차 워크숍

- 지역혁신체계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 2차 회의 (2022년 11월 8일, 14:00-17:00,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
 - 1차 워크숍을 바탕으로 지역혁신의 정의 및 범위, 실현가능한 전략 및 과제를 의제화(안)하고, 연구진이 제시한 거버넌스 모델(안)을 구체적으로 비교·검토하는 과정을 진행

〈워킹그룹 주요 논의 결과〉

☞ 혁신 기획

- ① 지역 차원
 - 지역혁신의 범위/유형에 대한 중앙-지역 합의
 - 지역특성 기반 투자 및 타깃 산업 분야 혁신 전략 수립
 - 혁신 기획 및 중앙정부와의 교섭 역량 제고 (예: City Deal)
 - 지역주도성 강화, 자생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 혁신주체 및 이해관계자의 혁신 기획 과정 참여·협업 구조 마련
- ② 중앙정부 차원
 - 지역혁신의 범위/유형에 대한 중앙-지역 합의
 - 국가차원에서 선택과 집중의 지역혁신 전략 수립을 위한 역할 정립
 - 지역 경쟁력·자생력 기반 지역 간 상생적 경쟁 촉진 구조 마련

☞ 혁신 실행

- ① 지역 차원
 - 지역 혁신 행정 역량 강화
 - 과학기술진흥업무 실행 역량 강화
- ② 중앙정부 차원
 - 국가차원의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중복·과잉투자 장치 마련
 - 지역혁신 투자성 재정지원방안 마련, 재정혁신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 혁신성과 지역자산화 방안 마련

☞ 혁신 평가

- ① 성과관리거버넌스 체계 마련
 - 지역역량 기반 선택과 집중의 지역혁신을 위한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성과관리 주체 등 거버넌스 정립 (중앙 vs 지역), 지역혁신 분석·평가 통계·데이터베이스 구축, 성과모니터링 체계 구축
 - 지역혁신정책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컨설팅 체계 마련
- ② 지역혁신 선도 모델 발굴 및 확산

☞ 혁신 거버넌스

- ① 범부처 중앙-지역 협력 거버넌스의 실효적 운영 방안
- ② 지역 특성 기반 지역혁신사업 추진체계 모델 논의



■ 워킹그룹1(지역혁신체계 구축) 논의 종합

구분	현황	전략
혁신 기획 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 주도(부처중심)의 단발성 지역사업이 지속되면서 타 사업과의 연계성 미흡 • 중앙정부의 기획-균특회계 집행 방식의 사업으로 지역 내 혁신자원의 축적 어려움 • 중앙정부 공모사업 형태의 사업 운영으로 불필요한 지역 간의 경쟁 구도, 정치권의 입김에 의한 결정 등 자원 배분에서의 문제 발생 • 중앙의 과도한 개입(지역 자체적 장기계획 수립 한계)으로 지역의 성과가 축적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칸막이 구조로 사업예산 집행(통합적 지역 정책 부재, 중복투자로 인한 효율성 저하) - 부처별로 설치한 기관 및 출연연 등 지역 내 하위 기관간의 갈등 • 정권교체 등 정치적 흐름에 의해 계획이 변경되면서 국가 차원의 장기적 포트폴리오 구상 미흡 • 실행(집행)-평가를 고려한 기획단계에서의 지표 구축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역 이분법적 접근 지양, 중앙-지역차원의 장기적 접근과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정책의 방향성 제시/중복사업 조정/지역혁신정책 수립 시 컨설팅 지원 • 중앙정부 차원의 미래주도산업과 지역전략사업을 구분하여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전략산업/ 국가차원지원산업/ 지역산업육성의 구분 - 국가전략산업(국가R&D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기획/집행을 위한 산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기획/집행 - 지역의 특색을 접목한 분야의 사업은 지역에서 집행하며, 기획 과정에 중앙 참여 • 합의된 계획의 지속적/장기적 유지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스스로의 장기계획·기획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조성 차원의 지원

구분	현황	전략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의 시스템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20년간 지역혁신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중심의 구도 속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형태로 유지 • 지자체 내부 체계 기획력/전문성의 한계 •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유치, 타겟산업 및 세부전략의 부재 • 신산업분야 자원의 중복, 과잉투자 문제 • 선택과 집중을 기반으로 한 혁신전략 부재 • 중앙에 대한 높은 재정 의존도 • 지역 과학 기술 혁신 산업 정책이 연속성 부재 • 지자체에서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역혁신을 위한 투자 • 실행(집행)-평가를 고려한 기획단계에서의 지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혁신에 충실한 지역사업을 자체적으로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스스로 지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을 탐색하여 지역간 상생 구도 모색 - 지역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지역산업분야의 혁신기획 - 수요 기반(지역 중소기업 등 지역 생산 네트워크 중심)의 정책 기획, 집행 및 평가를 고려한 기획 • 지역주체가 참여하여 자원배분을 공동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에 기반이 있는 주력산업은 지자체 주도 - 지자체 혁신요소(인적자원)의 집적/활용 • 수요발굴 및 기획의 창구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주체 간 엑셀러레이터(퍼실리테이터)로서의 지역혁신기관의 역할 - 혁신기관의 기획/집행 • 기획·역량이 담보되는 초광역 지자체 레벨에서의 접근 • 지자체의 지역혁신에 대한 관심(조직 위상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국/실 단위 조직으로의 위상, 지방의회 내 상임위와 같은 조직 마련/체계수립 필요 • 지역 혁신정책의 연속성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와 지역이 자율성과 권한을 가지고 지역에 맞는 경제성장 프로젝트와 전략을 수립 하여 정부와 거래함으로써, 지역 맞춤형 도시성장 지원 (예: 영국의 City Deal)
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한의 유지 • 재정분권의 현실적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기획 과정에서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획-실행-평가의 선순환 구축을 지원 • 중앙정부차원에서의 지역 혁신 독려 • 과잉·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한정된 분야 포괄보조금제 도입 검토
혁신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실행을 위한 핵심요소로서 인재 유입의 현실적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기업들의 인력충원 애로 -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혁신기관들이 엔진처럼 작동하려면 지역의 인재양성이 중요 • 지자체 공무원 역량/전문성의 문제 • 실행의 지속성/내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인재 양성/지원 방안 모색 • 지방의회를 활용한 지역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지방의회 차원의 관심 유도 • 담당 공무원 및 기관 담당자의 역량 내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공무원의 혁신기획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체계 • 지자체의 세입원을 확보하는 재정 관련 법·제도적 변화

구분	현황	전략
혁신 평가	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실행-평가 선순환에 기반한 평가시스템 구축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 중복사업 조정, 지역 혁신정책 수립 시 컨설팅을 수행하는 중앙정부의 역할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를 위한 정보(데이터) 부재 •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진단-처방을 위한 데이터 확보 중요성 위해서 데이터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단계에서부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정성/정량지표 구축 • 자체적인 기획역량 기능, 소통과 합의를 통해 분석 평가 시스템체계 구축 • 데이터 축적을 통한 데이터 기반 평가, 평가 결과를 기획에 반영하는 환류체계 구축
혁신 거버넌스	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인 협력 부재 • 혁신의 형식적인 여건(법, 제도)보다는 실질적인 여건(예산)이 중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역 협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방안 마련/추진 • 중앙과의 협의(파견)에 의한 기획단계에서부터의 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 특수법인을 통한 지역이해관계자 플랫폼 형성, 파견된 중앙공무원과 수요발굴 및 사업을 협의하고 중앙에 기획안을 제시 (예: 영국 RDA)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협력 거버넌스 체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혁신 기관 간 경쟁구조 - 지역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합의 시스템 작동 부재 • 지역 내 다양한 혁신주체의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이해관계자간 소통과 합의를 통해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혁신전략 도출 • 리더십에 따른 정책의 부침 • 지역기관간 협력문화 조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다층적 차원의 거버넌스 활용(지역의회, 지자체, 기업, 학교, 연구원, 시민 등) • 지역의 자생적 지역혁신 생태계 시스템 구축

■ 의제 우선순위 도출을 위한 워킹그룹 참여 전문가 서면조사

- 전문가 세미나와 유관기관 및 기업을 대상 인터뷰, 워킹그룹 세미나를 통해 지역혁신의 방향성과 관련하여 의제로 논의된 현황 분석과 향후 과제를 실효성 있는 정책의제로 도출하기 위한 워킹그룹 참여 전문가 서면조사 진행
 - 지역혁신사업이 정치적 논리에 의하여 지역사업이 결정되는 등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어렵다는 점과 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따른 장기적 투자전략 부재 등 정치적 요인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힘
 - 중앙부처 단위에서는 부처간 칸막이 구조로 통합적이고 연계된 사업 추진이 어려우며, 부처 중심 top-down 방식의 단발성 사업집행으로 효율성이 떨어짐. 또한 이러한 경쟁공모방식의 획일화된 사업 추진은 불필요한 지역간 경쟁구도를 유발하고 있음
 - 부처별 사업추진으로 지역 산하기관 및 출연연의 역할과 기능이 중복되고, 지자체 내 유관기관간 상호 연결과 협력이 미흡함

- 기획단계에서부터 집행과 평가를 고려한 성과지표가 구축되어야 하나 기획-집행-평가의 선순환 구조 속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표 50〉 지역혁신사업 추진에서의 문제점(워킹그룹 참여 전문가 설문 결과)

구분		평균값 (7점척도)
지역혁신사업의 문제점	정치적 논리에 의한 지역사업 결정 등 자원 배분의 문제	6.46
	부처별 칸막이 구조로 사업의 통합·연계성 부재, 효율성 저하	6.08
	자치단체장의 임기에 따른 장기적 투자전략 부재	6.00
	중앙정부의 기획과 보조금 집행 방식으로 지역별 특성에 맞는 혁신자원 축적의 어려움	5.85
	획일화된 사업의 경쟁 공모 방식에 따른 불필요한 지역 간의 경쟁 구도 유발	5.69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균형발전 중심의 사업 추진	5.69
	중앙정부 주도(부처중심 top-down)의 단발성 지역사업 집행	5.54
	부처별 지역 산하기관 및 출연연의 역할·기능의 중복과 협력 부재	5.23
	지역 내 지자체 및 유관기관간 상호연결과 협력 미흡	5.12
	집행-평가를 고려한 기획단계에서부터의 성과지표 구축 미흡	4.62

- 지역주도성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지역주도성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로는 지자체의 기획 역량 및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역 내 혁신인력 및 혁신기관의 역할을 강화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지역의 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과 자체적인 예산 확보 등에 대한 노력과 함께 중앙정부의 재원과 권한의 지역 이양이 논의되는 등 역할 조정이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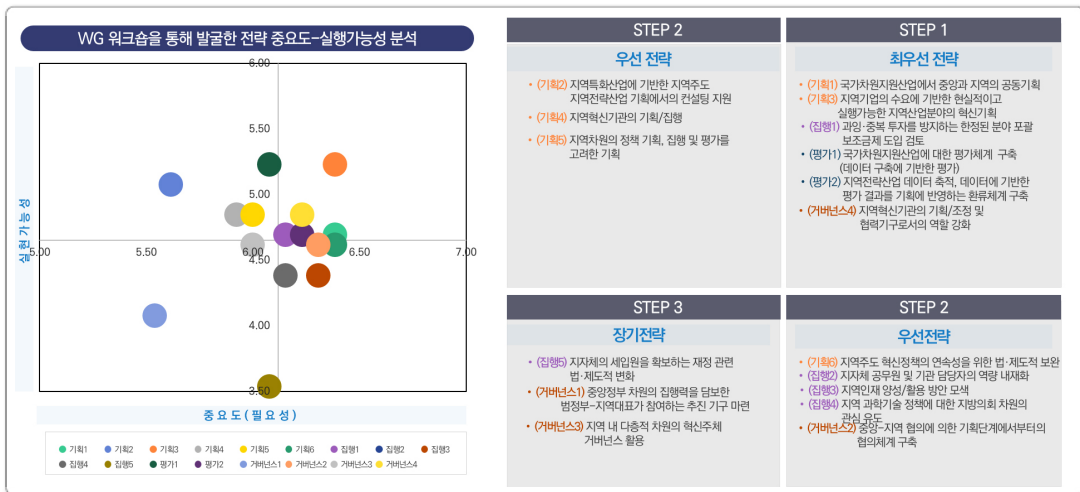
〈표 51〉 지역주도성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워킹그룹 참여 전문가 설문 결과)

구분		평균값 (7점척도)
지역주도성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	지자체의 기획역량 및 공무원의 전문성	6.15
	지역 내 혁신인력 확보	6.00
	지역혁신주체 간 엑셀러레이터(퍼실리테이터)로서의 지역혁신기관	5.85
	산학연네트워크를 포함한 협력생태계 구축	5.85
	자체예산의 확보	5.69

구분	평균값 (7점척도)
중앙정부 재원과 권한의 지역 이양	5.46
중앙정부의 역할조정(국가정책 방향성 제시, 중복사업 조정, 지역혁신정책 수립 시 컨설팅 수행)	5.46
지역산업 관련 데이터 축적 및 이에 기반한 평가체계 구축, 평가 결과를 기획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	5.46
지역 내 혁신주체간 소통과 합의 체계	5.38
지역의 연구개발 기능 확충	5.23

- 워킹그룹 워크숍을 통해 발굴한 전략 우선순위 도출

〈그림 66〉 워킹그룹 워크숍을 통해 발굴한 전략 우선순위 도출



- 국가차원지원산업에서 중앙과 지역의 공동기획, 지역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지역산업분야이 혁신기획, 평가체계 및 지역혁신기관 역할 강화 등이 최우선전략으로 도출
- 이하에서는 전문가 세미나 및 워킹그룹 워크숍 결과, 전문가 서면자문 결과를 최종적으로 연구진에서 종합·분석하여 최우선 전략 위주로 중앙-지역 협력 거버넌스 정책의제와 운영전략을 도출하여 제시함

3

제2절 지역혁신을 위한 중앙-지역
협력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의제와 전략

제2절

지역혁신을 위한 중앙-지역 협력 거버넌스 운영을 위한 의제와 전략

■ [의제 1] (개념) 중앙-지역 협력에 의한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혁신 개념 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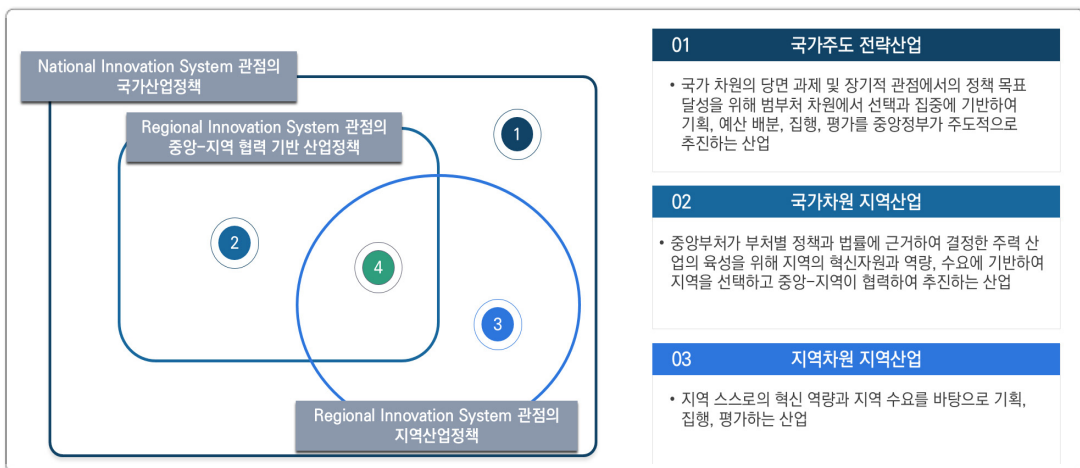
● 필요성

- 산업정책의 영역을 중심으로 중앙-지역 협력에 의한 지역혁신의 범위와 개념을 도출,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의제와 전략 도출의 방향성과 목표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워킹그룹 워크숍 및 사후 서면조사를 통해 중앙-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에서 중앙-지역 협력에 의한 지역혁신 개념, 그에 따른 중앙-지역의 역할과 전략에 대하여 합의함
- 지역의 산업정책은 크게 NIS(National Innovation System) 관점의 국가산업정책,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 관점의 중앙-지역 협력기반 산업정책 및 지역산업정책으로 볼 수 있음
- 이러한 정책 영역 안에서 산업을 구분하여 국가주도 전략산업, 국가차원 지역산업, 지역차원 지역산업으로 볼 때,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산업정책의 영역은 RIS 관점의 국가차원 지역산업과 지역차원 지역산업의 교집합인 일부 영역을 포함할 수 있을 것임

● 주요 개념 도출

- 국가주도 전략산업, 국가차원 지역산업, 지역차원 지역산업의 개념을 아래 그림과 같이 도출

〈그림 67〉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산업정책의 영역



제3장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의제 및 주요 전략

〈전문가 주요 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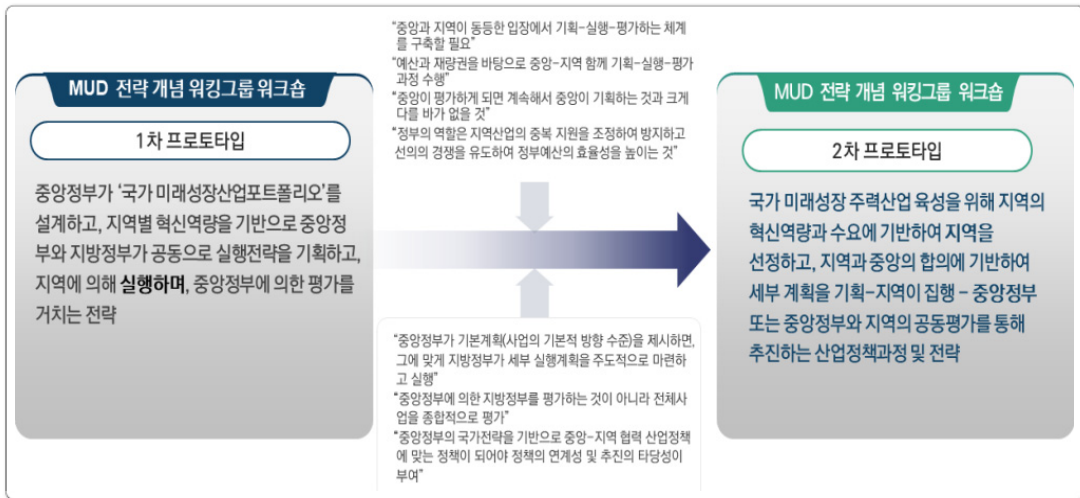
- ☞ **(지역혁신의 의미)** ‘지역혁신에 대한 일반적 정의보다는, 지자체의 환경에 따라 모델이 달라질 수 있음
- ☞ **(‘지역주도혁신’ 용어 사용의 관점)** ‘지역주도혁신’이라는 용어가 중앙정부 관점의 용어이며, 그동안 중앙정부가 지역에 혁신을 요구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지만, 이제는 지자체에서 스스로 하도록 촉진하는 차원에서 사용된 용어로 보임
- ☞ **(지역주도의 개념과 의미, 범위에 대한 정의 필요)** 중앙정부의 정책적 방향과 부합하면서 적당히 지역의 자율성 기반(투자 분야에 대한 선택, 타깃 산업에 대한 선택 등)으로 하는 지역혁신이 필요함. 최근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로 정책, 계획, 사업, 과제 단위까지도 지역주도로 할 수 있도록 체계를 변화하자는 주장들이 있으나, 과연 과학기술·산업·기업 정책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과를 낼 수가 있을지 고민해야 함. 그런 측면에서 지역주도의 개념과 의미·범위에 대해 정의가 필요함
- ☞ **(지역주도혁신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중요요소는 지역주도혁신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함. 지역의 기획 역량 및 기능 강화는 후속적으로 따라오는 논의사항이라고 생각함. 지역주도혁신의 현황은 이미 자료들이 많이 있어 큰 논의사항은 아니라고 보임. 지역주도혁신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근본 이유와 추진 동력은 앞서 구술한 바와 같이 개념이 불명확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짐
- ☞ **(혁신의 효율적인 측면 검토 필요)** 지역주도 혁신이 과연 중앙주도 혁신보다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건지 논의가 필요
- ☞ **(지역 경쟁력 탐색을 통한 지역간 상생 구도 구축 필요)**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구도 보다는 지역 스스로 지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을 탐색하여 지역간 상생 구도를 찾는 것이 바람직함
- ☞ **(지역의 자생적 시스템 구축 필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도 노력이 필요함. 특히 중앙정부가 지역에 권한(예산 관련)을 위임할 때 지역이 실행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역 자생적인 생태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 **(지역주도 혁신체계를 위한 방안)** 지역주도 혁신체계 구축을 위해서 기업이 느끼기에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 방식의 지역특화 산업에 대한 재정적, 민간 주도의 혁신 거버넌스 및 체계의 구축 및 혁신주체간 액셀러레이터(혹은 퍼실리테이터) 역할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재정적인 지원들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임

■ [의제 2] (거버넌스 운영 전략) 지역혁신을 위한 Middle Up-Down(MUD) 전략 개념과 범위의 정립

- (필요성) 국가차원지역산업과 지역차원지역산업의 중간 영역(④영역)에서 추진 가능한 지역혁신의 방안을 제안하고자 워킹그룹 워크숍에서는 Middle Up-Down(MUD) 전략의 개념을 구체화함
 - 1차 프로토타입을 제시하고 워킹그룹 참여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반영한 2차 프로토타입으로 수정
- “국가 미래성장 주력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의 혁신역량과 수요에 기반하여 지역을 선정하고, 지역과

중앙의 합의에 기반하여 세부 계획을 기획하며, 지역의 집행을 중앙정부 또는 중앙정부와 지역의 공동 평가를 통해 추진하는 산업정책과정 및 전략”으로 개념화

〈그림 68〉 지역혁신을 위한 Middle Up-Down 전략 개념 도출



- Middle Up-Down 전략의 범위
 - Middle Up-Down의 범위는 아래 〈그림 68〉과 같이 국가주도주력산업-국가차원지역산업-지역차원 지역산업의 연속 범주 상에서 국가차원의 지역산업 영역을 포함하며, 중앙과 지역이 합의/협의를 기반으로 하여 기획하고, 지역이 집행하며, 공동평가로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사업 영역을 포함함

〈그림 69〉 Middle Up-Down 전략 범위

	① 국가주도주력산업		② 국가차원 지역산업				③ 지역차원 지역산업			
	국가주도		MUD 영역 (전문가 13명 중 8명 선택)				지역주도			
	중앙	지역	중앙	지역	중앙	지역	중앙	지역		
기획	○	X	○	X	○	△	△	○	X	○
집행	X	○	X	○	X	○	X	○	X	○
평가	○	X	○	X	○	△	△	○	X	○

- 이하에서는 MUD 전략을 전제하여 중앙-지역 협력에 의한 지역혁신 추진을 위한 세부 의제안들을 제시하고자 함

■ [의제 3] (기획) 지역수요에 기반한 지역혁신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 방식 개편

● 필요성

-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즉 관련 부처간 협의·조정 없이 신규 지역혁신사업을 개별적으로 기획·추진함에 따라 지역 수요에 부응하면서 지역별 다양한 여건·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지역 주도형 지역혁신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바, (현행 중앙부처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공모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역수요에 기반하여 관련 부처간 경쟁을 통해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신규사업 추진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워킹그룹 워크숍 참여자 주요 발언〉

☞ 지역혁신의 시스템 부재

- 지난 20년간 지역혁신사업은 중앙정부 사업중심의 구도 속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형태로 유지
- 중앙의 과도한 개입(지역 자체적 장기계획 수립 한계), 중앙정부의 기획-균특회계 집행 방식의 사업으로 지역 내 혁신자원과 성과의 추적 어려움
- 중앙정부 공모사업 형태의 사업 운영으로 불필요한 지역 간의 경쟁 구도, 정치권의 입김에 의한 결정 등 자원 배분에서의 문제 발생
- 국가 차원의 장기적 포트폴리오 구상이 미흡한 채 정권교체 등 정치적 흐름에 의해 계획이 변경되면서 지역 내 혁신성과 추적 어려움

☞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역량의 한계

- 지자체 내부 체계 기획력/전문성의 한계
- 예산 확보를 위한 사업유치, 타겟산업 및 세부전략의 부재, 장기적 관점에서의 지역혁신을 위한 투자 전략 미비
- 중앙에 대한 높은 재정 의존도
- 지역 과학 기술 혁신 산업 정책의 연속성 부재

● 추진전략

- **(전략 3-1: 중앙차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들이 신규 기획한 다수의 지역혁신사업 중에서 지역 혁신성장계획을 통해 지역의 수요가 확인된 지역혁신사업에 대해서만 신규 추진을 허용

〈표 52〉 중앙부처의 신규 지역혁신사업 추진절차(안)

단계	주체	수행 내용
1단계	균형위 (지방시대위원회)	• (균형위-기재부 간 사전 협의를 통해) 일정규모의 신규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소관 부처별로 가배정(확보된 예산의 2~3배 규모)
2단계	중앙부처	• 부처별로 독자적으로 (가배정된 예산규모, 지역수요, 기존 사업의 공백분야 등을 고려하여) 신규사업(1개 이상 가능)을 기획
3단계	지자체	•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과정에서 자기 지역의 여건·특성에 부합하는 (각 소관부처가 제시하는) 신규사업을 자율적으로 선택
4단계	균형위 (지방시대위원회)	• 시도별 지역혁신성장계획 컨설팅을 통해 지자체별로 최적의 신규사업 포트폴리오 도출
5단계	기재부	• 14개 지역 중 과반 이상 지역에서 선택을 받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차년도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자료 :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20) 내용 재구성

- **(전략 3-2: 지역 차원)** 국가산업정책 차원의 타깃산업 거점 조성(예: 소부장특화단지, 첨단전략산업특구, 첨단투자지구 등)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국가적 타깃산업의 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중앙부처의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되) 지역 주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이러한 지역 주도의 (국가적 타깃산업의 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은 이미 지역 주도로 추진 중인 지역산업 발전전략(지역혁신전략산업, 지역주력산업, 스마트특성화산업 등)과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함

〈워킹그룹 워크숍 참여자 주요 발언〉

☞ 중앙 차원

- 중앙-지역 이분법적 접근 지양, 중앙-지역차원의 장기적 접근과 전략 필요
- 국가 정책의 방향성 제시/중복사업 조정/지역혁신정책 수립 시 컨설팅 지원 필요
- 국가전략산업(국가R&D산업,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은 중앙정부 주도의 기획/집행
- 지역의 특색을 접목한 분야의 사업은 지역에서 집행하며, 기획 과정에 중앙 참여

☞ 지역 차원

- 지역혁신에 충실한 지역사업을 자체적으로 주도
 - 지역 스스로 지역이 경쟁력을 가지는 부분을 탐색하여 지역간 상생 구도 모색
 - 지역기업의 수요에 기반한 현실적이고 실행가능한 지역산업분야의 혁신기획
 - 수요 기반(지역 중소기업 등 지역 생산 네트워크 중심)의 정책 기획, 집행 및 평가를 고려한 기획

- 지역주체가 참여하여 자원배분을 공동기획
 - 지역에 기반이 있는 주력산업은 지자체 주도
 - 지자체 혁신요소(인적자원)의 집적/활용
- 수요발굴 및 기획의 창구 마련
 - 혁신주체 간 엑셀러레이터(퍼실리테이터)로서의 지역혁신기관의 역할

■ [의제 4] (집행) 지역혁신사업 및 지역혁신기관간 협력·연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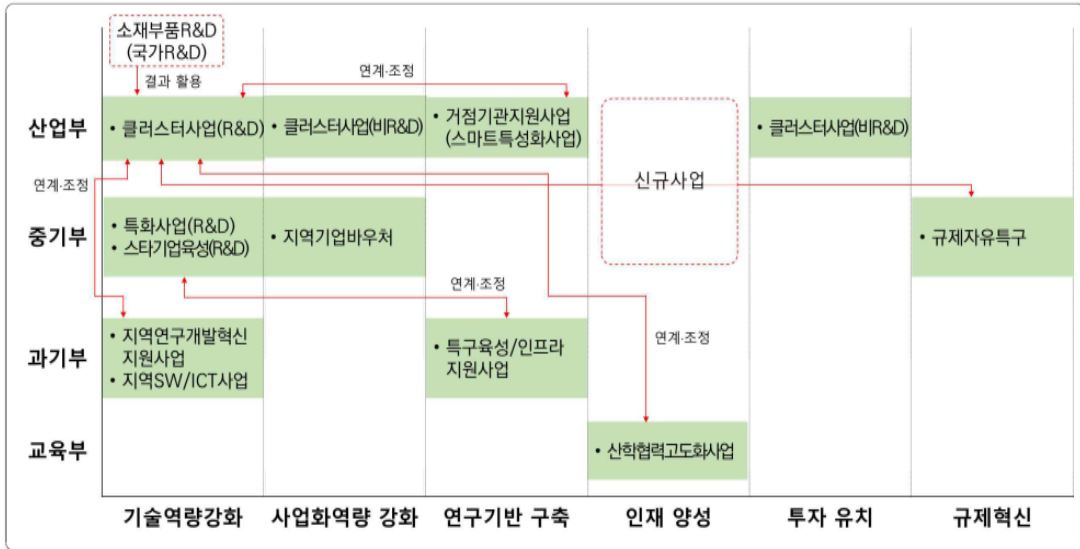
- 필요성
 - 부처별 칸막이 구조로 사업의 통합·연계성이 부재, 지역차원에서는 지역혁신기관이 중앙부처 정책의 집행기관으로 기능하면서 지역에서의 통합성과 연계성 또한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며 그 결과 지역혁신 사업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문제 초래

〈워킹그룹 워크숍 참여자 주요 발언〉

- ☞ 부처별 칸막이 구조로 사업예산 집행(통합적 지역정책 부재, 중복투자로 인한 효율성 저하)
 - 중앙정부 주도(부처중심)의 단발성 지역사업이 지속되면서 타 사업과의 연계성 미흡
 - 신산업분야 자원의 중복, 과잉투자 문제 발생
 - 선택과 집중을 기반으로 한 혁신전략 필요
- ☞ 부처별로 설치한 기관 및 출연연 등 지역 내 하위기관간의 갈등
 - 중앙정부 공모사업 형태의 사업 운영으로 불필요한 지역 간의 경쟁 구도, 정치권의 입김에 의한 결정 등 자원 배분에서의 문제 발생

- 추진전략
 - (전략 4-1: 중앙 차원) 기술성과·기업역량 → 사업화 → 시장지배력 강화로 이어지는 패키지형 사업체계 구축
 - 각종 지역혁신사업 간 연계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차원에서 각종 지역혁신사업의 이어달리기 등을 통해 혁신성과를 보다 효율적으로 창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지역혁신의 문제(혁신형 중소기업 부족, 좋은 일자리 부족 등)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여건·기반을 제공

〈그림 70〉 중앙부처 지역혁신사업 간의 연계구조(예시)



* 출처: 산업연구원(2021)

- (전략 4-2: 지역 차원) 지역에 소재하는 다양한 지역혁신기관의 “先 역할·기능조정 → 後 협력·연계 촉진”

- [중앙: 지역혁신기관간 기능조정 기본지침 제시] 지역혁신기관의 보유 자원, 역량,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관간 역할분담의 기본방향·원칙(기관간 특화 핵심·보조기능(지원서비스)은 ‘서비스 제공의 공간적 범위’, ‘제공하는 서비스의 특성’, ‘서비스 전달체계’, ‘지원대상 산업·연구자’ 등을 기준으로 설정)의 설정 → 각종 지역혁신사업의 운영요령(또는 지침)에 반영하여 신규과제의 기획·추진시 적용을 의무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 [지역: 지역혁신기관간 기능조정 실행] 중앙에서 제시한 기능조정 기본지침에 근거하되, 지역별 지역혁신기관의 혁신역량, 지원대상 기업의 여건 및 특성, 지역산업 전체의 여건 등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여, 기관 특성화에 부합하는 기본방향 및 세부 추진방안*을 도출·시행
- [지역혁신기관간 연계·협력 촉진] 연계·협력(수평적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별 산업·과학기술 여건, 기관간 관계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관간 연계·협력체계의 유형화(예시: 기관간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전과정(R&D기획)’, ‘연구개발실행단계’, ‘연구개발 후공정(기술사업화)’ 등의 전주기적 지원 강화 등)를 추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 한 예로 (출연(연) 지역분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지역소재 NIS기관에 대해서는 지역혁신 지원기능(RIS기능)을 일부 수행하고 있어 지역혁신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지만, 실제 지역혁신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 않다는 비판적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역혁신기관의 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기여도 등에 근거하여 각종 지역혁신사업의 참여 대상 수행기관을 사전 선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의제 5] (평가·환류) 지역혁신사업의 성과평가 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혁신사업에 있어서 지역의 주도성과 책임성 확보

● 필요성

- 지역혁신 자원과 지역의 혁신 수요에 기반한 사업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 지역의 주도성이 강화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역의 책임성 또한 확보되어야 함
- 현재는 지역 혁신 사업의 평가를 위한 정보가 부재한 상황. 혁신 주체의 상황,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뿐 아니라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부재

〈워킹그룹 워크숍 참여자 주요 발언〉

- 기획-실행-평가 선순환에 기반한 평가시스템 구축 미흡
-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진단-처방을 위한 데이터 확보 중요성 위해서 데이터 필요

● 추진전략

- 중앙 차원에서는 지역혁신사업 전체의 종합성과를 평가하여 환류하고, 지역 차원에서는 지역혁신사업별 과제 단위의 성과 평가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역할 조정
- (전략 5-1: 중앙차원) 균형위(지방시대위원회) 주관 하에 지역혁신성장계획에 포함된 전체 지역혁신 사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당초 계획 대비 달성한 종합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차년도 협약을 체결할 때 사업 전체 관점의 환류를 실시함
 - “지역주도 통합계획(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 통합계획 단위의 협약체결(균특법(제20조)상 「지역발전투자협약」) → 지역 주도로 지역혁신사업 전체의 통합적 추진”의 후속 절차로서 중앙에서는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통합계획 단위의 종합평가 및 환류 실시
 - 통합계획(지역혁신성장계획)에 대한 종합성과 평가에 근거하여 지역혁신사업별 예산편성을 (사업별 연간 예산규모를 그대로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시도 배정 예산을) 지역 주도적으로 일부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전략 5-2: 지역차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간에 공동으로 체결한 통합계획(지역혁신성장계획) 협약에 근거하되, 기존 중앙이 담당하던 과제관리 권한의 상당부분을 지역으로 이관
 - 지역혁신사업별 과제 단위의 공고, 평가(선정), 협약, 사업비 지급 및 관리 등의 제반 평가관리 기능을 지역의 평가전담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할 필요

〈표 53〉 지역혁신사업 과제단위 관리의 지역 이관 방안(안)

구분	현행		개선		비고		
	중앙	지역	중앙	지역			
사업 (계획)	기획	△	△	△	정부: 메뉴제시, 지역: 계획수립		
	평가·심의	○	×	○		×	정부: 지역계획 심의
	협약	·	·	○		○	정부·관계기관 협약
	과제	공고	○	×	→ △	△	지역 중심
		기획	×	○	→ ×	○	
		평가	△	△	→ ×	○	
		사업자 확정	○	×	→ △	△	
		협약	○	×	→ ×	○	
		사업비지급	○	×	→ ×	○	
	관리	△	△	→ ×	○		
	성과평가	○	×	○	×	정부: 시도의 종합성과 평가	
거버넌스	○	×	→ ○	○	지역: 지역혁신협의회(추가)		

* 출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20: 148)

〈워킹그룹 워크숍 참여자 주요 발언〉

- 중앙정부는 국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 중복사업 조정, 지역혁신정책 수립 시 컨설팅을 수행
- 기획단계에서부터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절한 정성/정량지표 구축
- 자체적인 기획역량 기능, 소통과 합의를 통해 분석평가 시스템체계 구축
- 데이터 축적을 통한 데이터 기반 평가, 평가 결과를 기획에 반영하는 환류체계 구축

■ [의제 6] (거버넌스) 중앙의 관련 부처간, 중앙-지역간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 필요성

- 지금까지 제안한 의제 1-3 및 관련 추진 전략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역 간 지역혁신 거버넌스 체계 마련 필요
- 또한 그간 구축되어 온 중앙-지역간 협력적 추진체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지역의 혁신자원과 수요에 기반한 혁신정책 기획과 실행,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전략을 추진할 거버넌스 및 운영 수단을 마련할 필요 있음

제3장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의제 및 주요 전략

● 추진전략

- **(전략 6-1: 중앙의 관련 부처간 협력)** 균형위(지역혁신성장계획의 수립·관리, 지자체와 협의 등 지역 혁신 총괄기능 수행)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사업 관련 중앙부처 간의 협력 촉진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성장 계획의 세부지침, 대상 사업의 범위 확대, 사업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 등을 협의·조정할 간사 부처를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혁신성장계획 단위의 예산 편성·심의를 진행될 수 있도록 균형위(지방시대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기계소재전문위) 간의 협력 강화 검토
- **(전략 6-2: 중앙-지역 간 협력거버넌스)** 중앙-지역간 협력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중앙 부처에 대응할) ①지자체(광역시도) 내에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주도할 통합조직과 (지역혁신사업별 중앙전담기관에 대응하여) ②지자체 내 지역혁신사업들의 추진상황(모니터링), 성과분석, 예산집행 등의 지원 체계 마련
 - (지자체(광역시도) 내 지역혁신 통합조직) 시도 지자체 내 기존 조직(예: 기획관실)을 활용하거나 별도 조직(예: 지역산업경쟁력강화기획단(TF성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으며, 통합조직의 핵심 기능은 지역혁신사업 관련 부서 간의 이해관계 조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것임
 - (지역별 지역혁신사업 기관 기능 조정) 지역별로 설치·운영 중인 TP정책기획단, 지역사업평가단, 연구개발지원단, 기타(BISTEP, DISTEP 등) 등 현행 조직의 기능조정을 통해 지역혁신사업 기획·평가의 체계적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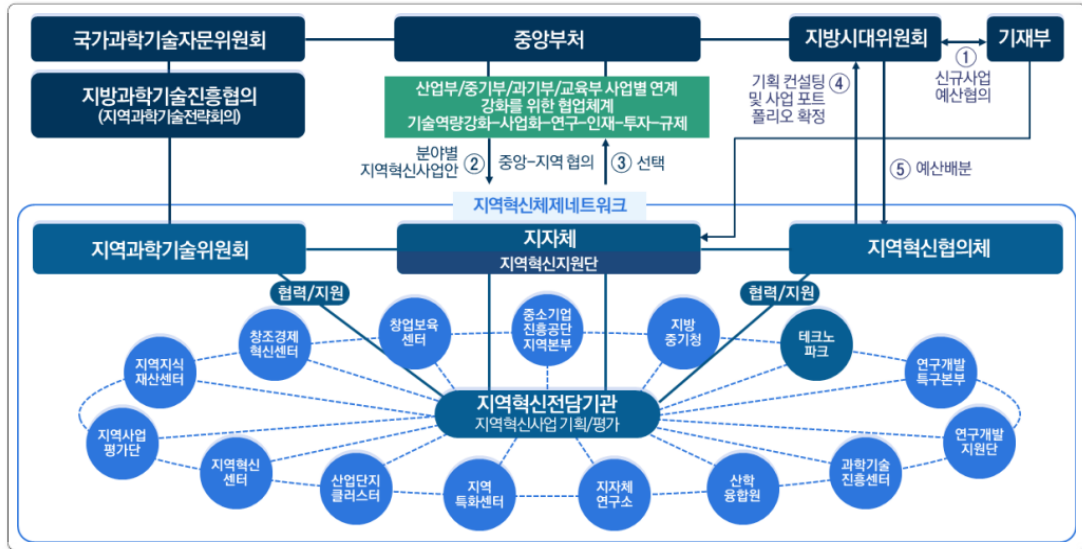
<워킹그룹 워크숍 참여자 주요 발언>

♣ **중앙과 지방 간 현실적 협력의 부재**

- 중앙은 권한을 내려놓아야 하고, 지방은 이임받은 권한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둘 다 준비가 부족. 중앙은 내려놓을 생각이 없고, 지방은 협력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음
- 중앙-지방 내에도 혁신 주체가 다양(지자체, 기업, 학교, 연구원, 시민 등)하고, 지역 간 협력 등 다층적/다방면적으로 거버넌스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층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

-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앙 차원에서의 협력 구조, 중앙-지역 간 협력구조, 그리고 지역 내 혁신주체 간 협력구조 및 지역혁신정책의 기획-집행-평가 절차를 통합하여 도식화하면 <그림 70>과 같음

〈그림 71〉 중앙-지역 협력모델의 방향(예시)



3

제3절 지역혁신을 위한
도시형 테스트베드 전략

Open
Policy
Lab

제3절

지역혁신을 위한 도시형 테스트베드 전략

1. 목표와 전략

■ 지자체 사업화·창업 생태계 활성화의 목표

- (As-Is)
 - 중앙정부 투자에 대한 단순 지자체 매칭(양적 증가)
 - 기술주도 기술사업화 및 창업 유도
 - 혁신주체별 개별 추진(소통 미흡)
- (To-Be)
 - 지자체 자체 사업 기획·운영을 통한 역량강화
 - 시장수요 맞춤형 기술사업화 및 창업 유도
 - 지자체 실증-사업화 실행 거버넌스 중심의 추진

■ 지자체 실증사업의 방향성 전환

- 지자체 자체 실증사업 기획과 실행을 통한 역할 강화
 - 중앙정부 투자의 단순 매칭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권을 가지고 과학산업 및 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지자체 자체 전략 수립, 운영 및 지속적 환류를 통해 지역혁신 역량 축적 필요
 - 지자체 전문 기획평가 전문기관을 통한 지역형 실증-사업화 전략 수립·운영 필요
 - 지역특화형 실증-기술사업화 모델을 정립하여 지역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 중심의 실증-사업화 생태계 구축 필요

〈표 54〉 대전의 주요 전략산업 분야 및 관련 대덕특구 혁신기관

전략산업군	주요 제품군	관련 대덕특구 혁신기관
나노/반도체	나노융합 소자/제품, 반도체 소자/장비/공정/측정	KAIST/충남대 ETRI/기계연/화학연
바이오의료	의료기기/장비, 진단기기/진단키트, 의약품, 의료용 물질, 바이오융복합	KAIST/충남대 ETRI/기계연/생명연/ 화학연/기초과학연구원
ICT	ICT융복합 산업, 지능형 로봇/드론 빅데이터/인공지능, 정보통신/무선통신/5G	KAIST/충남대 ETRI/KISTI/기계연/항우연
국방/항공우주	방위산업, 드론, 우주/항공, 인공위성 등	국방과학연구소/항우연

* 출처: 저자작성

- 지자체의 현장테스트 및 사회실증 기능 강화
 - 최종사용자의 피드백 반영을 토대로 BM개선이 가능한 방식, 즉 시장의 니즈 중심의 사회실증지원으로의 확장 운영 필요
 - 지역의 경제, 산업동향 파악 및 전략산업 육성전략 수립·추진 등의 기능을 갖춘 지자체 기획평가 기관을 통한 중장기 현장테스트 및 사회실증 계획 필요(예, 테스트베드 대전*)
 - * 대전시는 “테스트베드 도시, 대전” 구현을 위해 대덕연구단지 출연연, 대학 등의 연구 성과를 대전의 도시 인프라로 활용하는 테스트베드 수립 전략을 마련 중
 - 대전시는 전략산업 육성 및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특구의 융합네트워크 및 연구기획사업* 활용 중
 - *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은 2022년부터 「대전시-대덕특구 융합확산 기획 및 창의융합 사업」을 통해 대전형 융합신산업 육성과 도시문제 해결사업 기획과 발굴 시도

2. 세부과제

1) [의제 1] 대전형 융합실증 선도전략 마련

■ 추진전략 1-1 실증사업 프로세스 개선

- (선정 및 평가방식 개선) 시장수요 중심 실증-사업화 발굴 및 평가체계 구축
 - (선정방식의 엄격화) 중기부의 TIPS사업*을 벤치마킹하여 기업 선정 시에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구성하여 초기 단계부터 우수한 기업을 선발하여 육성하는 것이 필요
 - *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Korea,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하여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육성하는 프로그램. 글로벌시장을 지향하는 기술력을 갖춘 유망한 창업팀에게 과감한 창업도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엔젤투자·보육·멘토링과 함께 R&D 자금을 매칭하여 일괄 지원함
 - 시장진입이 가능한 아이템 발굴을 위한 투자사 평가체계 활용 및 사전기획-실증단계에서의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의 역할 및 책임성 강화

〈표 55〉 비즈니스 액셀러레이터의 주요 역할

구분	주요 역할
BM기획, 시장조사, 기술/경영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M개발, 참여기업간 협업 및 이해관계 조정, 상용화 개발, 시장진출 지원 등 • BM기획을 통해 해외 진출 예정인 신제품에 대한 국내·외 시장조사 • 신제품 사업화,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IP전략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침해감정, 특허 및 상표·디자인 방어전략, 무효조사, 회피설계방안, 해외 경쟁사 조사, 경고장, 소송, 무단 선등록, 침해제소 등
기술이전·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처로부터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술가치평가 비용, 기술거래 수수료 등 일부 지원
투자유치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과정에서 기업의 양산, 마케팅 자금 투자유치를 위해 컨설팅 지원
법률, 세무, 회계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증-사업화 과정에서 기업이 당면한 법률/세무, 특허분쟁 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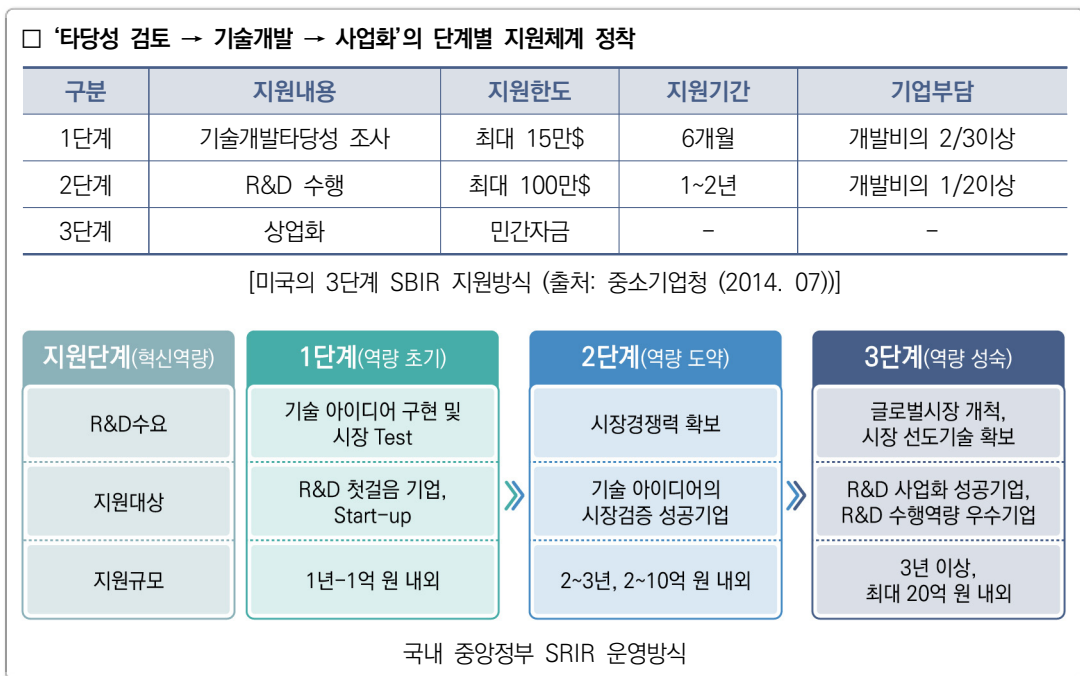
* 출처: DISTEP(2022b)

● **(지원 프로세스 개선)** 딥테크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형 KOSBIR 구축

-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제도(KOSBIR*)를 벤치마킹한 대전형 실증-사업화 생태계 구축하여 아이디어 발굴→실증→사업화 및 수출 창출 원스톱 지원 필요

* KOSBIR(Korea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Program,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고자 정부·공공기관이 소관 R&D 예산의 일정 비율을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사업. 소관부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이며, 수행기관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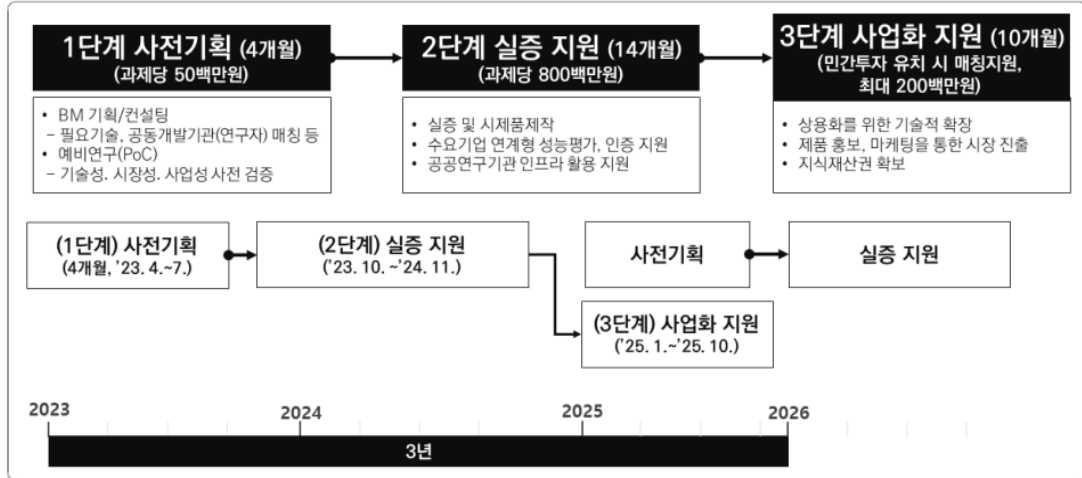
〈그림 72〉 미국의 3단계 SBIR 지원방식 및 국내 중앙정부 SRIR 운영방식



* 출처: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 중소기업 R&D 지원체계 혁신 방안 (중기부)

- **(사전기획)** 지자체는 중앙정부와 다르게 R&D를 직접 수행하기보다 비용적 측면에서의 전략성을 기반으로 이미 개발된 R&D의 제품화에 필요한 예비연구 등 공동기획단계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
- **(실증지원)** 공공기술의 시장진출과 지역산업 연계를 위해 수요기업인 지역기업과 기술 공급자인 출연연이 함께 실증단계를 운영, 이 때 지역기업의 실증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출연연 인프라 활용을 지원
- **(사업화 지원)** 상용화를 위한 기술적 확장분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제품홍보, 마케팅 교육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딥테크 스타트업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제품화 전반의 학습을 도모

〈그림 73〉 대전형 KOSBIR 프로그램



* 출처: 저자작성

- **(사업 후속지원)** 실증사업의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지원 연계 운영 필요
 - (예시1) **실증 후속사업 기획:** 실증 단계별 사업 기획·실행
 - (예시2) **유사사업 연계방안 모색:** 기관 내 유사 사업의 연계, 관계기관 사업 간 이어달리기 방안 모색

〈워킹그룹 참여자 발언〉

실증지원사업 운영의 애로사항

- ① **(실증사업의 단기성)** 실증사업 대부분이 단년도, 길어도 1년 6개월 사업으로 아주 짧음. 최근 반도체와 부품 수급문제로 신산업 분야는 실증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 더 필요한 만큼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함
- ② **(실증사업의 경직성)** 실증사업비 예산 항목 외에서 갑자기 자금투입이 필요한 경우, 사업비 변경이 필요함. 그러나, 현실적으로 예산 항목 신설, 사업비 변경 승인 절차 등 행정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 걸려 사실상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 해당 부분을 실증사업에 한해 유연화 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면 함. 사업의 주관기관에게 권한도 주고 그만큼의 책임도 주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③ **(실증사업의 장기적 관점 부재)**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프로세스와 결이 차이가 큼. 중앙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은 예산과 오랜기간 사업이 운영되나, 지자체의 경우, 빠른 성과와 실적을 요구함. 초기 실증의 경우, 제품의 상품성 특히 투자/매출 등의 성과를 단기간 안에 인정받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 이를 해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④ **(실증사업의 후속지원 부재)** 대전테크노파크가 정부부처와 논의할 때 대전시/기업들을 대변하기도 하고 시와 기업들 간 의견을 조율하기도 함. 문제는 TP의 비용이 모두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뤄져 과제가 끝나면 다른 과제를 활용해 진행해야 함. 따라서 어렵게 구축한 시스템을 보완하여 재구축하고 후속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지원이 없어 어려움

■ 추진전략 1-2 지자체 주도 도시실증 기획과 실행

- **(사회실증 확대)** 최종사용자의 피드백 반응을 토대로 BM개선이 가능한 방식, 즉 시장의 니즈 중심의 사회실증지원으로의 확장 운영 필요
- **(지자체 주도 도시실증 기획)** 시장진입과 지역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로서 지역의 강점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차원 미래전략 중심의 지자체 기획 실증사업 구상 필요
 - (가이드라인 마련) 도전적 실증사업 운영 시 자율성을 보장하되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 혹은 가이드라인 마련 필요
 - (도시실증 타깃 설정) 기술 구현가능성 검증과 달리 시장 적용 가능, 도시문제 해결 가능의 여부를 실증하고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 역량 기반의 실증 타깃 선정 필요
 - (테스트베드 조성) 신규 산업단지 조성 시 일부를 규제프리존의 성격을 담은 기업 BM 실증이 가능한 테스트베드로 활용
 - (기술이전 참여 인센티브 강화) 출연연 등 참여 기관의 기술이전 동기부여 방안 도입(개인 성과평가, 연구 인센티브 방식 부여 등)
 - (시민참여 실증공간 확보) 시민 참여도가 높은 실증사업 구조를 만들어 실증도시 시민의 자부심, 스마트 시티즌, 기술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경험할 수 있는 열린공간 마련 필요
 - (추진체계 전문성 강화) 현재 지원 기관들은 산업별로 나누어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구조임. 지자체에서 산업 내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육성이 필요한 세부에 전문가를 투입하여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 예를 들어 ICT 전반이 아닌 ICT 중 세부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함
 - (민간투자 활성화) 시민편드 조성: 시민이 도시 실증에 참여해 先경험, 後투자 등 클라우드 소싱 방식의 선순환 가치사슬 구축
 - (중앙-지역 협력체계)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재정과 거버넌스의 지역 주도성 강화

〈워킹그룹 참여자 발언〉

실증지원사업의 보완사항

- ① **(실증사업의 수요지향성 확보)** 민간기업과 진행한 실증사업은 내년도 판매계획을 가지고 참여한 사업으로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오랫동안 실증준비가 이뤄짐. 수요자 중심의 재이용률에 대한 데이터 분석, 만족도 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선도 이뤄져 사용자 니즈가 실질적으로 많이 반영됨. 반면, 지하상가 실증사업의 경우, 지하상가 내에 로봇활용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나, 지하상가 상인회 등 실사용자들의 니즈에 대한 분석과 이를 서비스에 담는 과정이 부족하여 아쉬웠음. 차후 대전의 실증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객의 니즈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과정이 있다면 실증사업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② **(기업 BM 창출 실증사업 기획)** TRL 7단계 이상의 성숙도를 지닌 제품을 대상으로 기업의 비즈니스 창출이 되고 지역 신산업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방식의 실증지원 사업 운영 필요함
- ③ **(지자체 주도 도시실증 기획)** 혁신의 확산과 스케일업을 위한 실증지원사업이 되기 위해서 시장 진입시 초기 16%의 시장 점유율을 열어줄 파일럿 프로젝트가 가장 중요함. 실증사업의 수요자 중 하나인 공공 관점에서 보게되면 도시 차원에서 도움이 될 만한 미래 관련 특정 테마를 선정하여 지자체 중심의 실증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 추진전략 1-3 융합기획-도시실증 선순환체계 구축·운영

- **(필요성)** 대덕 특구의 혁신자원을 활용해 대전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출연연의 지역 성장 공헌과 지역 기반 강화를 통해 혁신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
 - (융합연구 아이템 발굴) NIS와 RIS 간 협력을 통해 대덕특구가 대전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협력체계 필요
 - (자생적 융합기획 생태계 조성) 지역 내 안정적인 혁신 성과 창출 및 지속적 융합연구기획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생적 융합기획 생태계 조성 필요

〈그림 74〉 융합기획 생태계(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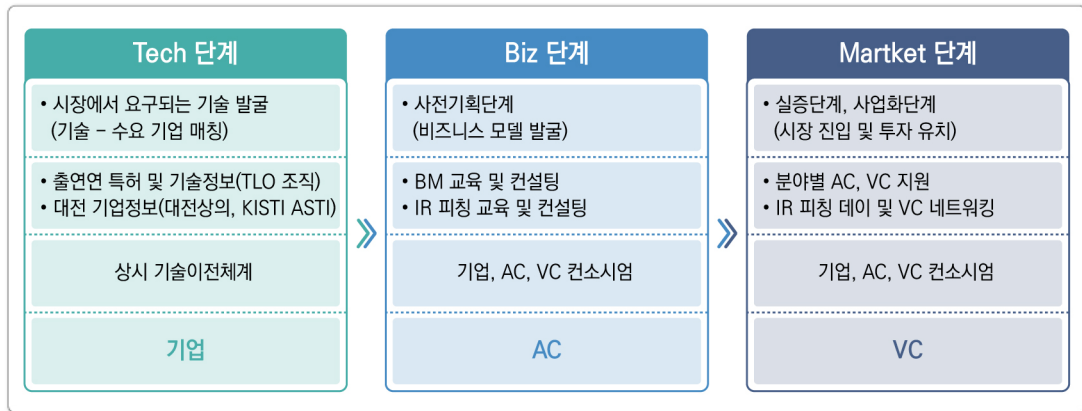


* 출처: 저자작성

- **(기업·출연연 공동 기획)** TBM 프레임 워크*에 관하여, 기업·연구소가 사업화 기술을 공동 연구하는 사전 기획 단계를 Tech 단계에 포함

* TBM 프레임워크: Tech 단계(주관기관: 기업)-Biz단계(주관기관: AC)-Market단계(주관기관:VC)로 구성

〈그림 75〉 TBM 프레임 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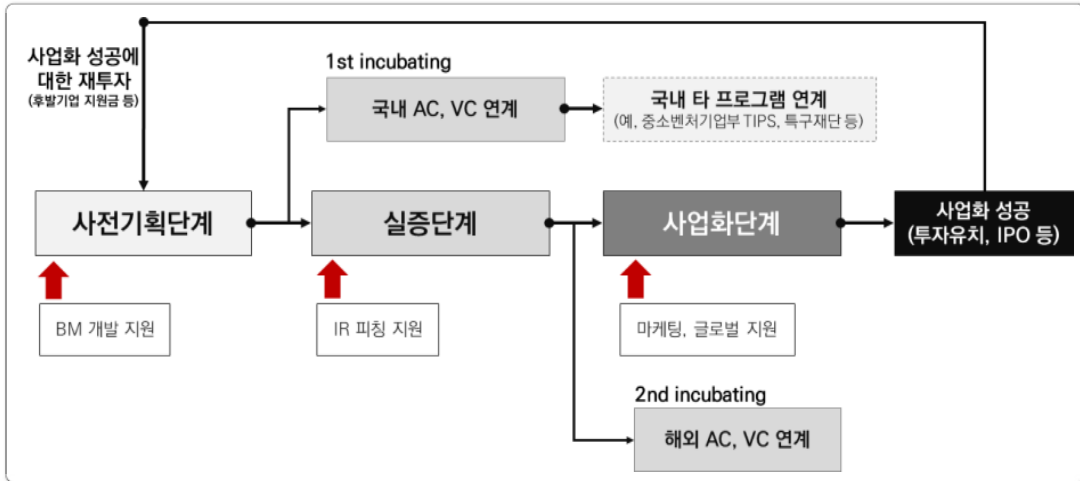
* 출처: 이상환(2022)

- **(국비사업 매칭)** 지자체 핵심전략산업 관련 과제 Item 발굴 등 지자체 미래 유망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중앙부처 공모사업 참여
- **(혁신주체 간 융합연구 네트워크 구축)** 융합문화혁신 및 융합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획 활동 지원과 과제별 담당자/연구책임자 네트워킹 정례화

■ 추진전략 1-4 실증-사업화 지원체계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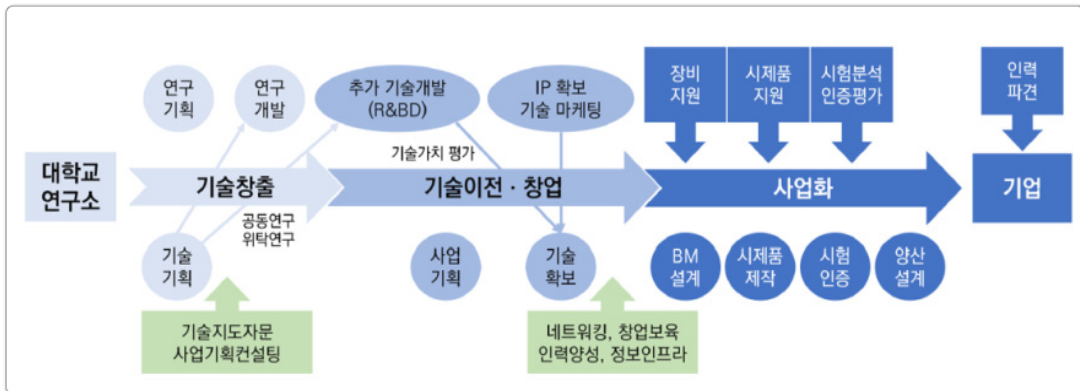
- **(주요 내용)** 실증사업의 근접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창출에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근접지원이 필요한 영역 발굴
 - 비즈니스 모델(BM) 교육·컨설팅 → 각 과제별 BM 확보
 - 투자유치를 위한 IR(투자계획서) 피칭 교육, IR피칭데이 개최 등
- 대전형 융합기획-실증사업 근접지원 및 환류체계 구축
 - 지역 내 기업 성장과 후속 민간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전문가 집단의 근접지원체계 구축 및 지속가능한 지원프로그램 운영

〈그림 76〉 대전형 실증사업 근접지원 및 환류체계 운영



* 출처: 저자작성

〈그림 77〉 대전형 실증사업을 통한 창업-실증-사업화 생태계 조성



* 출처: 저자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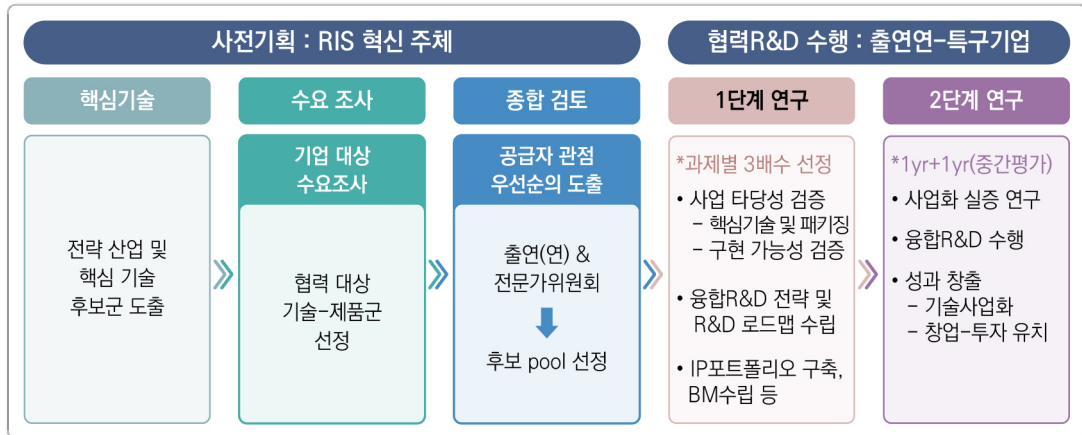
2) [의제 2] 자원협력의 혁신: 국가혁신체계와 지역혁신체계 연계 활성화

■ 추진전략 2-1: 대덕특구-RIS 연계 협력R&D 프로그램 운영

- (문제점) 대덕연구단지는 2005년 연구개발-사업화-재투자를 선도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로의 혁신클러스터로 전환을 추진하였으나 여전히 국가혁신시스템(NIS) 위주로 운영, 지역혁신시스템(RIS)과 분절화 현상이 발생
 - 출연(연)은 장기적인 연구중심이나, 기업은 기술이전과 사업화 단계부터 관심이 있으므로 수요자 니즈와의 미스 매칭 발생

- **(주요내용)** 대덕특구와 RIS 지역혁신주체와의 협력 R&D 설계 기본개념
 - 연구자가 기업을 적극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상호 협력 활동을 통해 R&D를 기술이전 및 후속 R&D 등에 집중하고, 미래 융복합 지역특화산업에 대한 지원 집중이 가능한 구조 설계 필요

〈그림 78〉 대덕특구와 RIS 지역혁신주체와의 협력 R&D 설계 기본개념



* 출처: DISTEP(2022c). 내부자료

- **(핵심기술-제품군 선정)**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협력R&D 대상 핵심기술-제품군 선정
 - 대전지역 RIS가 중심이 되어 대덕특구 기업의 수요 조사를 실시, 기 도출된 전략산업 분야 중 출연(연) 과 특구기업이 협력해 신산업·신시장을 개척하는데 필요한 핵심기술 및 융합기술 후보군을 도출
 - 다음으로 핵심기술 패키징으로 만들 수 있는 제품 및 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토대로 RFP(Request for proposal)의 기본이 되는 Needs Material Kit (NMK) 작성
 - 발굴된 핵심기술-제품 후보군을 대상으로 출연(연)을 통해 기업과의 융합R&D 수행에 적합한 우선순 위 도출
 -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융합R&D 수행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를 작성·평가 하고, 지원 대상 기술-제품군을 선정
- **(사업 추진체계)** NIS와 RIS의 협력모델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서 역할과 책 임을 나누어 공동 관리
 - RIS 산학연전략협의체(가칭 '대덕특구융합R&D기획단')을 구성, 전략산업 분야 및 신기술·신산업·신 시장 개척과 융합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핵심기술 후보군 도출 및 융합R&D 수행과정 점검
 - 융합R&D 평가전문위원회를 구성, 선정평가 및 중간 평가 실시
 - 창업, 투자 등 전문가 컨설팅 지원으로 지역 주도형 성공모델 마련

[참고] 대전 융합형 실증사업 사례 소개

■ 실증사업의 배경

- 대전 지역혁신지수는 전국 1위, 지역과학기술 혁신역량은 전국에서 3위(19년 기준)로 타 지자체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나, 지역 경제 기여도는 크지 않은 상황으로 대학 및 출연연 등 혁신역량을 활용한 지역 성장정책을 추진할 필요
 - 20개 공공연구기관, 13개 기업지원기관, 7개 대학 산학협력단 등 국내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 보유
 - 반면, 대전 지역 내 총생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로 다소 낮은 수준
- 대전 내 기업 및 혁신기관의 역량과 그간 대전 중점분야 등을 고려하여 「나노/반도체, 바이오의료, ICT, 에너지, 국방/항공우주」분야를 동 실증/사업화 전략분야로 선정
 - 그간 대전은 다양한 정책에서 중점분야 및 특화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이를 혁신기관 활용 극대화의 관점에서 지역 경쟁력을 고도화 전략 분야 제시

■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확보

- 동 사업은 사업목적, 지원 범위 및 대상 측면에서 유사사업과 차별성 확보
 - 동 사업은 실증연구 기획단계부터 사업화까지의 전 주기에 민간의 전문역량을 활용하는 차별적 구조의 사업
 - 또한, 기존 유사사업 대비 월등한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을 보장하는 혁신적 지원체계의 사업

〈표 56〉 유사사업과의 차별성

구분	공공수요기반 혁신제품개발·실증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R&D 지원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TIPS 창업기업지원계획)
목적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 목적의 사업으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본사업과 차별	실증특례 지정된 신기술 실증 R&D지원으로 한정하여 대전 전략산업분야 중소기업 수요기반 기술실증 및 사업화 지원 목적의 본사업과 차별	민간투자사가 선별한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수요기업의 밀접면접을 통해 실증·사업화를 지원하는 본사업과 차별
수행 주체	출연(연) 및 대학이 주관으로 중소기업 주관 본사업과 차별	실증특례 지정인(공공연구기관, 공기업, 대·중·소기업 등) 한정	팁스 운영사로부터 투자 및 추천을 받은 업력 7년 미만의 (예비)창업기업

구분	공공수요기반 혁신제품개발·실증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R&D 지원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 (TIPS 창업기업지원계획)
지원 범위	사전기획, 기술개발·실증, 제품화 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사업과 유사하나 제품수요는 공공영역에 한정	시제품 제작, 국내외 시험분석·인증 등 실증연구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사업과 유사하나 특구내에 소재하면서 규제완화가 필요한 신기술 분야만을 지원	창업기업이 희망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제안하여 연구하는 사업으로 예상되는 애로사항 파악을 통해 기술실증을 지원하는 본사업과 차별
지원 규모	3년간 45억원 내외의 연구단급 규모	과제별 최대 4억원(1년) 지원, 평가 후 후속지원과제 추가 지원	과제별 최대 5억원(최대2년) 지원, 평가 후 연계지원(최대 1억원, 10개월)
구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지역스타기업육성	동사업
목적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등 비R&D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출연연, 대학 등 기술 보유 기관 역량을 활용한 실증연구를 지원하는 본사업과 차별	지역 우수기업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의 성장 촉진 목적으로 출연연, 대학 등 기술보유 기관 역량을 활용한 실증연구를 지원하는 본사업과 차별	혁신연구기관 보유 기술역량과 사업화 전문회사, BM컨설팅 기업 등 민간의 전문역량을 연계하여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실증 및 사업화/ 창업 지원
수행 주체	지역혁신기관, 사업화지원 기업 등 지원서비스 공급기관	지역스타기업 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에 한정	① 대전지역 소재 중소기업 및 ② 창업 7년 이하 중소기업
지원 범위	사업화 단계 비R&D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개발연구 지원	혁신연구기관 보유 우수기술을 중소기업 기술·제품에 접목한 실증연구 지원 (사업화 연계 지원) 창업기업 애로사항 파악 후 기술실증 지원
지원 규모	서비스 공급기관이 연간 5억원 (최대 2년)의 예산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 대상 비R&D(마케팅, 특허, 인증 등) 지원	연 2억원 내외, 총 4억원(2년) 타 지역 소재 기관(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공동연구 가능	① 9.5억원 (사업화 추가지원 시 총 11.5억원) 3년 지원 ② 5억원(실증), 3억원(기술창업 지원)

* 출처: 저자작성

■ 1기 운영 결과

- 신규사업 1년 운영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점이 도출됨
 - 사업기간 정상화 및 사업화 단계 추가로 충분한 실증-사업화 기간 확보
 - 액셀러레이터 의무 투입을 통한 선정과제의 시장성·사업성 확보 필요
 - 융합기획-실증사업 연계를 통한 대전형 기획-실증-사업화 통합지원 모델 제시

〈표 57〉 실증사업 현황

구 분	'22년 기존	'23년 개선(안)
사업 단계/ 기간 및 예산 조정 * 총사업비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계 사업구성 (15개월) - 사전기획(3개월/0.2억원) - 실증사업(12개월/10억원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단계 사업구성 (29개월) - 사전기획(5개월/0.5억원) - 실증사업(14개월/8억원 내외) - 사업화(10개월/최대 2억원 매칭 지원) * 2단계 실증사업 종료시점까지 투자유치 성공 시, 사업화 단계 지원 (투자유치 금액 대비 40% 매칭) (예) 후속 민간투자 5억원 유치 시, 5억원×40% = 최대 2억원 사업화 단계 지원
협약기간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23.1. ~ '24.12.) - 사전기획('23.5.~7.) - 실증사업('23.10.~'2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년 ('23.1. ~ '25.12.) - 사전기획('23.4.~8.) - 실증사업('23.10.~'24.11.)
컨소시엄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롭게 컨소시엄 구성 - 최소 2개 기관 이상 참여 * 대전소재 기업, 출연(연), 대학교, 혁신기관 등이 자유롭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셀러레이터* 참여 의무화 * 예시: 기술지주회사, 사업화전문회사, BM 컨설팅 기업, 벤처캐피탈, 기술거래·평가기관 - 최소 3개 기관 이상 참여 * (주관) 대전지역 기업, 출연(연)·대학, 혁신기관 (참여) 액셀러레이터 1개 이상 의무 참여, 그 외 대전 참여기관 1개 이상 참여
액셀러레이터 사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규정 없음 - 별도의 규정 없이 컨소시엄별로 자유롭게 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액셀러레이터 사업비 최소화 마련 - 사전기획(최소 0.25억원 이상, 전체의 50%) - 실증사업(최소 1.2억원 이상, 전체의 15%) - 사업화 지원(자유롭게 편성)
융합기획 사업과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 없음 - 두 사업 모두 '22년도 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사업 우수과제 가산점 부여 - 융합기획사업(DISTEP) "우수" 과제에 한해, 1단계 사전기획 선정평가 시 가산점 부여
대전시 4대 전략산업과의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전력산업 대상 가산점 부여 - 바이오헬스, 국방, 반도체, 우주 산업 해당 시 가산점 부여

* 출처: 저자작성

〈대전형 실증사업 근접지원체계〉

〈1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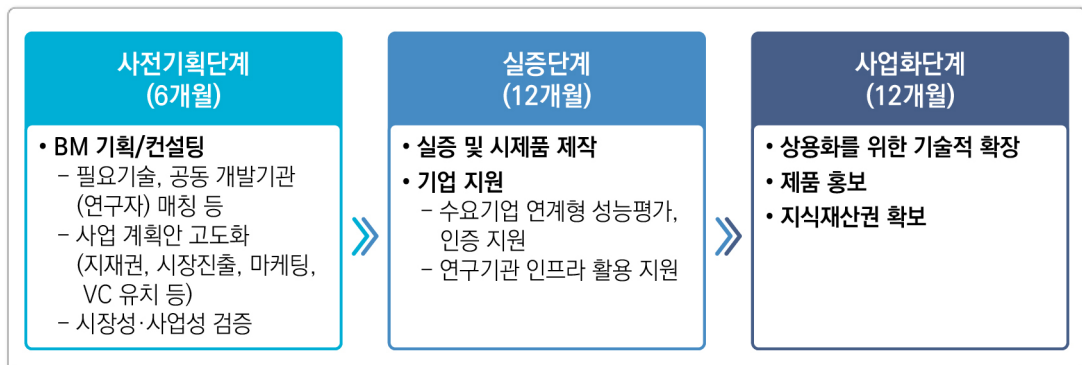
- (1차 지원) BM 컨설팅 (6/30, 7/7) → 각 과제별 BM 확보
 - * 국내 정상급 벤처투자자 대표 및 심사역을 초청하여 컨설팅 수행
- (2차 지원) BM 수립 및 피버딩 교육 (8/8~10) → 사전기획과제를 참여자 대상 신사업 아이디어 발굴, BM 개발 및 초기 타겟/고객가치 탐색 관련 이론 강의, 실습·발표를 통한 사업화 및 창업 역량 강화
- (3차 지원) 투자제안서 작성 및 피칭 교육 (10/19~21) → 모의IR피칭 및 VC와의 네트워킹 기회 제공
- (4차 지원) IR 피칭데이 개최 (11/10) → 총 9개사 IR피칭 및 투자사 네트워킹 제공

〈2단계(예정)〉

- (정기) 분야별 VC컨설팅 (2회(3~4월, 8~9월))
- (정기) IR피칭데이 개최 (1회(5~6월))
- (정기) 기업별 스타트업 전문 전시회 참석 (1회)
- (정기) 파이낸셜데이(기보, 신보 등 금융기관 연계 자금조달 상담) 개최 (1회)
- (상시) 실증 및 기술사업화 성공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2월말)
 - ※ 부처별/지자체 관련 지원사업 명단, 네트워킹 확장을 위한 주요 행사, 이벤트 명단 제공 등
- (상시) 근접지원체계(자문단+근접지원인력) 구축 및 운영을 통한 액셀러레이팅
- (상시) 실증사업 투자연계 지원(신규 VC 발굴 및 VC 네트워킹 활성화 등)

- 3단계로 구성된 대전형 실증사업 모델(안) 개발 및 지속가능한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사업 고도화 필요

〈그림 79〉 실증사업 3단계 모델(안)(3년 사업)



* 출처: 저자작성

2022

OPL 워킹그룹 ②

**지역혁신을 위한 중앙-지역
협력방안 결과보고서**

Open
Policy
Lab

제4장

핵심제안



	구분	필요성	전략
중앙-지역 협력 거버넌스 운영 의제와 전략	[의제 1] (개념) 중앙-지역 협력에 의한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혁신 개념 정립	산업정책의 영역을 중심으로 중앙-지역 협력에 의한 지역혁신의 범위와 개념을 도출,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의제와 전략 도출의 방향성과 목표를 명확하게 할 필요	국가주도주력산업, 국가차원지역산업, 지역차원지역산업의 개념을 도출하고, 지역혁신을 위한 지역산업정책의 영역은 RIS 관점의 국가차원지역산업과 지역차원지역산업의 교집합인 일부 영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개념화
	[의제 2] (거버넌스 운영 전략) 지역혁신을 위한 Middle Up-Down (MUD) 전략 개념과 범위의 정립	국가차원지역산업과 지역차원지역산업의 중간 영역(④영역)에서 추진 가능한 지역혁신의 방안을 제언	Middle Up-Down의 범위는 국가주도주력산업-국가차원지역산업-지역차원지역산업의 연속 범주 상에서 국가차원의 지역산업 영역을 포함하며, 중앙과 지역이 합의/협약에 기반하여 기획하고, 지역이 집행하며, 공동평가로 환류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사업 영역을 포함
	[의제 3] (기획) 지역수요에 기반한 지역혁신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 방식 개편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즉 관련 부처간 협의·조정 없이 신규 지역혁신사업을 개별적으로 기획·추진함에 따라 지역 수요에 부응하면서 지역별 다양한 여건·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지역 주도형 지역혁신사업이 추진되기 어려운 바, (현행 중앙부처가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를 공모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역수요에 기반하여 관련 부처간 경쟁을 통해 지역혁신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신규사업 추진절차를 도입할 필요	(중앙차원) 예산편성 과정에서 중앙부처들이 신규 기획한 다수의 지역혁신사업 중에서 지역의 수요 (지역차원) 국가산업정책 차원의 타깃산업 거점 조성(예: 소부장특화단지, 첨단전략산업특구, 첨단투자지구 등)이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바, 국가적 타깃산업의 거점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을 (중앙부처의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되) 지역 주도로 마련할 필요
	[의제 4] (집행) 지역혁신사업 및 지역혁신기관간 협력·연계 강화	부처별 칸막이 구조로 사업의 통합·연계성이 부재, 지역차원에서는 지역혁신기관이 중앙부처 정책의 집행기관으로 기능하면서 지역에서의 통합성과 연계성 또한 결여되어 있는 실정. 그 결과 지역혁신 사업의 효율성이 저해하는 문제 초래	(중앙차원) “기술성과·기업역량 → 사업화 → 시장지배력 강화로 이어지는 패키지형 사업체계 구축 (지역차원) 지역에 소재하는 다양한 지역혁신기관의 “先 역할·가능조정 → 後 협력·연계촉진”
	[의제 5] (평가·환류) 지역혁신사업의 성과평가 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혁신 자원과 지역의 혁신 수요에 기반한 사업 기획과 실행에 있어서 지역의 주도성이 강화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지역의 책임성 또한	(중앙차원) 균형위(지방시대위원회) 주관 하에 지역혁신성장계획에 포함된 전체 지역혁신사업을 대상으로 지역의 당초 계획 대비 달성한 종합성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차년도 협약을 체결할 때 사업 전체 관점의 환류를 실시

구분	필요성	전략
<p>지역혁신사업에 있어서 지역의 주도성과 책임성 확보</p> <p>[의제 6] (거버넌스) 중앙의 관련 부처간, 중앙-지역간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p>	<p>확보되어야 하나, 현재는 혁신 주체의 상황과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뿐 아니라 이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부재</p>	<p>(지역차원)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간에 공동으로 체결한 통합계획(지역혁신성장계획) 협약에 근거하되, 기존 중앙이 담당하던 과제관리 권한의 상당부분을 지역으로 이관</p>
	<p>주요 의제의 추진 전략 이행을 위한 혁신 거버넌스 체계 필요함. 지역의 혁신자원과 수요에 기반한 혁신정책 기획과 실행,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전략을 추진할 거버넌스 및 운영 수단을 마련할 필요</p>	<p>(중앙의 관련 부처간 협력) 균형위(지역혁신성장계획의 수립·관리, 지자체와 협의 등 지역혁신 총괄기능 수행)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사업 관련 중앙부처 간의 협력 촉진을 위해서는 지역혁신성장계획의 세부지침, 대상 사업의 범위 확대, 사업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 등을 협의·조정할 간사 부처를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고, 지역혁신성장계획 단위의 예산 편성·심의를 진행될 수 있도록 균형위(지방시대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기계소재전문위) 간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p> <p>(중앙-지역 간 협력거버넌스) 중앙-지역간 협력이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대응할) ①지자체(광역시도) 내에서 지역혁신성장계획을 주도할 통합조직과 (지역혁신사업별 중앙전담기관에 대응하여) ②지자체 내 지역혁신사업들의 추진상황(모니터링), 성과분석, 예산집행 등을 지원할 체계를 마련할 필요</p>
<p>실질적 지역혁신 실행을 위한 도시형 테스트베드 전략</p>	<p>실증사업 프로세스 개선</p>	<p>(선정 및 평가방식 개선) 시장수요 중심 실증-사업화 발굴 및 평가체계 구축 (지원 프로세스 개선) 딥테크 스타트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형 KOSBIR 구축 (사업 후속지원) 실증사업의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지원 연계 운영</p>
	<p>[의제 1] 대전형 융합실증 선도전략 마련</p> <p>지자체 주도 도시실증 기획과 실행</p>	<p>(사회실증 확대) 최종사용자의 피드백 반응을 토대로 BM개선이 가능한 방식, 즉 시장의 니즈 중심의 사회실증지원으로의 확장 운영 필요</p> <p>(지자체 주도 도시실증 기획) 시장진입과 지역산업 육성의 마중물 역할로서 지역 강점 중심으로 하는 도시 차원 미래전략 중심의 지자체 기획 실증사업 구상 필요</p>
	<p>융합기획-도시실증 선순환체계 구축·운영</p>	<p>(기업·출연연 공동 기획) TBM 프레임 워크*에 관하여, 기업·연구소가 사업화 기술을 공동 연구하는 사전 기획 단계를 Tech 단계에 포함</p> <p>(국비사업 매칭) 지자체 핵심전략산업 관련 과제 Item 발굴 등 지자체 미래 유망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중앙부처 공모사업 참여</p> <p>(혁신주체 간 융합연구 네트워크 구축) 융합문화 확산 및 융합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획 활동 지원과 과제별 담당자/연구책임자 네트워킹 정례화</p>



구분	필요성	전략
	실증-사업화 지원체계 개선	실증사업의 근접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기술 창출에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근접지원이 필요한 영역 발굴 대전형 융합기획-실증사업 근접지원 및 환류체계 구축
[의제 2] 자원협력의 혁신: 국가혁신체계와 지역혁신체계 연계 활성화	대덕연구단지가 국가혁신시스템(NIS) 위주로 운영되면서 지역혁신시스템(RIS)과의 분절화 현상 발생	대덕특구-RIS 연계 협력R&D 프로그램 운영 (핵심기술-제품군 선정)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협력R&D 대상 핵심기술-제품군 선정 (사업 추진체계) NIS와 RIS의 협력모델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에서 역할과 책임을 나누어 공동 관리

2022

OPL 워킹그룹 ②

**지역혁신을 위한 중앙-지역
협력방안 결과보고서**

Open
Policy
Lab

부록



규제자유특구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한국행정연구원 미래행정혁신연구실
열린정책랩(Open Policy Lab) 연구팀



규제자유특구사업 제도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테크노파크 담당자
2. 참여기업

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테크노파크 담당자

- 1-1. 사업운영과정 및 성과에 대한 견해
- 1-2. 정책목표 달성에 대한 견해
- 1-3. 개선사항
- 1-4. 규제자유특구 제도 및 주요 쟁점

10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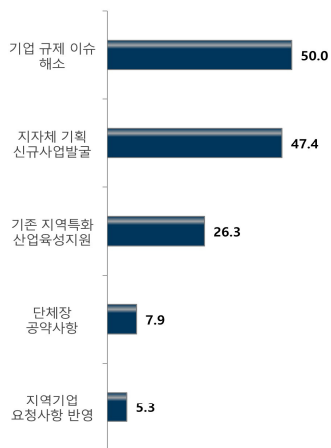
1-1. 사업운영과정 및 성과에 대한 견해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지원한 이유에 대해, '기업규제이슈 해소'라는 응답자가 50.0%로 가장 높았으며, '지자체 기획신규 사업발굴'(47.4%), '기존 지역특화 산업 육성지원'(26.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지원한 이유

[단위: %]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지원한 이유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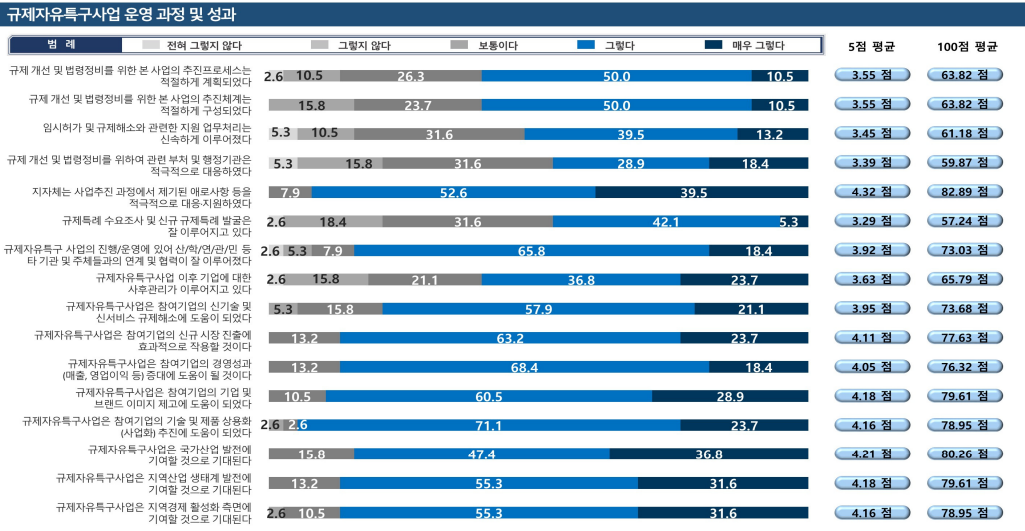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기업 규제 이슈 해소	지자체 기획 신규 사업발굴	기존 지역 특화산업 육성지원	단체장 공약사항	지역기업 요청사항 반영
전체		(38)	50.0	47.4	26.3	7.9	5.3
담당 주체별	지자체	(21)	33.3	42.9	33.3	9.5	0.0
	테크노파크	(17)	70.6	52.9	17.6	5.9	11.8
권역별	강원권	(6)	50.0	83.3	66.7	0.0	0.0
	충청권	(8)	62.5	12.5	25.0	0.0	12.5
	전라권	(11)	45.5	36.4	27.3	18.2	9.1
	경상권	(13)	46.2	61.5	7.7	7.7	0.0

*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해야 함

1-1. 사업운영과정 및 성과에 대한 견해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규제자유특구사업에 운영 과정 및 성과에 대해, '지자체는 사업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지원하였다'가 4.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5

1-1. 사업운영과정 및 성과에 대한 견해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지자체는 사업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지원하였다'가 4.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규제특례 수요조사 및 신규 규제특례 발굴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3.29점으로 가장 낮음.

규제자유특구사업 운영 과정 및 성과 (단위: 점, 5점평균)

구분	전체 (n=38)	담당주체별			권역별		
		지자체 (n=21)	테크노파크 (n=17)	강원권 (n=6)	충청권 (n=8)	전라권 (n=11)	경상권 (n=13)
규제 개선 및 법령정비를 위한 본 사업의 추진프로세스는 적절하게 계획되었다	3.55	3.48	3.65	3.33	3.75	3.18	3.85
규제 개선 및 법령정비를 위한 본 사업의 추진체제는 적절하게 구성되었다	3.55	3.38	3.76	3.33	3.75	3.27	3.77
임시허가 및 규제해소와 관련한 지원 업무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3.45	3.48	3.41	3.00	3.38	3.55	3.62
규제 개선 및 법령정비를 위하여 관련 부처 및 행정기관은 적극적으로 대응·지원하였다	3.39	3.24	3.59	3.33	3.63	3.55	3.15
지자체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애로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대응·지원하였다	4.32	4.24	4.41	4.33	3.88	4.55	4.38
규제특례 수요조사 및 신규 규제특례 발굴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3.29	3.29	3.29	3.67	2.88	3.09	3.54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진행/운영에 있어 산/현/관/민 등 타 기관 및 주체들과의 연계 및 협력이 잘 이루어졌다	3.92	3.90	3.94	4.33	3.50	3.82	4.08
규제자유특구사업 이후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3.63	3.57	3.71	3.67	2.88	3.82	3.92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참여기업의 신기술 및 신서비스 규제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3.95	4.00	3.88	3.33	3.63	4.18	4.23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참여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4.11	4.14	4.06	3.83	3.88	4.27	4.23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참여기업의 경영성과 (매출, 영업이익 등) 증대에 도움이 될 것이다	4.05	4.05	4.06	3.83	4.00	4.18	4.08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참여기업의 기업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되었다	4.18	4.10	4.29	4.17	3.88	4.27	4.31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참여기업의 기술 및 제품 상용화 (사업화) 추진에 도움이 되었다	4.16	4.10	4.24	3.67	3.88	4.36	4.38
규제자유특구사업은 국가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21	4.19	4.24	4.17	4.00	4.27	4.31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지역산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18	4.24	4.12	4.17	3.75	4.36	4.31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16	4.24	4.18	4.17	3.63	4.36	4.31

*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해야 함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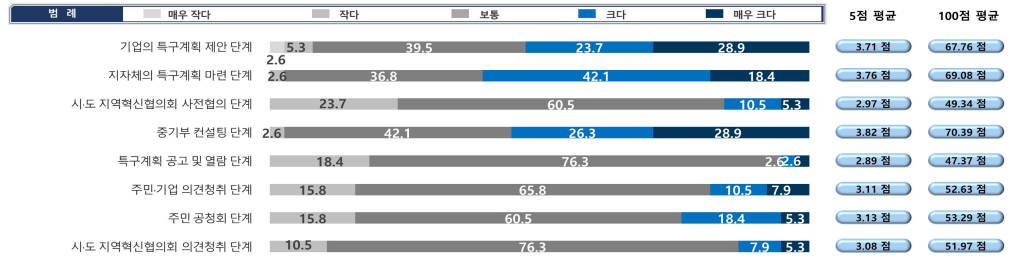
1-1. 사업운영과정 및 성과에 대한 견해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규제자유특구사업 신청 전 지정절차 부담정도에 대해, '중기부 컨설팅 단계'가 3.8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사전협의 단계'가 2.97점으로 가장 낮음

규제자유특구 신청 전 지정절차 부담정도

[단위: 점, 5점평균]



구분	전체 (n=38)	담당주체별			권역별		
		지자체 (n=21)	테크노파크 (n=17)	강원권 (n=6)	충청권 (n=8)	전라권 (n=11)	경상권 (n=13)
기업의 특구계획 제안 단계	3.71	3.52	3.94	3.83	3.63	4.27	3.23
지자체의 특구계획 마련 단계	3.76	3.67	3.88	3.33	3.63	4.00	3.85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사전협의 단계	2.97	3.05	2.88	3.00	3.00	3.09	2.85
중기부 컨설팅 단계	3.82	3.71	3.94	3.33	3.50	4.27	3.85
특구계획 공고 및 열람 단계	2.89	2.81	3.00	3.00	3.13	2.82	2.77
주민기업 의견청취 단계	3.11	3.19	3.00	3.00	3.13	3.27	3.00
주민 공청회 단계	3.13	3.19	3.06	3.00	3.13	3.18	3.15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의견청취 단계	3.08	3.05	3.12	3.17	3.25	2.91	3.08

*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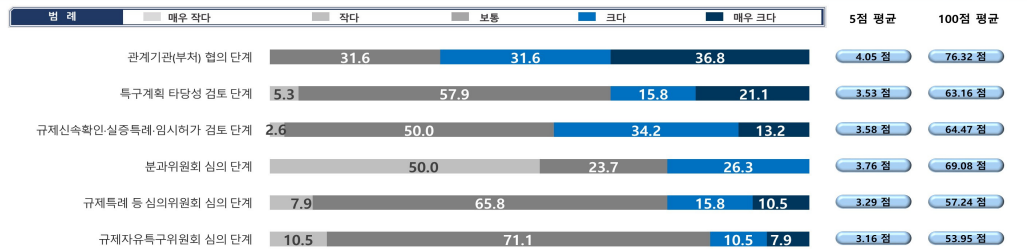
1-1. 사업운영과정 및 성과에 대한 견해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규제자유특구사업 신청 후 지정절차 부담정도에 대해, '관계기관(부처) 협의 단계'가 4.0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단계'가 3.16점으로 가장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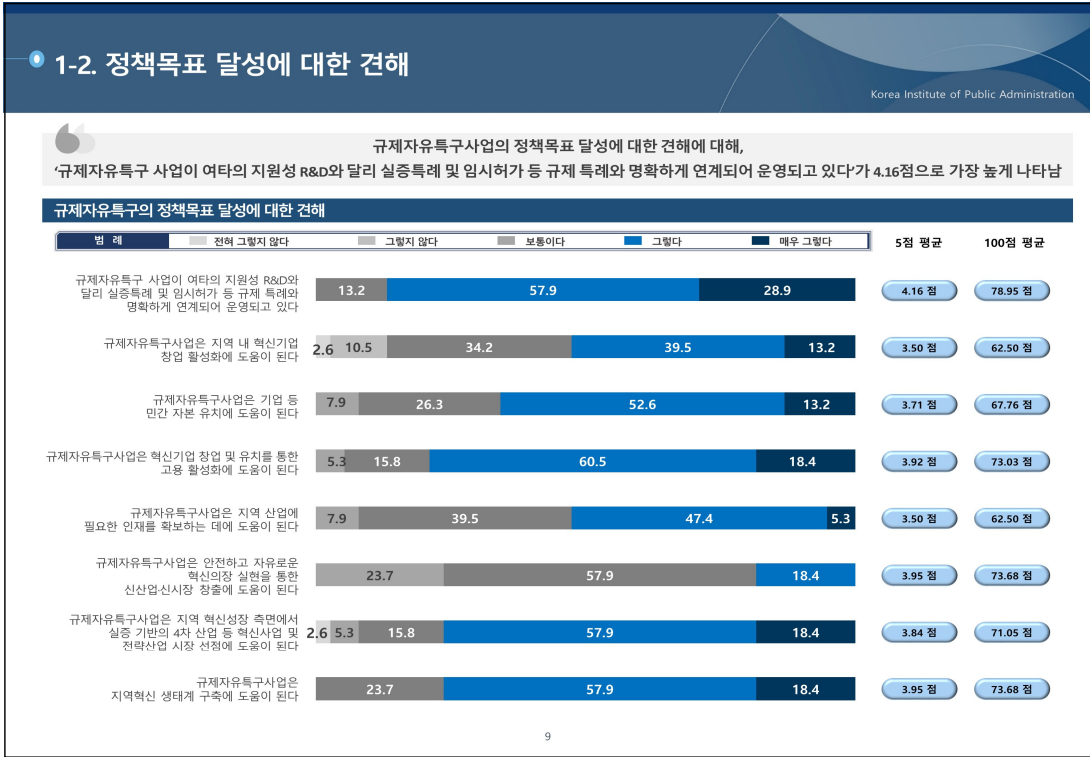
규제자유특구 신청 후 지정절차 부담정도

[단위: 점, 5점평균]



구분	전체 (n=38)	담당주체별			권역별		
		지자체 (n=21)	테크노파크 (n=17)	강원권 (n=6)	충청권 (n=8)	전라권 (n=11)	경상권 (n=13)
관계기관(부처) 협의 단계	4.05	4.00	4.12	3.50	3.63	4.36	4.31
특구계획 타당성 검토 단계	3.53	3.43	3.65	2.83	3.25	4.00	3.62
규제신속확인·실증특례 임시허가 검토 단계	3.58	3.52	3.65	3.00	3.25	4.18	3.54
분과위원회 심의 단계	3.76	3.57	4.00	3.33	3.25	4.27	3.85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 심의 단계	3.29	3.24	3.35	3.00	3.13	3.45	3.38
규제자유특구위원회 심의 단계	3.16	3.10	3.24	3.00	2.88	3.36	3.23

*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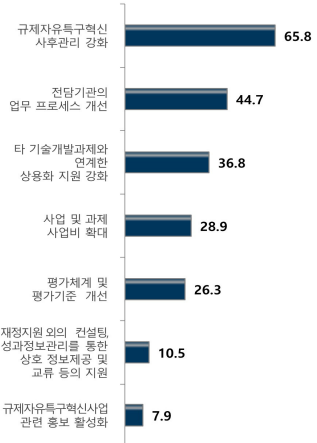


1-3. 개선사항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규제자유특구혁신 사후관리 강화'라는 응답자가 65.8%로 가장 높았으며, '전담기관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44.7%), '타 기술개발과제와 연계한 상용화 지원 강화'(36.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보완이 필요한 부분 [단위: %]



보완이 필요한 부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규제자유특구혁신 사후관리 강화	전담기관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타 기술개발 과제와 연계한 상용화 지원 강화	사업 및 과제 사업비 확대	평가체계 및 평가기준 개선	재정지원 외의 컨설팅, 성과정보 관리를 통한 상호 정보 제공 및 교류 등의 지원	규제자유특구혁신 사업 관련 홍보 활성화	
전체	(38)	65.8	44.7	36.8	28.9	26.3	10.5	7.9	
담당 주체별	지자체	(21)	81.0	47.6	42.9	38.1	19.0	14.3	4.8
	테크노파크	(17)	47.1	41.2	29.4	17.6	35.3	5.9	11.8
권역별	강원권	(6)	50.0	83.3	16.7	66.7	0.0	0.0	0.0
	충청권	(8)	62.5	25.0	37.5	25.0	25.0	12.5	12.5
	전라권	(11)	63.6	54.5	27.3	18.2	45.5	18.2	0.0
	경상권	(13)	76.9	30.8	53.8	23.1	23.1	7.7	15.4

*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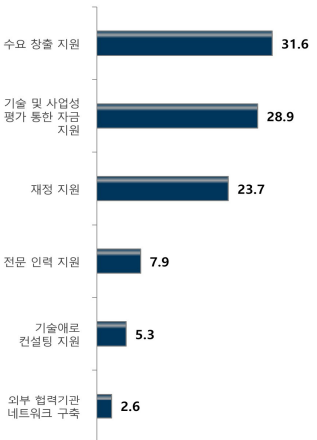


1-3. 개선사항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부분(1순위)에 대해, '수요 창출 지원'이라는 응답자가 31.6%로 가장 높았으며, '기술 및 사업성 평가 통한 자금 지원'(28.9%), '재정 지원'(23.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부분(1순위) [단위: %]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부분(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수요 창출 지원 (우선구매 지원 제도 등)	기술 및 사업성 평가 통한 자금 지원	재정 지원	전문 인력 지원	기술예로 컨설팅 지원	외부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전체	(38)	31.6	28.9	23.7	7.9	5.3	2.6	
담당 주체별	지자체	(21)	23.8	42.9	19.0	9.5	4.8	0.0
	테크노파크	(17)	41.2	11.8	29.4	5.9	5.9	5.9
권역별	강원권	(6)	16.7	33.3	16.7	16.7	0.0	16.7
	충청권	(8)	50.0	25.0	25.0	0.0	0.0	0.0
	전라권	(11)	18.2	27.3	45.5	0.0	9.1	0.0
	경상권	(13)	38.5	30.8	7.7	15.4	7.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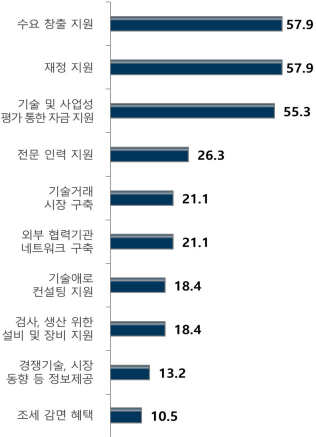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해야 함

1-3. 개선사항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부분(1+2+3순위)에 대해, '수요 창출 지원', '재정지원'이라는 응답자가 각각 57.9%로 가장 높았으며, '기술 및 사업성 평가 통한 자금 지원'(55.3%), '전문 인력 지원'(26.3%)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부분(1+2+3순위) [단위: %]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부분(1+2+3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수요 창출 지원(우선 구매 지원 제도 등)	재정 지원	기술 및 사업성 평가 통한 자금 지원	전문 인력 지원	기술거래 시장 구축	외부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기술애로 컨설팅 지원	검사 생산 위한 설비 및 장비 지원	경쟁기술, 시장 동향 등 정보제공	조세 감면 혜택
전체	(38)	57.9	57.9	55.3	26.3	21.1	21.1	18.4	18.4	13.2	10.5
담당 주체별	지자체	(21)	52.4	38.1	57.1	33.3	33.3	23.8	23.8	9.5	4.8
	테크노파크	(17)	64.7	82.4	52.9	17.6	5.9	17.6	11.8	17.6	17.6
권역별	강원권	(6)	16.7	83.3	33.3	16.7	0.0	50.0	16.7	50.0	16.7
	충청권	(8)	62.5	50.0	62.5	25.0	37.5	0.0	25.0	12.5	12.5
	전라권	(11)	54.5	63.6	45.5	18.2	18.2	9.1	27.3	27.3	18.2
	경상권	(13)	76.9	46.2	69.2	38.5	23.1	30.8	7.7	0.0	7.7

*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해야 함

1-4. 규제자유특구 제도 및 주요 쟁점 ① 특구사업 신청 전 준비절차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단계	요인	원인	해결방안
기업의 특구계획 제안 단계	기업의 규제에 대한 이해도 부족	- 산업 및 기술 규제 의 행정규제 관련 해소 요구가 많음	- 규제자유특구 신청 전 수요기업에 대한 홍보 및 간담회 개최
지자체의 특구계획 마련 단계	신규 규제 발굴 어려움	- 산업 및 기술 규제 관련 기술 보유 기업 부족(규무 영세) - 업무 과중, 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신규 규제 발굴에 한계	- 중기부 차원에서 신규 규제 발굴을 위한 창구 운영(경진대회 등) 및 적극적인 홍보 지원 - 신규 규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협의체(전략 산업 거점센터, 산학연 네트워크 등)활성화를 통한 규제 발굴 - 지자체의 규제 발굴 업무 부담 완화를 위한 특구사업 전담 인력 보강 - 신규 규제 발굴을 위한 관련 정보 제공(관련 법령, 기 제안된 규제 리스트 등)
	신청 전 특구계획 마련 어려움	- 특구사업 신청 전 프로세스 운영을 위한 예산 부족 - 특구계획 제안시 기술 및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계획 내용 구체화 어려움 - 지역과의 관계성, 예산, 도정정책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 검토 및 판단 어려움 - 기업이 제시한 기술에 대한 규제 특례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 어려움 -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 아이템 선정 및 구체화 과정이 어려움 - 특구계획 제안시 규제 여부 등 관련 법령 체계가 복잡하여 통합 검토 어려움 - 지자체의 특구계획에 대한 중기부의 판단과의 부합성에 대한 우려	- 특구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신속한 사업비 지원 및 확대 요망 - 특구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법률자문 및 사업성 검토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필요 - 특구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의 중기부와의 방향성 검토를 위한 협의 필요 - 특구사업계획서 작성 과정에서의 중기부와의 방향성 검토를 위한 협의 필요
사전협의 단계	사전협의 방식 및 절차 부담	- 특구계획안 변경시 사도 지역혁신협의회 의무 개최 부담 - 사도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에게 특구계획안 보고서 설득 및 협의가 어려움	- 중대한 변경사항이 아닌 경우 사도 지역혁신협의회 절차 생략 필요 - 사도 지역혁신협의회 참여 위한 규제자유특구사업에 대한 전문성 제고
	사도 지역혁신협의회 전문성 부족	- 사도 지역혁신협의회 전문가들의 특구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 행정규제 관련한 의견이 많아 특구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의견수렴이 어려움	
중기부 컨설팅 단계	중기부 컨설팅 대응 부담	- 컨설팅 과정에서 경쟁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 부담 - 중기부 컨설팅 과정에서의 잦은 회의 및 촉박한 준비 기간(약 일주일) - 컨설팅 참여 위원들의 의견이 상이하여 계획 내용 변경이 수시로 이루어짐 - 지자체 차원에서 중기부 컨설팅 대응 자료 작성을 위한 정보수집 및 타당성 확보 등 검토가 어려움	- 컨설팅 과정에서의 경쟁 및 평가 부담 완화 요망 - 중기부 컨설팅 담당 변호사를 통한 사전 자문 필요 - 중기부 컨설팅 이후 여유있는 보완기간 부여 및 컨설팅 프로세스 간소화 요망
	중기부 컨설팅 참여 위한 전문성 부족	- 특구계획에 대한 전문적인 컨설팅 부족 - 사업화와 관련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이해도 부족(대학교수 등)	- 신기술, 규제 관련 법령, 사업화 등과 관련한 전문가 매칭을 통한 컨설팅 필요
주민 등의 의견청취 단계	주민 의견청취 행정절차 부담	- 주민 및 기업의 특구계획 공고에 대한 호응 및 참여도가 낮음 - 특구계획에 대한 공고 30일 규정에 따른 업무상 일정을 맞추기 어려움	- 규제자유특구사업에 대한 지역 내 홍보 지원 필요
	규제에 대한 이해갈등 대응 어려움	- 규제 해소와 관련한 주민들의 이미지가 부정적임 -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도가 낮음 - 안전성 관련 질의에 대한 지자체의 대안 마련이 어려움	- 특구계획의 주요내용을 공보 또는 신문에 30일 이상 공고하는 규정 개선 요망 - 공청회시 특구사업 사업화와 관련한 전문가 참여

1-4. 규제자유특구 제도 및 주요 쟁점 ② 특구사업 신청 후 지정절차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단계	요인	원인	해결방안
관계기관(부처) 협의 단계	지자체 차원에서 관계부처와의 직접적인 협의가 어려움	- 규제 해소에 대한 관계부서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 비협조적임 - 관계부처와 협의시 중기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음	- 관련부처와의 원활한 협의 및 지원을 위한 통합 대응 기관 신설 필요 - 관련부처와의 협의시 중기부 차원에서의 부처간 협업체계 구축 및 지원 필요 (사전 안내 및 협업 지원) - 관련부처, 중기부, 지자체, 사업자 간의 정례적인 간담회 필요 -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한 중기부의 관련부처와의 네트워크 활성화 및 성과평가 등 제도 마련 필요 - 규제신속확인 과정에서 중기부 차원에서 회의 주도 등 협업 지원 필요
	관계기관 요구사항 대응을 위한 행정업무 부담	- 규제혁신 3중세트 검토시 요구되는 자료가 많아 대응이 어려움 - 지자체 차원에서의 특구계획 타당성 검토의 어려움(법률 검토, 기술 관련 검토, 사업성 분석 등)	- 규제혁신 3중세트 검토 단계에서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자료 보안을 위한 일정 확대 필요 - 심의 전 중기부 컨설팅 담당 변호사를 통한 사전 자문 필요 - 특구계획 타당성 검토를 위한 다양한 정보 제공 필요
분과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회 대응을 위한 행정업무 부담	- 분과위원회 회차별 시간 팀이 짧아(2주) 질의 내용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	- 분과위원회 1차 회의 이후 보완할 수 있는 기간 여유 필요 - 일반사업과제처럼 계획서 전체를 가지고 한번에 발표를 해서 자율적으로 신청하고, 우수한 아이템을 신청해서 특구 지정
	분과위원회 참여 위원 전문성 부족	- 해당 기술 및 규제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여 방향이 맞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어려움 의견 개진	- 해당 분야에 일치성이 높은 전문가 매칭 필요



1-4. 규제자유특구 제도 및 주요 쟁점 ③ 특구사업 개선 방안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p>재정지원 확대</p> <p>세부내용</p> <p>규제자유특구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 필요</p> <p>제정사업기간 확대 요망</p> <p>최초 2년 이후 일반적인 운영지원만 이루어짐에 따라 예산 부족</p> <p>규제자유특구 신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사업비 관리 체계 지원</p> <p>특구사업 기간 만료 후 지속적인 실증 지원을 위한 예산 추가 지원 요망</p> <p>법령 개정이 되기까지 지속적인 지원 필요</p> <p>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 및 지원 필요</p> <p>특구 신청 과정시 예산 지원 필요</p>	<p>사업 특성을 고려한 특구기간 유연화</p> <p>세부내용</p> <p>특구기간(3+2/3+3) 확대 요망</p> <p>규제자유특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유효기간 자발성 필요(실증특례기간(2+2)년) 획일화는 적정하지 않음</p> <p>특구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특구사업 기간 조정 필요</p> <p>기술 및 사업 아이템 특성에 맞추어 실증특례기간 적용 필요</p> <p>인프라 구축 사업인 경우 기본 사업 기간을 3+2년으로 확대 필요</p> <p>인프라 구축 규모에 따라 지원기간을 달리 적용 필요</p>
<p>특구사업 신청 및 지정 절차 간소화</p> <p>세부내용</p> <p>특구 지정 절차 단계가 복잡하여 준비 기간이 촉박하고, 참여업체 유지에 한계가 있어 지정 절차 간소화 및 체계화 정비 필요</p> <p>사업계획 변경할 때 단순한 임시허가 검토시 시도 지역혁신협의회 안건 상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음</p> <p>규제자유특구 사업계획 변경 절차 개선 필요(경미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이행토록 되어있어 최대 5개월 이상 소요)</p> <p>특구사업 참여기업의 계획 변화 등 변경시 절차 간소화 요망</p> <p>특구사업 관련 보고자료 작성 최소화 필요</p> <p>특구사업 추진시 요구되는 자료 제출 일원화 필요</p> <p>특구사업 관리 청구 단일화 필요(중기부, 중진공, Kiat 등)</p>	<p>특구사업 진행 중 행정절차 간소화</p> <p>세부내용</p> <p>특구사업 지정 이후 재정사업에 대한 협약 변경 간소화(ex. 특구사업자 해지&변경 건 특구 심의 절차 반영 제외)</p> <p>사업 진행시 행정자료 제출 및 성과와 실적 등 보고와 회의가 많아 문서작업 시간이 많이 소요됨</p> <p>특구사업 지정 후 예산 적정 심의 및 연구개발에 대한 평가 등이 각각 이루어짐에 따라 선정 결과가 모호하게 인식되어 관련 프로세스가 간소화 필요</p> <p>특구 지정 후 특례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 참여 신청시 절차 간소화 요망</p> <p>특구사업 중간 점검, 부처 현장 방문 등이 찾아 대응시 어려움</p>
<p>특구사업 담당자 순환보직 문제 개선</p> <p>세부내용</p> <p>특구지정 당시 관련부처 담당자 인사이동으로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p> <p>사업 추진 중 관련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병목현상 개선 필요</p> <p>실제 법령이 개정되어 진행되는 시기가 최초 계획 논의 이후 2-3년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는 관련 담당자가 변경되어 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 개정에 문제가 생김</p>	<p>특구사업 가이드라인 제공</p> <p>세부내용</p> <p>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전담기관) 제공</p> <p>특구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에 대한 공지 필요</p>

1-4. 규제자유특구 제도 및 주요 쟁점 ③ 특구사업 개선 방안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법령 정비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절차 개선 필요

세부내용

-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법령 개정 과정에서의 소관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필요
- 실증특례 이후 관계행정기관의 법령 개정 필요성 검토시 적극적인 관심 및 협력 필요
- 실증사업 종료 후 사업과 과정에서 소관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법령 개정 및 입시허가 필요
- 법령 개정 관련 협의시 중기부 차원에서 관련부처와의 소통 및 협의 지원 필요
- 중기부 차원에서 관련부처와 사전 협력을 통한 법령 개정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 특구계획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령 개정에 대한 소관 부처 협의시 중기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해당 규제 관련 소관부처가 다양하여 법령 개정 검토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 차원에서의 사업 추진 및 협력 필요
- 신산업 성장을 위한 법령 개정 관련 중양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 안전기준안 등 도출 후 법령 정비 전 주무부처 협의 프로세스 정립 필요
- 특구사업 전문가협의체를 통한 법령 개정안 도출 필요

특구사업의 산업화를 위한 지원 필요

세부내용

- 특구사업 지정 이후 산업화를 위한 재정지원 필요
- 특구사업 산업화를 위한 환경조성 마련 필요
- 특구사업의 향후 산업화를 위한 지자체의 준비 필요
- 선정 사업 아이템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생산 및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 내 특구사업자 외 특구지역 내 연관 기업에 대한 사업과 지원 필요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 필요

세부내용

-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한 지역기업 발굴 및 관련기업 유치 등 적극적인 행정 필요
-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업들의 투자유치 노력 필요
- 지역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자체 중심 기획 사업 발굴 필요
- 기업의 지역 전문인력 원활한 수급을 위한 지역 채용박람회, 전문인력 지원사업 추진 필요

1-4. 규제자유특구 제도 및 주요 쟁점 ③ 특구사업 개선 방안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특구사업 고도화 필요

세부내용

- 특구사업과 지역 내 혁신거점(경제자유구역 등)을 연계하여 지역 거점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신산업 전진기지로 육성 노력 필요
- 특구사업과 타 부처 연계 사업 추진 필요
- 특구사업과 지역 내 타 산업과의 연계 강화 필요(별류체인 구축)
- 유사특구 간 연계한 신사업 기술개발 고도화, 정보교류 및 전시회 개최, 시장개척사업 등을 통해 신산업 고도화 촉진을 위한 장 마련
- 특구사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까지 글로벌 특구 등 지속적인 사업 발굴 필요
- 기술 관련 연계사업 등 지속적인 기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기술에 대한 글로벌화 확장 클러스터 조성 필요
- 글로벌 혁신특구를 별개로 추진하는 것이 아닌 진행된 특구사업간 연계를 통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 타 지역과 연계하여 특구사업 발굴이 가능했으면
- 기 구축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신사업 기획 및 발굴을 위한 노력 필요
- 신규 특구 발굴보다는 지역별 규제자유특구 관리 및 운영 강화 필요(유사 특구 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창출하는 사례가 없고, 중앙부처의 규제 샌드박스와의 차별성이 없음)
-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2단계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인프라가 구축된 지역 특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필요
- 매뉴팩처 특례 사용이 특구가 지정되었다고 혜택을 보는것이 아닌 별도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 요청
- 규제샌드박스 사업과의 중복성으로 규제자유특구사업 참여기업이 피해를 입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지원 및 혜택 마련 필요
- 실증 진행하는 과정에서 규제 해소 시 특구 사업자 등 재정적인 손실 대책 필요(실증 진행 과정에서 법령 개정을 통해 규제 해소가 예정되어 실증 특례 기간 중 실증과제 중단 사례 발생 예상)
-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 지정되면 규제 혁신 절차가 1년에 1-2회 밖에 되지 않아 규제 해소 기간이 길어짐
- qnr형태 지정이 아닌 규제 프리존 형태로 지정(개발 기업에 대한 실증특례 방식)
- 규제자유특구사업에 기업 규모 및 지역에 관계 없이 참여 가능했으면
- 특구사업 참여기업의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원천적인 규제 개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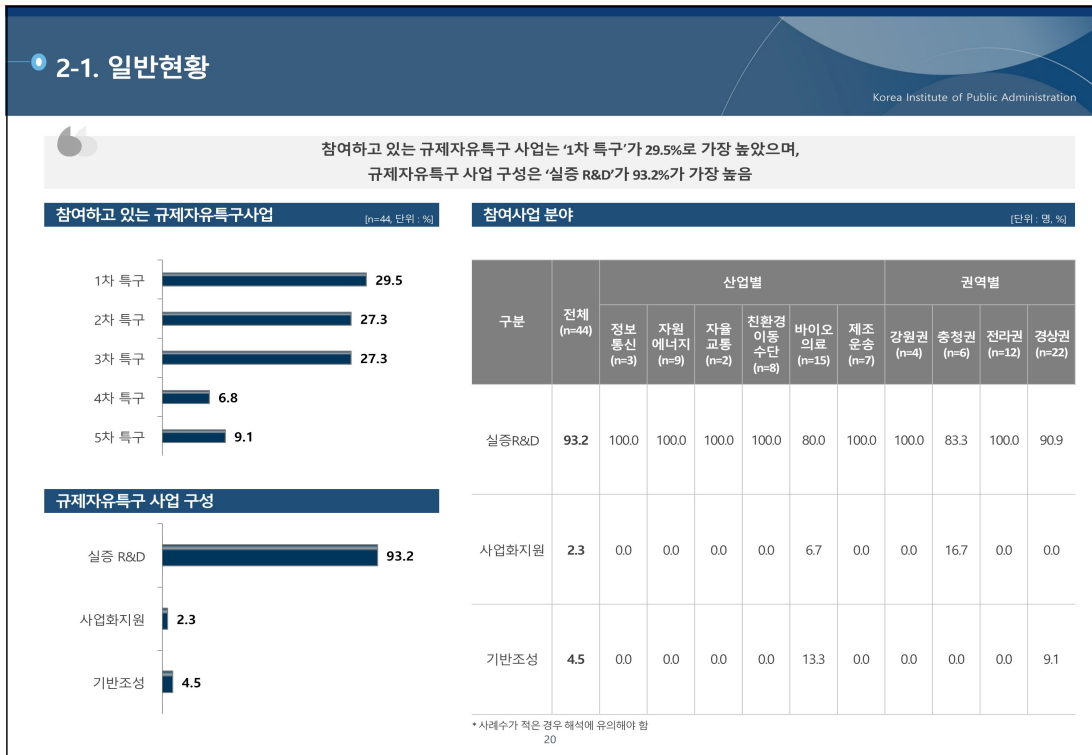
특구사업 종료 후 안착화 방안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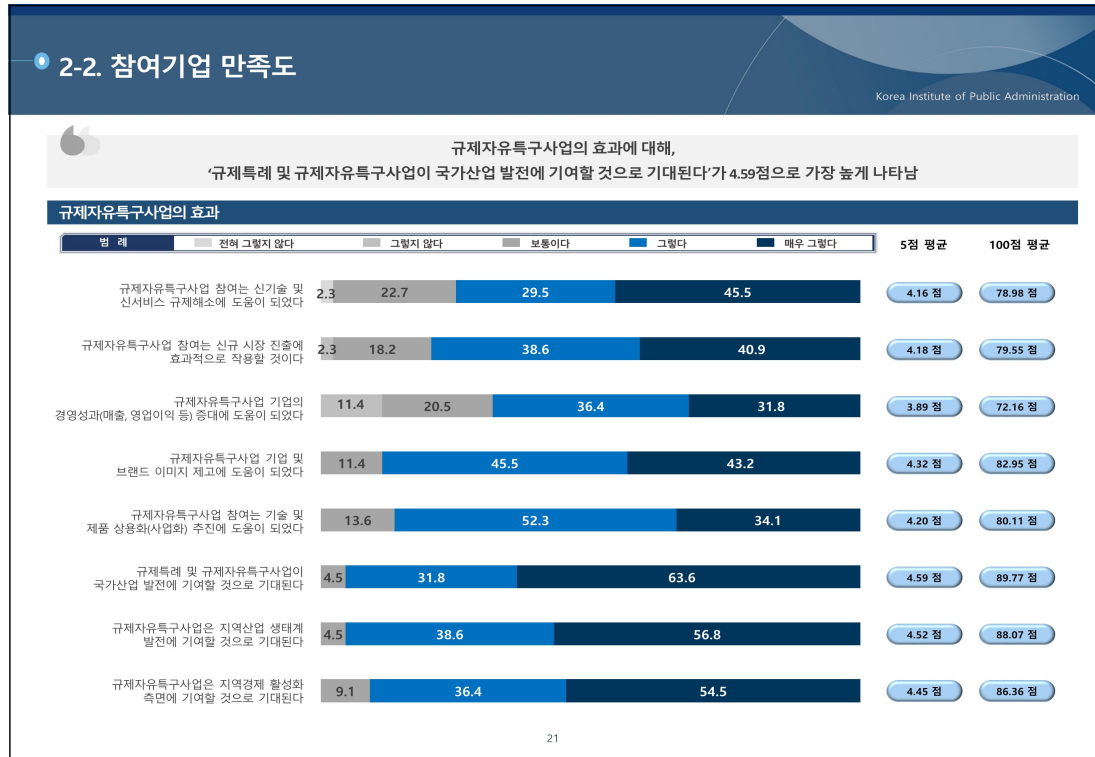
세부내용

- 실증 종료 후 사업과 단계에서 실질적인 기업 지원과 컨설팅 필요
- 실증사업 이후 추가적인 R&D지원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필요
- 특구사업 종료 후 후속사업 지원 계획 마련을 통한 사업 연계 필요
- 실증 종료 후 사후관리 및 지원 강화 요망
- 국제적인 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산시설 중소기업 상용화 지원 필요
-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지원 및 사업과 지원 필요
- 특구사업 종료 후 후속 사업과 멘토 시스템 구축 필요
- 실증사업 및 법령 개정 이후 참여기업이 지역 내 안착화 할 수 있는 재정지원까지 고려하여 제도 시행 필요
- 지역 정착 특구사업자 인센티브 제공 필요
- 특구사업 종료 후 참여기업의 안착화를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마련 필요 (특구기간 연장, 브랜드화 등)
- 실증사업 이후 참여기업의 정착을 위한 부처 연계 시범사업, 실증 확대 등 후속 지원 강화 필요
- 참여기업들의 실질적인 사업과 및 수익 창출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 필요
- 특구사업 종료 이후 참여기업의 안착화 지원 및 사업화를 위한 별도의 재정지원 필요
- 특구사업자 정착을 위한 행정적 지원 필요
- 실증 테스트 결과 이후 시장 출시를 위한 제도적 정책 마련 필요(우선구매제도, 기술 검증을 통한 자금지원, 기술 전시회 개최 등)
- 사업과 진행시 규제 관련한 수시 모니터링 필요

2. 참여기업

- 2-1. 일반현황
- 2-2. 참여기업 만족도
- 2-3. 정책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
- 2-4. 개선사항
- 2-5. 특구사업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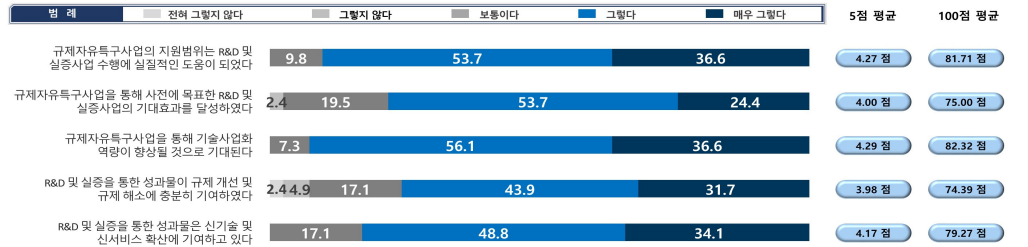
2-2. 참여기업 만족도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기술사업화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가 4.2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R&D 및 실증을 통한 성과물이 규제 개선 및 규제 해소에 충분히 기여하였다’가 3.98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추진된 R&D 및 실증사업의 기여도

[단위: 점, 5점평균]



구분	전체 (n=44)	산업별							권역별			
		정보통신 (n=3)	자원 에너지 (n=9)	자율 교통 (n=2)	친환경 이동 수단 (n=8)	바이오 의류 (n=15)	제조 운송 (n=7)	강원권 (n=4)	충청권 (n=6)	전라권 (n=12)	경상권 (n=22)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지원범위는 R&D 및 실증사업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4.27	4.33	4.00	3.50	4.63	4.42	4.14	4.25	4.20	4.33	4.25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사전에 목표한 R&D 및 실증사업의 기대효과를 달성하였다	4.00	3.33	3.67	3.00	4.50	4.08	4.29	3.75	3.80	4.25	3.95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기술사업화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4.29	4.00	4.00	3.50	4.75	4.33	4.43	4.25	4.40	4.42	4.20	
R&D 및 실증을 통한 성과물이 규제 개선 및 규제 해소에 충분히 기여하였다	3.98	3.67	3.22	2.50	4.63	4.00	4.71	4.00	3.80	4.17	3.90	
R&D 및 실증을 통한 성과물은 신기술 및 신서비스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4.17	4.00	3.67	4.00	4.25	4.33	4.57	4.25	3.80	4.17	4.25	

*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해야 함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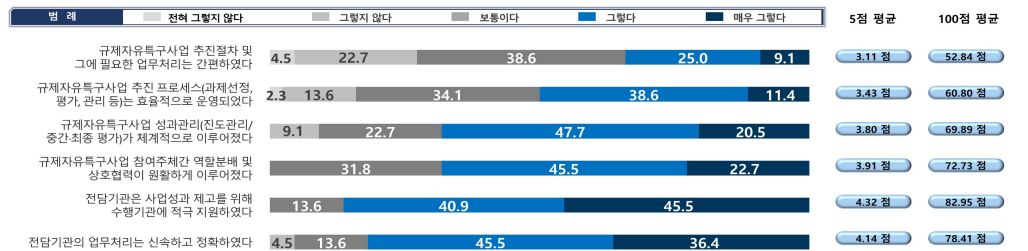
2-2. 참여기업 만족도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전담기관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수행기관에 적극 지원하였다’가 4.3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규제자유특구사업 추진절차 및 그에 필요한 업무처리는 간편하였다’는 3.11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업무처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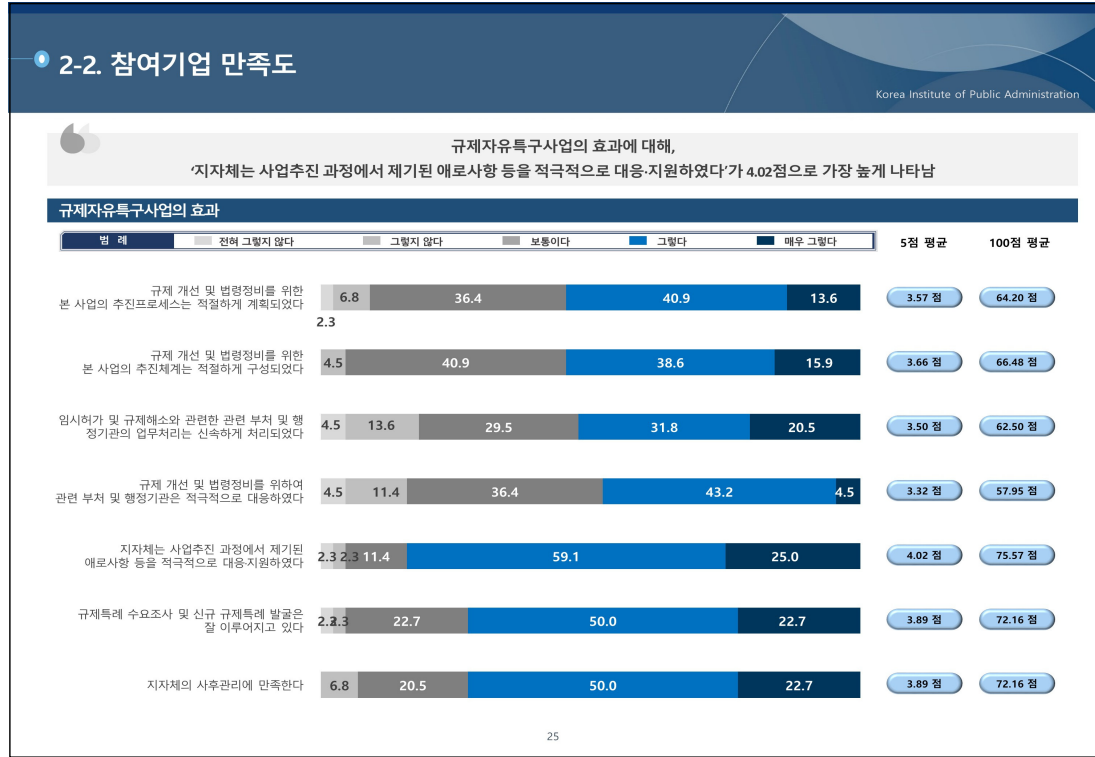
[단위: 점, 5점평균]



구분	전체 (n=44)	산업별							권역별			
		정보통신 (n=3)	자원 에너지 (n=9)	자율 교통 (n=2)	친환경 이동 수단 (n=8)	바이오 의류 (n=15)	제조 운송 (n=7)	강원권 (n=4)	충청권 (n=6)	전라권 (n=12)	경상권 (n=22)	
규제자유특구사업 추진절차 및 그에 필요한 업무처리는 간편하였다	3.11	2.67	2.44	2.00	3.88	3.13	3.57	3.75	3.33	3.50	2.73	
규제자유특구사업 추진 프로세스(과제선정, 평가, 관리 등)는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다	3.43	3.00	3.11	3.00	3.88	3.33	3.86	4.25	3.83	3.50	3.14	
규제자유특구사업 성과관리(진도관리/ 중간 최종 평가)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3.80	4.00	3.22	3.00	4.13	3.87	4.14	4.25	4.00	3.75	3.68	
규제자유특구사업 참여주체간 역할분배 및 상호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3.91	4.00	3.56	3.00	4.25	4.00	4.00	4.25	3.83	4.17	3.73	
전담기관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수행기관에 적극 지원하였다	4.32	4.33	3.89	4.00	4.38	4.47	4.57	4.50	4.50	4.33	4.23	
전담기관의 업무처리는 신속하고 정확하였다	4.14	4.33	3.78	3.50	4.13	4.20	4.57	4.25	4.00	4.25	4.09	

*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해야 함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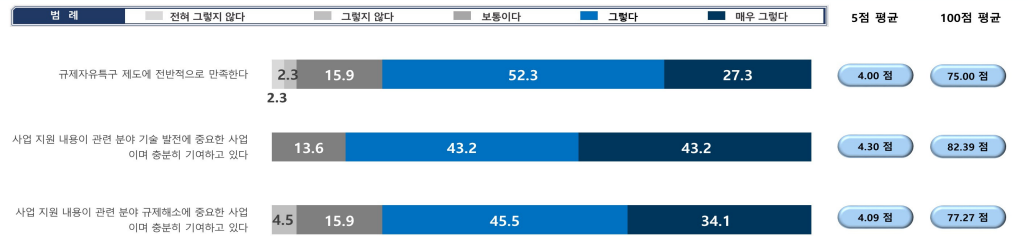


2-2. 참여기업 만족도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해,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사전에 목표한 R&D 및 실증사업의 기대효과를 달성하였다'가 4.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전반적 만족도 [단위: 점, 5점평균]



구분	전체 (n=44)	산업별							권역별			
		정보통신 (n=3)	자원에너지 (n=9)	자율교통 (n=2)	친환경이동수단 (n=8)	바이오의류 (n=15)	제조운송 (n=7)	강원권 (n=4)	충청권 (n=6)	전라권 (n=12)	경상권 (n=22)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지원범위는 R&D 및 실증사업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4.00	4.00	3.33	3.50	4.38	4.13	4.29	3.75	4.33	4.25	3.82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사전에 목표한 R&D 및 실증사업의 기대효과를 달성하였다	4.30	4.33	3.78	4.50	4.50	4.33	4.57	4.25	4.50	4.58	4.09	
규제자유특구사업을 통해 기술사업화 역량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4.09	4.33	3.56	3.50	4.25	4.13	4.57	3.50	4.17	4.42	4.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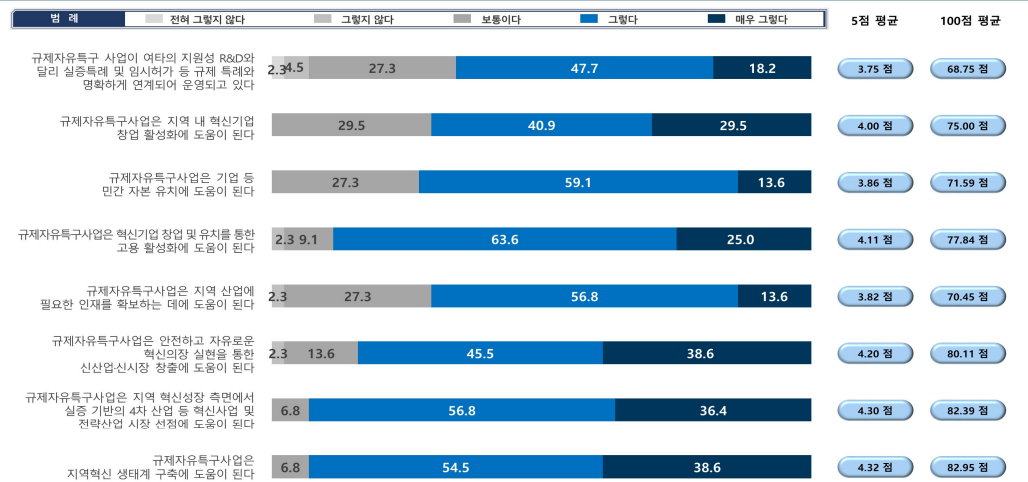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해야 함

2-3. 정책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정책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된다'가 4.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정책목표 달성 정도



2-3. 정책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정책목표 달성 정도에 대해,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된다'가 4.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규제자유특구사업의 정책목표 달성 정도

[단위: 점, 5점평균]

구분	전체 (n=44)	산업별						권역별			
		정보통신 (n=3)	자원에너지 (n=9)	자율교통 (n=2)	친환경이동수단 (n=8)	바이오의료 (n=15)	제조운송 (n=7)	강원권 (n=4)	충청권 (n=6)	전라권 (n=12)	경상권 (n=22)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여타의 지원성 R&D와 달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규제 특례와 명확하게 연계되어 운영되고 있다	3.75	3.33	3.11	3.50	4.50	3.67	4.14	3.75	3.67	4.17	3.55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지역 내 혁신기업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4.00	3.67	3.33	4.00	4.38	3.87	4.86	3.50	4.17	4.17	3.95
규제자유특구사업은 기업 등 민간 자본 유치에 도움이 된다	3.86	3.67	3.56	3.00	4.13	3.93	4.14	3.75	3.33	4.00	3.95
규제자유특구사업은 혁신기업 창업 및 유치를 통한 고용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4.11	4.00	3.89	3.00	4.50	4.13	4.29	4.00	4.00	4.25	4.09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지역 산업에 필요한 인재를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3.82	3.67	3.44	3.50	4.25	3.73	4.14	3.50	3.67	4.00	3.82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안전하고 자유로운 혁신의장 실현을 통한 신산업 신시장 창출에 도움이 된다	4.20	4.00	3.56	4.00	4.50	4.33	4.57	4.00	4.33	4.33	4.14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지역 혁신성장 측면에서 실증 기반의 4차 산업 등 혁신사업 및 전략산업 시장 선점에 도움이 된다	4.30	4.67	3.78	4.00	4.38	4.40	4.57	3.75	4.17	4.33	4.41
규제자유특구사업은 지역혁신 생태계 구축에 도움이 된다	4.32	4.67	3.89	4.00	4.38	4.53	4.29	4.00	4.33	4.33	4.36

*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해야 함

2-3. 정책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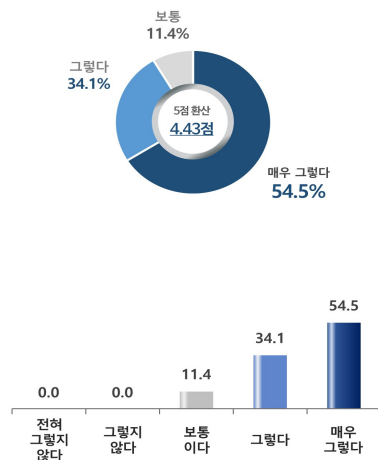
규제자유특구사업 지정 지역에 정주할 의향에 대해,
 '매우 그렇다'는 응답자가 54.5%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규제자유특구사업 지정 지역에 정주할 의향

[n=44, 단위: %]

규제자유특구사업 지정 지역에 정주할 의향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점평균	100점평균
전체	(44)	11.4	34.1	54.5	4.43	85.80
산업별	정보통신 (3)	0.0	33.3	66.7	4.67	91.67
	자원에너지 (9)	22.2	66.7	11.1	3.89	72.22
	자율교통 (2)	50.0	0.0	50.0	4.00	75.00
	친환경이동수단 (8)	0.0	37.5	62.5	4.63	90.63
	바이오의료 (15)	6.7	26.7	66.7	4.60	90.00
	제조운송 (7)	14.3	14.3	71.4	4.57	89.29
	권역별	강원권 (4)	0.0	25.0	75.0	4.75
충청권 (6)	0.0	33.3	66.7	4.67	91.67	
전라권 (12)	8.3	33.3	58.3	4.50	87.50	
경상권 (22)	18.2	36.4	45.5	4.27	8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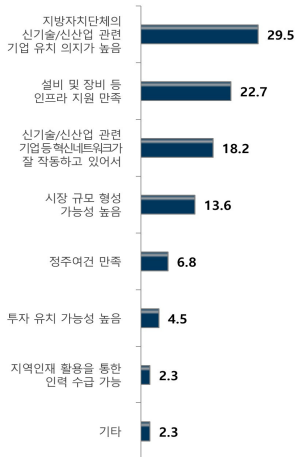
2-3. 정책목표 달성 정도에 대한 평가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지방자치단체의 신기술/신사업 관련 기업 유지/의지가 높음’이라는 응답자가 29.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설비 및 장비 등 인프라 지원 만족’(22.7%)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정주하고 싶은 이유

[n=44, 단위: %]



정주하고 싶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지자체의 신기술/신사업 관련 기업 유지 의지가 높음	설비 및 장비 등 인프라 지원 만족	신기술/신사업 관련 기업 동향(네트워크)이 잘 작동하고 있어서	시장 규모 형성 가능성 높음	정주여건 만족	투자 유치 가능성 높음	지역인재 활용을 통한 인력 수급 가능	기타
전체	(44)	29.5	22.7	18.2	13.6	6.8	4.5	2.3	2.3
사업별	정보통신 (3)	33.3	0.0	0.0	33.3	0.0	0.0	33.3	0.0
	자원에너지 (9)	33.3	33.3	11.1	11.1	0.0	11.1	0.0	0.0
	자율교통 (2)	0.0	0.0	50.0	0.0	0.0	0.0	0.0	50.0
	친환경 이동수단 (8)	12.5	25.0	12.5	25.0	12.5	12.5	0.0	0.0
	바이오의료 (15)	26.7	20.0	26.7	13.3	13.3	0.0	0.0	0.0
	제조운송 (7)	57.1	28.6	14.3	0.0	0.0	0.0	0.0	0.0
권역별	강원권 (4)	25.0	25.0	0.0	25.0	25.0	0.0	0.0	0.0
	충청권 (6)	16.7	0.0	66.7	16.7	0.0	0.0	0.0	0.0
	전라권 (12)	8.3	25.0	25.0	16.7	8.3	8.3	0.0	8.3
	경상권 (22)	45.5	27.3	4.5	9.1	4.5	4.5	4.5	0.0

*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해야 함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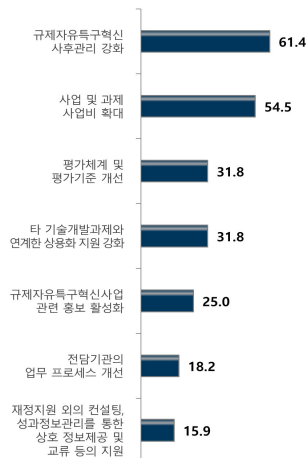
2-4. 개선사항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규제자유특구사업에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 ‘규제자유특구혁신 사후관리 강화’라는 응답자가 61.4%로 가장 높았으며, ‘사업 및 과제 사업비 확대’(54.5%), ‘평가체계 및 평가기준 개선’(31.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보완해야 할 부분

[n=44, 단위: %]



보완해야 할 부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규제자유특구혁신 사후관리 강화	사업 및 과제 사업비 확대	평가체계 및 평가기준 개선	타 기술개발 과제와 연계한 상용화 지원 강화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관련 홍보 활성화	전담기관의 업무 프로세스 개선	재정지원 외의 컨설팅, 성과정보관리를 통한 상호 정보제공 및 교류 등의 지원
전체	(44)	61.4	54.5	31.8	31.8	25.0	18.2	15.9
사업별	정보통신 (3)	33.3	33.3	33.3	33.3	33.3	0.0	0.0
	자원에너지 (9)	66.7	66.7	66.7	33.3	0.0	33.3	0.0
	자율교통 (2)	50.0	100.0	50.0	50.0	50.0	50.0	0.0
	친환경 이동수단 (8)	62.5	50.0	0.0	37.5	12.5	25.0	50.0
	바이오의료 (15)	66.7	46.7	26.7	26.7	33.3	6.7	13.3
	제조운송 (7)	57.1	57.1	28.6	28.6	42.9	14.3	14.3
권역별	강원권 (4)	50.0	50.0	25.0	25.0	25.0	25.0	0.0
	충청권 (6)	50.0	66.7	33.3	16.7	33.3	16.7	0.0
	전라권 (12)	66.7	41.7	33.3	33.3	8.3	25.0	25.0
	경상권 (22)	63.6	59.1	31.8	36.4	31.8	13.6	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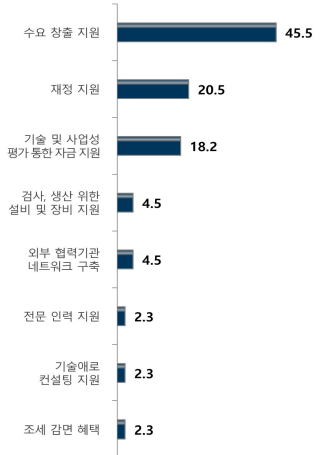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해야 함
32

2-4. 개선사항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규제자유특구사업에 지원을 확대해야하는 부분(1순위)에 대해, '수요 창출 지원'이라는 응답자가 45.5%로 가장 높았으며, '재정 지원'(20.5%), '기술 및 사업성 평가 통한 자금 지원'(18.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부분(1순위) [단위: %]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부분(1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수요 창출 지원	재정 지원	기술 및 사업성 평가 통한 자금 지원	검사, 생산 위한 설비 및 장비 지원	외부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전문 인력 지원	기술애로 컨설팅 지원	조세 감면 혜택
전체	(44)	45.5	20.5	18.2	4.5	4.5	2.3	2.3	2.3
사업별	정보통신 (3)	100.0	0.0	0.0	0.0	0.0	0.0	0.0	0.0
	자원에너지 (9)	33.3	22.2	33.3	0.0	0.0	0.0	11.1	0.0
	자율교통 (2)	0.0	50.0	50.0	0.0	0.0	0.0	0.0	0.0
	친환경 이동수단 (8)	37.5	25.0	25.0	0.0	0.0	0.0	0.0	12.5
	바이오의료 (15)	53.3	13.3	13.3	6.7	13.3	0.0	0.0	0.0
권역별	제조운송 (7)	42.9	28.6	0.0	14.3	0.0	14.3	0.0	0.0
	강원권 (4)	50.0	0.0	50.0	0.0	0.0	0.0	0.0	0.0
	충청권 (6)	33.3	16.7	33.3	0.0	0.0	0.0	16.7	0.0
	전라권 (12)	41.7	16.7	33.3	0.0	0.0	0.0	0.0	8.3
경상권 (22)	50.0	27.3	0.0	9.1	9.1	4.5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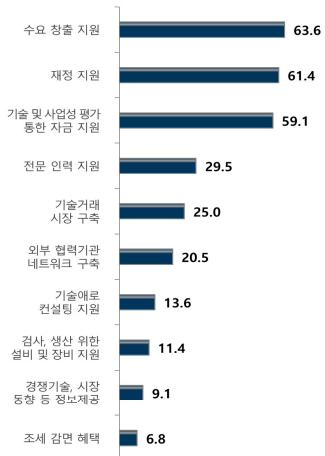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해야 함
33

2-4. 개선사항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규제자유특구사업에 지원을 확대해야하는 부분(1+2+3순위)에 대해, '수요 창출 지원'이라는 응답자가 63.6%로 가장 높았으며, '재정 지원'(61.4%), '기술 및 사업성 평가 통한 자금 지원'(59.1%)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부분(1+2+3순위) [단위: %]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 부분(1+2+3순위)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수요 창출 지원	재정 지원	기술 및 사업성 평가 통한 자금 지원	전문 인력 지원	기술거래 시장 구축	외부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기술애로 컨설팅 지원	검사, 생산 위한 설비 및 장비 지원	경쟁기술, 시장 동향 등 정보제공	조세 감면 혜택
전체	(44)	63.6	61.4	59.1	29.5	25.0	20.5	13.6	11.4	9.1	6.8
사업별	정보통신 (3)	33.3	100.0	66.7	0.0	0.0	33.3	0.0	33.3	0.0	33.3
	자원에너지 (9)	77.8	33.3	77.8	11.1	22.2	22.2	11.1	22.2	11.1	11.1
	자율교통 (2)	100.0	50.0	50.0	50.0	0.0	0.0	0.0	50.0	0.0	0.0
	친환경 이동수단 (8)	62.5	50.0	62.5	37.5	37.5	25.0	25.0	0.0	0.0	0.0
	바이오의료 (15)	66.7	73.3	46.7	26.7	20.0	26.7	13.3	0.0	20.0	6.7
권역별	제조운송 (7)	42.9	71.4	57.1	57.1	42.9	0.0	14.3	14.3	0.0	0.0
	강원권 (4)	100.0	75.0	50.0	25.0	0.0	25.0	0.0	25.0	0.0	0.0
	충청권 (6)	83.3	50.0	33.3	16.7	16.7	16.7	0.0	16.7	33.3	33.3
	전라권 (12)	66.7	41.7	66.7	50.0	25.0	25.0	16.7	0.0	8.3	0.0
경상권 (22)	50.0	72.7	63.6	22.7	31.8	18.2	18.2	13.6	4.5	4.5	

*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해야 함
34

2-5. 특구사업 개선 방안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요인	세부내용	사례수(건)
특구사업 사후관리 강화(14건)	실증사업 종료 후 신속한 법원 정비 요망(규제 관련 부처간 업무 연계 및 소통 확대)	10
	신속한 실증특례가 이루어졌으면	2
	실증사업 이후 사업화 진입시 연관되어 있는 또 다른 규제에 대한 통합적인 검토 필요	2
사업화 지원 필요(13건)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안정화 및 확대를 위한 후속사업 연계 필요	4
	실증사업 및 사업화 지원 확대 요망	2
	실증사업 종료 후 공공기관우선구매 제도 지원 필요	1
	실증사업 종료 후 사업화 과정에서의 제품 운영과 홍보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필요	1
	기업 제품의 실질적인 시장 진출을 위한 마련 필요	1
	규제자유특구 지역 내 정주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1
	실증사업 종료 후 임시허가 수행 및 사업화를 위한 지원 필요	1
	국가 차원의 시장 발굴 필요	1
	스규모 다품종 제품 시장 생태계 구축 및 국산화 비율을 높이기 위한 관련 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필요	1
	규제자유특구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 프로세스 간소화	2
특구사업 행정절차 개선(6건)	규제자유특구사업 행정 절차 영료화 필요	1
	규제자유특구 사업 진행 과정에 대한 중간 점검이 잦음(일원화를 통한 점검 절차 간소화)	1
	특구사업 담당자 변경으로 인한 행정적인 병목 현상 개선	1
	규제자유특구 운영 전담 기관의 명확한 관리 체계 마련	1
	규제자유특구 사업 기간 연장 필요	3
규제자유특구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개선(5건)	규제자유특구사업 사업비 지급 절차 체계화 필요	1
	기업 자부담 최소화 요망	1
	각 부처에서 진행하는 규제 혁신과의 연동 필요	1
규제 관련 정부부처간 협력 강화(4건)	규제 관련부처간 조정 및 윈윈톱 법률 및 제도 개선 체계 필요	1
	규제 소관 부처와의 협력 강화	1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거나 부처간 합의 부족으로 임시허가 결정 지연	1
	실증사업 종료 후 설치한 제도에 대한 운영비 지원	1
지속적인 실증사업 지원 요망(4건)	실증사업 종료 후 기술료에 대한 부담 완화 필요	1
	지속적인 실증사업을 위한 시설 및 자금 지원	1
	실증 테스트 중 연구개발이 가능한 공간 제공 필요	1
	규제자유특구 관련 제도 개선 필요	1
	특구사업 명확한 평가 기준 마련 및 제도 정비 필요	1
규제자유특구 관련 제도 개선 필요(3건)	부처별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참여한 동일 사업 간의 차별성 존재	1
	규제 발굴 관련 협의를 위한 상구 다양화 및 협의 기회 확대	1
규제자유특구 수요기업의 접근성 제고(2건)	규제자유특구사업 진입 문턱 완화	1

10 개월

THANK YOU



|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0).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실태조사 결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2a). 2022 경기도 과학기술통계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BSA 통계 2022-02.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2b). 2022 경기도 중소기업지원 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BSA 통계 2022-03.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2c).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세부 시행계획.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2022d).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부자료.
-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2021). 대덕특구 재창조 종합계획(안).
- 김계환·온기운·장태석. (2013). 독일 제조업 경쟁력 요인 분석과 시사점.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692.
- 김권식. (2020). 규제자유특구 및 규제샌드박스의 효과적인 적용·확산 방안 연구.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정책연구 20-16.
- 김명진·김학균. (2021). 경기도 산학연관 혁신활동 협력 활성화방안 연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BSA 수탁 연구 2021-08.
- 김병삼·강정훈. (2009). 프랑스의 경쟁거점 클러스터 사례연구. 글로벌 경쟁의 조건 해외광역클러스터.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재단.
- 김성진·장영희. (2015). 2015년 지방 R&D 체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보고 2016-081.
- 김성진 외. (2019). 2019 지방 R&D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관 019-060.
- 김성진 외. (2021). 2020년 지역 R&D혁신체계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관 -2020-051.
- 김성호. (2010). 지역정부 창설에 관한 연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1.
- 김수진·임덕순·정의정. (2010).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만족도 조사 및 대응방안. 경기과학기술진흥원 GSTEP Policy Focus 2010.02.
- 김수현·김창훈. (2020). 유럽 그린딜의 동향과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시연구보고서 20-01.
- 김준수·전연수·전정혁·조재영. (2021).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의 전환. 자원리싸이클링, 30(3): 3-17.
- 김진숙. (2015). 독일정부의 클러스터정책에 관한 연구: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연계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16(12): 8550-8555.
- 노용식·이희연. (2012). 세계화·기후변화시대의 지역 경쟁력 요인 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5(4): 601-614.
- 박충희. (2018). 지역지원사업의 新패러다임 발굴을 위한 영국의 지역산업 고도화 정책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연구원. (2021). 산업연구원 내부자료.
- 안영진. (2018). 독일의 지역산업 클러스터 정책. 한국경제지리학회, 21(4): 425-437.
- 안영진·구지영. (2022). 독일의 지역산업 클러스터 정책: 바이에른주의 사례 연구. 한국경제지리학회지, 25(4): 514-530.
- 안영진. (2020). 독일의 지역산업 클러스터 정책.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세미나 발표자료.
- 오용준·진선미·김지훈. (2015). 영국의 도시권협상 제도와 화이트섬 개발전략 도정 접목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현안과제연구.
- 이상환. (2022). 공공 딥테크 기반 기술사업화(대전형 융합 실증 선도사업), 융합실증 선도전략을 위한 워킹그룹 2차 회의 발표자료.
- 이원섭. (2017). 영국의 지역발전 정책 분권화와 분권협상(Devolution Deal).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2017. 8. 7.
- 임흥탁·정서화. (2022). 지역R&D리그'의 이론적 토대: 지역주도 혁신 프레임워크 제안. 대전과학기술진흥원 이슈페이퍼 2022-03.
- 정서화. (2022). 지역이 만드는 지역혁신체계(안): 대전을 중심으로, 2022 열린혁신정책플랫폼 성과공유회 발표자료.
- 정승용 외. (2020). 경기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종합계획 수립 연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BSA 과학정책 2020-01.
- 정옥주. (2006). 프랑스의 산업클러스터 정책: 경쟁거점(Pôle de Compétitivité)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2(6): 704-719.
- 정의정 외. (2014). 도 재정여건을 고려한 경기도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과 효율적 지원방안.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정준호. (2013). 영국 보수당 연정의 지역발전 재정지원제도 - 지역성장기금(Regional Growth Fund). 지역발전위원회 특집 3: 지역발전과 지방재정 지원정책의 해외사례.
- 주현 외. (2015).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산업정책 연구.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5-741.
- 최석환. (2018). 영국의 시티 딜(City Deal) 사례 연구. 수원시정연구원 SRI-기본-2018-12.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9). (가칭)대전과학기술기획평가원(DISTEP) 설립방안 및 타당성에 관한 연구.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3). 제6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립 연구. 2022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최종보고서.
- 허동숙. (2020). EU의 스마트 전문화 지역혁신정책 동향 및 시사점. 국토연구원 WP 20-06.
- 황혜란. (2006). 독일의 지역혁신클러스터 지원 정책프로그램의 평가: 협력을 위한 경쟁(Contests for Co-operation). 과학기술정책, 16(1): 51-54.
- DISTEP(2021) 내부자료

DISTEP(2022a). 2022년 대전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단계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DISTEP(2022b). 대전형 융합신산업 창출 특구기술 실증 선도사업 공고문.

DISTEP(2022c). 내부자료

DISTEP(2023a). 2022년 대전연구개발지원단 육성지원사업 단계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DISTEP(2023b). 2022년 대전연구개발지원단 추진실적 및 2023년도 선도연지단 계획발표자료.

DISTEP(2023c). 내부자료.

DISTEP(2023d). 2023년도 대전형 융합신산업 창출 특구기술 실증 선도사업 사업 공고문.

DISTEP(2023e). 내부자료.

〈국외문헌〉

Bachtler, J., Mendez, C. and Wishlade, F. (2018). Proposals for the MFF and Cohesion Policy 2021–27: A preliminary assessment (EoRPA Interim Meeting Paper). Glasgow: European Policies Research Centre (EPRC).

Camagni, R. (2002). On the concept of territorial competitiveness: sound or misleading? *Urban Studies*, 39: 2395–2411.

Commission of Experts for Research and Innovation. (2015). Report on research,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performance in Germany 2015. Berlin: EFI.

Commission of Experts for Research and Innovation. (2017). Report on research, innovation and technological performance in Germany 2017. Berlin: EFI.

European Commission. (2020). New Cohesion Policy. (URL: https://ec.europa.eu/regional_policy/en/2021_2027/)

Miedzinski, M., Stancova, K. C., Matusiak, M., & Coenen, L. (2021). Addressing sustainability challenges and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via Smart Specialisation. JRC Science for Policy Report. EU Joint Research Centre.

Nakicenovic, N., Zimm, C., Matusiak, M., & Stancova, K. C. (2021). Smart Specialisati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environmental commons. Science for Policy Report. EU Joint Research Centre.

Sedlmayr, B., Köcker, G. M. Z., & Schneider, K. (2021). Cluster Development Guide: A Practitioners Guide for Cluster Policy, Strategy and Implementation. Deutsche Zusammenarbeit (German Cooperation) and Deutsche Gesellschaft für Internationale Zusammenarbeit (GIZ).

Storper, M. (1997). *The Regional World: Territorial Development in a Global Economy*. New York:

Guildford.

Tödttling, F., Tripl, M., & Desch, V. (2021). New directions for RIS studies and policies in the face of grand societal challenges. *European Planning Studies*, 30(11): 2139–21556.

〈정부문서 및 자료〉

과학기술부. (2002). 2001 지방과학기술연감.

과학기술부. (2006). 2005 지방과학기술연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 과학기술 50년사 - 2편 과학기술 정책과 행정의 변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2020년 과학기술혁신정책지원사업 - 과학기술정책인큐베이팅 및 정책포럼 구성·운영.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 지방과학기술연감.

교육과학기술부. (2010). 제3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수정계획(안). 2022. 4. 18.

교육부. (2022). 보도자료(2022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예비 선정결과 발표).

교육부. (2022). (2022b).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2022년 기본계획.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3). 제4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8).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전략(안) - 제5차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18~'22)(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2012). 2011 지방과학기술연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19). 지역이 주도하는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혁신체계 개편방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0). 지역주도형 지역혁신사업 관리·운영방안 연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2022). 2023년 지역혁신성장계획 수립 및 2021년 자체평가 결과제출 가이드라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자원부. (2004).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 총괄 및 부문별 계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 (2019).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2018~2022) - 총괄 및 부문별 발전계획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2). 민관협력 지역혁신 선진사례집.

국정홍보처. (2008). 참여정부 국정운영백서6(균형발전).

중소벤처기업부. (2022). 지역주력산업 개편방안.

〈인터넷 사이트 자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홈페이지. (URL: <https://www.gbsa.or.kr>, 검색일: 2022. 11. 22.).

경기바이오센터 홈페이지. (URL: <https://www.gbsa.or.kr/pages/bio/index.do>, 검색일: 2022. 11. 22.).

경기도지역협력연구센터 홈페이지. (URL: <http://www.grrc.or.kr>, 검색일: 2022. 11. 22.).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URL: www.openfiscaldata.go.kr, 검색일: 2022. 11. 20.).

디지털오픈랩 홈페이지. (URL: <https://digitalopenlab.kr/>, 검색일: 2022. 11. 22.).

법제처 국가법률정보센터. (URL: www.law.go.kr 검색일: 2022. 11. 20.).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홈페이지. (URL: <https://aict.snu.ac.kr/>, 검색일: 2022. 11. 20.).

판교테크노밸리 홈페이지. (URL: <https://www.pangyotechnovalley.org/base/main/view>, 검색일: 2022. 11. 22.).

프랑스 경쟁력클러스터 홈페이지. (URL: <http://www.competitivite.gouv.fr/>, 검색일: 2022. 10. 5.).

한국나노기술원 홈페이지. (URL: <https://www.kanc.re.kr/main.do.>, 검색일: 2022. 11. 20.).

CGET. (URL: <http://www.cget.gouv.fr/>, 검색일: 2022. 10. 5.).

2022

OPL 워킹그룹 ②

지역혁신을 위한 중앙-지역 협력방안



한국행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DiSTEP 대전과학기술산업진흥원
Daejeon Institute of Science & Technology for Enterprise & People